
제3기[2015~2018]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목 차 -

I.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
1. 계획수립의 개요	3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배경	3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	4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범위	5
4) 주요 추진 방향	5
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6
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 실행결과 분석	9
1) 제3기 계획수립 과정 분석	9
2) 제2기 계획분야별 실행 결과 분석 및 평가	12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14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14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15
3)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방안	15
II. 지역사회의 복지수급 진단	17
1. 지역현황	19
1) 행정구역 및 인구	19
2)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23
2. 복지수요의 전망	32
1) 주민복지욕구조사	32
2) 분야별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 평가	49
3. 복지공급 전망	58
1) 인천광역시 복지담당 조직 및 예산규모	58
2) 사회복지 예산 현황	62
2) 사회복지 시설 현황	65
4. 계획수립의 개요	70
1) 중앙정부 상위계획 검토	70
2) 인천광역시 상위계획 검토	86
3) 상위계획 분석 결과 반영 검토 사항	92
4) 복지수요와 복지공급 자원의 흐름분석	96

III. 비전 및 핵심과제	101
1. 환경 및 여건변화 전망	103
1) 사회경제적 요인	103
2) 인구지표	110
3) 물리적 환경	112
4)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식 및 요구사항	114
5) 제3기 계획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118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120
1) 비전 및 전략목표	120
2) 핵심과제	122
IV.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계획	125
1. 핵심과제 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	127
1) 개요	127
2) 세부과제 계획	133
2. 핵심과제 2. 민관협력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143
1) 개요	143
2) 세부과제 계획	148
3. 핵심과제 3. 모두가 건강한 도시	157
1) 개요	157
2) 세부과제 계획	165
4. 핵심과제 4. 안심 출산·맘(Mom) 편한 보육	183
1) 개요	183
2) 세부과제 계획	189
5. 핵심과제 5.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199
1) 개요	199
2) 세부과제 계획	204
6. 핵심과제 6. 건강한 노후, 활기찬 여가	218
1) 개요	218
2) 세부과제 계획	223
7. 핵심과제 7. 장애인의 사회통합	234
1) 개요	234
2) 세부과제 계획	240
8. 핵심과제 8.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실현	252
1) 개요	252
2) 세부과제 계획	258
9. 핵심과제 9. 동고동락하는 다양한 사회	267
1) 개요	267
2) 세부과제 계획	272

V.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원계획	279
1.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 분석	281
1) 군·구 계획수립 과정의 참여주체 평가	281
2) 군·구 계획수립 과정의 절차 평가	287
2.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	293
1) 군·구 계획의 내용 점검 영역 및 기준	293
2) 군·구 계획 내용 점검의 대상 영역, 기준 및 주요내용, 점검지표와 평가기술	293
3. 군·구 핵심과제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299
1) 군·구 핵심과제의 지원계획	299
2) 군·구의 복지사업 대상별 핵심과제 지원계획의 내용	305
VI. 행·재정 계획	309
1. 인력 계획	311
1)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311
2) 민간인력 확충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14
2. 복지인프라 확충 계획	316
1) 현황 및 필요성	316
2) 개선방안(확충계획)	319
3. 사회복지전달체계 정비 계획	320
1) 사회복지전달체계	320
2) 개선방안(추진방향)	320
4. 복지재정 계획	322
1) 인천광역시 재정현황	322
2) 재정투입 계획	326
5. 조례 제·개정 계획	328
VII. 자체평가 계획	329
1. 평가 근거, 목적 및 기대효과	331
1) 평가의 근거	331
2) 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331
2. 평가 방법	332
1) 평가추진체계	332
2) 평가유형	333
3. 평가계획(안) 및 평가결과 활용	336
1) 평가절차	336
2) 평가결과의 활용	338

VIII. 첨부자료	339
1.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	341
2. 복지사업 목록	344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일정	347
4.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설문지	350
5. 영구·국민 임대주택 등 관리 현황	360
6. 주요 복지시설 현황 및 향후(2015-2018년) 설치 계획	361

- 표 목 차 -

<표 1-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수립 TFT 구성	8
<표 1-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점검	9
<표 1-3>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분야별 실행결과 평가	12
<표 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실현방안	16
<표 2-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20
<표 2-2> 인천광역시 인구 현황	20
<표 2-3> 인천광역시 군·구별 인구 현황(2013년)	22
<표 2-4> 인천광역시 영·유아 인구 현황	23
<표 2-5> 인천광역시 65세 이상 인구 추이	24
<표 2-6>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현황	25
<표 2-7> 인천광역시 여성가구주 가구 현황(2010년)	26
<표 2-8> 인천광역시 등록 외국인 현황	27
<표 2-9> 인천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8
<표 2-10> 인천광역시의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	29
<표 2-11> 인천광역시의 독거노인 현황	29
<표 2-12> 인천광역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30
<표 2-13> 인천광역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12년)	31
<표 2-14> 군·구별 표본의 가구 수, 가구원수, 평균 가구원 수	32
<표 2-15> 가구주 특성	33
<표 2-16> 기초생활보장분야 정책의 중요도	49
<표 2-17> 차상위계층(비수급 저소득층)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50
<표 2-18> 노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51
<표 2-19> 장애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52
<표 2-20> 여성·가족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53
<표 2-21>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54
<표 2-22> 지역사회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55
<표 2-23> 자원봉사분야 정책의 중요도	55
<표 2-24> 저출산·고령사회분야 정책의 중요도	56
<표 2-25>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중요도	56
<표 2-26>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정·현원 현황	59
<표 2-27> 2014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	59
<표 2-28>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정·현원 현황	61
<표 2-29> 2014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	61
<표 2-30>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 재정립도	62
<표 2-3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생활시설 현황	65
<표 2-32> 인천광역시 보육시설 현황	66
<표 2-33>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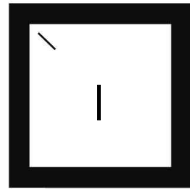
<표 2-34>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68
<표 2-35> 인천광역시 여성복지 생활시설 현황	69
<표 3-1> 인천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103
<표 3-2> 인천광역시 경제활동 인구	103
<표 3-3> 인천지역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규모 현황	104
<표 3-4> 인천시민의 소득수준에 대한 의견	104
<표 3-5> 인천광역시 외국인 등록 현황	105
<표 3-6> 인천광역시 다문화가구 현황	106
<표 3-7>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현황	106
<표 3-8>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연령표준화 자살률	107
<표 3-9> 인천광역시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109
<표 3-10> 인구구조의 변화	110
<표 3-11> 장기 인구 변화	111
<표 3-12>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111
<표 3-13> 인천의 대(大)생활권	112
<표 3-14> 인천의 대(大)생활권별 주요 복지환경 지표	114
<표 3-15> 인천 복지환경에 대한 인천 여성의 만족도	115
<표 5-1> 중구의 참여주체 평가	282
<표 5-2> 동구의 참여주체 평가	282
<표 5-3> 남구의 참여주체 평가	283
<표 5-4> 연수구의 참여주체 평가	283
<표 5-5> 남동구의 참여주체 평가	284
<표 5-6> 부평구의 참여주체 평가	284
<표 5-7> 계양구의 참여주체 평가	285
<표 5-8> 서구의 참여주체 평가	285
<표 5-9> 강화군의 참여주체 평가	286
<표 5-10> 옹진군의 참여주체 평가	286
<표 5-11> 군.구 계획수립 과정의 '절차평가'	287
<표 5-12> 군.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점검영역 및 기준	293
<표 5-13> 군.구 계획 개요의 내용 평가 취합	296
<표 5-14> 인천시 자치구의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의 비교	299
<표 5-15> 군.구의 핵심과제 지원계획내용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300
<표 6-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대상 및 담당공무원 수	311
<표 6-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직 신규 총원 계획	313
<표 6-3>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조직 개편	313
<표 6-4> 복지인프라 확충 계획	318
<표 6-5> 인천광역시 세입 규모	322
<표 6-6> 인천광역시 기능별 세출예산	323

<표 6-7>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예산	323
<표 6-8> 2014년 인천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 예산	324
<표 6-9> 2014년 인천광역시 세부항목별 사회복지 예산	325
<표 6-1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전망	326
<표 6-11> 핵심과제별 재정투입계획	326
<표 6-12> 세부과제별 재정투입계획	327
<표 7-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332
<표 7-2> 계획평가 수립과정에 대한 평가지표	333
<표 7-3> 계획평가 계획내용에 대한 평가지표	334
<표 7-4> 연차별 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334
<표 7-5> 인천광역시의 평가계획	337

- 그림 목 차 -

<그림 2-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19
<그림 2-2> 인천광역시 인구변화 추이	21
<그림 2-3> 인천광역시 영.유아 인구 변화 추이	23
<그림 2-4> 인천광역시 60세, 65세 이상 인구변화 추이	24
<그림 2-5>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 변화 추이	25
<그림 2-6> 인천광역시 여성 가구주가구 현황(2010년)	26
<그림 2-7> 인천광역시 등록 외국인 변화 추이	27
<그림 2-8> 인천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화 추이	28
<그림 2-9> 인천광역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변화 추이	30
<그림 2-10> 인천광역시 국민연금 가입자 수 변화 추이	31
<그림 2-11> 인천광역시 시민의 생활여건상의 어려움	35
<그림 2-12> 인천시민의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35
<그림 2-13> 인천시민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	36
<그림 2-14> 사회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36
<그림 2-15>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37
<그림 2-16> 지역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부문	37
<그림 2-17> 여성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38
<그림 2-18> 여성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38
<그림 2-19>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부문	39
<그림 2-20> 미취학아동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39
<그림 2-21> 미취학아동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40
<그림 2-22>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부문	40
<그림 2-23> 아동(초등학생)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41
<그림 2-24> 아동(초등학생)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41
<그림 2-25> 아동(초등학생)의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부문	42
<그림 2-26> 청소년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43
<그림 2-27>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43
<그림 2-28>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44
<그림 2-29> 노인(여가부문)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44
<그림 2-30> 노인(소득 및 취업부문)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45
<그림 2-31> 노인(요양 및 보호시설, 기타 영역)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45
<그림 2-32> 노인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46
<그림 2-33>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46
<그림 2-34>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47
<그림 2-35>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47
<그림 2-36>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48

<그림 2-37>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조직도	58
<그림 2-38>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조직도	60
<그림 2-39>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비중	63
<그림 2-40> 인천광역시 부문별 '지역'사회복지사업 예산 비중	63
<그림 2-41> 2014년 인천광역시 자치구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64
<그림 3-1> 시민들이 생각하는 복지도시건설 위한 과제	115
<그림 3-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120
<그림 3-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전략지도	121
<그림 6-1>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비교 (전담)	312
<그림 6-2> 인천광역시 세입규모 증감	322
<그림 7-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의 절차와 과정	336



I.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개요

1. 계획수립의 개요
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 실행
결과 분석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I.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 계획수립의 개요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배경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성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모든 지자체가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임.

○ 지자체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필요성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실현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맞물린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참여 확대, 사회복지 자원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이용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에 의한 사회복지 실현하기 위한 계획임.
 - 특히, 광역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광역지자체 자체 사업의 개발과 실시를 위한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의 계획 및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
 - 중앙정부가 법률과 사업수행 지침 및 재정의 대부분을 제공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보편사업) 이외에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례 제정 및 재원조달을 통해 실시하는 자체 사회복지사업(지역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선거를 기점으로 작성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민선 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이 활성화되는 계획임.
 -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2010년 전체 예산 대비 22.3%인 1조 485억원에서 2014년에는 29.2%인 1조 7,389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분야별 불균형한 관심과 자원투입 등으로 투입하는 예산규모에 비해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가 충족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임.
-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유연한 사회복지자원 제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 사회복지 욕구 및 동원 가능한 민간자원 등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전략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이며 효율적 실행방안으로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

이 필요함.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목적

○ 민선6기의 지역사회복지정책 방향 설정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은 민선6기(2014년 7월~2018년 6월)와 시기적으로 같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민선6기 사회복지분야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이 실현될 수 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 통합적인 사회복지정책 제시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회복지사업들의 분절적 시행, 연계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위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비전과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라는 큰 틀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보편성’에 기초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보완된 사회복지 전략 제시

- 인구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회양극화, 다문화가정의 증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생존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복지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투입자원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성’ 원칙에 기초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10개 군구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인천광역시차원에서 분석하여 취약계층의 사회복지욕구들을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선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궁극적으로는 도시, 농촌, 어촌, 도서지역, 접경 지역이라는 인천의 지역 특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민선6기가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인천시민의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범위

○ 공간적 범위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로서 10개 기초지자체(군·구)로 구성됨.

○ 시간적 범위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5년-2018년까지의 4개년 중기 계획임.

4) 주요 추진 방향

○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계획 및 기초지자체와 연계

-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여성·가족, 보육, 장애인, 보건의료분야의 계획을 교검토함.
- 10개 기초지자체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분석·조정하여 인천광역시차원의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함.

○ 지역특성 반영

- 인천광역시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을 반영하여 민선6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비전, 전략과 핵심과제를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효과성을 확보함.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향후 업무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세부사업별로 연차별 실행계획과 소요예산을 제시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의 구체성을 제고함.

○ 전문가, 지역대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 및 담당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전문성, 소통, 통합성 및 참여성 제고

-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가 제2기 계획 평가, 제3기 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성, 소통, 통합성과 참여성을 향상시킴.

○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

- 지역사회 분석,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제공 시설·체계 분석, 향후 사회복지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 전망 등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들은 인천광역시, 기초지자체,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문헌고찰, 실태조사·분석,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의 견수렴과 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함.

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절차

○ 계획 수립 절차의 개요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계획수립준비, 연구계획수립, 분야별 TFT운영,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도출, 제3기 계획 심의 및 확정으로 추진됨.

○ 계획수립 준비

- 계획수립준비단계에서는 2008~2014년까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및 사업을 분석함.
- 계획수립준비 단계에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직·보건직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현황·보건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분야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연구계획수립

- 연구계획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분야 계획들을 분석함.
- 연구계획수립단계에서는 제2기 계획을 검토함.
- 10개 군구가 실시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를 인천광역시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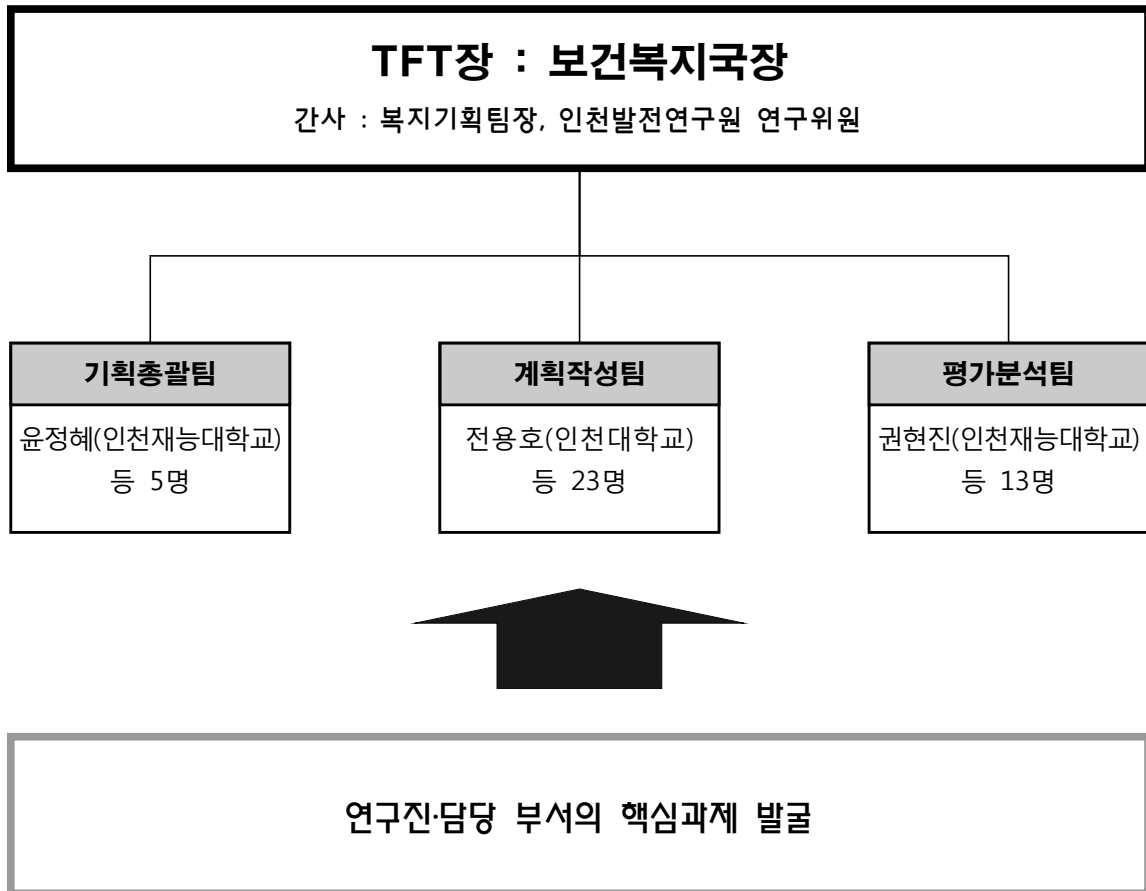
○ 분야별 TFT운영

- 분야별 TFT는 공무원, 전문가, 지역대표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사회복지 일반, 저소득,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보육, 다문화, 아동·청소년, 보건 의료 및 총괄분야로 구성하여, 제2기 사업을 평가함.
- 분야별 TFT는 제3기 계획에 제시될 수 있는 세부사업들을 발굴함.
- 총괄TFT는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를 도출함.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심의 및 확정

- 분야별 TFT 및 총괄TFT가 제시한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과제를 정리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 중간보고함.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 중간보고한 것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함.
- 중간보고 및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게 지원하는 행정·재정계획을 추가하여 민선6기 집행부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수렴함.
- 일반시민 및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제3기 계획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여 승인받음.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수립 조직도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수립 TFT 구성

〈표 1-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수립 TFT 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 역할
팀장		한길자	보건복지국장	•계획수립 총괄
간사		고태성	복지기획팀장	
		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기획총괄팀 (5명)	공무원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	•지역사회복지 비전, 전략 목표, 지표설정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선 정
	사회복지위원	김광용	인천사회복지협의회 기획이사	
	전문가	윤정혜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지역대표	우옥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창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계획작성팀 (23명)	공무원	오영철	생활보장팀장	•사업 선정 및 내용작성 •행·재정 계획 수립, •사업추진체계 마련 •군·구 계획의 조정 및 지원계획 수립
		강원배	장애인정책팀장	
		권후자	여성정책팀장	
		김정민	보육정책팀장	
		김창근	다문화가족팀장	
		서홍식	노인정책팀장	
		황유익	청소년정책팀장	
		박종용	정신건강팀장	
	사회복지위원	전홍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정영기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자영	인천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센터장	
		정진모	인천노인복지협회 회장	
		하성도	인천아동복지협회 회장	
		서향순	가천의대길병원 사회사업실장	
	전문가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한경현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배은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태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지역대표	이용우	인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상민	예림원 사무국장	
		오선영	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정락녀	인천남구노인문화센터 사무국장	
		김정태	인천사회복지시설협회 회장	
평가분석팀 (13명)	공무원	장정진	사회복지봉사과 주무관	•제2기 계획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분석 •시·군 계획 분석
	사회복지위원	이재만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제형	인천청소년수련관 관장	
	전문가	권현진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윤연숙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은주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지역대표	최상희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한명섭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장혜순	인천여성민우회 고문	
		최윤희	인천서구노인복지관 관장	
		김보기	인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	

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 실행결과 분석

1) 제2기 계획수립 과정 분석

〈표 1-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점검

제2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제3기 계획에 반영한 개선 요소
제2기 계획 수립 과정 분석	용역수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분야별 TFT 및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계획을 수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의 주체 구성 및 사전준비를 추진함. •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부의 작성 매뉴얼에 따라 관련 분야 공무원, 학계전문가, 지역대표, 시민사회단체, 지역복지협의체 대표 및 사회복지위원들로 분야별 TFT 및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함.
	욕구조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시민, 저소득계층, 여성,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 • 공무원,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중요도와 실행도 등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군구가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를 광역시차원에서 재분석하여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욕구를 계획수립에 반영함. • 제2기 계획에서 실시하였던 공무원,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중요도와 실행도 등에 대한 조사를 2014년에도 재실시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함.
	자원조사 및 계획수립의 활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지자체 조사결과를 반영한 계획수립을 추진함. • 기존에 작성된 지역자원 현황을 활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작성된 지역자원 현황을 재분석하여 기초지자체별로 균형 있는 복지수급을 계획함. • 사회통계지표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도 활용함.
	사업 개발과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및 기초지자체의 복지정책과 중복가능성 및 이에 따른 시행주체의 불명확성 문제가 제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업 중심의 계획을 수립함. •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 및 2015년 이후 사회복지분야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실행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함.
	계획수립 관련 협의체 및 사회복지 위원회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참여는 없음. •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가 참여하여, 민관협력분야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강조함. • 분야별 TFT에 사회복지위원들이 참여함. • 계획 수립의 시작, 중간보고 및 최종보

			고를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내용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반영함.
	사도 조정 권고 관련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련	•자체적으로 실시한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계획의 초안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기초지자체의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계획의 초안을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기타	•해당 사항 없음.	•민선6기의 시정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제3기 계획과 시정 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일관성을 유지함.
제2기 계획 실행 분석	사업실행 관련	•일부 사업의 경우 핵심사업과 세부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미확보와 부족, 개별 세부사업과의 통합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예산 미확보·부족,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보류·중지된 사업들의 경우 연차별 실행계획에서 타 사업과 조정·연계 등 수정하는 유연성이 부족함. •일부 사업의 경우 조직개편 후 제2기 계획에 제시된 사업의 담당부서가 불분명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에 따라 사업수행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함.	•실행 및 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수행의 실행력을 담보함. •실행부서가 명확한 사업과 과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실행의 주체와 실행력을 강화함.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일부 사업의 경우 제2기 계획 전체와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함. •예산확보 및 조직개편을 반영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계획대비 예산집행과 인원 수 중심의 성과지표 달성에 초점을 둔 연차별 실행평가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연차별 실행의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제3기 계획 전체와 연차별 계획과의 실행 연계성을 확보함.
	실행과정의 협의체 활동 관련	•일부 기초지자체 지역복지협의체 상근 간사의 부재로 협의체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함. •광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함.	•모든 기초지자체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실행과정에서 협의체 활동의 강화를 유도함. •광역사회복지협의회 중심의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실제 사업으로 연계하고 구체화함.
	기타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지역주민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계획 및 연차별 실행 결과 전반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 필요함. •지역차이를 감소시켜 복지욕구 충족에서 기초지자체간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함.
총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 준비 및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핵심사업과 세부사업을 전체적으로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및 행복나눔인전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각각 대상, 최우수, 우수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특히, '행복나눔 인천'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 유료로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예산확보 및 실행부서의 문제 등으로 제2기 계획과 사업의 실제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중기계획과 연차별 계획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연차별 실행결과 평가에서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사전준비를 실시함.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선 6기 시정의 사회복지분야 계획과 사업을 고려하여 사업 실행·평가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TFT에서 검토한 사업들을 계획으로 작성함. •연차별 계획에 따른 사업실시가 가능하도록 사업실시계획 및 모니터링계획을 작성함.

2) 제2기 계획 분야별 실행 결과 분석 및 평가

〈표 1-3〉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분야별 실행결과 및 평가

분야	실행결과 분석 및 평가
사회복지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관련 핵심사업은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복지재단 건립·운영 관련 핵심사업은 사업수행이 보류되었지만, 제3기에 다시 추진될 예정임.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식품 제공을 위한 세부사업은 민관협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지역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를 지원하는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군·구가 상근 간사를 채용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 및 광역자치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할 수 있을 것임.
저소득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수급·빈곤층 지원 관련 핵심사업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신규 지역사업인 민관협력 취약계층지원사업인 「행복나눔 인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관련 세부사업은 각각 다른 지역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속됨. 비수급·빈곤층발굴과 생활안정 지원·연계를 위한 사업은 현장인력(복지통장 및 복지위원)의 확충 및 지역복지 중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주체간의 협력의 체계화로 공공부문, 민간부문 및 민관협력차원에서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 전체에 대한 각 사업별 주제, 내용, 성과 등에 대한 총체적 파악이 가능한 통합관리체계구축이 필요함.
자원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자원봉사자 육성과 관련 핵심사업은 전문자원봉사단 육성 관련 세부사업과 통합되어 수행됨. 12개의 세부사업은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따라 대부분 수행됨. 저소득·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참여사업은 민관협력사업인 「사랑가사업」으로 전환되어 활성화됨.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보상체계를 구축함.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장애인복지관 확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홍보, 장애인산책로 조성과 관련한 5개 핵심사업이 계획에 따라 대부분 수행되었음. 세부사업들은 목표에 따른 실적이 우수하게 시행되었음 장애인의 교육·문화·여가 지원 사업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기반 조성사업은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흡, 예산미확보, 실행부서의 혼선 등으로 인하여 실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음.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된 세부사업들의 실행 실적이 우수함. 여성취업지원 관련 세부사업은 목표를 확대하여 실시되는 등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계획대로 수행되면서 여성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이 계획대로 확대됨. 여성노인육구조사와 관련한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수행되어 여성노인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됨.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출산·고령화연구센터 설립·운영 관련 핵심사업은 사업수행이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 핵심사업은 성공적으로 확대·시행됨. 세부사업들은 목표에 따른 실적이 우수하게 시행되었음 한부모복지시설은 추가적으로 신설되어 한부모가족의 사회복지 인프라가 확대됨. 몇몇 세부사업에서는 예산의 미반영이나 부족으로 보류, 축소 또는 종료되는 경우가 있어 계획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보다 확실하게 필요함.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상보육 관련 핵심사업은 국가의 보편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이용자 규모가 확대됨.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보육시설 일자리의 질 개선에 기여함.

다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사업을 포함한 계획된 모든 세부사업들이 수행되었음.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과 관련된 핵심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었음. •다문화가족지원 계획수립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함.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들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함.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일자리 개발과 수행을 위한 핵심사업은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노인복지용구 대여 서비스 및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각각의 핵심사업은 관련 보편사업이 실시되면서 대체됨. •노인의 사회참여, 돌봄, 취약계층 지원 등 세부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과 사업의 실적에 있어 우수한 결과를 보였음. •노인정신건강상담 관련 세부사업은 보건의료분야 치매상담, 자살예방 등의 지역사업과 보편사업이 실시되면서 대체됨.
아동·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과학관 건립, 대안학교 운영, 아동복지시설 다양화,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한 핵심사업이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실행 실적이 우수함.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들이 계획대로 실행되었으며, 목표에 따른 실적이 비교적 우수하게 시행되었음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는 경우는 해당기관을 중심으로 사업들의 통합적 기획 및 설계가 필요함. •아동건강관리센터·체험관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업은 보건의료분야 지역사업과 보편사업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실시되면서 대체됨. •아동·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몇몇 세부사업들과 같이 예산미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수행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 향후 계획에 이러한 상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 가입을 지향하는 핵심과제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해당사업은 그 후 어린이집 대상 유해식품·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광역·기초자치체의 자살예방센터 운영과 관련된 핵심사업은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실행 실적이 우수함.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사업들은 계획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수행 주체가 다양하여 치매 예방·상담·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의 통합적 관리·운영이 필요함. •국가지정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세부사업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지와 홍보가 필요함.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 근거에 기반한 지역사회 분석

- 다양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인천광역시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사회복지 제공 현황을 분석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및 인천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현황·보건복지 전달체계·사회복지분야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10개 군구가 실시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상자별, 분야별 사회복지욕구를 분석함.
-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관련 다양한 계획들을 분석함.

○ 민관협력에 기반한 계획 수립

- 분야별 TFT 구성 및 운영에서 전문가들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대변되는 지역대표, 지역복지협의체 대표 및 사회복지위원들이 참여하여 제2기 계획 실행결과를 점검하고, 제3기 사업들을 검토함.
- 제3기 계획 수립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및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함.

○ 민선6기 시정 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제3기 계획에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을 반영함으로써 제3기 계획과 민선6기 사회복지분야 시정 목표와 사업들이 연계되어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함.

○ 실행 및 평가가 가능한 사업들로 계획 구성

- 2기 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조직개편, 예산 미확보 등의 문제로 몇몇 사업들은 다른 사업과 연계·통합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제3기 계획은 담당 조직이 2018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실행가능하고, 성과지표가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함.

○ 10개 군구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 10개 군구가 실시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 분석 및 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함.
- 10개 군구가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 핵심·세부과제를 분석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군구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함.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 민관협력 강화에 의한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이들에 대한 지원 등에서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함.
- 지역사회에서 복지통장·동복지위원제도의 정립 및 지역 내 취약계층 발견시 복지포털·모바일·대표전화에 의한 신고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민관협력에 의한 조기 발굴을 주요 과제로 추진함.
- 또한, 발굴한 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긴급지원, 민관협력에 의한 재능기부와 물품제공 및 협력 서비스 연계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주요 과제로 포함함.

○ 고용과 사회복지 통합지원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사회복지 서비스와 고용 지원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저소득계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고용·사회복지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고용 및 사회복지에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고, 고용과 사회복지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을 주요 과제로 추진함.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역량의 강화하는 사업들을 주요 과제로 포함함.

○ 함께 하는 사회복지환경 조성

- 지역 내에서 사회복지인력의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사회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주요 과제로 추진함.
- 사회복지여건 조성을 위한 주민센터 사회복지인력의 확충, 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통합 지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을 주요 사업에 포함함.
- 지역사회 내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물품·현금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등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활성화를 주요 사업에 포함함.

3)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방안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정 전체에 걸쳐 통합성, 협력성, 참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참여성 : 제3기 계획은 지역주민과 지역사업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들의 참여과정을 포함하여 사업을 계획함.
- 인천시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및 이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

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

- 협력성 : 제3기 계획은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이며 효율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획임.
 -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제공의 주체로서 공공부문과 민간 기관들의 협력을 다양한 차원에서 구축한 제3기 계획을 수립함.
- 통합성 : 제3기 계획은 지역사회 발전의 전체적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연계를 갖고 통합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함.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 계획, 인천광역시 민선 6기 시정계획(공약실천계획)을 고려한 인천시차원의 통합적 실행계획을 수립함.

〈표 1-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 실현방안

계획과정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1단계 : 기획 및 지역사회 복지조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시 및 10개 군구 담당 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학계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실시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단체 및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2014년 인천시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함. ·10개 군구의 주민복지육구 조사결과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분석함. ·제2기 계획의 실행결과를 연차별로 분석함.
2단계 : 계획수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계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종사, 시민사회단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설문조사하여 분석함. ·분야별 TFT에서 지역별 수급격차 및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시 담당부서의 사업들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함. ·학계 전문가, 지역대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 사회복지협의체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사회복지위원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TFT에서 전략 목표와 핵심과제 선정, 사업별 세부계획을 검토·논의하고, 수립함. ·분야별 TFT에서 세부과제와 사업 계획 초안을 인천시 담당부서와 함께 예산, 실행·평가 가능성 등을 논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의 상위 계획을 분석하고 반영함. ·인천시 사회복지예산분석자료, 2015년 이후 인천시의 핵심사업 및 민선6기 공약사업 등을 분석하여 반영함. ·군·구의 복지계획을 분석하고 반영함.
3단계 : 심의보고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 및 공청회를 실시하여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 착수·중간·최종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의회에 보고하여 계획과 예산을 연계함.



■

II

II. 지역사회 복지수급 진단

1. 지역현황
2. 복지수요의 전망
3. 복지공급 현황
4. 계획수립의 개요

II. 지역사회의 복지수급 진단

1. 지역현황

1) 행정구역 및 인구

○ 인천광역시의 지리적 위치

- 인천광역시는 한반도의 중서부인 동경 126° 42′, 북위 37° 27′에 위치하고 있으며, 8개구와 2개 군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시들 중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은 광역시임.
- 인천광역시는 서해안의 중앙부에 있는 항구도시로서, 중구의 인천항은 1875년 개항한 이후 서해안의 최대 항구로 성장하였으며, 중구의 영종도에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음.
- 인천광역시는 한반도 수도권의 관문으로서 서울에 인접한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는 서울의 침상도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으며, 남동구와 연수구의 공업단지 발달과 최근 서구의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건설과 경제특구 지정에 힘입어 인천은 세계적인 도시기능을 갖춘 동북아의 관문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음.
- 대한민국 5대 섬 중의 하나인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주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옹진군은 약 3,000ha의 양식어장과 500여척의 어선 등 어업이 발달하였으나, 서해 NLL 접경지역으로서 한반도 분단체제에 따른 불안감이 존재하는 지역임.

〈그림 2-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표 2-1〉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연도 행정지역	면적		군·구		읍·면·동				통(리) 반		반	출장소		
	면적 (km ²)	구성비 (%)	군	구	읍	면	동		통	리		시	군·구	읍·면
							행정	법정						
2008	1010.35	100.0	2	8	1	19	123	135	3,717	259	21,427	1	4	3
2009	1027.01	100.0	2	8	1	19	121	135	3,677	260	21,051	-	4	3
2010	1029.43	100.0	2	8	1	19	122	135	3,705	260	21,200	1	4	3
2011	1032.41	100.0	2	8	1	19	125	135	3,808	261	21,603	1	4	3
2012	1040.82	100.0	2	8	1	19	126	135	3,838	261	21,894	1	4	3
중 구	131.29	12.6	-	1	-	-	11	52	249	-	1178	-	2	-
동 구	7.19	0.7	-	1	-	-	11	7	204	-	981	-	-	-
남 구	24.84	2.4	-	1	-	-	21	7	633	-	3106	-	-	-
연수구	45.57	4.4	-	1	-	-	12	6	420	-	2136	1	-	-
남동구	57.01	5.5	-	1	-	-	19	11	622	-	3542	-	1	-
부평구	32.00	3.1	-	1	-	-	22	9	638	-	4200	-	-	-
계양구	45.58	4.4	-	1	-	-	11	23	461	-	2645	-	-	-
서 구	114.00	10.9	-	1	-	-	19	20	611	-	2589	-	1	-
강화군	411.35	39.5	1	-	1	12	-	-	-	186	1245	-	-	1
옹진군	171.99	16.5	1	-	-	7	-	-	-	75	272	-	-	2

자료 : 인천광역시, 2013년 인천광역시통계연보, 2013

○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의 면적은 1,040.82km²이며, 2012년을 기준으로 8개구와 2개 군, 26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별로 보면, 강화군의 면적은 411.35km²로 인천광역시 전체 면적에서 가장 많은 39.5%를 차지하였으며, 동구는 7.19km²(0.7%)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

〈표 2-2〉 인천광역시 인구 현황

연도	세대수	성별			세대당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계	남	여		
2009	1,026,936	2,758,431	1,394,068	1,364,363	2.64	225,683
2010	1,059,664	2,808,288	1,421,439	1,386,849	2.60	237,805
2011	1,077,563	2,851,490	1,441,501	1,409,989	2.60	250,528
2012	1,097,491	2,891,286	1,459,692	1,431,594	2.59	267,059
2013	1,118,988	2,930,164	1,478,862	1,451,302	2.57	282,471

자료 : 인천광역시, 2013년 4/4분기 계간 인천통계, 2013

○ 인천광역시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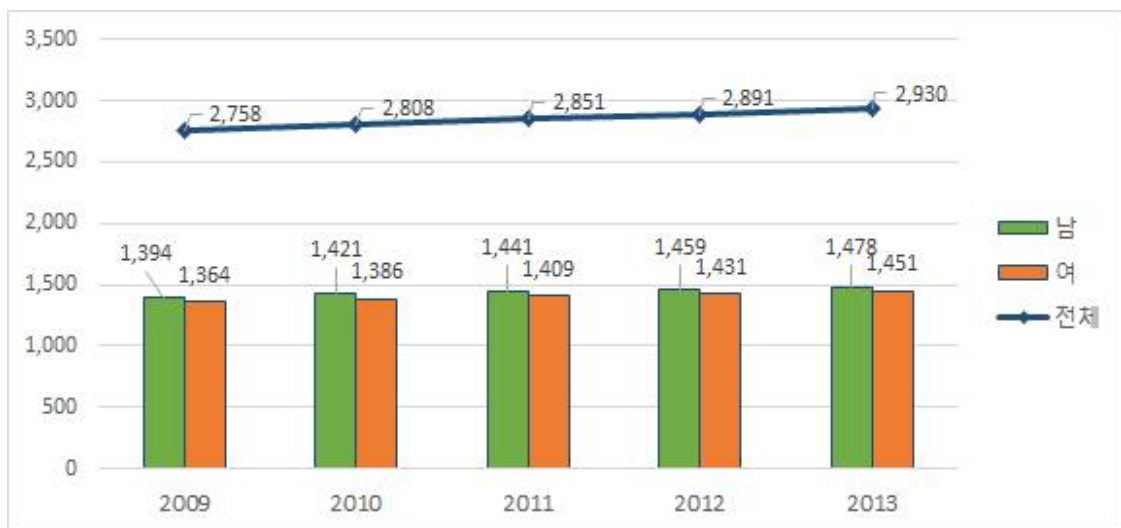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의 세대수 및 인구수는 2009년 말 1,026,936세대, 2,758,431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말에는 1,118,988세대 2,930,164명으로 나타났음.

- 성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2013년에 남성이 1,478,862명으로 50.5%, 여성이 1,451,302명으로 49.5%로 나타남에 따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세대 당 인구수는 2009년 2.64명에서 2013년 2.5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009년 225,683명에서 2013년 282,47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2〉 인천광역시 인구변화 추이

(단위: 천명)



○ 인천광역시의 군·구별 인구현황

- 2013년 말 현재 인천광역시의 군·구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부평구가 56만 5,313명으로 전체 인구의 19.3%를 차지함에 따라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동구가 17.7%인 51만 8,781명, 서구가 17.0%인 50만 468명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옹진군이 0.7%인 2만 826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었으며, 강화군이 2.3%인 6만 7,359명, 동구는 2.6%인 7만 6,148명 순으로 나타났음.
-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강화군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옹진군이 19.8%, 동구가 1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구가 7.2%, 연수구가 7.5%, 계양구가 7.6%로 고령 인구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세대 당 인구수는 연수구가 2.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구가 2.74명, 계양구가 2.69명 순으로 나타났고, 옹진군과 강화군은 각각 1.88명, 2.2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 인천광역시 군·구별 인구 현황(2013년)

(단위: 세대, 명, %)

구분	인구		성비		세대수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당 인구
		구성비	남성	여성			구성비	
인천광역시	2,930,164	100.0%	50.0%	49.5%	1,118,988	282,471	9.6%	2.61명
중 구	111,611	3.8%	51.8%	48.2%	47,949	13,993	12.5%	2.32명
동 구	76,148	2.6%	50.4%	49.6%	30,966	11,666	15.3%	2.45명
남 구	418,066	14.3%	50.5%	49.5%	171,342	50,852	12.2%	2.43명
연수구	304,834	10.4%	50.0%	50.0%	107,906	22,994	7.5%	2.82명
남동구	518,781	17.7%	50.5%	49.5%	194,917	44,892	8.7%	2.66명
부평구	565,313	19.3%	50.0%	50.5%	214,173	53,902	9.5%	2.63명
계양구	346,759	11.8%	50.1%	49.9%	128,889	26,219	7.6%	2.69명
서 구	500,468	17.0%	51.0%	49.0%	182,028	35,832	7.2%	2.74명
강화군	67,359	2.3%	50.3%	49.7%	29,713	18,002	26.7%	2.27명
옹진군	20,826	0.7%	56.3%	43.5%	11,105	4,119	19.8%	1.88명

자료 : 인천광역시, 2013년 4/4분기 계간 인천통계, 2013

2)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 영·유아 인구 현황

- 인천광역시의 3세 이하 아동 인구는 2009년 10만 1,907명에서 2013년 10만 9,81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구와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서는 3세 미만 아동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 지역인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에서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인천광역시 영·유아 인구 현황

(단위: 명)

지역	0-3세					4-6세				
	2009	2010	2011	2012	2013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천광역시	101,907	103,169	105,009	108,416	109,815	77,841	75,149	78,241	81,695	82,734
중 구	3,385	3,536	3,457	3,728	4,397	2,520	2,498	2,595	2,977	3,280
동 구	2,873	3,106	3,014	2,908	2,773	2,098	2,130	2,119	2,104	2,038
남 구	14,497	14,675	14,297	14,231	13,994	10,435	9,963	10,033	10,280	10,224
연수구	8,987	9,343	9,817	10,357	10,970	7,702	7,576	8,041	8,416	8,858
남동구	18,999	19,002	20,199	20,881	20,553	13,973	13,670	14,881	15,573	15,711
부평구	21,019	20,826	20,006	19,979	19,749	15,837	14,811	14,892	14,892	14,696
계양구	13,260	13,409	12,891	12,818	12,732	10,021	9,589	9,389	9,437	9,396
서 구	16,816	17,254	19,331	21,560	22,825	13,624	13,319	14,651	16,392	16,949
강화군	1,453	1,438	1,363	1,354	1,280	1,238	1,199	1,224	1,196	1,170
옹진군	618	580	634	600	542	393	394	416	428	412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 4-6세 아동인구는 2009년 7만 7,841명에서 2013년 8만 2,73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세 미만 아동과 마찬가지로 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서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다른 군·구에서는 2009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인천광역시의 미취학 아동인구는 증가추세에 있었지만, 군·구별로 아동인구 증감 추세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2-3〉 인천광역시 영·유아 인구 변화 추이

(단위: 1,000명)



○ 65세 이상 인구 현황

- 인천광역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22만 5,683명으로 전체 인구의 8.3%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28만 2,471명으로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5〉 인천광역시 65세 이상 인구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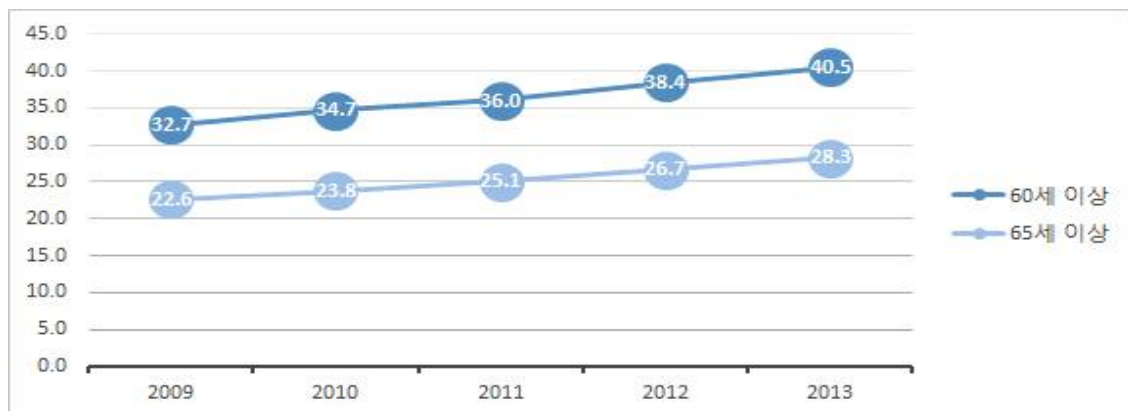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천광역시	225,683	8.3	237,805	8.6	250,528	8.9	267,059	9.4	282,471	9.8
중 구	10,387	11.6	11,045	11.9	11,558	12.4	12,766	12.9	13,993	13.0
동 구	9,801	12.7	10,390	13.0	10,772	13.7	11,250	14.7	11,666	15.5
남 구	42,023	10.0	44,287	10.4	45,947	11.0	48,523	11.7	50,852	12.4
연수구	18,466	6.8	19,307	6.9	20,535	7.1	21,640	7.4	22,994	7.7
남동구	34,166	7.4	36,405	7.7	39,565	8.0	42,370	8.4	44,892	8.9
부평구	44,673	7.9	46,859	8.3	48,651	8.7	51,401	9.2	53,902	9.7
계양구	21,452	6.2	22,563	6.5	23,334	6.8	24,684	7.2	26,219	7.6
서 구	25,691	6.5	27,319	6.7	29,798	6.8	33,059	7.0	35,832	7.3
강화군	15,564	23.2	16,010	23.9	16,579	24.8	17,363	26.0	18,002	27.0
옹진군	3,460	19.0	3,620	19.3	3,789	19.4	4,003	20.0	4,119	19.9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 군·구 별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화군으로 전체 인구의 27.0%가 65세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옹진군 19.9%, 남구 15.5% 순으로 나타났음.
- 아동인구의 증감추세와 달리, 노인인구의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4〉 인천광역시 60세, 65세 이상 인구변화 추이

(단위: 만 명)



○ 장애인 인구 현황

- 등록 장애인의 전체 규모는 2009년 126,738명에서 2013년 133,778명으로 증가함.

〈표 2-6〉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명)

지역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09	126,738	10,850	18,196	22,084	19,227	26,250	30,131
2010	131,699	11,187	17,775	22,602	20,598	27,666	31,871
2011	131,789	10,863	17,249	22,476	20,692	27,950	32,559
2012	133,467	10,875	17,220	22,887	20,691	28,384	33,410
2013	133,778	10,701	17,151	22,975	20,563	28,383	34,005
중 구	5,368	335	647	930	863	1,147	1,446
동 구	4,872	338	649	893	828	1,051	1,113
남 구	20,918	1,375	2,479	3,500	3,343	4,861	5,360
연수구	11,630	1,074	1,603	2,000	1,730	2,476	2,747
남동구	22,560	1,864	2,901	3,917	3,409	4,689	5,780
부평구	27,232	2,417	3,642	4,721	4,049	5,645	6,758
계양구	14,213	1,142	1,674	2,388	2,152	2,920	3,937
서 구	20,461	1,476	2,601	3,510	3,087	4,286	5,501
강화군	5,099	480	768	924	874	1,020	1,033
옹진군	1,425	200	187	192	228	288	330

자료 : 인천광역시, 2013년 4/4분기 계간 인천통계, 2013

- 장애등급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6급이 3만 4,0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급이 2만 8,383명 3급 2만 2,975명 순이었음.

〈그림 2-5〉 인천광역시 장애인 등록 변화 추이

(단위: 명)



○ 여성가구주 가구 현황

- 2010년 현재 인천광역시 91만 8,850가구 중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는 22만 8,481가구로 24.87%임.

〈표 2-7〉 인천광역시 여성가구주 가구 현황(2010년)

(단위: 가구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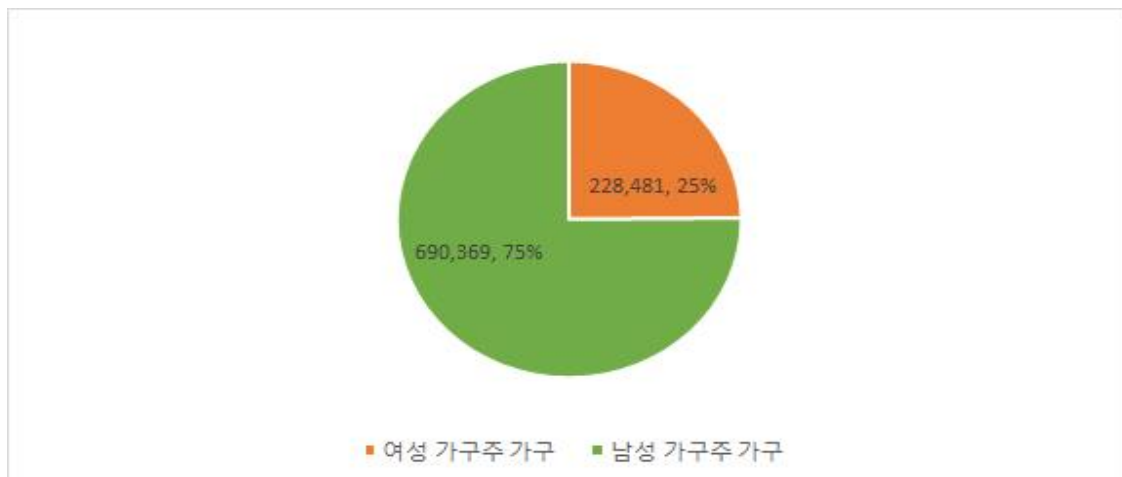
지역	일반 가구수	여성가구주 가구수	남성가구주 가구수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
인천광역시	918,850	228,481	690,369	24.87
중 구	31,121	8,901	22,220	28.60
동 구	26,287	6,920	19,367	26.32
남 구	151,908	41,247	110,661	27.15
연수구	94,007	21,340	72,667	22.70
남동구	157,859	40,537	117,322	25.68
부평구	187,494	47,293	140,201	25.22
계양구	113,561	27,560	86,001	24.27
서 구	128,975	28,088	100,887	21.78
강화군	21,686	5,113	16,573	23.58
옹진군	5,952	1,482	4,470	24.90

자료 : 인천광역시, 2013 인천광역시통계연보, 2014

- 10개 군·구 중 중구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28.60%로 다른 군·구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서구가 21.78%로 가장 낮은 수준임.

〈그림 2-6〉 인천광역시 여성 가구주 가구 현황(2010년)

(단위: 가구수, %)



○ 등록외국인 현황

- 인천광역시 내의 외국인은 2009년 4만 7,852명에서 2013년 5만 382명으로 약 5.3% 증가하였으며, 남동구가 1만 1,7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서구가 1만 433명으로 나타났다.

〈표 2-8〉 인천광역시 등록 외국인 현황

(단위: 명, %)

연도별 군구별	총인구	외국인				
		계	남	여	구성비	증가율
2009	2,758,431	47,852	29,259	18,593	1.7	-
2010	2,808,288	49,992	31,083	18,909	1.8	4.5
2011	2,851,490	50,217	30,523	19,694	1.8	0.5
2012	2,891,286	47,305	28,099	19,206	1.6	-5.8
2013	2,930,164	50,382	30,027	20,355	1.7	6.5
중 구	111,611	3,837	1,983	1,854	3.4	-
동 구	76,148	1,055	591	464	1.4	-
남 구	418,066	6,736	3,384	3,352	1.6	-
연수구	304,834	4,529	2,294	2,235	1.5	-
남동구	518,781	11,760	8,650	3,110	2.3	-
부평구	565,313	3,828	4,051	4,277	0.7	-
계양구	346,759	2,953	1,249	1,704	0.9	-
서 구	500,468	10,433	7,399	3,034	2.1	-
강화군	67,359	623	355	268	0.9	-
옹진군	20,826	128	71	57	0.6	-

자료 : 인천광역시, 2013. 4/4분기 계간 인천통계, 2013

- 남성 외국인은 남동구와 서구가 각각 8,650명, 7,399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여성 외국인은 부평구가 4,27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인천광역시 등록 외국인 변화 추이

(단위: 만 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인천광역시 기초생활수급자는 2009년 7만 2,492명에서 2013년 7만 133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급 가구수는 2009년 3만 9,887가구에서 2013년 4만 1,950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반 수급자가 대략 90%를 차지하였으며, 특례수급자와 시설수급자는 각각 5%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옹진군과 강화군에서는 시설수급자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음

〈표 2-9〉 인천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단위: 가구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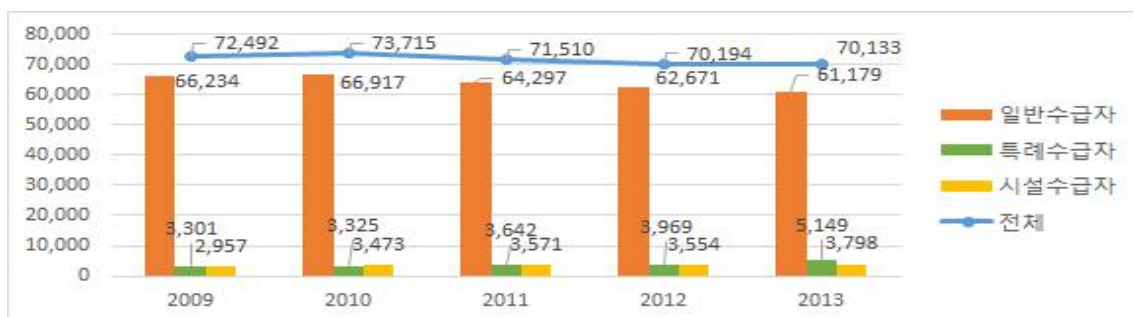
지역	전체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가구수	인원수	시설수	인원수
2009	39,887	72,492	37,835	66,234	2,052	3,301	55	2,957
2010	41,075	73,715	39,005	66,917	2,070	3,325	176	3,473
2011	40,631	71,510	38,511	64,297	2,120	3,642	221	3,571
2012	40,890	70,194	38,669	62,671	2,221	3,969	251	3,554
2013	41,950	70,133	38,913	61,179	2,757	5,149	273	3,798
중 구	2,284	3,487	2,130	3,052	139	253	15	182
동 구	1,642	2,411	1,533	2,163	102	181	7	67
남 구	5,903	9,668	5,536	8,409	334	683	33	576
연수구	4,666	7,854	4,444	7,042	207	419	15	393
남동구	7,863	13,302	6,908	11,453	907	1,553	47	295
부평구	9,984	16,643	9,473	15,016	444	825	62	797
계양구	3,252	5,462	3,032	4,924	197	364	23	174
서 구	4,308	7,772	3,925	6,387	349	719	34	666
강화군	1,781	3,011	1,673	2,383	77	151	30	476
옹진군	267	523	259	350	1	1	7	172

자료 : 인천광역시, 2013 4/4분기 계간 인천통계, 2013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일반 수급자는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특례수급자와 시설수급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8〉 인천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화 추이

(단위: 명)



○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규모는 2008년 28,116명에서 2013년 37,909명으로 증가하였음.
- 2013년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는 67.2%인 25,456명이며, 나머지 32.8%인 12,453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임.

〈표 2-10〉 인천광역시의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

	전체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인원(명)	가구	인원(명)	가구	인원(명)
2008	10,592	28,116	5,239	13,649	5,353	14,467
2009	12,022	31,471	6,423	16,757	5,599	14,714
2010	7,458	19,168	7,458	19,168		
2011	6,698	7,262	5,547	14,414	1,151	3,008
2012	14,373	37,067	8,961	22,874	5,412	14,193
2013	14,281	37,909	9,684	25,456	4,597	12,453
중구	480	1,240	282	727	198	513
동구	408	1,093	241	637	167	456
남구	2,087	5,478	1,464	3,808	623	1,670
연수구	1,560	4,078	805	2,104	755	1,974
남동구	3,075	8,169	1,968	5,170	1,107	2,999
부평구	3,061	8,214	2,141	5,667	920	2,547
계양구	1,708	4,710	1,223	3,335	485	1,375
서구	1,591	4,109	1,394	3,573	197	536
강화군	264	698	129	340	135	358
옹진군	47	120	37	95	10	25

자료 : 인천광역시, 2014년 인천통계연보, 2014

○ 독거노인 현황

- 2013년 독거노인은 64,758명이며, 이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19.1%인 12,372명, 저소득 노인은 10.6%인 6,848명, 나머지 70.3%인 45,538명은 일반 노인임.

〈표 2-11〉 인천광역시의 독거노인 현황

	전체(명)	기초생활 수급자(명)	저소득 노인(명)	일반 노인(명)
2013	64,758	12,372	1,876	45,538
중구	3,504	893	76	2,433
동구	3,050	602	58	2,219
남구	11,470	1,829	410	8,385
연수구	4,555	926	150	3,244
남동구	9,965	1,741	685	5,708
부평구	13,185	3,304	168	9,146
계양구	6,107	876	102	4,626
서구	7,718	1,167	125	5,939
강화군	4,488	976	83	3,300
옹진군	716	58	19	538

자료 : 인천광역시, 2014년 인천통계연보, 2014

○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 현황

- 인천광역시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08년 267만 4,159명에서 2012년 279만 7,36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7년 21.3%에서 2012년 27.1%로 높아진 직장 가입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짐.

〈표 2-12〉 인천광역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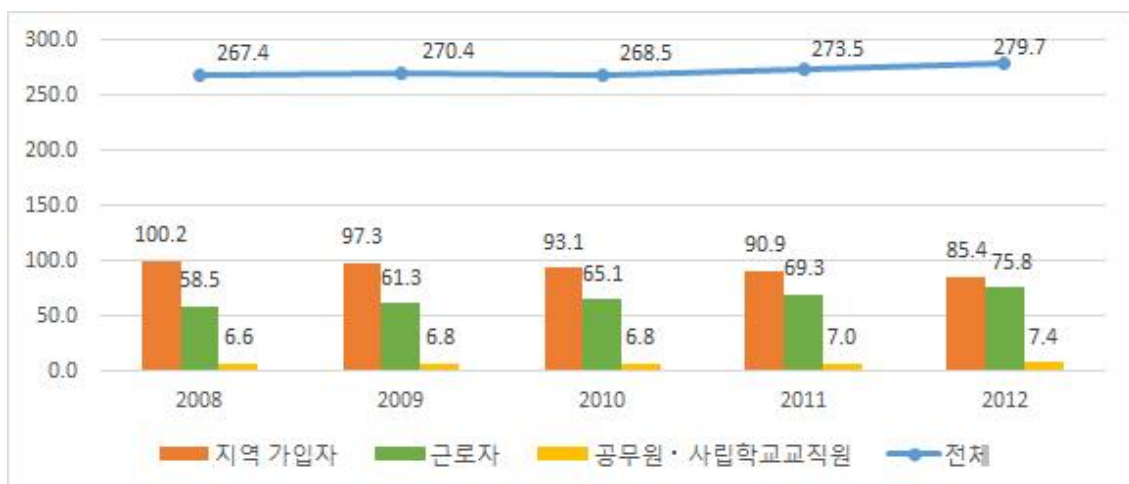
연도	전체	직장가입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지역 가입자
		가입자	피부양자	가입자	피부양자	
2008	2,674,159	585,013(21.9)	895,047(33.5)	66,035(2.5)	126,419(4.7)	1,001,645(37.5)
2009	2,703,563	612,668(22.7)	923,510(34.2)	67,667(2.5)	126,334(4.7)	973,384(36.0)
2010	2,684,944	651,133(24.3)	917,329(34.2)	68,154(2.5)	117,295(4.4)	931,033(34.7)
2011	2,734,940	693,148(25.3)	945,245(34.6)	69,730(2.5)	118,098(4.3)	908,719(33.2)
2012	2,797,365	758,332(27.1)	991,747(35.5)	73,613(2.6)	119,783(4.3)	853,890(30.5)

자료 : 인천광역시, 2013년 인천광역시통계연보, 2013
괄호() 안은 비율(%).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가입자의 비율은 2008년 이후 2011년 까지 2.5%를 유지하다가 2012년에서야 2.6%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가입자는 2008년 37.5%에서 2012년에는 30.5%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9〉 인천광역시 건강보험 적용인구 변화 추이

(단위: 만 명)



○ 국민연금 적용 인구 현황

- 인천광역시의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는 2008년 91만 2,495명에서 2012년 100만 64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사업장 가입자가 2008년 45.2%에서 2012년 49.5%로 증가한 반면, 지역 가입자는 2008년 54.6%에서 2012년 49.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인천광역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12년)

(단위: 명, %)

지역	전체 가입자수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2008	912,495	412,298(45.2)	497,788(54.6)	1,208(0.1)	1,201(0.1)
2009	927,363	431,835(46.6)	492,348(53.1)	1,623(0.2)	1,557(0.2)
2010	956,549	457,327(47.8)	493,067(51.5)	4,235(0.4)	1,920(0.2)
2011	981,296	476,099(48.5)	494,357(50.4)	8,463(0.9)	2,377(0.2)
2012	1,000,649	495,711(49.5)	491,345(49.1)	10,230(1.0)	3,363(0.3)
중 구	55,005	36,788(66.9)	17,743(32.3)	316(0.6)	158(0.3)
동 구	37,456	24,249(64.7)	12,927(34.5)	175(0.5)	105(0.3)
남 구	130,173	49,022(37.7)	79,424(61.0)	1,144(0.9)	583(0.4)
연수구	77,962	33,195(42.6)	42,927(55.1)	1,585(2.0)	255(0.3)
남동구	217,117	128,395(59.1)	86,031(39.6)	2,050(0.9)	641(0.3)
부평구	186,627	84,668(45.4)	99,070(53.1)	2,218(1.2)	669(0.4)
계양구	98,270	34,800(35.4)	62,001(63.1)	1,154(1.2)	315(0.3)
서 구	172,702	94,717(54.8)	76,157(44.1)	1,373(0.8)	455(0.3)
강화군	19,449	7,405(38.1)	11,725(60.3)	165(0.8)	154(0.8)
옹진군	5,888	2,472(42.0)	3,338(56.7)	50(0.8)	28(0.5)

자료 : 인천광역시, 2013년 인천광역시통계연보, 2013
괄호() 안은 비율.

- 사업장 가입자의 수는 남동구가 12만 8,3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 사업장 가입자의 비율은 중구가 66.9%로 가장 높은 반면, 강화군이 38.1%로 가장 낮았음.
- 지역가입자의 수는 부평구가 9만 9,07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구별 지역가입자의 비율은 계양구가 63.1%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32.3%로 가장 낮았음.

〈그림 2-10〉 인천광역시 국민연금 가입자 수 변화 추이

(단위: 만 명)



2. 복지수요의 전망

1) 주민복지욕구조사

(1) 주민복지욕구조사 개요

○ 주민복지욕구조사

- 복지에 대한 인천시민의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설문조사표를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실시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를 취합한 후에 분석하였음.
- 조사표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응답하였으며, 조사내용은 가구 일반 사항, 가구의 주거사항, 가구주와 가구의 소득·자산·부채, 가구의 생활여건,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복지대상이 있는 가구에 대한 설문 등으로 구성되었음.
- 각 군·구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한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매뉴얼에 제시된 표준 문항만을 분석하였음.

〈표 2-14〉 군·구별 표본의 가구 수, 가구원수, 평균 가구원 수

지역	가구		가구원		평균 가구원 수
	가구수	비율	가구원 수	비율	
인천광역시	4,178가구	100.0%	12,202명	100.0%	2.92명
중 구	402가구	9.6%	1,090명	8.9%	2.71명
동 구	468가구	11.2%	1,320명	10.8%	2.82명
남 구	450가구	10.8%	1,322명	10.8%	2.94명
연수구	413가구	9.9%	1,277명	10.5%	3.09명
남동구	420가구	10.1%	1,340명	11.0%	3.19명
부평구	405가구	9.7%	1,172명	9.6%	2.89명
계양구	400가구	9.6%	1,211명	9.9%	3.03명
서 구	404가구	9.7%	1,353명	11.1%	3.39명
강화군	416가구	10.0%	1,161명	9.5%	2.79명
옹진군	400가구	9.6%	956명	7.8%	2.39명

○ 주민복지욕구조사 응답 현황

-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조사에 포함된 가구는 총 4,178가구이며, 가구원수는 12,202명, 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는 2.92명임.
- 표본에 포함된 군·구당 가구수는 400~468가구였으며, 가구원수는 956~1,353명, 평균 가구원수는 2.71~3.39명으로 나타났음.
- 표본의 군·구별 가구 분포는 9.6~11.2%로 계양구와 옹진군이 400가구로 가장 적었고, 동구가 468가구로 가장 많았음.

- 가구원수는 956명~1,353명으로 웅진군이 가장 적었고, 서구가 가장 많았음.
- 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는 중구가 2.7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서구와 웅진군이 3.39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2-15〉 가구주 특성

(단위: 가구수, %)

가구일반사항	가구주 특성	가구수	비율
성별	남성	3,256	79.0
	여성	867	21.0
출생지	국내	4107	99.7
	국외	14	0.3
연령	20대	77	1.9
	30대	650	15.9
	40대	1,035	25.3
	50대	848	20.7
	60대	593	14.5
	70대	693	16.9
	80대 이상	203	5.0
혼인상태	유배우	2,979	72.3
	별거	47	1.1
	사별	618	15.0
	이혼	248	6.0
	미혼	212	5.1
	비해당	19	0.5
교육수준	무학	231	5.6
	초등학교	560	13.6
	중학교	458	11.1
	고등학교	1,615	39.2
	전문대학	306	7.4
	대학교	855	20.8
	대학원	92	2.2
경제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1,456	35.3
	임시직 임금근로자	233	5.6
	일용직 임금근로자	200	4.8
	자활근로, 공공근로	170	4.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17	5.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58	18.4
	무급 가족종사자	19	0.5
	실업자	100	2.4

가구일반사항	가구주 특성	가구수	비율
	가정주부	166	4.0
	학생	2	0.0
	연로자	664	16.1
	기타	87	2.1
	비해당	53	1.3
장애유무	비장애	3,629	88.0
	장애	495	12.0
건강상태	모름	238	5.8
	건강함	2,259	54.8
	보통	376	9.1
	아픔	187	4.5
	3개월 미만 투병·투약	61	1.5
	3~6개월 투병·투약	44	1.1
	6개월 이상 투병·투약	956	23.2
의료급여 수급	비해당	3,041	74.0
	의료급여(1종)	240	5.8
	의료급여(2종)	829	20.2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해당	3,840	93.3
	일반 수급	237	5.8
	조건부 수급	35	0.9
	특례 수급	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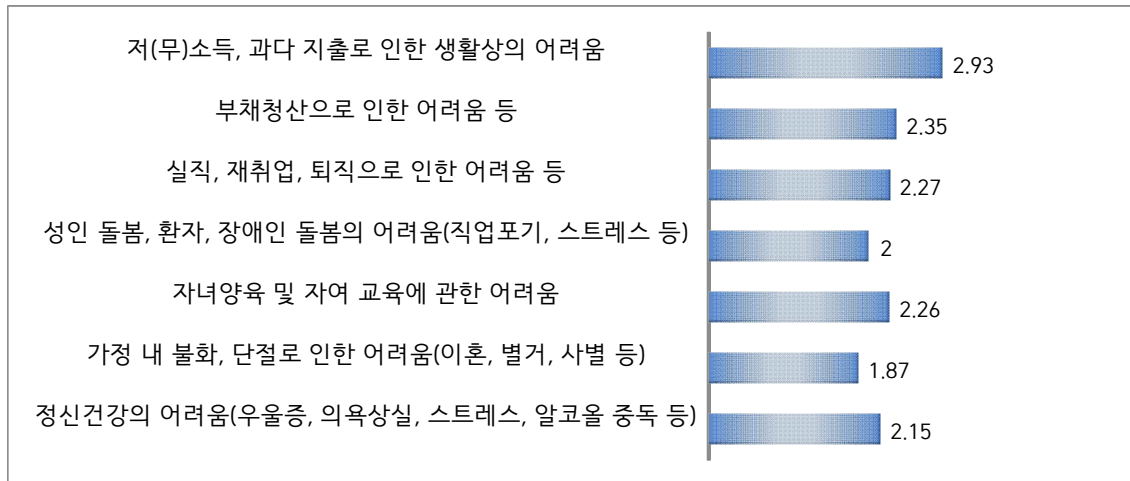
○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 79.0%, 여성 21.0%였으며, 가구주의 연령이 40대인 가구가 1,035가구로 가장 많은 반면, 20대인 가구가 77가구로 가장 적었음.
- 가구주의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72.3%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의 학력이 고등학교인 가구가 39.2%로 가장 많았음.
-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가 상용 임금근로자인 가구가 35.3%로 가장 많았고, 가구주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하는 가구는 18.4%, 가구주가 연로자인 가구가 16.1%로 나타났다.
- 가구주가 장애인인 가구는 12.0%였으며, 가구주가 6개월 이상 투병 혹은 투약중인 가구는 23.2%로 나타났다.

(2) 일반사항 분석

○ 생활여건상의 어려움

- 생활여건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소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2.93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불화로 인한 어려움은 1.87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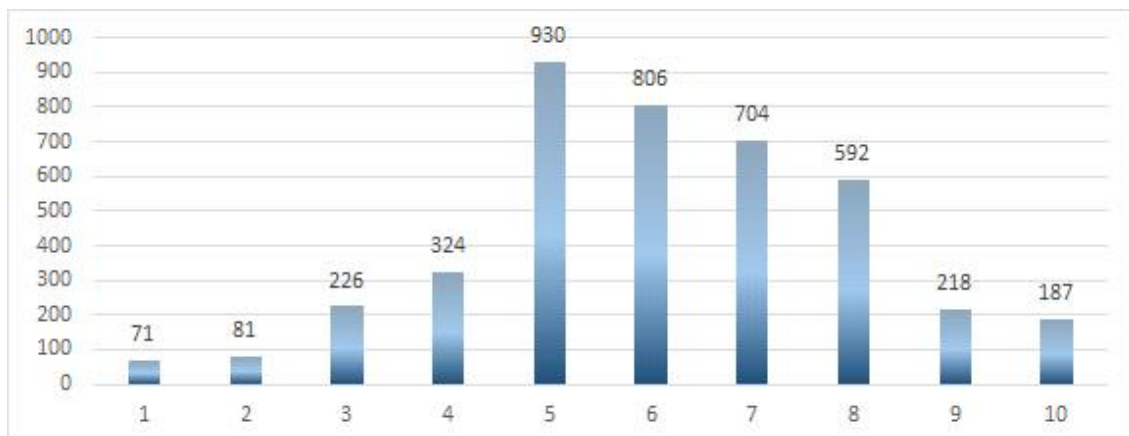


*5점 척도의 평균값.

○ 거주지역 만족도

-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최고점 10점 중 5점이 93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값은 6.1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 인천시민의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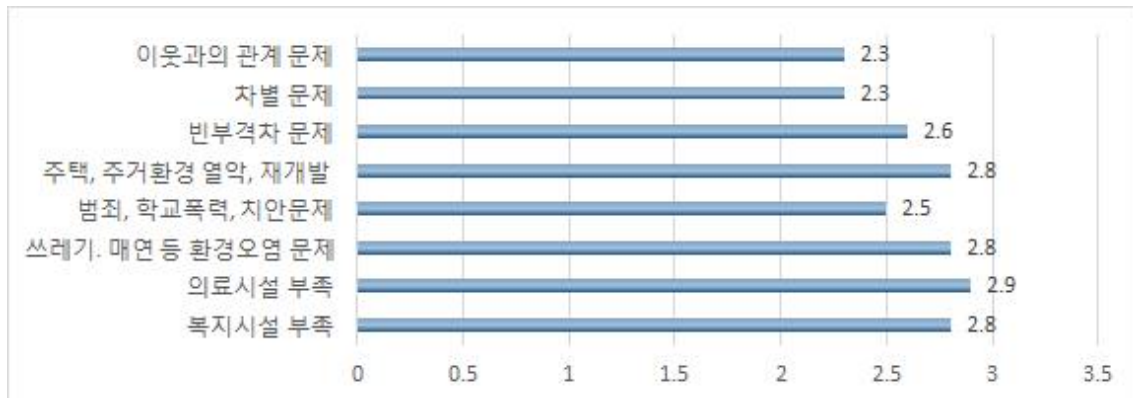


10점 기준 각 점수에 대한 응답자 수

○ 지역사회 문제점

- 인천시민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은 의료시설의 부족이 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시설의 부족과 주거환경의 열악함 2.8점으로 높았음.
- 차별과 이웃과의 관계 문제는 2.3점으로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13〉 인천시민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문제의 심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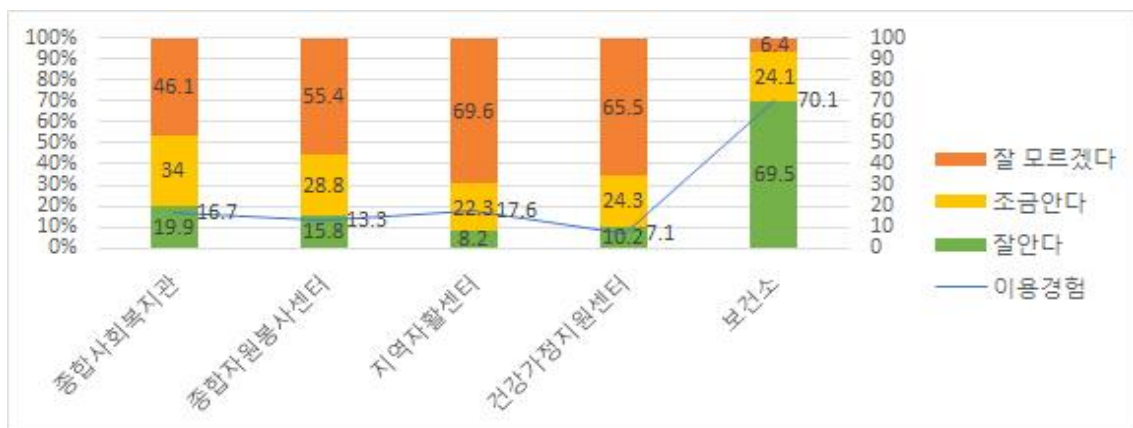
*5점 척도의 평균값

(3) 일반 가구의 복지욕구

○ 사회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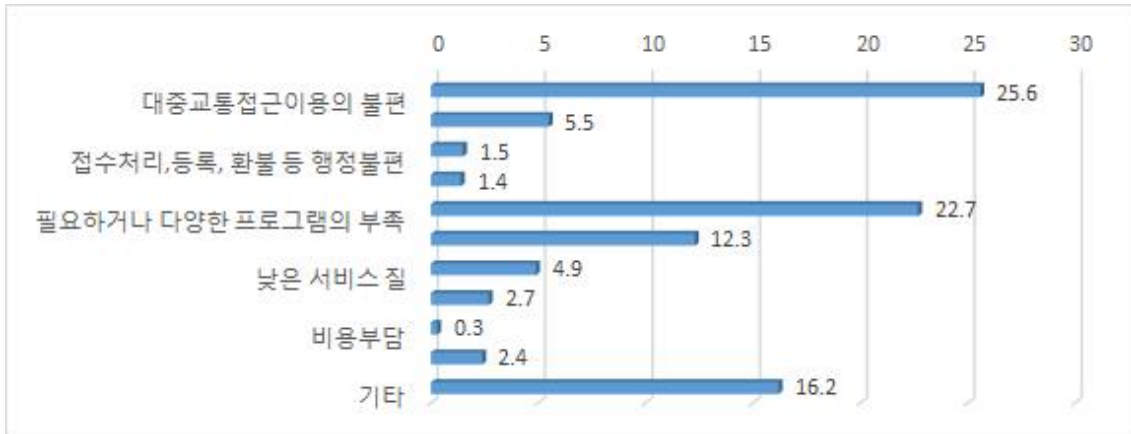
-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인지도는 보건소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자활센터의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용경험 역시 보건소가 가장 많았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이용경험은 가장 낮았음.

〈그림 2-14〉 사회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그림 2-15〉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단위: %)



○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도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행정상의 불편이나 정보제공의 부족, 서비스의 질이나 직원의 불친절, 비용부담으로 인한 불편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16〉 지역사회복지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부문

(단위: %)



○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어르신 관련 서비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4) 여성가구의 복지욕구

○ 여성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여성관련 복지시설의 인지도는 잘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다른 부문의 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용경험에서도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음.
- 여성관련 복지시설 중 청소년수련관과 여성 문화센터의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17〉 여성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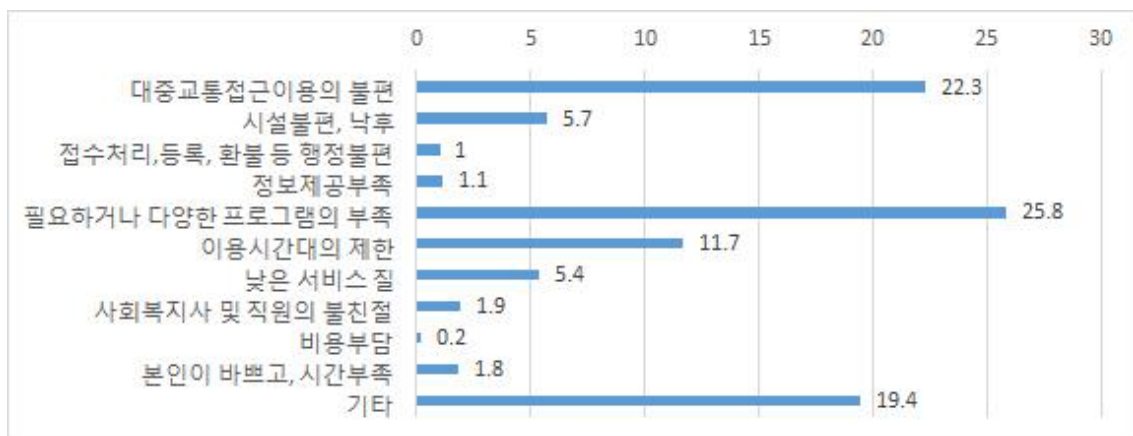


○ 여성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여성관련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은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다양성의 부족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18〉 여성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단위: %)



〈그림 2-19〉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부문

(단위: %)



○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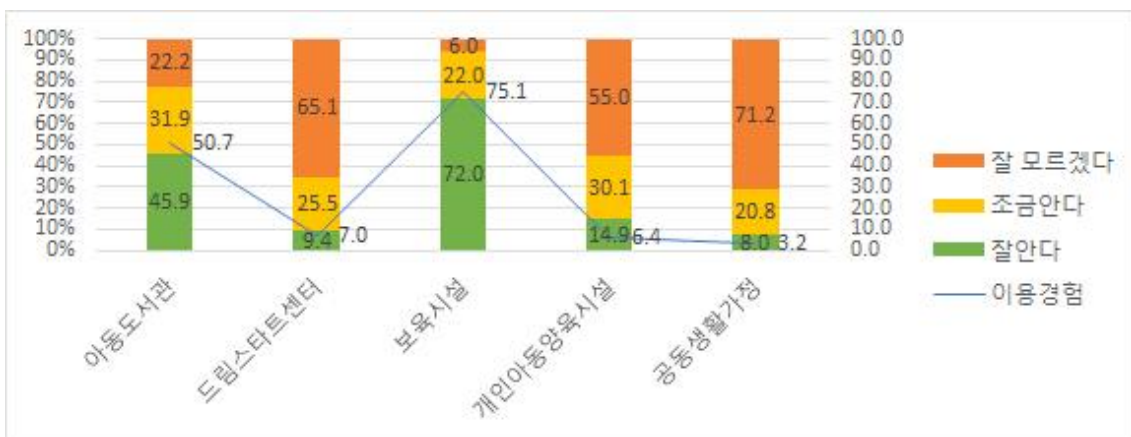
- 여성복지의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문화 및 여가관련 서비스가 3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건강 및 의료 서비스(27.5%),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26.0%) 순으로 나타났다.

(5) 미취학아동 가족의 복지욕구

○ 미취학아동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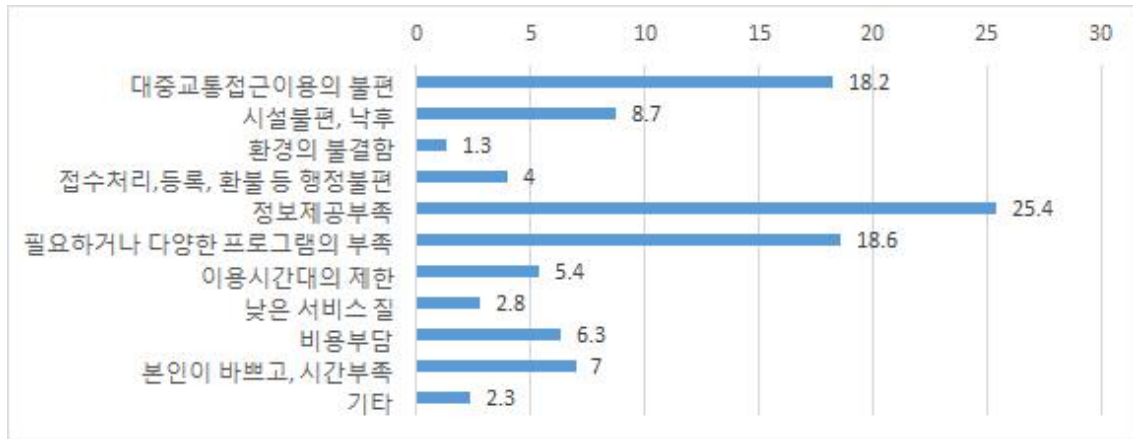
- 취학 전 아동복지 관련 시설의 인지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아동도서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경험 또한 보육시설(75.1%)과 아동도서관(50.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0〉 미취학아동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그림 2-21〉 미취학아동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단위: %)



○ 미취학아동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미취학 아동 관련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으로는, 정보제공의 부족이 2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다양성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18.6%,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의 불편함이 18.2%로 나타났다.

〈그림 2-22〉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부문

(단위: %)



○ 미취학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36.9%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도 27.4%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아동(초등학생) 가구의 복지욕구

○ 취학아동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의 인지도는 도서관이 5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청소년 수련관 43.5%, 공부방, 40.6% 순으로 나타났음.
- 이용경험에서도 도서관이 57.9%, 청소년 수련관 39.1%, 공부방 31.6%로 나타남에 따라 인지도는 이용경험과 비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2-23〉 아동(초등학생)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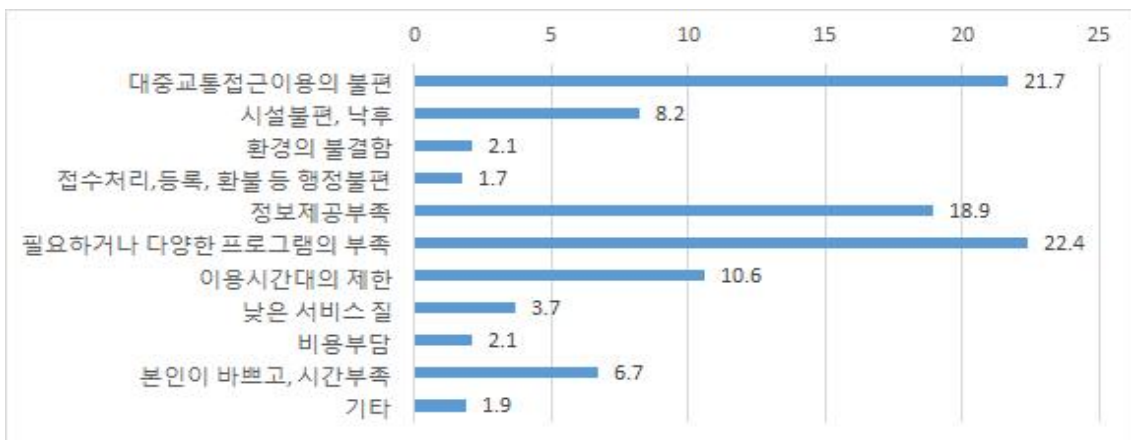


○ 취학아동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취학 아동 대상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접근의 불편함이 21.7%로 나타났으며, 정보제공의 부족도 18.9%로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24〉 아동(초등학생)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단위: %)



○ 취학아동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취학 아동 대상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접근의 불편함이 21.7%로 나타났으며, 정보제공의 부족도 18.9%로 상대적으로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25〉 아동(초등학생)의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부문

(단위: %)



○ 취학아동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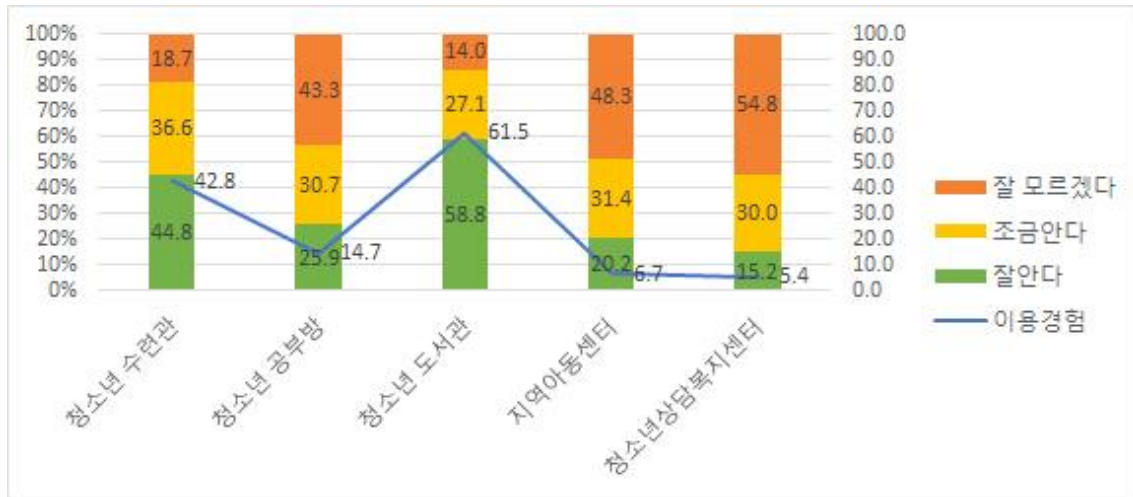
- 취학 아동의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방과 후 학습 지도가 2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체험학습활동이 24.3%로 나타났으며, 취미·특기교실 19.9%, 자녀교육비 지원 15.6% 순으로 나타났음.

(7) 청소년가구의 복지욕구

○ 청소년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청소년 복지 시설의 인지도는 청소년 도서관이 5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청소년 수련관이 44.8%로 나타났음.
- 이용경험도 청소년 도서관이 61.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청소년 수련관이 42.8%로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26〉 청소년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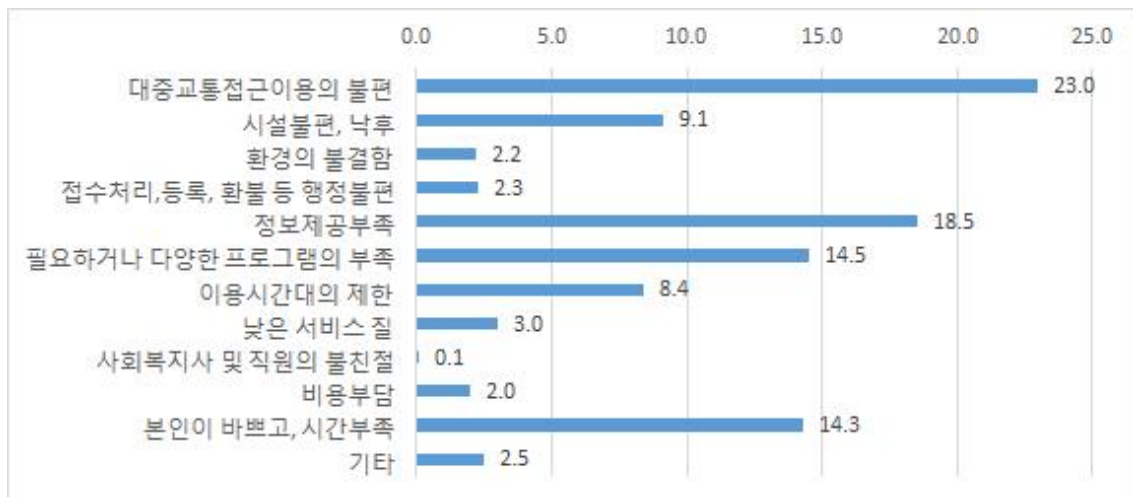


○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청소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의 불편함이 23.0%로 가장 컸으며, 정보제공과 프로그램의 부족이 각각 18.5%, 14.5%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27〉 청소년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단위: %)



〈그림 2-28〉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성격이나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상담이 27.6%로 가장 높았고, 진로상담도 26.2%로 필요성이 높았으며, 학습능력 향상(19.1%)과 문화나 취미활동 서비스(16.2%)도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8) 노인가구의 복지욕구

○ 노인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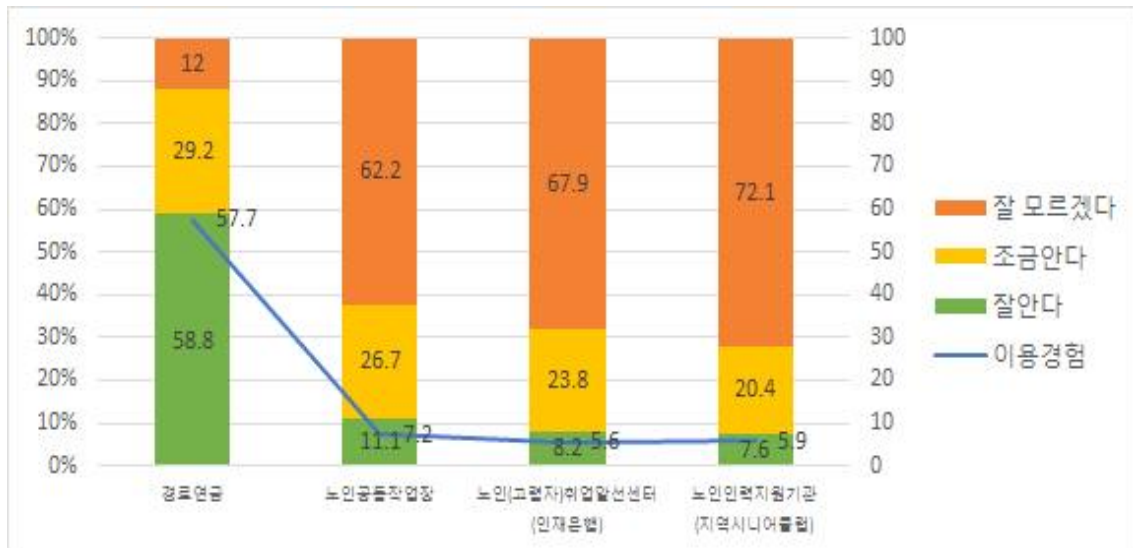
- 여가부문의 노인복지시설 관련 인지도, 이용경험은 경로당(노인정)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교육기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9〉 노인(여가부문)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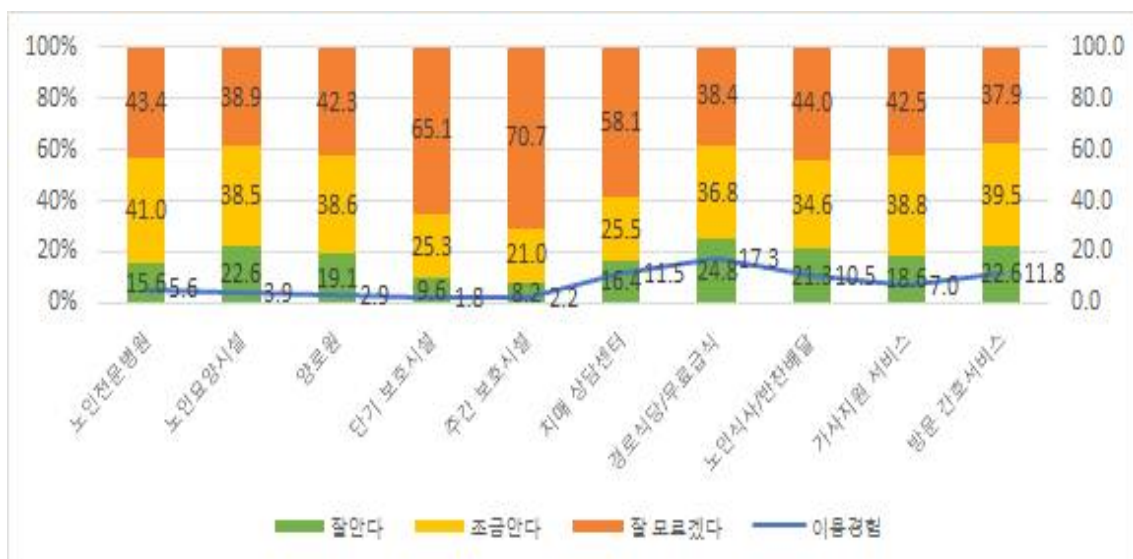
- 노인의 소득보장 및 취업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경로연금이 58.8%로 가장 높았으며, 이용경험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금보다는 취업관련 시설의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노인공동작업장의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0> 노인(소득 및 취업부문)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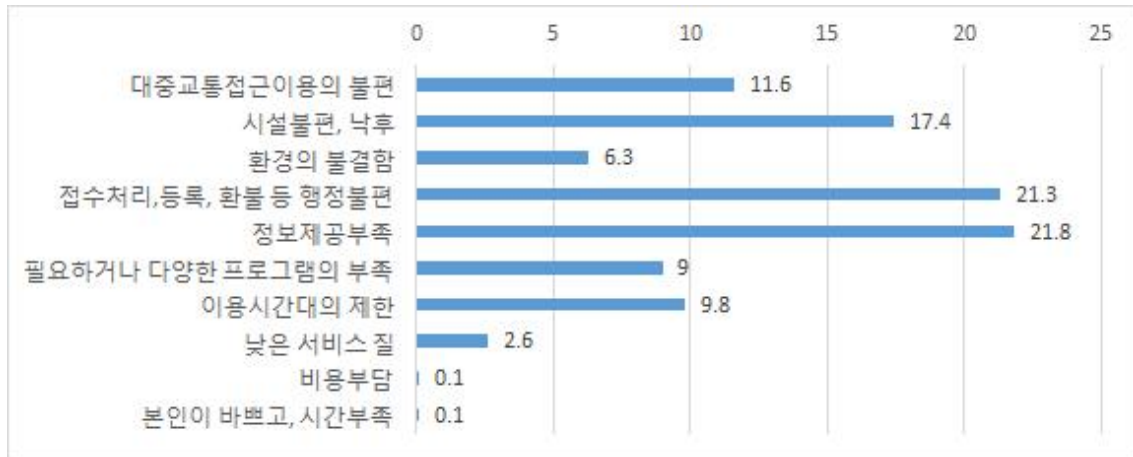
- 노인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낮았으며, 경로식당/무료급식은 인지도와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1> 노인(요양 및 보호시설, 기타 영역)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그림 2-32〉 노인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단위: %)



○ 노인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노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정보제공의 부족(21.8%)과 행정과 관련된 사항(21.3%)으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의 낙후로 인한 불편함(17.4%)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3〉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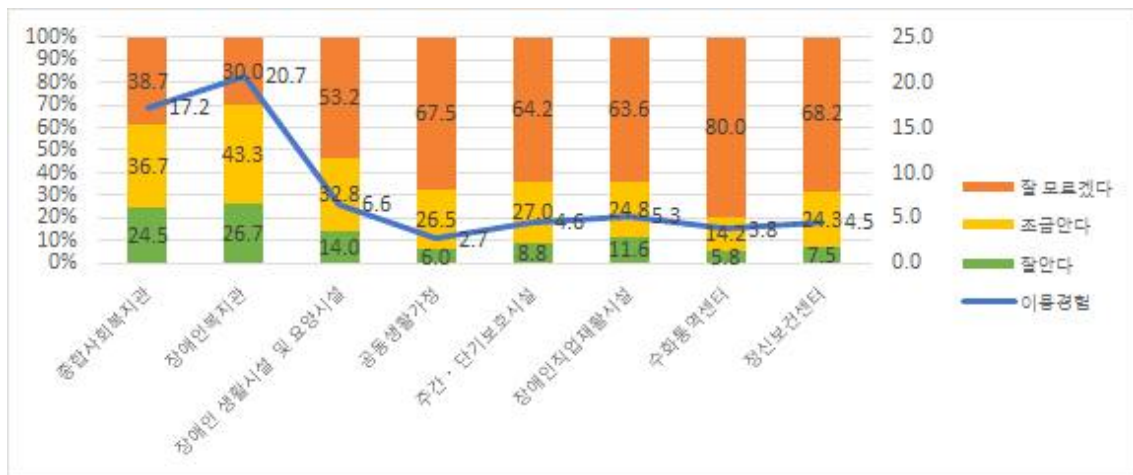
- 노인이 있는 가구에서 노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로는 가사지원 서비스가 19.2%, 방문간호 서비스 16.2%로 가정방문과 관련된 서비스의 필요성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고용지원 서비스 14.7%와 복지정보 제공 서비스 12.9% 순으로 나타났다.

(9) 장애인가구의 복지욕구

○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의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종합사회 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절대적인 이용경험은 각각 17.2%, 20.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4〉 장애인 복지시설의 인지도 및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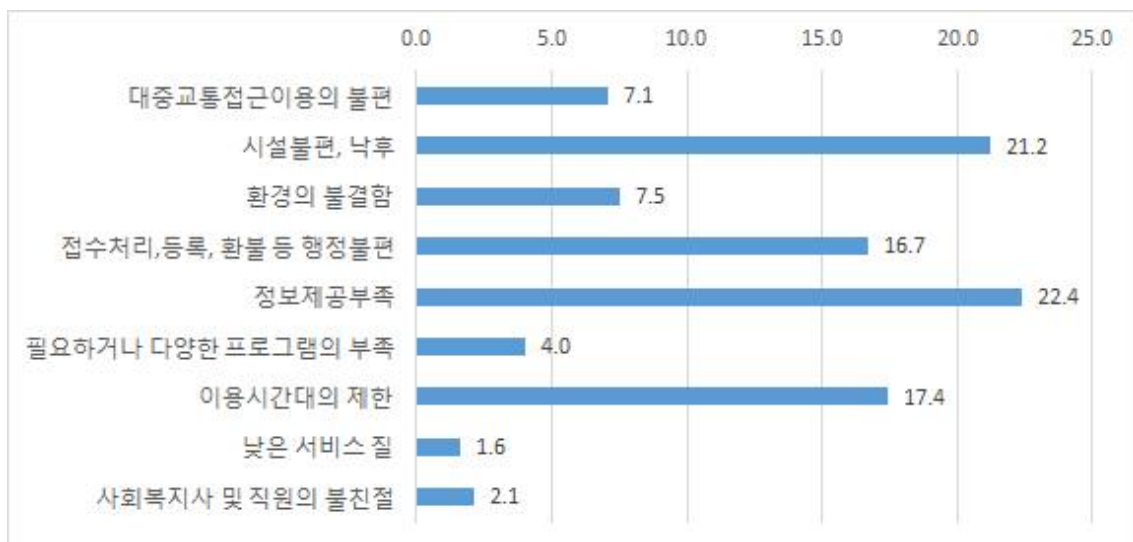


○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으로는 정보제공의 부족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의 낙후로 인한 불편함도 21.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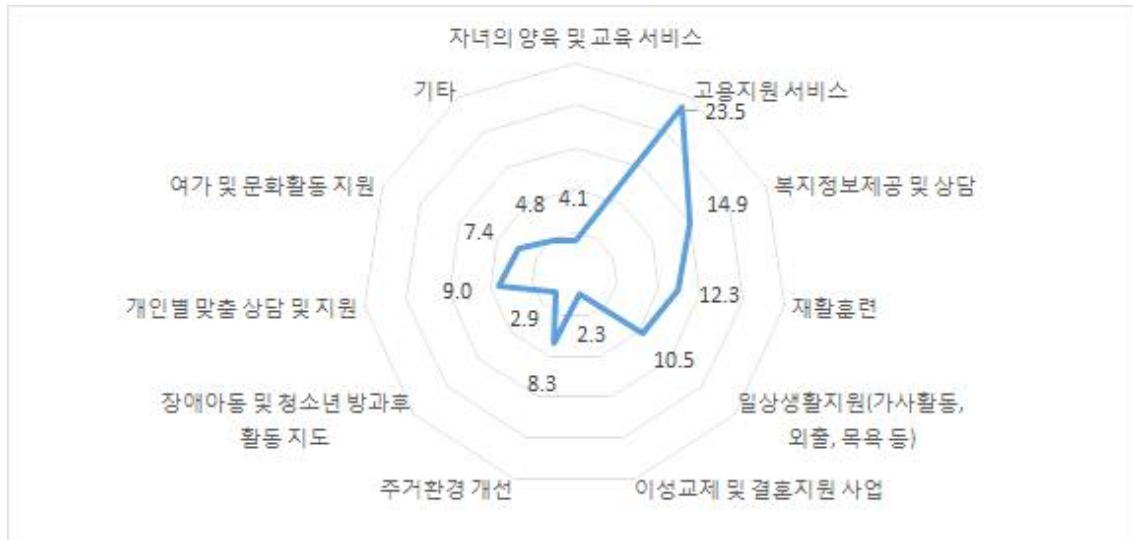
〈그림 2-35〉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단위: %)



〈그림 2-36〉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장애인 가구에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고용지원 서비스가 23.5%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14.9%, 재활훈련 12.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분야별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 평가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인천발전연구원은 2014년 지난 2010년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작성하면서 실시한 설문조사들 중 ‘전문가조사’를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가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동일한 문항으로 2014년 5월~6월에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로 실시함.
 -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에는 인천광역시청 및 각 군·구청의 5급 이하 사회복지 및 보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대학교수와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설문문항들 중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정책 과제’ 부분에서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을 분석함.
 - 중요도를 나타내는 값은 5점 척도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응답자의 소속분야에 따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로 구분하였으며, 합계(=전체 평균)는 소속분야별 평균값을 합산한 후 나누어 산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응답자의 값을 합산한 후 전체 응답자의 수로 나누어 산출한 전체 평균값임.

〈표 2-16〉 기초생활보장분야 정책의 중요도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대상 발굴 및 확대	3.62	4.09	4.00	3.89	3.81	4.18	4.56	3.86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3.81	4.13	4.05	4.00	3.84	4.29	4.56	3.89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3.87	4.08	4.11	4.00	3.86	4.27	4.28	3.90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3.69	4.00	3.93	3.87	3.66	3.86	3.83	3.68
기초생활보장 지원확대(양곡할인, 교복비 지원 등)	3.50	3.87	3.73	3.70	3.49	3.94	3.72	3.53
종합사회복지관 확대	3.42	3.94	3.62	3.70	3.36	3.20	3.50	3.35

- 기초생활보장분야 정책의 중요도
- 기초생활보장분야 정책의 중요도에서 공무원은 2010년과 2014년 모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가장 중요시 하였으며, 시설 종사자는 2010년과 2014년 모두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하였음.
 - 전문가의 경우 2010년에는 ‘기초생활 보장’을 가장 중요시하였으나, 2014년에는 ‘기초생활 보장’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하였음.
 -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의 중요도에서, 공무원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주거복지의 실현을 가장 우선시한 반면, 시설 종사자와 전문가는 상대적으로 소득보장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된 25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정책중요도 분석에 반영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이나 주거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 차상위계층(비수급 저소득층)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에서 2010년에는 공무원, 시설 종사자, 전문가 모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개발’을 가장 중요시하였음.

〈표 2-17〉 차상위계층(비수급 저소득층)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차상위계층 발굴 및 지원사업	3.67	4.26	4.05	4.01	3.76	4.10	4.39	3.81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개발	3.93	4.43	4.22	4.21	3.91	4.31	4.44	3.96
사례관리 사업 강화	3.82	4.24	4.04	4.05	3.83	4.02	3.72	3.84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안전망 확대	3.83	4.20	4.15	4.04	3.97	4.25	4.22	4.00
긴급복지지원체계 구축(희망복지129 활성화)	3.72	4.04	4.00	3.91	3.89	4.04	4.11	3.91
식품 나눔 문화 성화(푸드마켓·푸드뱅크사업)	3.45	3.82	3.65	3.66	3.54	3.76	3.39	3.56
자활분야 일자리 확대	3.82	4.01	4.11	3.94	3.85	4.02	3.94	3.87
자활 관련 시설의 확충	3.70	3.92	3.89	3.83	3.72	3.82	3.83	3.73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3.84	4.16	4.18	4.03	3.86	4.10	4.17	3.89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3.71	4.10	4.02	3.93	3.60	3.71	3.72	3.61

- 2014년에는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안전망 확대’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전문가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개발’을 가장 우선시하였음.
-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무원과 종사자의 정책 중요도에 대한 판단은 2014년에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안전망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화함으로써, 차상위계층의 시민들이 민간보험이나 연금 등의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반면에, 전문가는 2014년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개발’을 가장 중요시함으로써 여전히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

책과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2-18〉 노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	3.97	4.18	3.93	4.07	3.99	4.02	3.94	3.99
의료보장 지원 및 개선	3.89	4.13	4.16	4.04	3.87	4.12	3.94	3.89
노인의 주거정책	3.68	3.96	4.02	3.86	3.72	4.18	3.83	3.76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시설확충	3.71	3.73	3.85	3.73	3.70	3.78	3.89	3.72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내실화 방안	3.82	3.96	3.91	3.90	3.81	4.14	4.22	3.84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인 지원	3.91	4.12	4.11	4.04	3.91	4.29	4.44	3.95
노인의 교육, 여가정책 및 권익증진	3.63	3.92	3.73	3.78	3.61	3.70	3.50	3.62
노인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3.61	3.90	3.84	3.78	3.59	3.75	3.50	3.60
노인 건강관리 지원	3.81	3.97	4.00	3.91	3.78	4.08	3.83	3.80
독거노인 지원정책 개발	3.85	4.07	4.22	4.00	3.85	4.22	4.22	3.88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	3.71	3.93	3.91	3.84	3.68	4.14	4.00	3.72
노인복지시설 확충	3.59	3.87	3.71	3.74	3.59	3.60	3.78	3.59
장묘문화 발전과 장사시설 확충 방안	3.44	3.71	3.44	3.57	3.39	3.65	3.39	3.41

○ 노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노인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2010년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선택한 반면에, 전문가는 ‘독거노인 지원 정책 개발’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에는 공무원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하였으나, 시설 종사자와 전문가는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노인 지원’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선택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공무원, 시설 종사자, 전문가 사이에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2-19〉 장애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연도 소속 분야	2010년				2014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익 옹호	3.80	4.20	4.13	4.04	3.84	4.25	4.56	3.89
장애인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	3.98	4.33	4.16	4.17	3.96	4.22	4.28	3.99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3.91	4.16	4.18	4.06	3.85	4.24	4.18	3.89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3.80	4.09	3.85	3.95	3.78	4.08	4.00	3.81
장애인의 소득보장	3.79	4.19	3.95	4.01	3.79	4.29	4.33	3.84
주거시설 서비스 강화	3.67	3.96	3.93	3.84	3.65	4.10	4.11	3.69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3.73	3.95	4.00	3.87	3.76	4.16	4.28	3.80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내실화	3.72	4.02	3.96	3.89	3.83	4.24	4.11	3.87
이동 및 편의시설 확충	3.90	4.26	4.09	4.10	3.85	4.35	4.22	3.90
정보 접근권 강화	3.74	4.13	3.91	3.95	3.69	4.16	4.11	3.74
장애인 보건, 복지 서비스 강화	3.73	4.08	4.00	3.93	3.74	4.22	4.00	3.78
장애인의 여가, 문화, 체육활동 활성화	3.61	3.96	3.78	3.80	3.61	3.96	3.83	3.64
장애인 평생 교육프로그램 확대	3.64	4.01	3.84	3.85	3.58	3.96	4.06	3.62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3.82	4.08	4.13	3.98	3.75	4.27	4.35	3.8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3.58	4.00	3.93	3.83	3.60	4.14	4.28	3.66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관리체계 구축	3.56	3.90	3.89	3.76	3.61	4.00	4.06	3.65
장애인 시설, 단체 네트워크 구축	3.52	3.92	3.84	3.75	3.56	4.00	3.83	3.60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내실화	3.65	3.93	3.78	3.80	3.66	4.16	4.06	3.71

○ 장애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장애인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에서 2010년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 전문가는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음.
- 2014년에는 공무원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시설 종사자는 ‘이동 및 편의시설 확충’, 전문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익 옹호’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음.
- 이는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고용과 취업, 직업재활을 강조하였으나, 2014년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당장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20〉 여성·가족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연도 소속 분야	2010년				2014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개발	3.94	4.31	4.09	4.14	3.78	4.00	4.22	3.81
일-가족 양립지원	3.88	4.32	4.18	4.13	3.91	4.24	4.29	3.94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4.04	4.35	4.42	4.23	3.94	4.43	4.24	3.99
국, 공립 보육시설 확충	3.98	4.28	4.35	4.16	3.95	4.22	4.18	3.97
보육사업 발전 계획	3.76	4.20	4.02	4.01	3.72	4.00	3.88	3.74
양성평등 문화 확산	3.55	3.99	3.87	3.80	3.60	3.82	4.00	3.63
지역여성문화 발굴 및 지원	3.39	3.82	3.82	3.65	3.47	3.75	3.24	3.48
여성의 복지권 및 건강권 보장	3.51	3.94	3.84	3.76	3.58	4.04	3.65	3.62
취약계층여성(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새터민)에 대한 지원	3.71	4.15	4.09	3.97	3.74	4.12	4.29	3.78
여성인권보호체계 강화	3.54	3.94	3.85	3.77	3.58	3.98	3.88	3.62
여성의 정치 및 사회참여 확대	3.53	3.93	3.85	3.76	3.54	3.94	4.06	3.58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가족의 역량 강화	3.79	4.19	4.15	4.03	3.81	4.06	4.41	3.84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3.80	4.21	4.15	4.04	3.77	4.14	4.18	3.81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3.84	4.21	4.05	4.05	3.64	4.12	4.00	3.69
가족지원기관 확대	3.60	4.11	3.78	3.88	3.57	3.84	3.47	3.59

○ 여성·가족분야 정책의 중요도

- 여성·가족분야 정책의 중요도에서 2010년 공무원과 종사자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전문가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에는 공무원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시설 종사자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전문가는 ‘일-가족 양립지원’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음.
- 여성의 일-가족 양립은 여성·가족정책의 핵심으로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적 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무원, 시설 종사자,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2-21〉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확충	3.70	4.11	3.85	3.92	3.68	4.04	3.94	3.71
아동·청소년 안전 및 문화기반 구축	3.84	4.23	4.09	4.06	3.79	4.26	4.11	3.84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제적 지원	3.83	4.16	4.16	4.03	3.84	4.16	4.28	3.87
아동, 청소년 시설보호 및 자립지원 방안	3.73	4.12	4.05	3.96	3.76	4.12	4.28	3.80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가정보호 지원	3.81	4.20	4.09	4.03	3.85	4.22	4.17	3.89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지원	3.49	3.94	3.75	3.74	3.58	3.92	3.78	3.61
결식아동급식지원 확대	3.79	4.24	4.18	4.06	3.73	4.22	4.17	3.78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3.61	4.04	3.94	3.86	3.66	3.96	4.06	3.69
국내입양사업 활성화	3.62	3.85	3.78	3.75	3.63	3.84	3.94	3.65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	3.90	4.26	4.20	4.11	3.95	4.28	4.33	3.99
아동,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수련활동 지원	3.41	3.88	3.73	3.68	3.47	3.74	3.67	3.49
아동,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3.35	3.73	3.51	3.55	3.36	3.53	3.11	3.37
위기 및 소외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3.81	4.20	4.07	4.03	3.78	4.24	4.17	3.83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3.34	3.83	3.45	3.59	3.45	3.68	3.83	3.47
학교전담사회복지사 배치	3.65	4.20	3.93	3.95	3.73	4.04	3.83	3.75
다문화 가정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3.69	4.08	4.00	3.92	3.58	3.98	3.83	3.62

○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아동·청소년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에서 2010년 공무원, 시설종사자, 전문가는 모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음.
- 2014년에는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는 2010년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이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경제적 지원’과 ‘아동·청소년 시설보호 및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아동·청소년을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22〉 지역사회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복지네트워크 강화	3.89	4.38	4.24	4.17	3.99	4.19	4.22	4.0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3.64	4.17	3.96	3.94	3.65	3.98	3.94	3.68
후원 및 기부문화 확산	3.87	4.31	4.07	4.11	3.91	4.12	3.89	3.93

○ 지역사회복지분야 정책의 중요도

- 지역사회복지분야의 정책 중요도에서는 2010년과 2014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전문가 모두 ‘복지네트워크 강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음.
- 복지네트워크 강화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앞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급자와 수요자 간 조정과 연계가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의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일치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2-23〉 자원봉사분야 정책의 중요도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주민참여의식 및 참여 활성화	4.00	4.32	4.20	4.18	3.89	4.19	4.28	3.92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과 연구 개발 확대	3.80	4.20	3.96	4.02	3.74	4.04	3.83	3.77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 보상제도 강화	3.70	4.03	3.76	3.87	3.70	4.00	3.72	3.72
자원봉사센터 육성 및 인프라 구축	3.75	4.07	3.80	3.91	3.71	3.88	3.61	3.72
전문자원봉사단 건립 및 운영	3.49	3.86	3.75	3.70	3.52	3.62	3.44	3.53
자원봉사센터 건립 및 운영	3.50	3.74	3.51	3.62	3.51	3.42	3.44	3.50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자원봉사단 육성 및 지원	3.55	3.67	3.65	3.62	3.53	3.61	3.61	3.54

○ 자원봉사분야 정책의 중요도

- 자원봉사분야 정책의 중요도에서는 2010년과 2014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전문가 모두 ‘주민참여의식 및 참여 활성화’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음.

〈표 2-24〉 저출산·고령사회분야 정책의 중요도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03	4.36	4.27	4.22	3.94	4.29	4.33	3.97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3.88	4.27	4.05	4.09	3.87	4.25	4.00	3.91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보육, 아동복지 등)	3.95	4.24	4.18	4.11	3.93	4.33	4.00	3.96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3.95	4.24	4.07	4.11	3.96	4.31	4.44	4.00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3.95	4.25	4.13	4.12	3.95	4.35	4.28	3.99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3.89	4.18	4.13	4.06	3.95	4.33	3.94	3.98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3.74	3.98	3.96	3.88	3.77	4.20	3.67	3.80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3.78	4.06	4.02	3.94	3.80	4.22	3.94	3.84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3.70	3.96	3.95	3.86	3.74	4.10	3.72	3.76

○ 저출산·고령사회분야 정책의 중요도

- 저출산·고령사회분야의 정책 중요도에서 2010년에는 공무원, 시설 종사자, 전문가 모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음.
- 그러나, 2014년에는 공무원과 전문가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종사자는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한 미래세대의 육성보다는 현재 당면한 노인 세대의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인천광역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정책이 상당한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25〉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중요도

연도	2010년				2014년			
소속 분야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공무원	종사자	전문가	합계
생애주기별 적극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3.76	4.12	4.09	3.98	3.81	4.15	4.35	3.85
생활권별 보건의료 수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	3.70	4.03	4.07	3.91	3.69	3.98	4.17	3.73
정신보건사업 확대	3.87	4.20	4.07	4.06	3.87	4.14	3.89	3.89
공공보건의료 확충	3.80	4.08	4.07	3.97	3.75	4.13	4.44	3.80
취약계층 건강 수준 향상	3.79	4.16	4.02	4.00	3.77	4.13	4.44	3.82

○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중요도

- 보건의료분야의 정책 중요도에서 2010년에는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가 ‘정신보건사업 확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전문가는 ‘생애주기별 적극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음.
- 2014년에는 공무원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사업 확대’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사자는 ‘생애주기별 적극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전문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음.

3. 복지공급 전망

1) 인천광역시 복지담당 조직 및 예산규모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담당 부처

-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국’ 과 ‘여성가족국’ 임.

○ 보건복지국

- 2014년 7월 말 기준 보건복지국은 사회복지봉사과, 장애인복지과, 다문화정책과, 보건정책과, 위생정책과 등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37〉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조직도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보건복지국의 총 정·현원은 103/103명임.
- 사회복지봉사과 25/26명, 장애인복지과 19/19명, 다문화정책과 9/9명, 보건정책과 28/27명, 위생정책과 22/22명임.

〈표 2-26〉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전체	103/103	1/0	5/5	22/22	41/44	28/20	5/10	0/1	1/1	1/1
사회복지봉사과	25/26	1/0	1/2	6/6	10/12	7/6	-	-	-	
장애인복지과	19/19	-	1/1	4/4	8/9	5/2	1/3	-	-	
다문화정책과	9 / 9	-	1/0	2/3	2/2	2/2	1/1	-	1/1	1/1
보건정책과	28/27	-	1/1	5/4	14/14	7/6	1/2	-		
위생정책과	22/22	-	1/1	5/5	7/7	7/4	2/4	0/1	-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2014년 기준 보건복지국의 예산편성 현황은 약 8,781.5억원임
-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는 약 3,231억원, 장애인복지분야는 약 1,508억원, 다문화 정책분야 약 38억원, 보건정책분야는 약 3,979억원, 위생정책분야는 약 24.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정책분야가 보건복지국 예산의 45.3%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도 36.87%를 차지하였음.

〈표 2-27〉 2014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분 야	예산액	비율
전체	878,157	100.0
사회복지분야	323,106	36.8
장애인복지분야	150,820	17.2
다문화정책분야	3,829	0.4
보건정책분야 (의료급여기금 포함)	397,944	45.3
위생정책분야	2,458	0.3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여성가족국

- 2014년 7월 말 기준 여성정책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등 4개 과, 14개 팀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38〉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조직도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여성가족국의 총 정·현원은 123/123명임.

·여성정책과 20/21명, 보육정책과 16/16명, 아동청소년과 17/17명, 노인정책과 18/18명, 여성복지관 17/17명, 여성의 광장 11/11명, 서부여성회관 14/14명, 아동복지관 10/9명임

〈표 2-28〉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전체	123 / 123	1 / 1	7 / 7	19/19	36/33	43/40	16/21		1 / 1
여성정책과	20 / 21	1 / 1	1 / 1	4 / 4	8 / 8	4 / 4	2 / 3		-
보육정책과	16 / 16	-	1 / 1	3 / 3	7 / 7	3 / 3	2 / 2		-
아동청소년과	17 / 17	-	1 / 1	4 / 4	5 / 4	6 / 6	1 / 2		-
노인정책과	18 / 18	-	1 / 1	3 / 3	8 / 7	6 / 6	- / 1		-
여성복지관	17 / 17	-	1 / 1	2 / 2	2 / 1	7 / 9	4 / 3		1 / 1
여성의광장	11 / 11	-	1 / 1	1 / 1	2 / 2	6 / 5	1 / 2	-	-
서부여성회관	14 / 14	-	1 / 1	1 / 1	1 / 1	5 / 4	6 / 7		-
아동복지관	10 / 9	-	0 / 0	1 / 1	3 / 3	6 / 4	0 / 1		-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 2014년 기준 여성가족국의 예산 규모는 1조 189.2억원임.

·여성정책분야가 약 300억원으로 2.9%, 보육정책분야가 약 5,003억원으로 49.4%, 아동청소년 분야는 약 684억원으로 6.7%, 노인정책분야는 약 4,112억원으로 40.5%, 사업소가 약 80억 원으로 0.8%였음.

·여성가족국 내에서는 보육정책분야가 예산의 49.4%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예산이 많았고, 노인정책분야도 40.5%로 높은 예산을 차지하였음.

〈표 2-29〉 2014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분 야	예산액	비 고
전체	1,018,915	100.0
여성정책분야	29,955	2.9
보육정책분야	500,330	49.4
아동청소년분야	68,377	6.7
노인정책분야	412,228	40.5
사업소	8,025	0.8

자료 : 인천광역시 내부자료

2) 사회복지 예산 현황

○ 재정자립도

- 인천광역시의 2014년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 62.6%로 광역지자체 전국 평균인 44.8%보다 높은 수준임.
-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총계규모 27.5%로 자치 구 전국 평균인 27.2%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2014년 군의 재정자립도는 자치 군 전체 평균 11.4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10.1%로 나타났다으며, 강화군과 옹진군 모두 전체 군의 재정자립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2014년 현재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45.6%로 가장 높았으며, 동구가 14.8%로 가장 낮았음.
- 인천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014년의 재정자립도가 2013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0〉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 재정립도

(단위: %)

시도별	시·도 평균 (순계 규모)		특별·광역시 (총계 규모)		도 (총계 규모)		시 (총계 규모)		군 (총계 규모)		자치구 (총계 규모)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단체별 평균	51.1	44.8	66.8	61.5	34.1	29.0	36.8	31.7	16.1	11.4	33.9	27.2
인천광역시	67.3	62.6	64.4	61.6	-	-	-	-	13.5	10.1	35.2	27.5
중 구	-	-	-	-	-	-	-	-	-	-	54.3	45.6
동 구	-	-	-	-	-	-	-	-	-	-	26.1	14.8
남 구	-	-	-	-	-	-	-	-	-	-	25.6	19.4
연수구	-	-	-	-	-	-	-	-	-	-	42.3	32.9
남동구	-	-	-	-	-	-	-	-	-	-	39.6	29.4
부평구	-	-	-	-	-	-	-	-	-	-	27.0	20.8
계양구	-	-	-	-	-	-	-	-	-	-	23.9	19.5
서 구	-	-	-	-	-	-	-	-	-	-	43.9	36.8
강화군	-	-	-	-	-	-	-	-	12.9	11.0	-	-
옹진군	-	-	-	-	-	-	-	-	14.3	8.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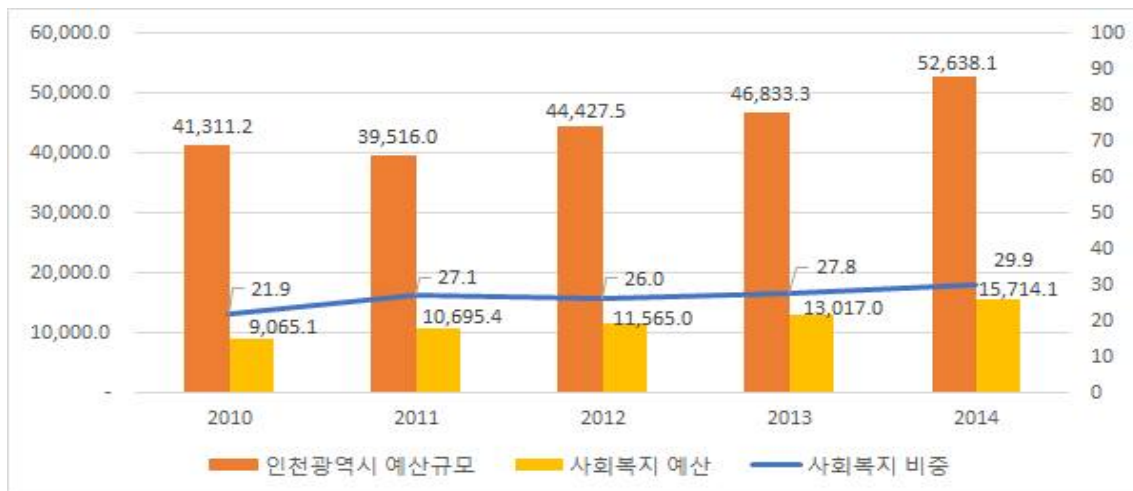
자료 :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Jarip_02.jsp).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 인천광역시의 예산규모는 인천광역시 본청의 일반회계 기준 2010년 약 4조 1,311.2억원에서 2014년 약 5조 2,638.1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사회복지 예산도 2010년 전체 예산 대비 21.9%인 9,065.1억원에서 2014년에는 29.9%인 약 1조 5,714.1억원으로 약 73.4% 증가하였음.

<그림 2-39>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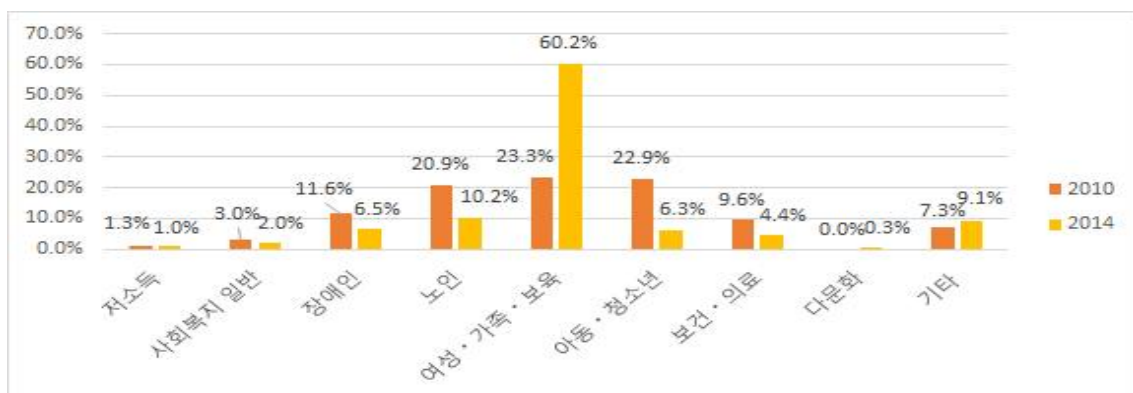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_01.jsp)

- 인천광역시의 부문별 ‘지역’ 사회복지사업 예산에서 2010년에는 여성·가족보육 분야가 23.3%, 아동·청소년이 22.9%, 노인 20.9% 순의 지출수준을 보였음.
- 2014년에는 보육예산의 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성·가족보육이 전체 지역사회복지 예산의 6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와 기타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감소하였음.

<그림 2-40> 인천광역시 부문별 ‘지역’ 사회복지사업 예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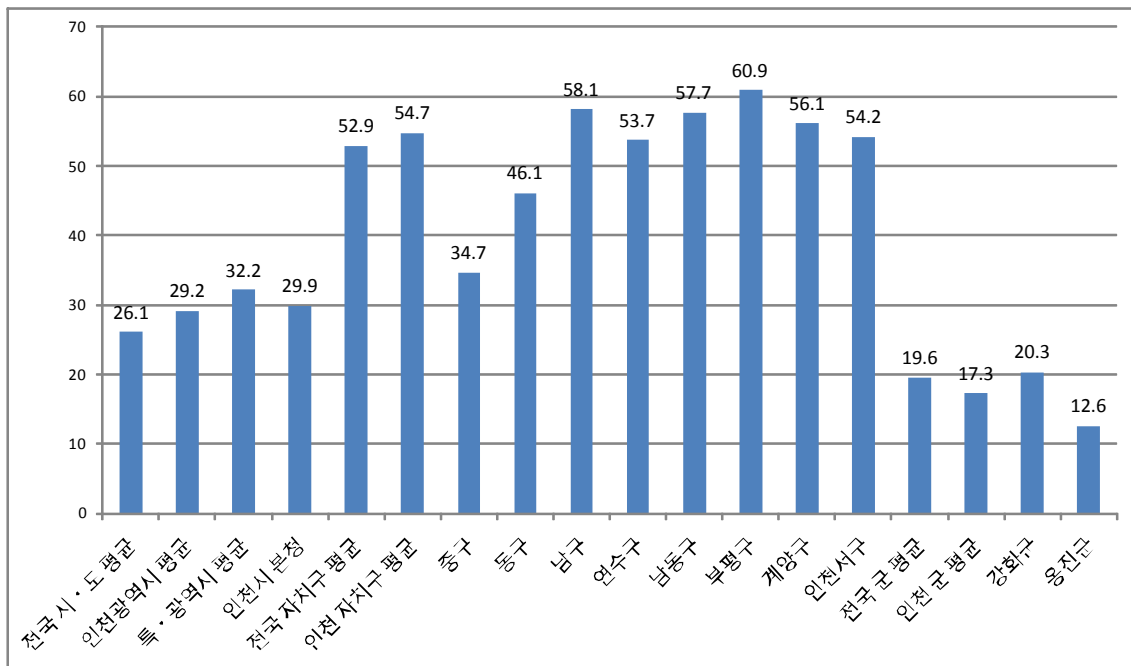
자료 : 이용갑·최동국, 인천광역시 지역 사회복지사업 개발 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4

○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 2014년 인천광역시의 구·군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인천광역시 전체 평균은 29.2%로 전국 시도 평균인 26.1%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특광역시 평균 32.2%보다는 낮은 수준임.
- 인천광역시 본청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9.9%로 전국의 특별·광역시 평균인 32.2%보다는 낮은 수준임.
- 군·구별로는 부평구, 남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는 전국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 지자체이며, 반면에 옹진군의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전국의 자치 군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그림 2-41〉 2014년 인천광역시 자치구별 사회복지예산 비중

(단위: %)



2014년 일반회계 기준.

자료 : 재정고 홈페이지_지방예산현황/지방예산지표

3) 사회복지 시설 현황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생활시설

- 2013년 말 기준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총 417개소임.
- 전체 생활시설 중 노인관련 생활시설이 총 308개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단 2개소로 가장 적음.
- 생활인원 또한 전체 10,885명 중 노인복지시설 생활인원이 8,2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235명으로 가장 적었음.
- 노인과 장애인 생활시설은 모든 군·구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에, 그 외 생활시설은 소재의 지역적 차이가 있음.

〈표 2-3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생활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전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모·부자		정신질환자		부랑인	
	시설 수	생활 인원	시설 수	생활 인원	시설 수	생활 인원	시설 수	생활 인원	시설 수	생활 인원	시설 수	생활 인원	시설 수	생활 인원	시설 수	생활 인원
2008	103	2,648	11	731	4	157	64	413	14	749	9	169	2	211	3	375
2009	178	6,459	11	723	6	202	136	4,150	16	813	9	177	2	208	4	388
2010	282	8,190	9	678	8	89	229	5,696	18	896	11	241	2	217	5	373
2011	310	9,297	9	658	8	282	250	6,488	23	980	14	321	2	210	5	358
2013	327	10,004	9	647	8	366	271	7,141	72	944	10	320	2	214	4	372
2013	417	10,885	9	606	8	635	308	8,206	72	994	14	374	2	235	4	354
중 구	15	80	1	40	-	-	12	519	1	10	1	30	-	-	-	-
동 구	10	181	1	49	-	-	7	132	2	-	-	-	-	-	-	-
남 구	59	1,737	3	238	2	103	34	1,154	12	102	6	125	-	-	2	15
연수구	27	1,133	-	-	1	309	15	598	9	128	2	98	-	-	-	-
남동구	63	1,275	-	-	2	55	55	1,135	5	39	1	46	-	-	-	-
부평구	93	2,174	3	213	3	168	70	1,510	15	267	2	16	-	-	-	-
계양구	41	898	-	-	-	-	32	799	8	88	1	11	-	-	-	-
서 구	56	1,725	-	-	-	-	44	1,203	8	40	1	48	1	95	2	339
강화군	46	1,414	1	66	-	-	36	1,083	8	125	-	-	1	140	-	-
옹진군	7	268	-	-	-	-	3	73	4	195	-	-	-	-	-	-

자료 : 인천광역시, 2013 4/4 계간인천통계, 2013

○ 인천광역시 보육시설 현황

- 2013년 말 기준 인천광역시의 보육시설은 총 2,263개소이며, 이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5.5%인 125개소에 불과하며, 민간보육시설은 36.3%인 821개소임.
- 2013년 말 기준 인천광역시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총 81,796명이며, 이 중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9.0%인 7,367명이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61.8%인 50,582명임.

〈표 2-32〉 인천광역시 보육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직장		가정	
	시설	아동	시설	아동	시설	아동	시설	아동	시설	아동	시설	아동	시설	아동
2008	1,625	55,884	76	4,642	9	1,003	751	37,963	3	68	25	859	788	11,349
2009	1,806	57,799	84	5,072	9	930	770	37,941	3	73	26	970	914	12,813
2010	1,857	65,075	98	5,860	10	1,041	768	41,885	2	58	26	1,246	953	14,985
2011	1,998	71,381	103	6,319	10	1,043	781	45,661	4	151	30	1,424	1,070	16,783
2013	2,181	79,751	106	6,563	10	994	806	49,782	6	175	35	1,596	1,218	20,641
2013	2,263	81,796	125	7,367	10	955	821	50,582	8	185	44	3,450	1,255	19,257
중 구	112	3,469	14	742	1	65	16	919	-	-	9	565	72	1,178
동 구	76	2,189	9	570	-	-	20	915	-	-	3	69	44	653
남 구	255	10,826	17	1,159	2	229	123	7,338	3	40	7	1,744	103	316
연수구	234	7,657	11	841	-	-	62	3,998	-	-	6	224	155	2,594
남동구	380	14,918	23	1,164	2	241	151	9,875	-	-	5	246	199	3,392
부평구	420	14,973	13	789	4	347	151	9,610	1	73	6	233	245	3,921
계양구	300	10,776	13	664	-	-	128	7,685	2	50	3	114	154	2,263
서 구	455	15,693	13	837	1	73	159	9,681	2	22	5	255	275	4,825
강화군	21	974	6	422	-	-	9	457	-	-	-	-	6	95
옹진군	10	321	6	179	-	-	2	104	-	-	-	-	2	38

자료 : 인천광역시, 2014 통계연보, 2014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 2013년 말 현재 인천광역시의 노인 생활시설 중에서 주거양로시설은 26개, 생활인원은 573명이었으며, 의료요양시설은 262개에서 7,633명이 생활하고 있음.
- 주거양로시설은 강화군이 10개소 2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요양시설은 65개소에서 1,439명이 생활하고 있는 부평구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남동구(53개소, 1,102명), 서구(37개소, 1,034명), 남구(34개소, 1,154명)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이용시설은 1,425개소가 운영 중인 경로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157개소이고, 98개소가 있는 부평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33>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노인 생활시설						노인 이용시설									양 로 원
	합계		주거 양로시설		의료 요양시설		합계	복 지 회 관	문 화 센 터	경 로 당	무 료 급 식 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시 설 수	생 활 인 원	시 설 수	생 활 인 원	시 설 수	생 활 인 원						방문 요양 서비 스	주야 간 보호 시설	단기 보호 서비 스	현 재 인 원	
2011	250	6,488	19	458	231	6,030	1,434	9	8	1,359	45	63	15	3	458	
2012	271	7,141	22	485	249	6,656	1,636	9	8	1,410	38	139	23	8	485	
2013	308	8,206	26	573	282	7,633	1,667	9	9	1,425	36	157	20	11	573	
중 구	12	519	-	-	12	519	81	1	-	77	2	1	-	-	-	
동 구	7	132	-	-	7	132	61	1	1	36	6	17	1	-	-	
남 구	34	1,154	-	-	34	1,154	162	1	2	143	6	8	1	1	-	
연수구	15	598	1	50	14	548	145	1	1	130	7	4	2	-	50	
남동구	55	1,135	2	33	53	1,102	177	1	-	163	-	9	2	2	33	
부평구	70	1,510	5	71	65	1,439	313	1	-	194	4	98	9	7	71	
계양구	32	799	1	20	31	779	173	1	3	153	5	8	2	1	20	
서 구	44	1,203	7	169	37	1,034	252	1	2	236	4	6	3	-	169	
강화군	36	1,083	10	230	26	853	233	1	-	226	1	5	-	-	230	
옹진군	3	73	-	-	3	73	70	-	-	68	1	1	-	-	-	

자료 : 인천광역시, 2013 4/4 계간인천통계, 2013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 2013년 말 기준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72개소에 1,022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지체 장애인이 705명으로 생활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평구가 15개소 267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의 수와 생활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중구는 1개소 10명, 동구는 2개소 8명으로 가장 수가 작았고, 옹진군은 4개소에 195명이 생활함에 따라 시설 1개소 당 생활인원이 48.8명으로 가장 높았음.
- 동구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이 없음.
- 장애인 이용시설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60개소, 직업재활시설이 28개소, 복지관은 8개소로 총 96개소가 있음.

〈표 2-34〉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시설수	생활인원						합계	복지관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직업 재활 시설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기타				
2011	23	923	113	65	13	682	108	97	8	65	25
2012	23	944	152	63	11	612	106	116	8	80	28
2013	72	1,022	110	64	13	705	102	96	8	60	28
중 구	1	10	-	-	-	10	-	5	1	3	1
동 구	2	8	-	-	-	-	-	3	-	2	1
남 구	12	102	15	2	1	57	27	21	2	10	9
연수구	9	128	9	1	-	99	19	12	1	10	1
남동구	5	39	1	-	-	35	3	10	1	6	3
부평구	15	267	35	61	11	139	21	11	1	6	4
계양구	8	88	41	-	-	41	6	11	1	7	3
서 구	8	40	-	-	-	40	-	14	1	10	3
강화군	8	125	9	-	1	95	20	8	1	6	2
옹진군	4	195	-	-	-	189	6	1	-	-	1

자료 : 인천광역시, 2013 4/4 계간인천통계, 2013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 생활시설

- 2013년 말 기준 인천광역시의 여성복지생활시설은 총 14개소 중 한부모가족시설이 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모자보호시설 1개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가 운영 중임.

〈표 2-35〉 인천광역시 여성복지 생활시설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여성복지생활시설											
	전체		모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한부모 가족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수	생활 인원	시설수	생활 인원	시설수	생활 인원	시설수	생활 인원	시설수	생활 인원	시설수	생활 인원
2008	9	169	2	78	1	11	2	42	3	32	1	6
2009	9	177	2	83	1	6	3	60	2	22	1	6
2010	11	241	2	68	1	9	5	123	2	27	1	14
2011	14	316	1	48	1	9	9	230	1	12	1	9
2012	15	371	1	46	1	20	9	274	2	19	1	12
2013	14	374	1	68	1	8	9	272	2	17	1	9
중 구	1	30	-	-	-	-	1	30	-	-	-	-
동 구	-	-	-	-	-	-	-	-	-	-	-	-
남 구	6	125	-	-	1	8	4	108	-	-	1	9
연수구	2	98	1	68	-	-	1	30	-	-	-	-
남동구	1	46	-	-	-	-	1	46	-	-	-	-
부평구	2	16	-	-	-	-	1	10	1	6	-	-
계양구	1	11	-	-	-	-	-	-	1	11	-	-
서 구	1	48	-	-	-	-	1	48	-	-	-	-
강화군	-	-	-	-	-	-	-	-	-	-	-	-
옹진군	-	-	-	-	-	-	-	-	-	-	-	-

자료 : 인천광역시, 2014 통계연보, 2014

4. 계획수립의 개요

1) 중앙정부 상위계획 검토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토하는 중앙정부의 상위계획들은 다음과 같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2017년)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종합대책(2014년 5월)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년~2018년)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년)
-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1~2015년)
- 제5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 기본계획(2013~2017년)
- 제2차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2011~2015년)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 제2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2013~2017년)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년)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2017년)
-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
-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2010~2014년)
-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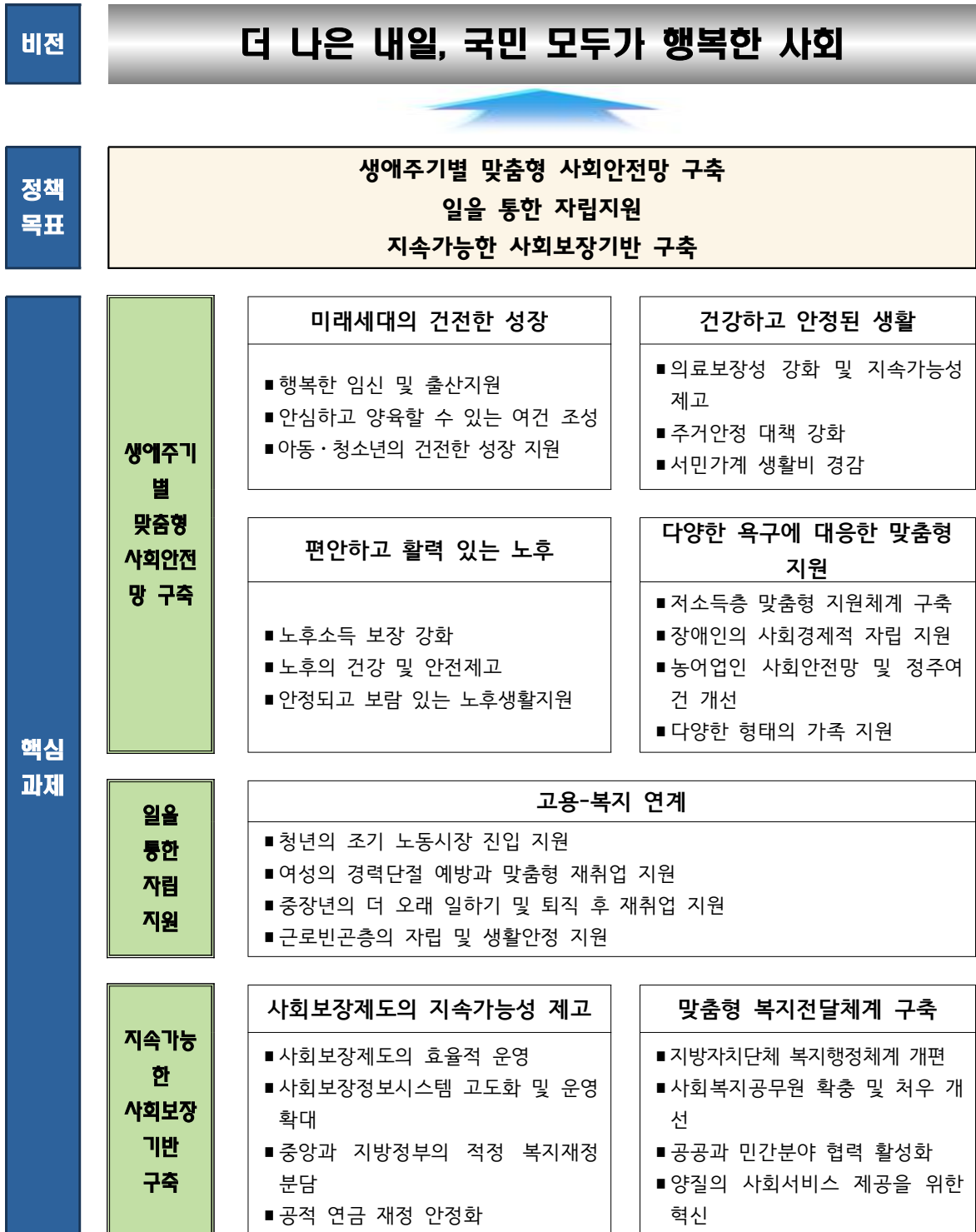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2017년)

비전	<div>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div>	
정책 목표	<div>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div>	
핵심 과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맞춤형 고용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 전문 인재양성 및 평생학습 체계 ■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안전과 통합의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 재난 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 전개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종합대책(2014년 5월)

목표	촘촘한 복지 구현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맞춤형 보호 강화 ■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제도 문턱 낮추기 ■ 지자체 재량 강화를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체계 개선 ■ 일선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로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눈높이 맞춤형 홍보 ■ 알기 쉬운 맞춤형 복지제도 제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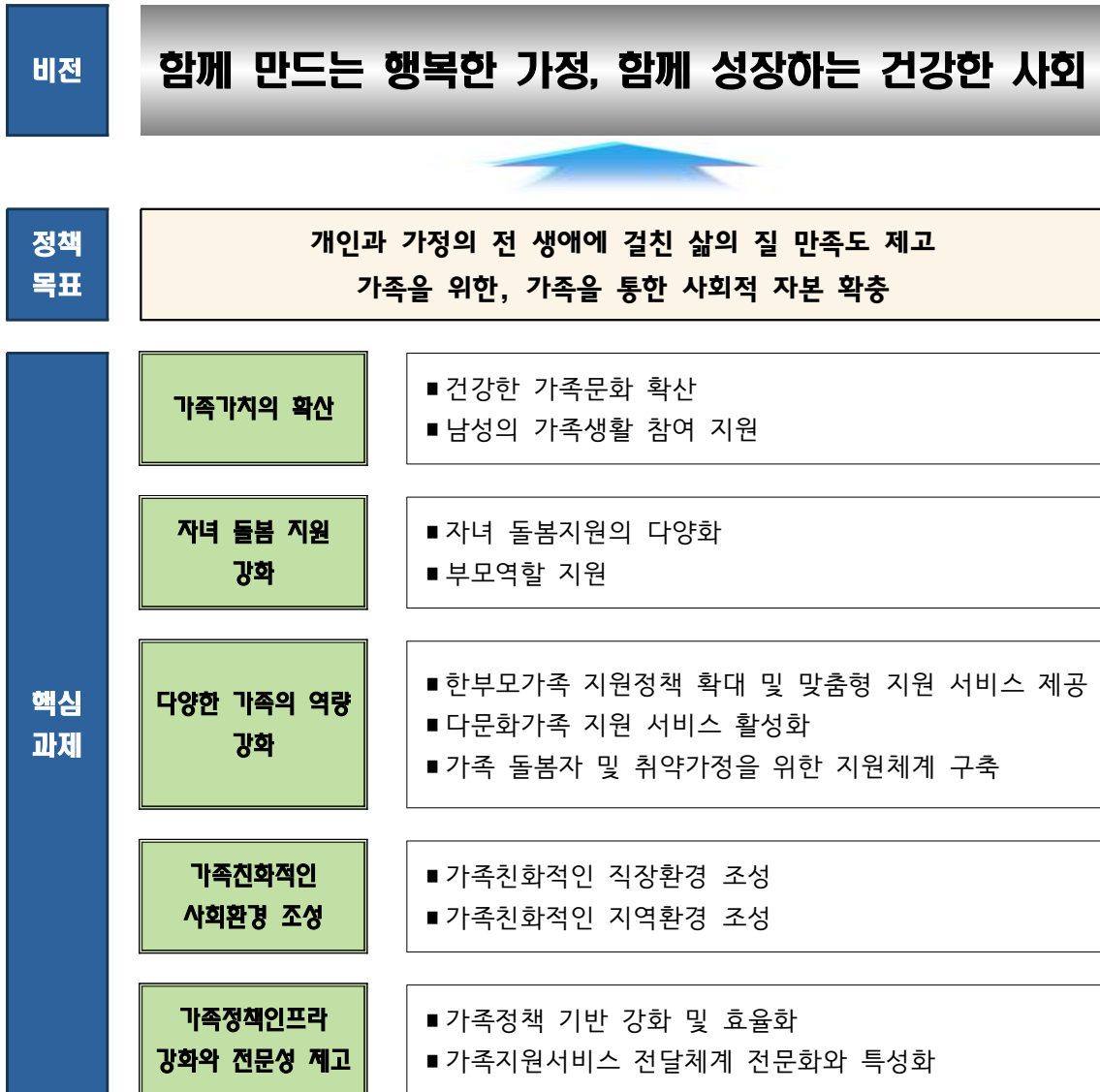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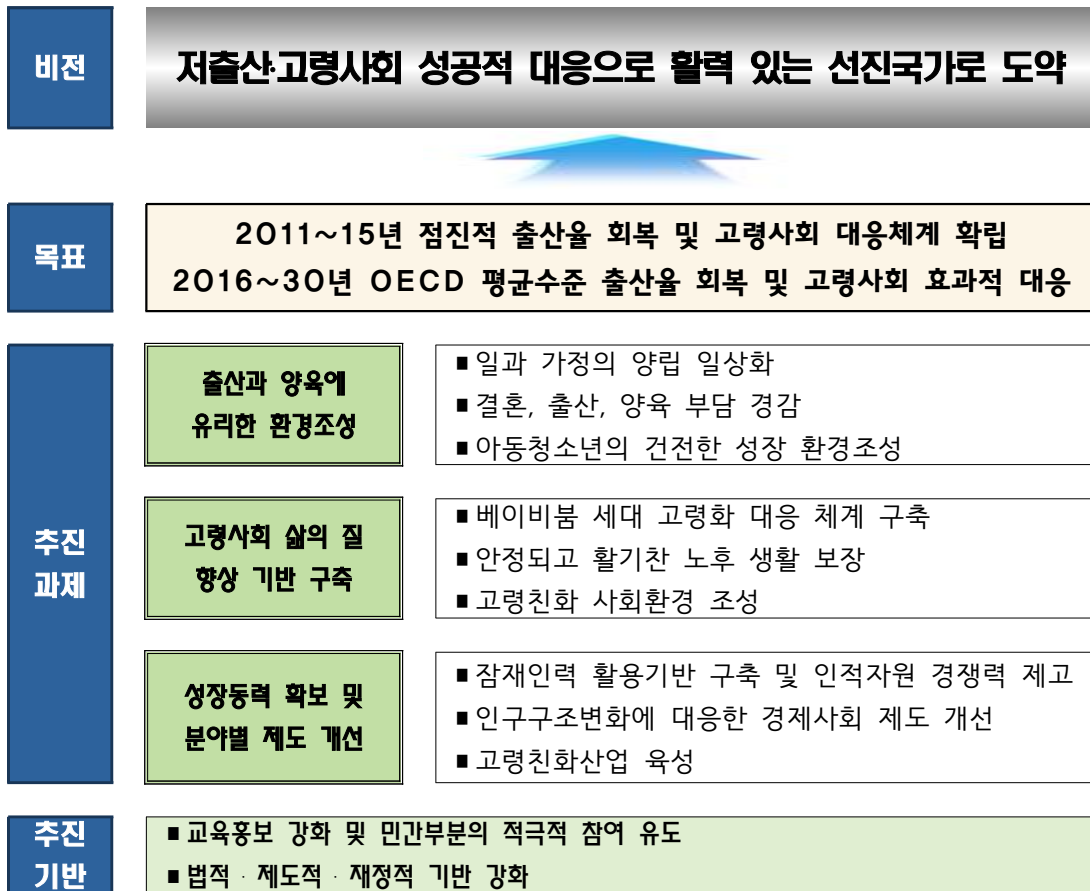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비전	함께 성장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사회
목표	<p style="text-align: center;">  여성일자리와 대표성 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돌봄의 공유와 사회화 성별 고정관념 해소 </p>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의 확산 ■ 여성정책의 책무성 강화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공공부문 대외협력의 참여확대 ■ 여성에 대한 폭력종식과 인권 보호 ■ 여성의 복지 및 건강권 보장 ■ 돌봄지원과 일 가정 양립 실현 ■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성평등정책 추진역량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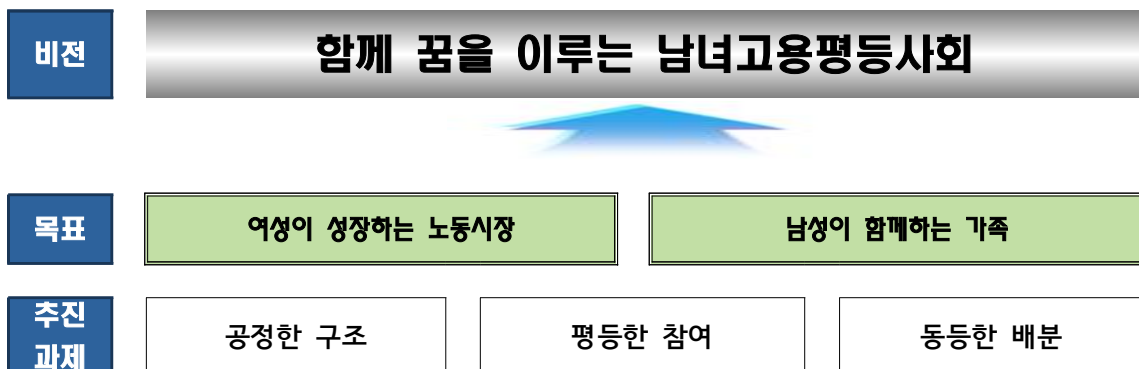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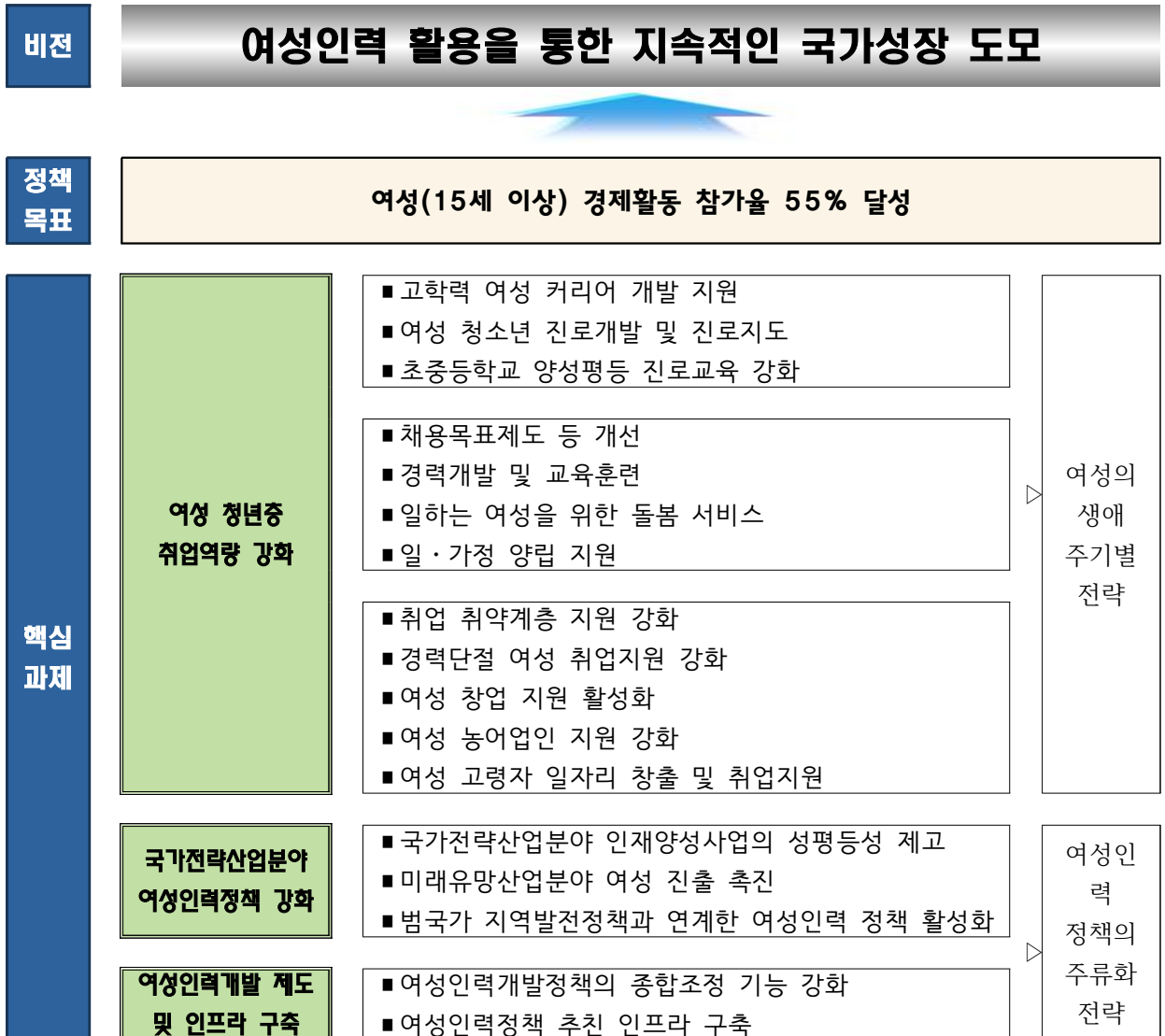
○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1~2015년)



○ 제5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 기본계획(2013~2017년)



○ 제2차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2011~2015년)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비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정책 목표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 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핵심 과제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 한국어능력 향상 ■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 소외계층 지원 강화 ■ 피해자 보호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 직업교육훈련 지원 ■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문화 차별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 제고 ■ 다문화가족의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효과성 제고 ■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 제2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2013~2017년)

비전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전략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 국가 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 증진	
추진 과제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 보육료·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 보육료 적정화 및 부모 추가 비용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가족 특성별 맞춤형 지원 ■ 장애아·다문화 아동 맞춤형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및 진입·퇴출 등 연계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인력의 역량 지원 강화 및 처우 개선 ■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 ■ 아이가 안전한 보육 환경 기반 마련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정보공개·신뢰 등 민관 협력 기반 조성 ■ 효율적·체계적인 보육 3.0 관리시스템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감도 높은 보육·양육지원 전달체계 강화 ■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의 합리적 분담 ■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방안 검토

○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비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목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 인재로 양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정책
과제

5대 영역 15대 중점과제(75개 세부과제-신규과제 30개, 보완과제 45개)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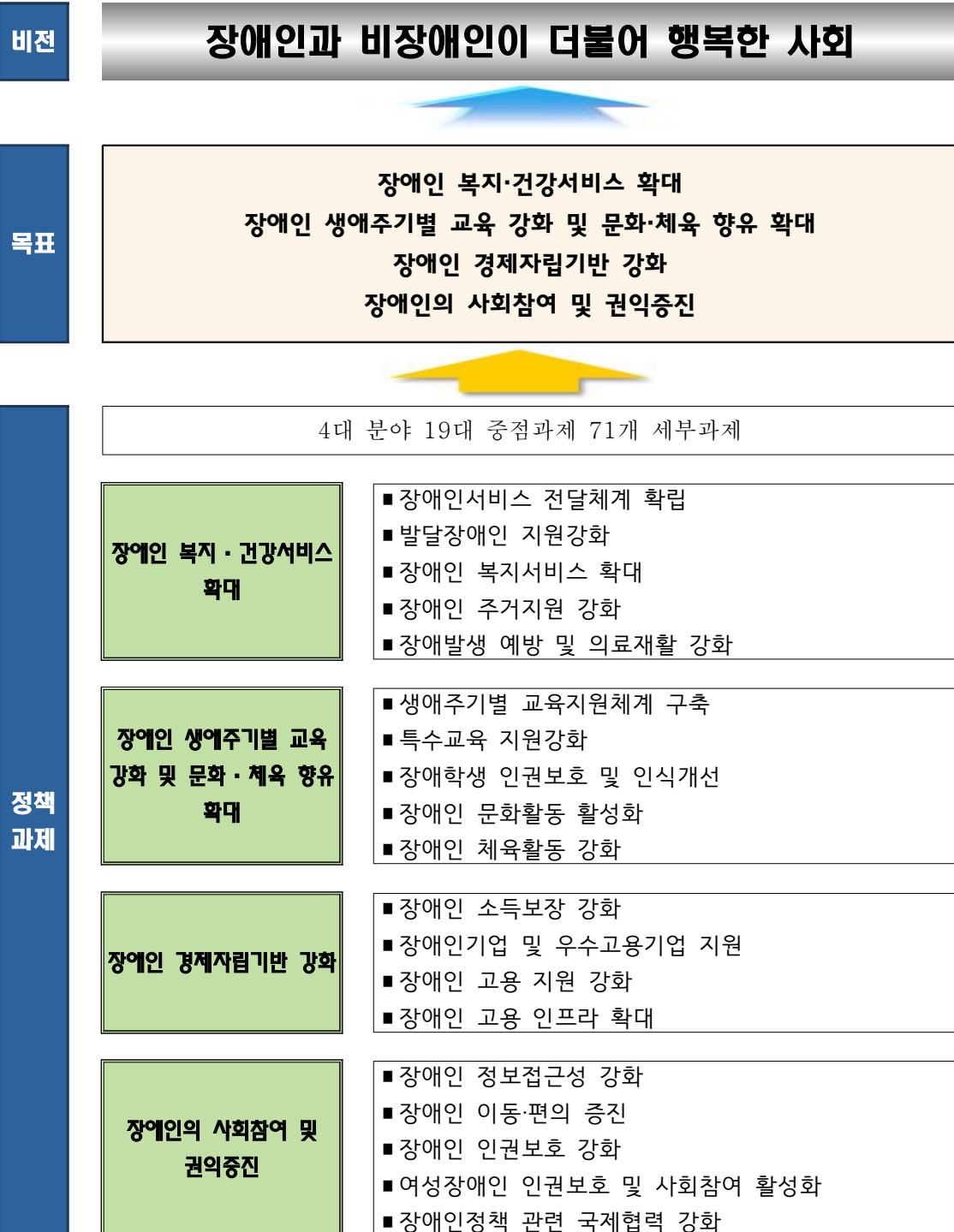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 제고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강화

-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년)



○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2013~2017년)

비전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전략
목표

- 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4대 전략목표 21대 추진목표 57개 주요 추진 과제

추진
목표Ⅰ. 평등한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 장애인 등급등록제 개선
-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 실현
-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개선
-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 장애인 접근권 보장
-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Ⅱ. 적절한 삶의 향유를
위한
기본권 보장

-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 일할 수 있는 기회 및 권리 보장
- 기본적인 교육권 및 교육기회 보장
- 장애인 주거 지원제도 강화
- 차별 없이 건강을 향유할 권리 보장
- 개인의 이동권 보장
- 자기결정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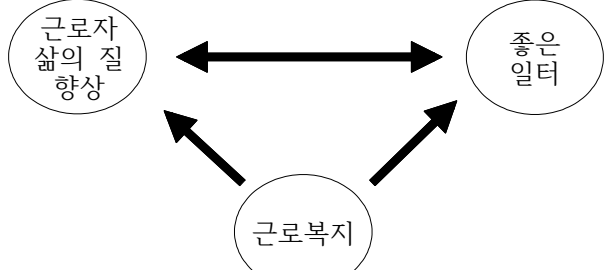
Ⅲ. 차별시정 및
예방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강화
- 장애인인권센터 설치
-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Ⅳ.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반구축

-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장애) 권리보장 강화
- 정신장애 권리보장 강화
- 장애여성 권리보장 강화
- 장애아동 권리보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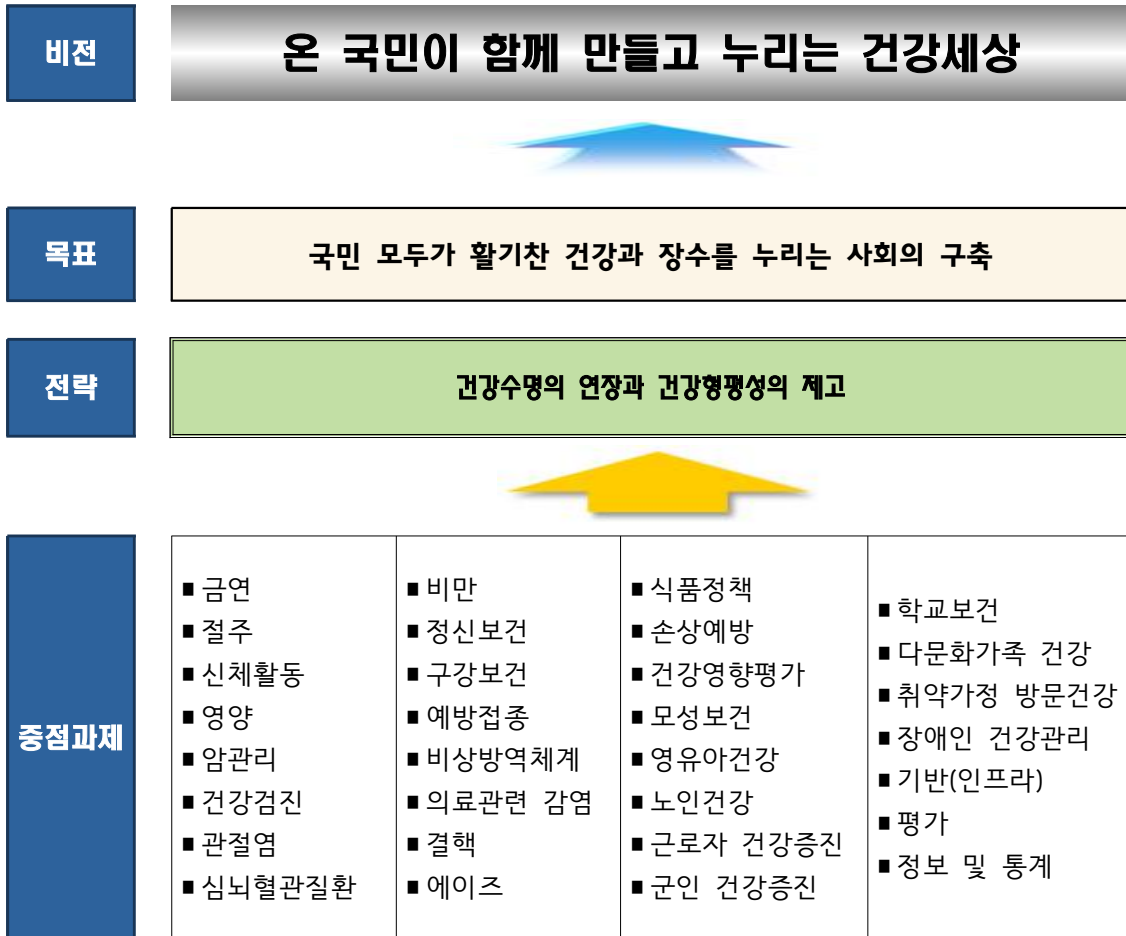
○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

비전	일하는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목표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		
기본 방향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공공복지 대폭 확충	근로자 간 기업복지 격차 완화	근로복지 인프라 강화
전략	공공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든든한 생활기반 조성 ■ 은퇴, 실업, 상병으로부터 보호 ■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마련 		기업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복지 격차 완화 ■ 중소기업 복지 확충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정자금 용자 확대 ■ 주거안정 지원 확대 ■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 상병휴가제도 도입·지원 ■ 근로자종합복지관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 가입 확산 ■ 중소기업 기업복지 확산 ■ 사내근로복지금의 차별 해소 및 격차 완화 ■ 비정규직 복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전문가와 함께 고용복지네트워크 구축 ■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내실화 ■ 근로복지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 강화

○ 제2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2010~2014년)

비전	더불어 행복한 농어촌,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
목표	<p>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강화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개선 및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p>
추진 방향	<div data-bbox="365 669 525 846"> <p>예방형</p> </div> <div data-bbox="557 669 1367 8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도모 ■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전적 투자 </div>
	<div data-bbox="365 893 525 1032"> <p>맞춤형 보편형</p> </div> <div data-bbox="557 893 1367 10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 아동·여성·가족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 지역별 의료접근성의 격차를 최대한 완화 </div>

○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년)



2) 인천광역시 상위계획 검토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토하는 인천광역시의 상위계획들은 다음과 같음.
 - 민선6기 시정계획(2014.7~2018.6) 중 사회복지분야
 -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06~2025년)
 - 인천광역시 가족정책 기본계획
 - 인천광역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 인천광역시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년)의 핵심과제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2013~2017년)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2018년)

○ 민선6기 시정계획(2014년 7월 ~ 2018년 6월) 중 사회복지분야

비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목표
및
핵심과제

인천형 복지 시스템 구축

- 인천복지재단 설립 1천억 기금 조성, 기반 마련
- 인천보훈병원 건립
-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고용복지 종합센터 구축
- 24시간 보육 서비스
- 공공근로사업 확대
- 요양보호사 쉼터 건립
- 인천어린이집 확대
-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 보육종합센터 이전
- 영유아(소아) 응급의료체계 구축

여성 행복도시

-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지원
- 여성안심택배 구축
- 여성정책참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골목길 불 밝히기

어르신이 즐겁게 생활하는 인천

-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 마음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
- 인천 시니어 연구소 설립

장애인이 편리한 인천

-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 장애인 이동이 편리한 인천
- 동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
-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강화

청년이 돌아오는 인천

-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확대 시행
- 청년인턴제 확대 시행
- 인천 공공직업 훈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 SW 융합 클러스터 조성

○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2006~2025년)

비전

누구나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도시 인천

목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미래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녹색도시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도시전통과 미래가 함께
하는 창조적 문화도시

추진 전략

- 도시성장 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간구조 정비
-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상단의 전략적 육성으로 국제적 도시기능 강화
- 첨단지식산업 육성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물류인프라를 활용한 국제물류기능 강화

- Green Way 구축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
-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 인구지표 및 개발용량 재산정을 통한 탄소배출요인 최소화
- 계양산 등 GB 내 녹지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탄소 저감

- 경인아라뱃길 조성 등 시민여가공간 조성
- 맞춤형 통합복지체계 구축
- 비영리의료병원 중심 의료복지체계 구축
- 공평하고 경쟁력있는 교육기반 구축

- 역사·문화자원의 계획적 보존과 발굴로 도시재생 제고
- 지역보유 자산을 활용한 관광레저인프라 육성
- 창조적 문화산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유도
-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원도심 정비 추진

<사회복지분야>

목표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체계 구축건강한 시민, 건강한 도시
실현기본방향
및
세부계획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 취약계층을 위한 자활 지원 강화

여성가족 복지지원 확대

-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성폭력 및 여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건강한 가족 증진을 위한 건강가정지원 사업 확대
- 청년 노인 등 일자기 위גיע층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 제공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개선
-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지원
- 장애인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체계적 제공과 장애인 전용 구직센터 운영

쾌적한 건강도시 조성

- WTO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유지
- 생활공감 도시환경 조성

공공 보건의료 강화

- 건강행태 개선사업 확대
-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지원

- 낙후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 주요사업 확대 및 지원강화

○ 인천광역시 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더불어 가꾸는 건강한 가정, 더불어 평등하고 행복한 인천**

목표 및 전략	정책 목표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정책 추진체계 강화 ■ 가족-지역사회-인천광역시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책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족생활 양립지원 강화 ■ 자녀돌봄 지원 ■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 조성 ■ 가족가치 및 가족문화의 확산 ■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
----------	---

○ 인천광역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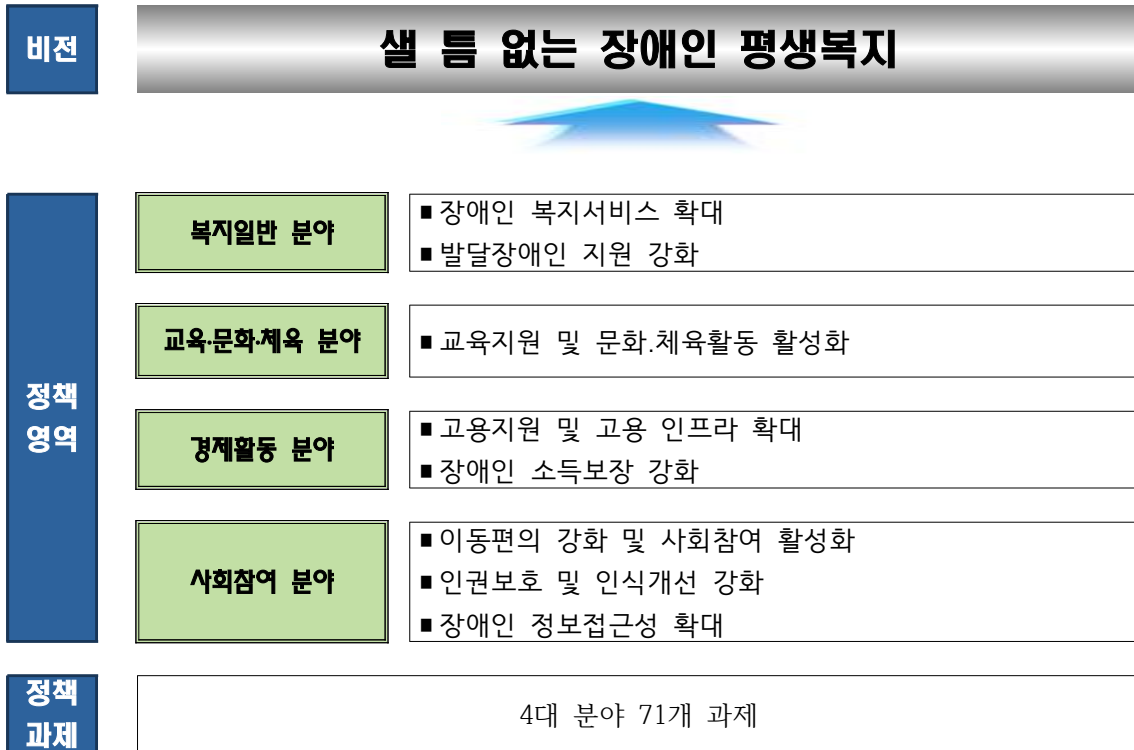
비전 **소통하는 성 평등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

정책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평등 추진기반 강화 ■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정치, 행정 사회 참여 확대 및 대표성 강화 ■ 다양한 가족 가구 지원 ■ 여성의 권익증진 ■ 성평등 문화 확산
----------	---

○ 인천광역시 중장기 보육계획(2013~2017년)의 핵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보육기반 확충 ■ 아동별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보육서비스의 질적 관리 강화 ■ 보육행정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홍보강화
--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계획(2013~2017년)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2018년)

비전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인천
목표	<div> <div></div> <div> 시민 건강수준 향상 건강 형평성 개선 </div> </div>
추진 방향	<div> <div></div> <div> ■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도시 조성 </div> </div>
	<div> <div></div> <div> ■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 </div> </div>
	<div> <div></div> <div> ■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강화 </div> </div>
	<div> <div></div> <div> ■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안전한 도시 실현 </div> </div>
	<div> <div></div> <div> ■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강화 </div> </div>

3) 상위계획 분석 결과 반영 검토 사항

(1)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상위계획의 핵심 단어

○ 핵심 단어

- 행복, 고용-복지 연계, 보편적 돌봄, 맞춤형, 생애주기, (정신)건강, 안전, 함께 사는 사회, 민·관 협력, 예방

○ 분야별 핵심 단어

- 저소득 분야 : 일을 통한 자립, 맞춤형 고용-복지연계
- 사회복지 일반 분야 :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인천형 복지
- 보건의료분야 : 건강, 정신건강, 공공보건의료, 사전예방
- 출산·보육분야 : 안심 출산, 일·가정 양립, 행복한 아이, 안심 보육
- 아동·청소년분야 : 미래 세대, 건강한 성장, 행복한 세상
- 노인분야 :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 노인맞춤형 일자리
- 장애인분야 : 더불어 행복한 세상, 사회참여, 권익증진
- 여성분야 : 여성취업, 안정
- 다문화분야 : 활기, 함께하는 사회

(2) 중앙정부 상위계획의 분야별 시사점

○ 저소득계층복지분야

- 중앙부처 계획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지자체 재량 강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고용-복지 연계 강화
- 제3기 계획 반영 검토 사항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사무기능 조정 및 인력재배치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
·복지통장제 및 동복지위원회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상시 발굴체제 도입 및 긴 급지원 강화 필요
·민간부문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상시 발굴체제 및 맞춤형지원제도 구축 필요
·자활사업 확대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 강화 필요

○ 노인복지분야

- 중앙부처 계획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환경 조성
 -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노후설계 서비스 활성화
 -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돌봄 강화
 -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자살 예방체계구축
- 제3기 계획 반영 검토 사항
 - 노인보호전문사업, 노인권익증진상담사업,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자살예방사업 등 노인권익증진사업 활성화 필요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안전도우미 등 안전 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독거노인 안전 확인·보호 강화 필요
 -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및 만 65세 이상 노인대상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

○ 장애인복지분야

- 중앙부처 계획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 장애인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 제3기 계획 반영 검토 사항
 -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조사 및 구제활동사업, 교육사업,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필요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거주시설 지원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필요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지원 강화 필요
 -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나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등과 같이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장애인의 취업 지원 강화 필요

○ 보육분야

- 중앙부처 계획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양육서비스 제공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아이가 안전한 보육 환경 기반 마련
- 제3기 계획 반영 검토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보육기반 확대 필요
 - 일-가족 양립 기반 강화를 위한 24시 어린이집 확대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필요
 - 저소득계층 자녀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는 비용지원 강화 필요
 - 어린이집의 투명성·신뢰성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기반 구축 필요

○ 여성복지분야

- 중앙부처 계획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확대
 - 취업 후 고용유지 및 재 경력단절 예방 강화
 -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 일하는 여성을 위한 돌봄 서비스
 - 일·가정 양립 지원
 -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녀양육서비스 제공
- 제3기 계획 반영 검토 사항
 -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여성취업·창업문제 담당 기구의 구성 및 운영 필요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여성일자리 조사·연구,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필요
 - 경력단절 구직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등 공공부문 보육기반 확대 필요
 - 일-가족 양립 기반 강화를 위한 24시 어린이집 확대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필요

○ 지역사회복지 분야

- 중앙부처 계획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 제3기 계획 반영 검토 사항
 - 과(課) 및 팀 신설로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전담조직 정비 필요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차원에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동장의 복수직렬화 추진 필요
 - 복지통장제 및 동복지위원회 운영을 통한 수요자의 욕구 기반 및 밀착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 현금, 현물 및 재능기부 등 민간자원을 이용한 지역단위 복지 관련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로 인천형 복지공동체 정립 필요

4) 복지수요와 복지공급 자원의 흐름분석

○ 저소득계층복지분야

- 2003년, 2006년, 2008년 및 2011년 인천광역시의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서 인천시민들은 건강한 복지사회를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할 과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복지시책 확대’ 임(37.5%, 48.7%, 38.5% 및 36.7%).
-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인천광역시차원에서 분석하면 인천시민들이 제기하는 5점 척도 기준 생활여건의 어려움 제1순위는 ‘저(무)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 (2.91)이며, 이를 가구소득 기준으로 구분하면, 1,0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3.25로 가장 높은 수준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독거노인 및 여성가구주 가구 등 저소득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시급함.
- 특히, 인천광역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이 포함된 저소득분야 예산은 2002년 1,045.0억원에서 2014년 2,836.8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36.8%에서 2014년 15.4%로 감소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복지사업예산 중 저소득분야 예산의 비율은 2008년 2.0%에서 2014년 1.0%로 감소한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탈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예산과 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 노인복지분야

- 2012년 6월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는 2010년 271.3만명에서 2030년 306.1만명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40년 303.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23.4만명에서 91.1만명으로 증가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의 8.6%에서 30.0%로 증가하게 됨.
-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증가를 유도하게 되며,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인천광역시차원에서 분석하면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가사지원(19.2%)’, ‘방문간호(16.2%)’, ‘고용지원(14.7%)’ 등이 제시됨.
- 인천광역시 전체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308개소, 이용시설 1,667개소 및 양로원 86개소 등 총 2,061개소로 공급측면에 있어서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많은 상황이지만, 전체 시설의 69.1%인 1,425개소는 경로당임.
-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주요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는 각각 9개소이지만, 2014년 「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 ‘접수처리, 등록, 환불 등 행정 불편’, ‘정보제공 부족’, ‘대중교통 접근 이용의 불편’ 등이 이용의 불편한 점으로 제시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2002년 260.5억원에서 2014년 4,116.6억원으로, 비

율은 같은 기간 동안 9.2%에서 22.4%로 크게 증가하였음.

-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단계적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지만, 점차 감소하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를 고려하여 지역에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욕구에 따른 지역별 맞춤형 연계,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
- 인구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를 고려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은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기초생활보장 수급 유지,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탈출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장애인분야

- 인천광역시 등록 장애인은 2009년 12.7만명에서 2013년 13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장애유형별로는 2013년을 기준으로 지체장애인이 54.3%인 72,617명, 시각장애인이 10.2%인 13,604명, 청각장애인이 9.9%인 13,286명, 뇌병변장애인이 9.5%인 12,687명, 10.4%인 13,907명은 지적장애·자폐·정신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임.
-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인천광역시차원에서 분석하면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어려움들 중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로 인한 어려움’ 등이 중요하게 부각됨.
- 또한,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이 있는 가구들은 ‘고용지원 서비스’,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 ‘재활훈련’, ‘일상생활지원’ 등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제기함.
- 2014년 인천광역시 공무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장애인분야의 정책에서도 ‘장애인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 및 ‘이동 및 편의시설 확충’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됨.
-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은 2002년 173.7억원에서 2014년 1,508.0억원으로,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6.1%에서 8.2%로 증가하였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강화가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 자립과 관련된 일자리 확대, 소득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이 함께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보육·다문화가족 분야

- 인천광역시 여성의 고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49.9%에서 2014년 9월 53.2%, 고용률은 같은 기간 동안 47.4%에서 50.3%로 증가는 하였지만 여전

히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5.0%에서 5.7%로 증가하였음.

-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에서 여성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가 포함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등의 취업육구와 직업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 취업지원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 취업관련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참여율 제고 및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유도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의 구성이 필요함.
-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공공형·시간연장형·24시 어린이집 확대와 같은 보육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고, 또한 일하는 여성들이 보육시설에 안심할 수 있는 보육의 질 향상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중 보육이 포함된 여성·가족분야 예산은 2002년 69.0억원에서 무상보육의 확대로 2014년 5,263.5억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보육·여성분야 예산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4%에서 28.7%로 크게 증가하였음.
-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또한 위기다문화가족도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및 사회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지역사회복지분야

-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 생활여건의 어려움,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의 문제점, 박탈정도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시 불편한 점 등에서 10개 군·구별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남.
- 원도심지역이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생활여건이 심각하고, 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족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 내 복지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관련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타시설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내 분포되어 있는 거의 모든 복지자원을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지도 제작과 배포, 각 시설들간의 연계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의 제시 등이 필요함.
- 「2013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결과 인천광역시 시민들 중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15.0%이며, 자원봉사활동분야를 6가지로 나누어 연간 참여횟수와 1회 평균 활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과 관련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활발하였음.
- 또한, 같은 조사를 분석하면, 지난 1년 동안 후원금을 기부한 적이 있다는 인천광역시 시민은 21.5%이며, 후원경로를 6가지로 나누어 연간 후원 횟수를 조사한 결과 종교단체

를 통한 후원 36.9%와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 30.3%가 가장 활발하였음.

-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기부와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원봉사와 기부와 같은 나눔활동을 장려하여 사회적으로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과 맞춤형 지원의 경우 공공부문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차원에서 민관협력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분야

- 2010년 및 2014년 공무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의 중요도분석에서 아동·청소년복지분야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중요도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었음.
-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서는 ‘방과 후 학습 지도(26.5%)’와 ‘체험학습활동(24.3%)’, 중고생이 있는 가구에서는 ‘성격이나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상담(27.6%)’과 ‘진로상담(26.2%)’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천광역시 본청의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아동·청소년분야의 예산은 2002년 251.9억원에서 결식아동 급식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대 등으로 2014년 672.0억으로 2.7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 및 노인이나 여성·가족 분야 예산의 증가가 컸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8.9%에서 3.7%로 감소하였음.
- 인천광역시 본청의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지역사회복지에서 아동·청소년분야의 비율도 같은 이유로 2010년 22.9%에서 2014년 6.3%로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분야 사회복지정책과 사업의 경우 청소년문화교류, 학교밖청소년 사회적 지원, 물리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방과후 학습과 같은 학습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 내에서의 생활 및 학교밖에서의 생활이 시공간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신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청과의 연계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보건의료 분야

- 2010년 및 2014년 공무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의 중요도분석에서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정신보건사업 확대, 취약계층 건강수준 향상, 생애주기별 적극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의 중요도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었음.

- 인천광역시 본청의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 및 기타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예산은 2002년 107.7억원에서 2014년 583.0억으로 5.4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 규모와 다른 분야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3.8%에서 3.2%로 감소하였음.
- 인천광역시 본청의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 지역사회복지에서 보건의료분야의 비율도 같은 이유로 2010년 9.6%에서 2014년 4.4%로 감소하였음.
-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사회복지사업들 중 정신질환·치매환자·자살고위험군 등 정신건강 관련 사업들을 연계하여 통합적 관리하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또한, 소아, 도서지역주민, 장애인,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 공공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의료원 신축과 같은 장기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현방안 모색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단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민간의료기관과의 공공의료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한 교육과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

III

III. 비전 및 핵심과제

1. 환경 및 여건변화 전망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Ⅲ. 비전 및 핵심과제

1. 환경 및 여건변화 전망

1) 사회경제적 요인

○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 감소 경향

-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액에서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율은 2010년 4.85%에서 2012년 4.76%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임.

〈표 3-1〉 인천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단위: 10억원, %)

		2010년	2011년	2012년
인천	총생산액	56,857	59,166	60,635
	전국 비율	4.85	4.77	4.76
전국	총생산액	1,172,742	1,241,582	1,274,989

*당해 연도 가격 기준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군구단위 지역내총생산, 각 연도

○ 취업자 증가 및 실업률 감소 경향

-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222.4만명에서 2013년 236.3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실제 취업한 사람은 132.0만명에서 144.2만명으로 증가하였음.
- 그 결과 실업률은 2010년 5.1%에서 2013년 4.2%로 감소하였으며, 고용률은 같은 기간 동안 59.3%에서 61.0%로 증가함.

〈표 3-2〉 인천광역시 경제활동 인구

(단위: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체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 동 인구			
		소계	취업자	실업자				
2010년	2,224	1,390	1,320	70	834	63.3 (61.0)*	5.1 (3.8)*	59.3 (58.7)*
2011년	2,257	1,429	1,360	68	829	61.7 (61.1)*	4.8 (3.4)*	60.3 (59.1)*
2012년	2,308	1,480	1,413	67	827	64.2 (61.3)*	4.5 (3.2)*	61.2 (59.4)*
2013년	2,363	1,505	1,442	63	859	63.7 (62.0)*	4.2 (3.0)*	61.0 (60.0)*

*당해 연도 전국 평균값

자료 : 인천광역시, 계간인천통계, 각 연도

- 인천의 경우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반면에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높음.
- 이러한 현상은 인천에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3〉 인천지역의 조직형태별 사업체 규모 현황

(단위: 명, 개소)

연도	종사자 수	전체	개인	회사법인	회사이외 법인	비법인
2008년	765,041	157,980	135,131	14,198	2,979	5,372
2009년	790,202	159,597	135,946	14,645	3,059	5,947
2010년	827,790	163,655	138,813	15,595	3,151	6,096
2011년	848,393	169,421	143,177	16,757	3,240	6,427
2012년	871,532	177,198	148,581	18,783	3,373	6,461
2013년	895,657	177,990	147,929	19,805	3,627	6,629

자료 : 인천광역시, 2014년 인천통계연보

○ 사업체 규모의 증가

-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은 사업체 규모나 이에 고용된 종사자 규모의 변화와도 연관됨.
- 인천의 사업체 규모는 2008년 약 15.8만개소에서 2013년 17.8만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체 종사자의 약 42% 정도를 고용하는 회사법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4,198개소에서 19,805개소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종사자의 규모도 2008년 약 76.5만명에서 2013년 89.6만명으로 증가함.

〈표 3-4〉 인천시민의 소득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 분	아주 부족하다	부족하지만 절약하면서 살아간다	적당한 편이다	여유 있는 편이다	아주 여유 있는 편이다
2005	30.5	49.7	17.4	2.1	0.2
2007	28.9	48.6	19.4	2.9	0.3
2009	33.7	46.3	16.9	2.6	0.5
2011	32.6	45.5	18.3	3.1	0.4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2013	9.2	28.6	36.8	22.4	3.0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각 연도

○ 소득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양극화

-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 조사」 결과 소득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아주 부족

하다’ 고 평가한 경우가 2005년 30.5%에서 2011년 32.6%로 증가한 반면에, ‘여유 있다’ 와 ‘아주 여유있다’ 를 합산 한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2.3%에서 3.5%로 증가하여 주관적 평가의 양쪽 끝이 증가함.

- 하지만, ‘부족하지만 절약하면서 살아간다고’ 대답하는 서민·중산계층의 의견은 2005년 49.7%에서 45.5%로 감소하였음.
- 그 결과 2013년 조사에서는 자신의 소득상태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 인 경우는 9.2%, ‘약간 불만족’ 인 경우는 28.6% 수준으로 전체의 약 37.8%가 자신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는 상황임.

○ 등록 외국인의 증가

- 인천에 거주지를 등록을 한 외국인의 규모는 2009년 47,852명에서 2013년 50,382명으로 증가함.
- 2013년 현재 등록외국인 50,382명의 국적은 중국 22,108, 대만 2,786, 인도네시아 2,090, 필리핀 2,432, 베트남 6,107, 방글라데시 948, 태국 1,943, 미국 939, 일본 811, 영국/캐나다 229, 기타 9,989 등임.
- 인천에 등록된 외국인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이주근로자, 송도지역에서 일하는 사무직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표 3-5〉 인천광역시 외국인 등록 현황

(단위: 명, %)

연도	인천 인구	외국인				
		합계	남성	여성	구성비	증가율
2009	2,758,431	47,852	29,259	18,593	1.7	-
2010	2,808,288	49,992	31,083	18,909	1.8	4.5
2011	2,851,490	50,217	30,523	19,694	1.8	0.5
2012	2,891,286	47,305	28,099	19,206	1.6	-5.8
2013	2,930,164	50,382	30,027	20,355	1.7	6.5

자료 : 인천광역시, 2013년 4/4분기 계간 인천통계

- 인천에 등록된 다문화가족은 2008년 1,954가족에서 2013년 1,328가족으로 감소함.
- 다문화가족의 감소가 타 시·도로의 거주지 이전이나 다문화가족의 해체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다문화정책에서 결혼이주자 및 그 2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은 지역사회복지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임.

〈표 3-6〉 인천광역시 다문화가구 현황

(단위: 가구)

	전체	외국인 부인 가구	외국인 남편 가구
2008	1,954	1,624	330
2009	1,783	1,442	341
2010	1,839	1,471	368
2011	1,473	1,156	317
2012	1,420	1,062	358
2013	1,328	1,007	321

자료 : 인천광역시, 2014년 인천통계연보

○ 취약계층 현황

-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취약계층들의 규모 및 변화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 대표적인 저소득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규모는 2009년 72,492명에서 2013년 70,133명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3-7〉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현황

	인천 인구(명)	기초생활수급자(명)	장애인(명)	저소득.한부모가족(명)	독거노인(명)	여성가구주(가구)
2009	2,758,431	72,492	126,738	31,471		
2010	2,808,288	73,715	131,699			228,481
2011	2,851,490	71,510	131,789	27,262		
2012	2,891,286	70,194	133,467	37,067		
2013	2,930,164	70,133	133,778		64,758	

자료 : 인천광역시, 2014년 인천통계연보, 2014

- 장애인은 2009년 12.7만명에서 2013년 13.4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장애유형별로는 2013년을 기준으로 지체장애인이 54.3%인 72,617명, 시각장애인이 10.2%인 13,604명, 청각장애인이 9.9%인 13,286명, 뇌병변장애인이 9.5%인 12,687명, 10.4%인 13,907명은 지적장애·자폐·정신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임.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규모는 2009년 31,471명에서 2012년 37,06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자는 61.7%인 22,874명이며, 나머지 38.3%인 14,193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임.
- 2013년 독거노인은 64,758명이며, 이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19.1%인 12,372명, 저소득노인은 10.6%인 6,848명, 나머지 70.3%인 45,538명은 일반 노인임.
- 2010년 현재 인천광역시 91.9만 가구 중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는 24.9%인 22.8만가구이며, 이는 전체 가구의 1/4이 여성가구임을 의미함.

○ 높은 자살률

-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30~50대 및 70대에서 자살률은 증가한 반면에, 그 외 연령층에서는 감소함.
-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 또한 높으며 특히 65세 이상 자살률은 89.2명으로 인천시 평균 자살률의 약 2.9배 수준임.

〈표 3-8〉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연령표준화 자살률*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24.7	21.3	23.9	24.7	29.1	28.7	28.8	25.1	25.1
서울	20.1	17.1	19.6	20.7	24.6	24.3	24.6	21.2	22.6
부산	26.1	21.2	24.1	25.9	29.3	29.3	28.6	26.5	24.9
대구	22.9	20.4	22.6	24.5	28.0	27.9	27.5	22.4	24.1
인천	26.7	23.5	24.1	27.2	30.7	31.0	31.2	29.4	27.9
광주	20.6	17.5	23.6	22.1	28.8	30.7	26.1	24.6	21.6
대전	27.7	23.7	25.3	22.9	31.1	29.0	29.0	24.1	22.6
울산	23.5	18.3	21.3	23.4	25.9	24.6	25.5	22.8	23.6
세종시								33.6	14.7
경기도	26.2	22.1	23.2	24.6	28.8	28.9	29.2	25.5	25.8
강원도	31.7	27.4	33.0	33.0	38.1	36.8	37.7	31.4	32.0
충청북도	31.3	26.0	28.4	30.6	37.5	31.9	33.6	30.6	29.3
충청남도	32.0	27.9	31.7	30.3	38.8	36.9	36.5	30.0	30.3
전라북도	23.8	22.7	28.0	26.8	31.0	28.3	31.6	25.1	24.5
전라남도	21.8	20.0	21.8	23.8	28.0	29.0	27.8	25.8	25.7
경상북도	25.1	22.8	26.2	25.1	29.2	29.7	30.0	27.1	25.8
경상남도	26.8	24.1	27.4	27.0	29.2	29.3	29.2	24.0	24.3
제주도	27.3	20.5	24.5	28.1	31.7	30.2	28.5	29.4	30.5

*인구 10만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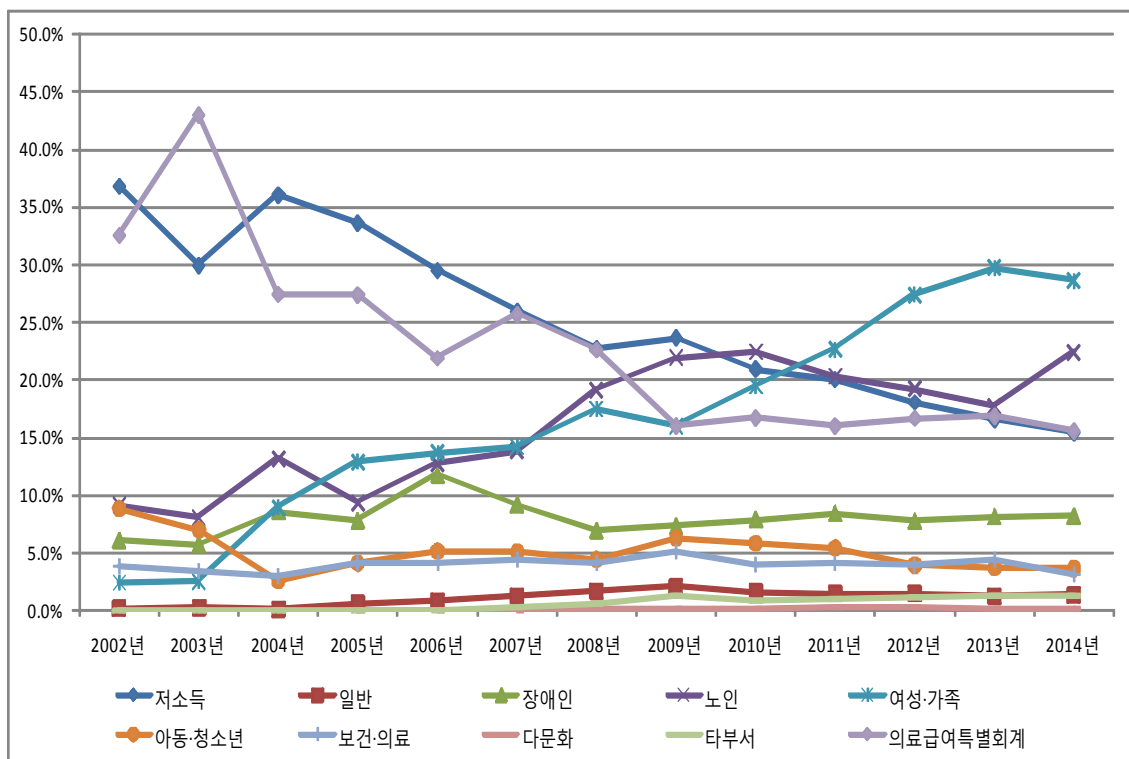
자료 : 한국 자살률, 나이와 지역 따라 양극화 - 신기섭의 자료로 본 한국, 한국인
(<http://plug.hani.co.kr/data/textyle/1965347>)

○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 부문별 사회복지예산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이 포함된 저소득분야 예산은 2002년 1,045.0억원에서 2014년 2,836.8억원으로 2.7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사회복지예산에서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36.8%에서 15.4%로 크게 감소함.
- 전체 예산과 다른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저소득분야 예산의 비중이 감소한 것임.

- 장애인분야 예산은 2002년 173.7억원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의 도입과 대상자 확대와 금에 인상 등에 따라 2014년 1,508.0억원으로 8.7배 증가함.
·그 결과,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장애인예산 비율은 같은 기간 6.1%에서 8.2%로 증가함.
- 노인분야 예산은 2002년 260.5억원에서 노인기본·종합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치매 관련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2014년 4,116.6억원으로 15.8배 증가함.
·그 결과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노인분야의 예산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9.2%에서 22.4%로 크게 증가하였음.
- 여성·가족분야의 예산은 2002년 69.0억원에서 무상보육의 확대로 2014년 5,263.5억으로 76.3배 증가함.
·그 결과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여성·가족분야의 예산 즉, 보육·여성분야 예산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4%에서 28.7%로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3-1〉 인천광역시 분야별 사회복지예산의 변화



자료 : 이용갑·최동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사업 개발 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4

- 아동·청소년분야의 예산은 2002년 251.9억원에서 결식아동 급식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대 등으로 2014년 672.0억으로 2.7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 및 노인이나 여성·가족 분야 예산의 증가가 컸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8.9%에서 3.7%로 감소하였음.
-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 및 기타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의료예산은 2002년 107.7억원에서 2014년 583.0억으로 5.4배 증가함.
 - 그 결과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보건의료분야 예산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3.8%에서 3.2%로 약간 감소하였음.
 - 다문화분야 예산은 2007년 1.7억원으로 처음 독립적으로 편성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예산은 38.1억으로 22.4배 증가함.
 - 하지만, 예산 금액 자체가 너무 작고, 전체 예산 및 노인이나 여성·가족 분야 예산의 증가가 컸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다문화분야 예산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0.0%에서 0.2%로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제공하지만, 독자적인 기금으로 편성되는 의료급여의 예산은 2002년 924.0원에서 2014년 2,866.1억으로 3.1배 증가함.
 - 하지만, 예산 금액 자체가 너무 작고, 전체 예산 및 노인이나 여성·가족 분야 예산의 증가가 컸기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의료급여 예산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32.6%에서 15.6%로 감소하였음.

〈표 3-9〉 인천광역시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평균	17.5	18.3	19.9	20.9	21.3	23.1
인천광역시 평균	20.4	19.8	22.3	26.5	26.7	27.3
인천본청	19.7	20.2	21.9	27.1	26.0	27.8
중구	26.2	23.6	23.9	28.9	29.1	32.2
동구	34.4	31.0	33.1	38.4	40.7	40.9
남구	47.4	47.6	48.7	52.3	54.2	56.7
연수구	46.5	42.9	43.7	48.3	45.8	51.0
남동구	35.8	38.0	42.2	47.5	49.9	53.7
부평구	50.4	47.7	49.7	56.0	57.5	60.0
계양구	45.4	45.2	50.0	50.7	52.2	55.0
서구	38.3	35.7	40.5	45.1	48.1	50.8
강화군	14.4	10.6	15.0	16.4	14.9	16.9
옹진군	11.1	8.6	11.5	11.8	10.5	9.6

자료 :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gaha.go.kr/main.jsp>)

○ 기초지자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증가

- 2008년 이후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율의 평균은 2008년 17.5%에서 2013년 23.1%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전체 평균도 같은 기간 동안 20.4%에서 27.3%로 증가함.
- 인천의 기초지자체 중 사회복지비 예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자체는 2013년 현재 남

- 구 56.7%, 연수구 51.0%, 남동구 53.7%, 부평구 60.0%, 계양구 55.0%, 서구 50.8%임.
- 사회복지예산이 50%이상인 지자체는 인구 30만 명 이상의 지자체로 2013년 말 현재 남구는 41.8만명, 연수구 30.5만명, 남동구 51.9만명, 부평구 56.5만명, 계양구 34.7만명, 서구 50.0만명임.
- 반면에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인 인구 11.1만명의 중구는 32.2%, 7.6만명의 동구는 40.9%, 6.7만명의 강화군은 16.9%, 2.1만명의 옹진군은 9.6%로 사회복지예산의 비율도 낮은 수준임.

2) 인구지표

○ 영유아의 증가 및 노인의 증가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의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0~6세까지의 영유아아동도 증가함.
- 65세 이상 노인은 2009년 22.6만명에서 2013년 28.2만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인천인구의 8.3%에서 9.8%로 증가함.
- 0~3세 아동의 경우 2009년 약 10.2만명에서 2013년 11.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인천인구의 3.7%에서 3.8%로 증가하였으며, 4~6세의 아동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7.8만명에서 8.3만명으로 증가하면서 그 비율이 2.8%로 유지됨.
- 이에 따라 인천 전체 인구, 65세 이상 노인 및 6세 이하 아동의 인구 규모는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폭이 전체 인천인구의 증가폭보다 큰 반면에 6세 이하 아동인구의 증가폭은 인천 전체 인구의 증가폭과 유사하여 절대 수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인천의 경우 지역사회복지자원에서는 현재 전국 평균보다 작은 수준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의 아동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2가지 인구사회학적 변동을 고려해야 함.

〈표 3-10〉 인구구조의 변화

(단위: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2,758,431		2,808,288		2,851,490		2,891,286		2,930,164	
0~3세	101,907	3.7%	103,169	3.7%	105,009	3.7%	108,416	3.8%	109,815	3.8%
4~6세	77,841	2.8%	75,149	2.7%	78,241	2.7%	81,695	2.8%	82,734	2.8%
65세 이상	225,683	8.3%	237,805	8.6%	250,528	8.9%	267,059	9.4%	282,471	9.8%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 장기 인구 변화

- 인천의 인구규모는 2010년 271.3만명에서 2040년 303.6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됨.
- 연령별로는 0~14세의 유소년인구는 2010년 45.0만명에서 2040년 35.0만명으로 감소하면

- 서,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은 16.6%에서 11.5%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203.0만명에서 2040년 177.5만명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은 74.8%에서 58.5%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인천의 15~64세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약 2% 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함.
 - 65세 이상 노년인구는 2010년 23.4만명에서 2040년 91.1만명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은 8.6%에서 30.0%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인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약 2% 포인트 낮은 수준을 유지함.

〈표 3-11〉 장기 인구 변화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전체 (천명)	전국	49,410		51,435		52,160		51,091	
	인천	2,713		2,952		3,061		3,036	
65세+ (천명)	전국	5,452	11.0%	8,084	15.7%	12,691	24.3%	16,501	32.3%
	인천	234	8.6%	386	13.1%	676	22.1%	911	30.0%
15-64세 (천명)	전국	35,983	72.8%	36,563	71.1%	32,893	63.1%	28,873	56.5%
	인천	2,030	74.8%	2,162	73.2%	1,986	64.9%	1,775	58.5%
0-14세 (천명)	전국	7,975	16.1%	6,788	13.2%	6,575	12.6%	5,718	11.2%
	인천	450	16.6%	404	13.7%	400	13.1%	350	11.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2012.6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의 변화
- 연령별 인구규모가 변화함에 따라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도 변화함.
 -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인구(유소년 및 고령자)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2010년 33.6에서 2040년 71.0으로 증가하게 됨.
 - 2040년 인천의 총부양비는 가장 낮은 서울의 67.6 다음으로 6번째 낮은 수준임.
 - 생산가능인구 1백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 수를 의미하는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2010년 22.1에서 2040년 19.7으로 감소하게 됨.
 - 2040년 인천의 유소년 부양비는 서울 17.0, 부산 17.5, 대구 19.3 다음으로 4번째 낮은 수준임.

〈표 3-12〉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총부양비	전국	37.3	40.7	58.6	77.0
	인천	33.6	36.5	54.2	71.0
유소년 부양비	전국	22.2	18.6	20.0	19.8
	인천	22.1	18.7	20.1	19.7
노년 부양비	전국	15.2	22.1	38.6	57.2
	인천	11.5	17.9	34.0	51.3
노령화지수	전국	68.4	119.1	193.0	288.6
	인천	52.0	95.7	169.0	260.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2012.6

- 생산가능인구 1백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노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10년 11.5에서 2040년 51.3으로 증가하게 됨.
·2040년 인천의 노년부양비는 광주 33.2, 대전 36.4, 경기도 37.1, 서울 38.4 다음으로 5번째로 낮은 수준임.
- 유소년 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노년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유소년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2010년 52.0에서 2040년 260.5으로 증가하게 됨.
·2040년 인천의 노령화지수는 광주 211.4, 대전 227.4, 경기도 231.8, 울산 237.4 다음으로 5번째로 낮은 수준임.

3) 물리적 환경

○ 생활권 설정

- 생활권이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활동 범위로서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활동 등을 위한 공간적 범위임.
- 생활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근린 또는 행정동 단위의 ‘소(小)생활권’, 일정 규모의 상업·업무기능을 갖춘 ‘중(中)생활권’, 및 자치구 혹은 부도심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大)생활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표 3-13〉 인천의 대(大)생활권

구분	행정구역
도심대권	· 중구 : 영종동 · 용유동을 제외한 전지역 · 동구 : 전지역 · 남구 : 전지역 · 남동구 :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수산동을 제외한 전지역
남부대권	·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 남동구 :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수산동 · 연수구 : 옥련1·2동, 선학동, 연수1·2·3동, 청학동, 동춘1·2·3동
동북대권	· 부평구 : 전지역 · 계양구 : 전지역
서북대권	·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 서구 : 전지역
영종대권	·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 중구 : 영종동, 용유동 · 옹진군 : 북도면
강화대권	· 강화군 : 전지역
영종대권	· 옹진군 : 북도면 제외한 전지역

자료 : 인천광역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2012.12

○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된 생활권 및 인구 전망

-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의 생활권을 7개로 구분함.
- 도심대권

- 중구와 동구 일대 그리고 남동구의 기존시가지 일대는 기능변화에 따라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향후 신규 개발지역으로의 인구이전에 따른 인구 감소가 예측됨.
- 남구 일대는 기성시가지의 개발이 거의 완료된 지역이며,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신규 개발지역으로의 인구이전에 따른 감소추세가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이 추진 될 경우 외부로의 인구유출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남부대권
 -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는 계획인구 30만명을 계획하고 있음.
 - 남동구 남부지역 일대는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인구증가가 예상됨.
 - 연수구 내 기존 시가지는 비교적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변 신규 개발지역으로 인구이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동북대권
 - 부평구 일대는 개발이 이미 완료된 지역이며, 생활권내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인천 관내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 지역으로 이전이 예상됨.
 - 계양구 일대는 인구증가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여건 제한에 따라 신규 개발지역으로 인구가 이전하는 현상이 예상됨.
- 서북대권
 -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는 계획인구 약 9만명을 계획하고 있음.
 - 검단지역은 검단신도시 개발 가속화로 인해 높은 인구증가가 예상됨.
 - 서구의 기존시가지 일대는 지속적으로 인구감소 추세이며, 향후 청라국제도시와 같은 신규 개발지역으로 인구이전 현상이 예상됨.
- 영종대권
 -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약 41만명을 수용할 예정임.
- 강화대권
 - 인구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관광지 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의 활성화로 인구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옹진대권
 - 인구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관광지 개발 및 주거환경정비의 활성화로 인구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3-14〉 인천의 대(大)생활권별 주요 복지환경 지표

(단위: 만명, 개소)

구분	계획 인구	보육 시설	아동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종합 복지관	여성 복지시설	종합 병원
전체	340	210	14	209	31	157	14	209	14
도심대권	82	49	3	46	7	39	3	49	3
남부대권	60	33	2	33	6	28	3	33	3
동북대권	78	42	3	40	6	33	2	42	2
서북대권	69	40	3	38	6	31	3	40	3
영종대권	41	27	2	25	5	21	1	27	1
강화대권	8	13	1	14	1	4	1	12	1
영종대권	2	6	-	13	-	1	1	6	1

자료 : 인천광역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2012.12

○ 생활권별 활성화 전략

- 적정 수요의 공공시설 확보

·생활권별 장래 인구규모 및 지역적 특성, 영역성 등을 감안하여 균형적으로 공공시설을 배치함.

·종합적 기능의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소규모 다기능 공공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수립함.

- 균형적인 시설 배치 유도

·기존 공공시설의 입지를 고려한 향후 이전 및 신규 적지를 선정함.

·적정 수요의 공공시설을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도서지역 등은 소규모 종합기능의 공공시설 설치 등으로 균형적 서비스를 제공함.

- 생활권별 주요 복지환경 지표

·생활권별 장래 인구규모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시설 지표를 설정함.

·대규모 시설의 경우 생활권 범위를 감안하여 생활권별 1개소씩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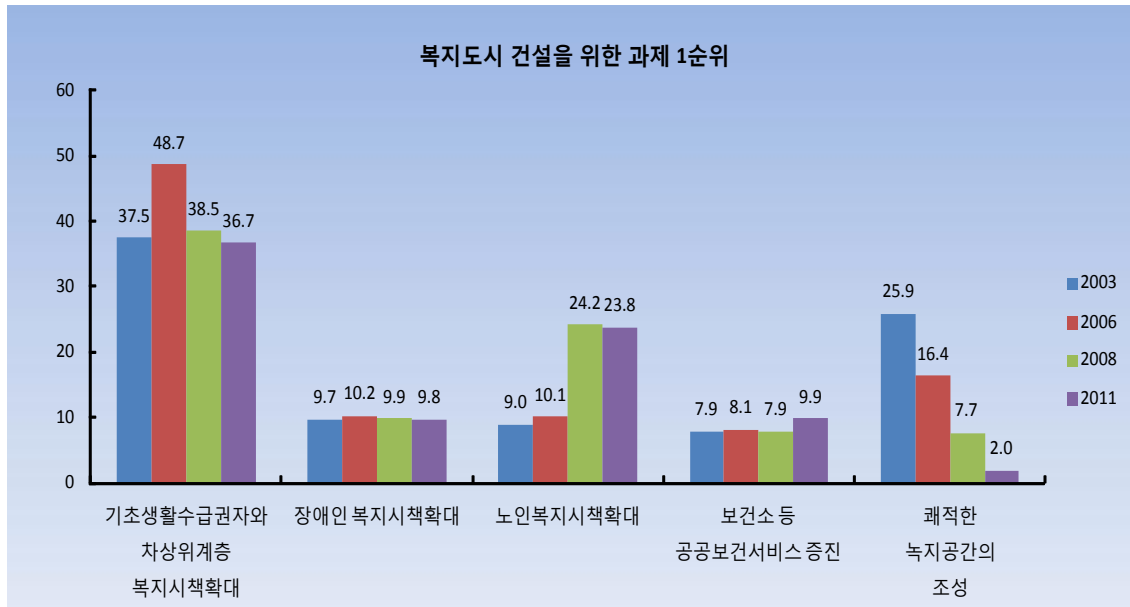
4)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식 및 요구사항

○ 「2011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결과 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

- 인천광역시의 「2011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서 인천시민들은 건강한 복지사회를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할 과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복지시책 확대’ (36.7%), ‘노인 복지시책 확대’ (23.8%), ‘아동 복지시책 확대’ (12.1%)로 제시함. 순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 비교하면 ‘노인 복지시책 확대’는 2003년 9.0%에서 2006년 10.1%, 2008년 24.2%, 2011년 23.8%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에, ‘쾌적한 녹지공간의 조성’은 같은 기간 동안 25.9%에서 2.0%로 큰 폭으로 감소함.

<그림 3-1> 시민들이 생각하는 복지도시건설 위한 과제



자료 : 인천광역시, 2011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2012.6

○ 2012년 「지역사회 행복지표」 결과 복지환경 만족도

- 2012년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인천여성행복에 관한 연구”의 세부지표인 「지역사회 행복지표」 조사결과 인천 여성의 복지환경에 대한 5점 기준 만족도는 다음과 같음.
-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인 3.25로 가장 높음
- 반면에,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가장 낮은 수준(2.68)이었으며, 그 외에도 여성의 일-가족양립, 장애인지원, 자녀양육, 노인지원 등에 대하여 인천 여성들의 만족도는 보통 이하임.

<표 3-15> 인천 복지환경에 대한 인천 여성의 만족도*

영역	세부 영역	질문	만족도
취약계층 지원 환경	빈곤 지원	빈곤층에 대한 만족할 만한 지원	2.68
	장애인 지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충분	2.78
	노인 지원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충분	2.85
일-가정양립 환경	일-가정양립 지원	여성이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	2.76
의료서비스 환경	의료서비스 지원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	3.25
여가·문화 환경	여가·문화 지원	만족스러운 여가·문화 환경	2.92
주거환경	주거 지원	만족스러운 주거환경	2.90
보행약자 시스템 구비 환경	보행약자 시스템 지원	보행약자를 위한 시스템 만족	2.92
자녀양육 환경	자녀양육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2.81
교육환경	교육환경 지원	만족스러운 교육환경	2.90

*5점 척도

자료 : 홍미희·한미경, 인천시 지역사회환경 개선 방안 연구 - 안전 및 복지환경을 중심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 2014.1

○ 2014년 「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

- 2014년 인천광역시 10개 군·구가 해당지역에서 실시한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인천광역시차원에서 분석하면 인천시민들이 제기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 및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5점 척도로 대답한 지역사회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의료시설 부족(2.9)’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부족(2.8)’ 등을 제시함.
-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문화·여가활동 서비스(34.3%)’, ‘건강·의료서비스(27.5%)’,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26.0%)’ 등을 제시함.
- 미취학아동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문화공간(36.9%)’, ‘시간연장형 보육(27.4%)’ 등을 제시함.
- 초등학생 양육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방과후 학습지도(26.5%)’, ‘체험학습활동(24.3%)’, ‘취미·특기 교실(19.9%)’ 등을 제시함.
- 청소년이 있는 가구가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성격·대인관계 등 개인고민상담(27.6%)’, ‘진로상담(26.2%)’, ‘학습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19.1%)’ 등을 제시함.
-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가사지원(19.2%)’, ‘방문간호(16.2%)’, ‘고용지원(14.7%)’ 등을 제시함.
-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고용지원(23.5%)’,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14.9%)’, ‘재활훈련(12.3%)’, ‘일상생활지원(10.5%)’ 등을 제시함.

○ 2014년 인천발전연구원 「지역사회복지발전방향조사」 결과 제시된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의 중요도

- 2014년 인천발전연구원이 사회복지직·보건직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복지발전방향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분야별로 중요하다고 제시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3.90)’,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3.89)’,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대상 발굴 및 확대(3.86)’ 등이 제시됨
-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분야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안전망 확대(4.00)’,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개발(3.96)’, ‘사례관리 사업 강화(3.84)’ 등이 제시됨.
- 노인복지분야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3.99)’, ‘사각지대, 취약계층 노인 지원(3.95)’, ‘독거노인 지원정책 개발(3.88)’ 등이 제시됨.
-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장애인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3.99)’, ‘이동 및 편의시설 확충(3.90)’,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3.89)’ 등이 제시됨.
- 여성·가족복지분야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3.99)’,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3.97), ‘일-가족 양립 지원(3.94)’ 등이 제시됨.
- 아동·청소년복지분야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3.99)’,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정보호 지원(3.89),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제적 지원(3.87)’ 등이 제시됨.
- 보건분야에서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정신보건사업 확대(3.89)’, ‘생애주기별 적극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3.85), ‘취약계층 건강 수준 향상(3.82)’ 등이 제시됨.

5) 제3기 계획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 복지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

-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업률도 상대적으로 높음.
- 이러한 현상은 인천에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일자리의 부족은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도 부정적이며, 이들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지와 연계된 일자리창출이 필요함.
- 여성, 노인, 장애인 분야의 경우 일자리와 관련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는 노인·장애인·여성·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을 확대와 취업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돌봄수요 증가에 따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강화

- 2040년까지의 장기 인구추계에서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340만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40년에는 303.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2010년 현재 약 8.6%인 65세 이상 인구는 2040년 30.0%까지 증가하지만, 0~5세의 아동은 같은 기간 동안 5.7%에서 2.7%로 감소하게 됨.
- 노인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지원 등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됨.
- 저출산은 지속되지만, 보육의 사회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시간연장형 보육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됨.
- 또한, 장애인을 위한 이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이에 따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는 노인·장애인 및 영유아와 아동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위해 사례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 인천광역시민들이 생각하는 해결해야 하는 지역사회문제 1순위는 의료시설 부족, 2순위는 사회복지시설 부족임.
- 이에 따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는 소아, 도서지역주민, 장애인, 보훈대상자 및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하여 의료시설 확충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인프라 확대 및 민·관 협력 강화

- 인천광역시민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강조하며, 공무원·전문가·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이를 위하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대상 발굴 및 확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안전망 확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개

발, 사례관리 사업 강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발굴, 맞춤형 긴급지원 및 민간부문의 지원이 서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하고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며, 통장제도를 복지통장제로 전환하고, 모든 읍·면·동에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긴급지원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는 민간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발굴하고, 민간의 자원과 재능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맞춤형 현금·현물·재능기부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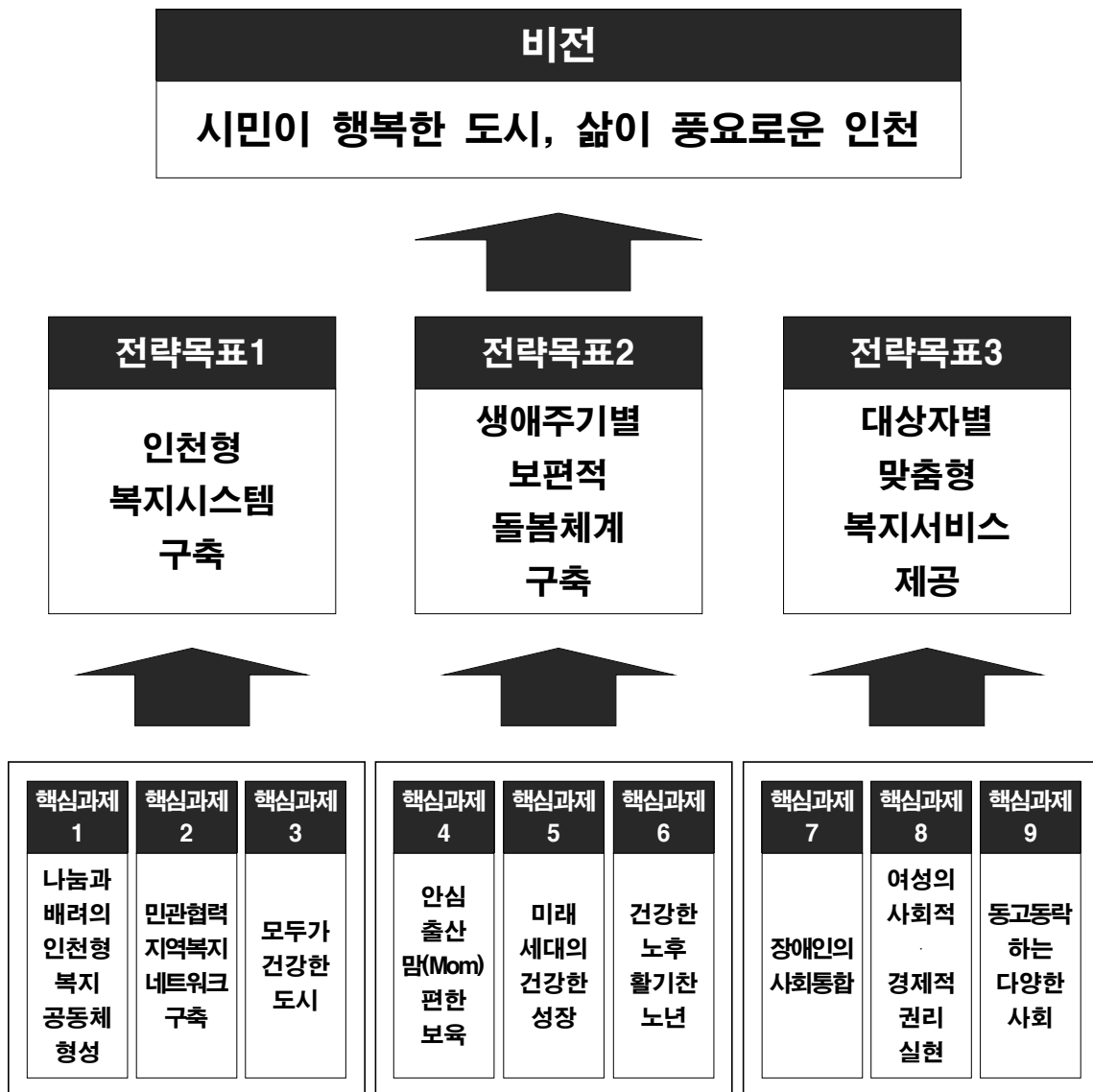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1) 비전 및 전략목표

○ 비전 :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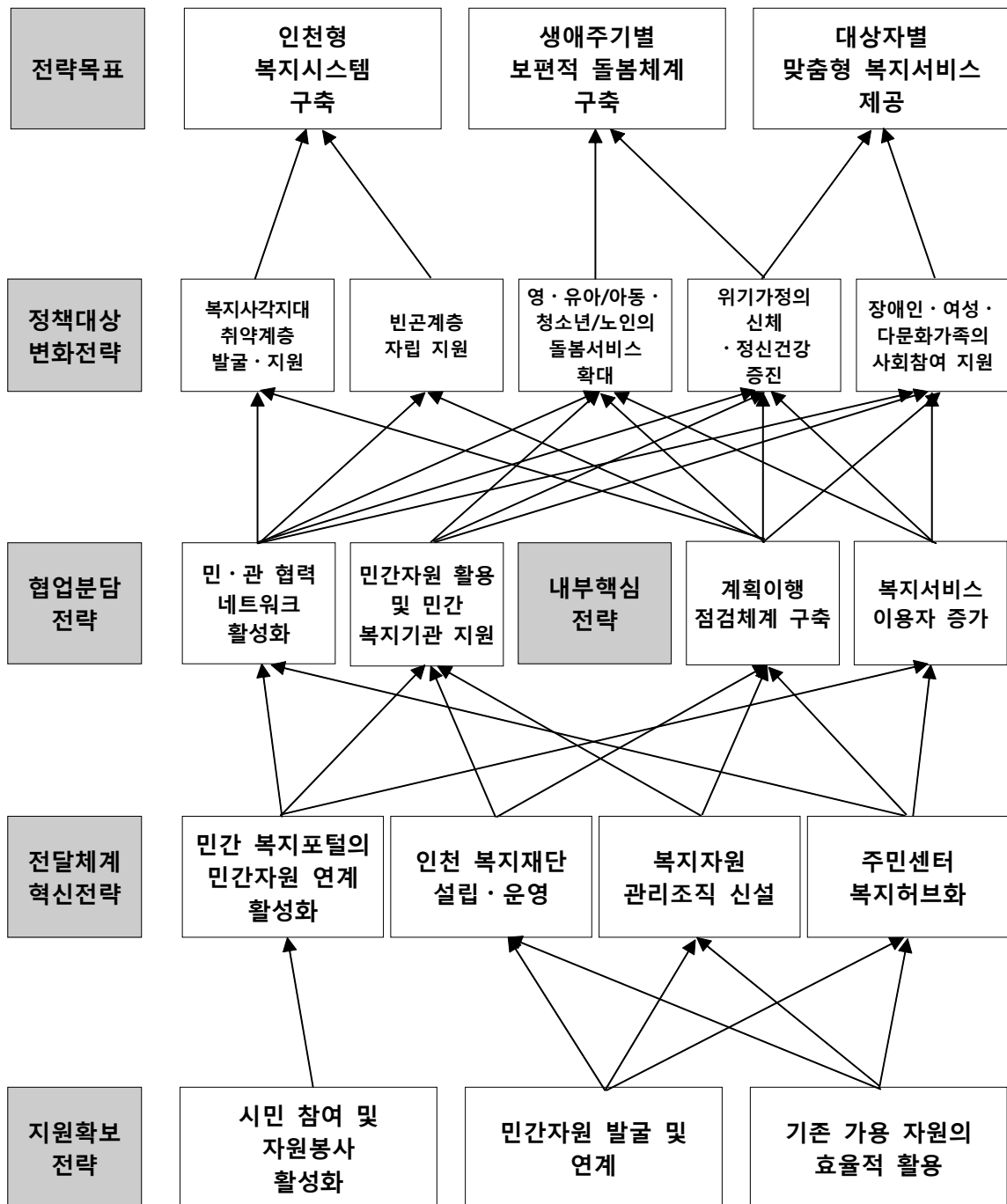
-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은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환경 변화 및 전망, 10개 구군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핵심과제, 민선6기 시정계획 사회복지분야의 비전과 목표 및 핵심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그림 3-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 민·관 협력에 의한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고자 함.

〈그림 3-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전략지도



○ 전략목표

-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 사회복지계획의 전략목표는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및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설정함.
-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복지통장제·동복지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공부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 및 민간부문의 자원·재능기부를 통한 민관협력방식으로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고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략임.
- ‘생애주기별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은 임신·출산·보육부터 아동·청소년 및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심되는 출산과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보육기반 확대,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임.
-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은 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및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정립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 배우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며 자녀와 함께 사회통합을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함께 어울려 동고동락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전략임.

2) 핵심과제

○ 핵심과제의 선정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기초자료 및 주민복지욕구조사와 같은 여러 설문조사결과들을 토대로 도출됨.
- 핵심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선정됨
 - 모든 사회복지사업의 분야별 제시가 아니라, 지역사업 중심 사업의 범주화
 - 실행과 평가가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범주화
 - 10개 군·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맞춤지원
 -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의 채널화
-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들은 하나의 전략목표에 각각 3개의 핵심과제들이 범주화됨.

○ 전략목표 1 :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

- 핵심과제 1-1 :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 체계화
 - 공공부문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 저소득취약계층의 빈곤탈출지원 강화

-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강화
- 핵심과제 1-2 : 민·관 협력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 민·관 협력 복지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 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복지허브화를 위한 인력확충 및 기능 강화
 - 지역사회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복지통장제 및 동복지위원회 운영
 - 건강증진과 취업 지원, 교육 등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쉼터 운영
 - 지역주민 사회복지욕구 조사·분석 및 인천형 지역사회복지정책·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설립·운영함
- 핵심과제 1-3 : 모두가 건강한 도시
 - 공공의료기관들의 연계 체계 구축
 - 소아, 장애인, 도서지역주민,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강화
 - 건강증진활동의 생활화
 -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사회적 자립 지원
 - 정신질환·치매·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통합관리 활성화

○ 전략목표 2 : 생애주기별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 핵심과제 2-1 : 안심 출산, 맘(Mom) 편한 보육
 - 여성의 출산지원 강화 추진
 -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어린이집/24시 어린이집/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
 - 안전하고 투명한 안심보육 환경 마련
 - 법정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 및 민간어린이집 이용시 발생 하는 보육비용의 차액을 지원
- 핵심과제 2-2 :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 취약계층 아동 및 위기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필요
 -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 강화
- 핵심과제 2-3 :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년
 - 노인을 위한 사회참여 지원 시스템의 강화
 - 노인을 위한 돌봄과 보호 체계의 강화
 - 노인복지의 정책 기능 강화
 -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

○ 전략목표 3 :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핵심과제 3-1 : 장애인의 사회통합
 -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및 서비스 발굴
 -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

- 장애인 욕구 맞춤형 장애인복지시설 증설 및 운영확대
- 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활동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핵심과제 3-2 :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실현
-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성 주류화 정책 추진 확대
- 인천여성 취업 관련 기관의 헤드쿼터 운영
- 아동과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실현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
- 핵심과제 3-3 : 동고동락하는 다양한 사회
-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활용 및 프로그램 강화
- 다문화가족 문제 해소 및 진정한 사회통합 정책 추진



IV

IV. 핵심과제별 세부사업 계획

1. 핵심과제 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2. 핵심과제 2: 민관협력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3. 핵심과제 3: 모두가 건강한 도시
4. 핵심과제 4: 안심 출산·맘(Mom) 편한 보육
5. 핵심과제 5: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6. 핵심과제 6: 건강한 노후, 활기찬 여가
7. 핵심과제 7: 장애인의 사회통합
8. 핵심과제 8: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실현
9. 핵심과제 9: 동고동락하는 다양한 사회

IV. 핵심과제별 세부사업 계획

1. 핵심과제 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

1)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일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자활사업, 사각지대발굴과 긴급지원 등 다양하지만, 제도 및 예산의 한계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구와 최저생계비 120%이내 차상위계층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긴급복지 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의 필요성

- 예산과 제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찾아내어 이들에게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하며, 또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자립 지원의 필요성

- 저소득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생계급여 제공뿐만 아니라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선순환구조의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이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목돈마련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민관협력에 의한 저소득취약계층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

-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취약계층이외에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정에 대한 파악이나 지원은 공공부문의 복지통장제도, 매년 실시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현금·재능기부 및 자원봉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과 결합될 필요가 있음.

○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일반 성인 대상 돌봄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증가

-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서비스로 전환되면서 대상자도 저소득취약계층에서 중산·서민층으로 확대되었고, 그 내용도 다양화됨.
- 다양화된 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의 여러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2) 현황 및 대응방안

① 수요분석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취약계층의 증가

-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구는 2010년 41,075가구의 73,715명에서 2011년 40,631가구 71,510명, 2012년 40,890가구 70,194명으로 감소추세였다가, 2013년 41,950가구, 70,133명, 2014년 42,020가구 72,113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구의 변화에서 일반 수급자는 2010년 66,917명에서 2014년 61,876명으로 감소한 반면에, 시설수급자는 3,473명에서 3,805명으로, 특례수급자는 3,167명에서 5,952명으로 증가함
- 최저생계비 120%이내 차상위계층의 규모도 2013년 약 35,312가구의 약 65,047명에서 2014년 10월 36,324가구 66,427명으로 증가하면서, 그 구성도 모자가족 26,051명,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16,499명,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7,913명, 차상위 장애인 7,502명, 부자가족 7,107명, 차상위 자활대상자 815명, 청소년한부모 모자가족 384명, 청소년한부모 부자가족 44명, 조손가족 112명임.

○ 보호대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발굴규모의 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구 및 차상위계층의 증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보호대상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임.
- 위기·빈곤가정을 사전에 발굴하여 선제적 대응함으로써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유도하고자 2011년 12월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구성된 ‘희망복지지원단’ 및 주민센터 복지위원제도 등의 활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를 2012년 7,952명, 2013년에는 6,378명을 발굴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중 지원자는 2011년 2,691명에서, 2012년 2,628명, 2013년 3,81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또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2011년 1,300명에서 2012년 2,700명, 2013년 3,000명으로 증가함.

○ 민민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의 발전이 필요한 민간지원체계

- 증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인구, 차상위계층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부문의 공식적인 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인력을 제공하고 있음.
- 직장인 자원봉사 재능나눔이나, 사랑가(家)꿈 등의 자원봉사활동은 민민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금품·물품·재능기부가 연계되어야 함.

○ 일을 통한 탈빈곤 및 자립

-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및 자립을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자활사업 참여자는 2012년 약 2,600명, 2013년 약 3,000명이지만, 그 수요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음.
-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 및 자립을 지원하는 또 다른 수단인 목돈마련 지

원에 대한 수요도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수요자가 각각 증가하고 있음.

- 저소득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자도 2010년 4,500명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1만명 수준임.

○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의 증가

- 2007년 32억원을 투입하여 9개 사업으로 시작한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12년 약 91억원, 36개 사업으로 연인원 약 16.8만명의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및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② 공급분석

○ 공공부문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2013년 41,852가구의 70,553명에게 1,874.3억원의 기초생활보장을 지급하였으며, 3,812명에게 39.8억원의 긴급지원을 제공함.

○ 민간부문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공공부문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참여와 유연하고 긴급한 지원이 어려움.
- 이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및 민관협력에서 진행됨.
- 분산된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의 중복 및 누락 방지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물품지원 및 재능기부를 통해 돕고자 하는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도와 인천지역 내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만들고자 하는 시민참여형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약 1,500건의 물품기부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 현금기부자를 발굴하여 약 1.5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여 전체적으로 약 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함.
- 또한, 민간영역의 긴급지원사업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복지사각지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행복나눔인천 긴급지원사업 통합한 2014년 통합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의료비지원 67건, 생계비 지원 25건, 재해재난복구비 지원 3건을 제공함.

○ 저소득취약계층의 결식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차원의 통합적 노력

- 민간부문의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제도화하여 저소득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해소하고자 푸드뱅크 11개소, 푸드마켓 15개소 등 총 26개소의 기부식품 제공업소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의 증가

-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12년 91억원 36개 사업 연인원 16.8만명, 2013년 102억원, 380개 사업으로 연인원 약 17만명의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및 일반 성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저소득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 약 3,000명이 1개

광역자활센터와 11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약 90여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월 약 63~93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음.

- 또한,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빈곤탈출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III 및 내일키움통장을 제공하고 있음.

③ 수요-공급 격차분석 및 대응방안

○ 공공부문 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 공공부문의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 복지통(이)장 활용 및 민·관 협의체 네트워크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일시적인 생계곤란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

○ 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화

- 한정된 공공부문의 자원을 이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은 민간부문에서 나눔과 배려, 기부, 자원봉사 등에 기반한 인천형 복지공동체 구축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보완함.
-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 SNS, 대표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견하여 제보하고, 이들에게 기획모금사업, 공모형 지원사업, 물품·재능 기부사업 등의 방법으로 5,000명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민간자원을 제공하고 연계하는 체계인 ‘행복나눔 인천’을 운영함.
- 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약 6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택을 수리하고 주거물품을 지원하는 재능나눔·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가(家)꿈’을 운영함.
- 셋째, 지역사회 취약계층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기부가 기능하도록 기부식품제공업소 총 26개소(푸드뱅크 11개소, 푸드마켓 15개소)를 운영하는 기부식품제공을 더욱 체계화함.

○ 저소득취약계층의 빈곤탈출지원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중위소득 50%이하의 빈곤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게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와 사회경제적일자리 등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조건부과에서 제외되는 수급자 등에게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자활역량강화 등 대상자 선정을 체계화함.
-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목돈 마련으로 자립기반 확대하여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일하는 기초수급자 가구에게는 ‘희망키움통장 I’, 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일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에게는 ‘희망키움통장 II’, 3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는 ‘내일키움통장’을 제공하고, 신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상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월세 대출을 은행과 연계하는 것을 지원함.

○ 지역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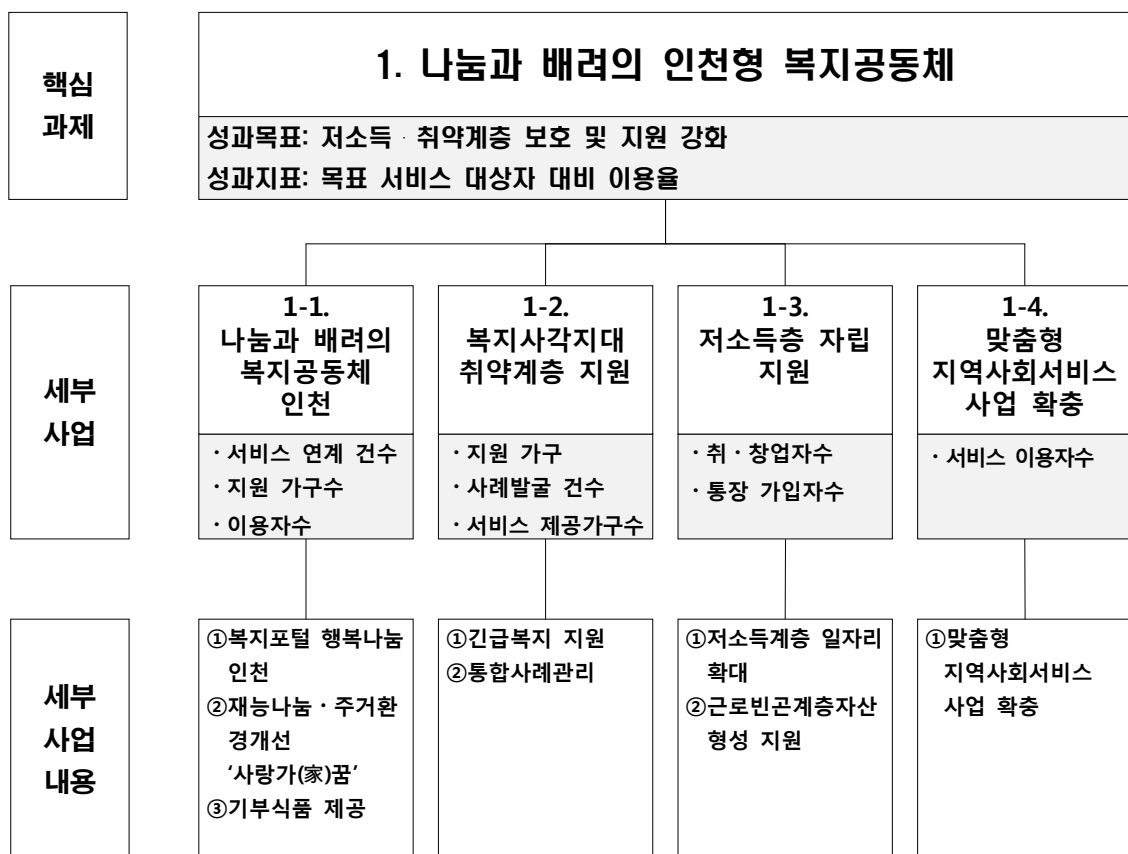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의 발달, 장애인과 노인의 상담과 돌봄 및 사회참여 지원,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역맞춤형으로 인천광역시 개발형 15개 사업, 군·구개발형 9개 사업, 총 24개 사업을 운영함.

- 18만명 이상의 저소득·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들도 돌봄, 인지향상, 건강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핵심과제 내용 및 추진방향

①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도식



② 세부과제 개요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 공동체 형성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예산	126	134	142	150
		성과지표 (서비스 연계 규모)	5,000건	5,500건	6,000건	7,000건
	재능나눔·주거 환경개선사업 '사랑가(家)꿈'	예산	1,000	530	530	530
		성과지표 (지원가구)	710가구	500가구	500가구	500가구
	기부식품 제공	예산	1,913	1,920	1,930	1,950
		성과지표 (총 이용자)	40,000여명	41,000여명	42,000여명	43,000여명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긴급복지 지원	예산	10,500	12,670	13,050	13,440
		성과지표 (긴급복지 지원 가구)	6,500가구	6,800가구	7,000가구	7,200가구
	통합사례 관리	예산	1,017	1,020	1,050	1,070
		성과지표 (서비스 연계 제공 가구)	1,500가구	1,550가구	1,600가구	1,650가구
저소득 계층 빈곤탈출·자립 지원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를 통한 빈곤탈출·자립 지원	예산	28,314	29,160	30,035	30,935
		성과지표 (취·창업자)	600명	610명	620명	630명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예산	4,724	5,000	5,300	5,700
		성과지표 (통장 가입자)	1,000가구	1,100가구	1,150가구	1,200가구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확충		예산	11,593	11,610	11,630	11,650
		성과지표 (서비스 이용자)	180,000명	180,500명	181,000명	181,500명

2)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1-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한정된 공공부문의 자원을 이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은 민간부문에서 나눔과 배려에 기반한 인천형 복지공동체 구축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통합 방안 및 일반 시민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IT기술을 활용한 운영시스템 및 물품기부, 재능기부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이웃이 이웃을 돕고 시민이 시민을 도울 수 있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지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육성과 민간사회 안전 중추거점기능 수행을 위하여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 지원이 필요함.

○ 사업 목적

- 민간자원 연계 및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을 통한 민간부문의 나눔과 배려를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인천형 복지공동체를 구축함.
- 민간부문의 물품재능나눔 및 자원봉사를 통해 긴급지원, 주거환경 개선, 식품제공을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구분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서비스 연계 실적 5% 향상	서비스 연계 인원
재능나눔·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가(家)꿈'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규모 유지	지원가구 수
기부식품 제공	취약계층의 결식해소	총 이용자 수

○ 사업 내용

①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사업대상 : 인천 시민, 복지욕구가 있는 시민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지역내 취약계층 발견시 복지포털 및 모바일,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 조기발굴 및 민·관 협력 서비스 연계처리
 - 긴급지원, 기획모금사업, 공모형 지원사업, 물품 및 재능 기부사업 추진
 -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인천사회복지시설 지도 서비스 제공 등 간편한 복지정보 제공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②재능나눔·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가(家)꿈’

- 사업규모 : 저소득 소외계층
- 사업대상 :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수리, 방수, 물품교체 등
- 재원조달(매칭): 국비 0%, 시비0%, 군·구비 0%, 기타(복권기금) 100%

③기부식품 제공

- 관련 근거 :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재가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 사업내용 : 기부식품사업자가 이용자(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게 기부물품 무상제공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50 %, 군·구비 5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예산액	126	134	142	150
	주요 내용	취약계층 신고체계 구축, 재능기부, 취약가구에 현금/물품 등 긴급지원	취약계층 신고체계 구축, 재능기부, 취약가구에 현금/물품 등 긴급지원	취약계층 신고체계 구축, 재능기부, 취약가구에 현금/물품 등 긴급지원	취약계층 신고체계 구축, 재능기부, 취약가구에 현금/물품 등 긴급지원
	성과지표	5,000건	5,500건	6,000건	7,000건
재능나눔·주거 환경개선사업 '사랑가(家)꿈'	예산액	1,000	530	530	530
	주요 내용	자원봉사자에 의한 집수리, 물품지원, 전면개조 등	자원봉사자에 의한 집수리, 물품지원, 전면개조 등	자원봉사자에 의한 집수리, 물품지원, 전면개조 등	자원봉사자에 의한 집수리, 물품지원, 전면개조 등
	성과지표	집 수 리 : 500가구 물품지원 : 180가구 전면개조 「Love House」 : 30가구	집수리 : 500가구	집수리 : 500가구	집수리 : 500가구
기부식품 제공	예산액	1,913	1,920	1,930	1,950
	주요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해소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해소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해소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해소를 위한 기부식품 제공
	성과지표	40,000여명	41,000여명	42,000여명	43,000여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사업 평가회	성과 평가회	1회	연 1회 (2015. 11~12월)
재능나눔·주거 환경개선사업 '사랑가(家)꿈'	내부 평가	대상가구 만족도 조사	연 1회	연말
기부식품 제공	내부평가	운영실태평가 (지도점검)	연1회	매년 하반기
	외부평가 (복지부)	사업장 평가		연 1회(2015. 9월)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의 경우 사업 재원이 시민의 기부금이기 때문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강화가 필요함.
- 재능나눔·주거 환경개선사업 ‘사랑가(家)꿈’의 경우 최저생활가구 우선선정 및 자력 신청이 어려운 숨어있는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며, 재원마련을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사업협조가 필요하고, 사업실시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기부식품 제공의 경우 기부자 발굴과 물품 모집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세부과제 1-2.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국가,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통장과 복지위원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신속히 발굴하여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의 연계가 필요함.

○ 사업 목적

- 저소득취약계층을 상시 발굴·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
- 위기가구발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긴급복지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 복지욕구에 공공복지와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 구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지역사업()	보편사업(v)
	지속사업(v)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 규모 향상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
통합사례 관리	통합사례관리 지원 규모 향상	서비스 연계 제공 가구 수

○ 사업 내용(활동)

- 관련근거 : 「긴급복지법」 제8조
- 사업대상 : 주 소득자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민간협의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복지욕구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사례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재원조달(매칭)
 - 긴급복지 지원 : 국비 80%, 시비 10%, 군·구비 10%
 - 통합사례 관리 사업비 : 국비 50% 시비 30% 군·구비 20%

(※통합관리사례사 인건비 :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긴급복지 지원	예산액	10,500	12,670	13,050	13,440
	주요 내용	위기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	위기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	위기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	위기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
	성과지표	6,500가구	6,800가구	7,000가구	7,200가구
통합사례 관리	예산액	1,017	1,020	1,050	1,070
	주요 내용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제공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제공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제공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제공
	성과 지표	1,500가구	1,550가구	1,600가구	1,650가구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및 복지부 평가	사업결과 평가	연 1회 이상	하반기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4) 향후 고려사항

- 긴급복지지원 이후에도 기초생활보장가구에서 탈락하여 지속적이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읍면동 기능강화를 통한 인적안전망 강화를 통한 복지통장 및 동복지협의체를 통한 발굴을 지원함.
- 발굴 협력자에 대한 상시 접수체계를 유지하고, 홍보를 강화함.

세부과제 1-3. 저소득계층 빈곤탈출·자립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사회의 양극화, 실업 등 근로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고용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일자리와 소득 제공을 통한 저소득취약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확대 및 자산형성을 위한 근로유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사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을 통하여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를 지원함.
-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탈수급과 빈곤탈출을 지원함.

○ 사업 구분 : 공약사업 포함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를 통한 빈곤탈출·자립 지원 근로빈곤계층 자산형성 지원	지역사업()	보편사업(v)
	지속사업(v)	신규사업()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를 통한 빈곤탈출·자립 지원은 공약사업임.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저소득계층 일자리 확대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자 수 누적 5% 향상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자 수
근로빈곤계층 자산형성 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누적 20% 향상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1조
- 사업대상 : (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및 대상 사례관리 프로그램 추진
 -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 등으로 자활성공률 지속적 향상 도모
 - 3년간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 가입기간 동안 재무·금융 교육 이수

- 만기시 지원되는 지원금은 주택구입·임차, 본인·자녀의 교육기술훈련비, 사업·창업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 재원조달(매칭) : 국비 90%, 시비 7%, 군·구비 3%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를 통한 빈곤탈출 ·자립 지원	예산액	28,314	29,160	30,035	30,935
	주요내용	자활 사업단/기업 등 구성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및 급여 제공	자활 사업단/기업 등 구성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및 급여 제공	자활 사업단/기업 등 구성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및 급여 제공	자활 사업단/기업 등 구성하여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및 급여 제공
	성과지표	600명	610명	620명	630명
	예산액	4,724	5,000	5,300	5,700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주요내용	일하는 저소득층의 본인저축액에 근로장려금 및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의 본인저축액에 근로장려금 및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의 본인저축액에 근로장려금 및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의 본인저축액에 근로장려금 및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
	성과지표	1,000가구	1,100가구	1,150가구	1,200가구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및 복지부 평가	사업 결과 평가	연 1회 이상	하반기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에 대한 발굴 및 자활사업의 성실 참여를 통한 자립도모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함.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개별급여 제공으로 자활사업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격과 규모가 변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도 수정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의 희망키움통장Ⅱ사업 가입자 발굴을 강화하고,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가입대상 기준 및 근로 인센티브 지원을 조정함.

세부과제 1-4.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확충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과 사회활동, 위기가정 상담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구매가 어려운 중산서민층에게 다양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쉽게 하고,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분야 일자리창출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의 발달, 장애인과 노인의 상담과 돌봄 및 사회참여 지원,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역맞춤형으로 개발하여 저소득·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서민층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사회투자적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사업 구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확충	지역사업()	보편사업(v)
	지속사업(v)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	서비스 이용자 수

○ 사업 내용(활동)

-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20% 이하 가구 중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아동정서발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등 24개 세부사업 운영
 -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 (월 8~20만원 상당의 전자이용권 지원)
- 재원조달(매칭) :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 확충	예산액	11,593	11,610	11,630	11,650
	주요내용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관련 24개 사업 운영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관련 24개 사업 운영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관련 24개 사업 운영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관련 24개 사업 운영
	성과지표	180,000명	180,500명	181,000명	181,50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연 1회	연말
외부 평가(복지부)	사업성과평가	연 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예산 증가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필수적임.
- 신규 사업 발굴 및 비효율적 사업의 통폐합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운영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제공기관관리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광역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업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2. 핵심과제 2. 민관협력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1)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필요

-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고도화 되고 공공과 민간이 각각 다른 운영 방식과 조직 하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갖고 있는 복지자원을 이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함.
-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경우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상근간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여 지역차원에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사회복지 허브로서 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립 필요

- 17개 중앙부처 292개 복지사업 중 동(洞) 주민센터는 170개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동시에 1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임.
-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은 과거 동(洞)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행정개혁이 중요한 구성요소였지만, 행정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사회복지업무는 이양되면서 주민센터의 만능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요구 충족을 위하여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요양보호사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도 업무도 증가하지만, 이들은 저임금, 낮은 복리후생,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기가 저하된 상태임.
-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신체적·정신적 휴식 및 기타 교육과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인 쉼터의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사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 수행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조직의 필요성

- 지역의 다양한 사회복지요구 충족을 위한 사업 실시 및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인천시 전체 예산의 약 27%가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함.
- 하지만, 인천지역은 사회복지관련 대학교 교수와 전문 연구자가 많지 않고, 또한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대전복지재단, 경북행복재단 등과 같이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사업을 조사·연구·개발하고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조사연구개발기관이 없어서 지역사회복지정책연구 및 사업 개발이 부진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2) 현황 및 대응방안

① 수요분석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상근간사 배치 지원
 - 10개 군·구에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 활동을 담당하는 상근간사는 현재 8명이어서 나머지 2개 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일할 수 있는 상근간사 배치가 필요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정기적 제공이 필요함.
- 주민센터 사회복지업무 수행 인력 확충
 - 주민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허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제 업무를 수행할 사회복지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읍·면·동장의 자격을 복수직렬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업무를 이해하는 책임자가 주체적으로 주민센터를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업무의 허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주민센터가 사회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복지코디네이터를 지정·배치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들에게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또한 지역사회 사회복지 연계를 위한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요양보호사 지원 센터 운영
 -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여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을 위한 건강증진과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해서 직무능력향상과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함.
-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사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 수행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조직 및 운영
 - 6개 광역지자체(서울, 부산, 대전,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운영 중이고, 1개 광역지자체(광주)는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을 준비 중이며, 17개 기초지자체(서산시, 거제시, 달성군, 목포시, 신안군, 광양시, 중평군, 당진시, 청주시, 김포시,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태백시)가 운영 중인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사업을 개발하고,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또한 지역사회에 적합한 민관협력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② 공급분석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 현황
 - 10개 군·구에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질적 활동을 담당하는 상근간사 배치를 위한 노력은 2011년 3명에서 2012년 5명, 2013년 5명이며, 2014년에는 8명의 상근간사를 유지하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 허브로서 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확보
 - 중앙정부의 170개 복지사업 및 수십 개의 지자체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주민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허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신규 인력 확충 및 복수직렬

읍면·동장의 임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복지위원인 이장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동복지위원회가 구성 중임.

○ 요양보호사 지원 쉼터 부재

- 요양보호사의 건강증진과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쉼터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임.

○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사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 수행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조직 부재

-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정책·사업을 개발하고,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또한 지역사회에 적합한 민관협력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지역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노력이 2011년 이후 중단되어, 현재 조직은 없는 상황임.

③ 수요-공급 격차분석 및 대응방안

○ 민관협력 복지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 활성화

- 10개 군·구 모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0군구 통합지역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자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함.

○ 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복지허브화를 위한 인력확충 및 기능 강화

-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인력 확충하고, 복수직렬제에 의한 복지동장제를 확대하고 비사회복지직렬 동장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을 강화함.
-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에 사회복지코디네이터 배치하여 사회복지종합상담을 실시하고, 동복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허브로 전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함.

○ 요양보호사 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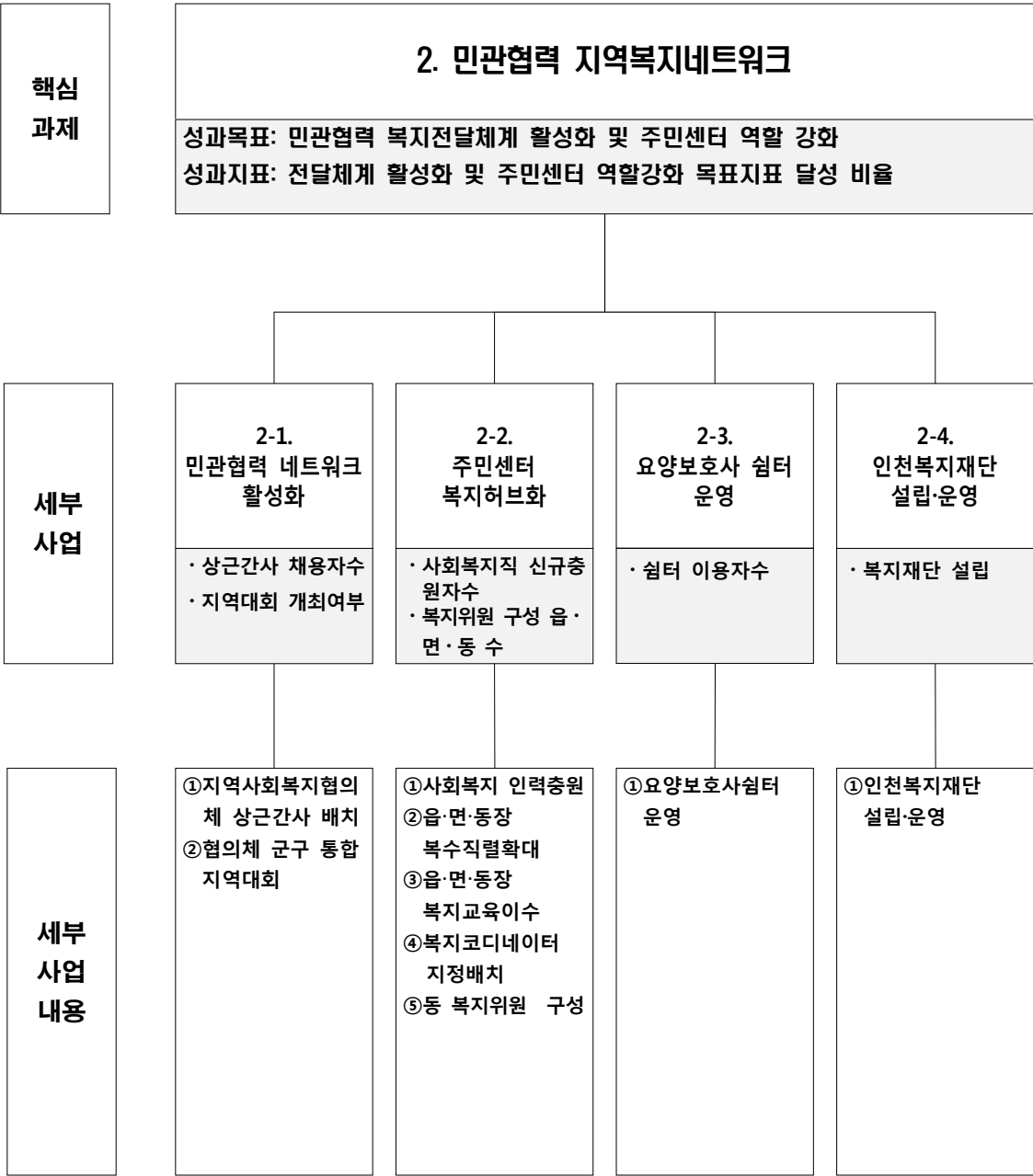
-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여 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건강증진과 취업 지원, 교육 등을 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지역사회복지재단 설립

-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천형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사업을 연구개발하고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 조사연구개발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3) 핵심과제 내용 및 추진방향

①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도식



② 세부과제 개요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예산	200	250	250	250
		성과지표 (지역협의체 상근간사 채용 군구 수)	8개 군구 상근간사 배치	10개 군구 상근간사 배치	10개 군구 상근간사 배치	10개 군구 상근간사 배치
	협의체 군구 통합 지역대회	예산	15	15	15	15
		성과지표 (지역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여부)	1회	1회	1회	1회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사회복지 인력충원	예산	-	-	-	-
		성과지표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	60명	70명	74명	80명
	읍·면·동장 복수직렬확대	예산	-	-	-	-
		성과지표 (읍·면·동장 복수직렬 확대)	21개소	24개소	26개소	26개소
	읍·면·동장 복지교육이수	예산	-	-	-	-
		성과지표 (읍·면·동장 복지교육 이수)	연4시간이상 20%	연4시간이상 40%	연4시간이상 60%	연4시간이상 100%
	복지코디네이 터 지정배치	예산	-	-	-	-
		성과지표 (코디에 의한 복지종합상담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동 복지위원 구성	예산	-	-	-	-
		성과지표 (동복지위원 조례정비 및 위원구성)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요양보호사쉼터 운영		예산	-	500	300	300
		성과지표 (이용자수)	-	-	3,000명	5,000명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예산	-	2,500	1,000	1,000
		성과지표 (조례 제정, 법인 설립, 운영)	계획수립, 조례제정, 법인허가신청	재단설립	정책개발 및 연구	정책개발 및 연구

2)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2-1.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고도화 되고 공공과 민간이 각각 다른 운영 방식과 조직 하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갖고 있는 복지자원을 이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지만, 상근간사가 부재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지역차원에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문제를 민관협력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자 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상근간사 배치를 지원하고, 군구 통합 지역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사업구분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업(v)	보편사업()
	지속사업(v)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군구 증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유지	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군구 수 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여부

○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사업대상 : 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

- 사·군·구 통합 지역대회 개최
- 재원조달(매칭) :
 - 군·구 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 국비 0%, 시비 0%, 군·구비 100%
 - 군·구 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 국비 100%, 시비 0%, 군·구비(추가 비용 부담)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예산액	200	250	250	250
	주요내용	지역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지역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지역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지역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성과지표	상근간사배치 8개 군구	상근간사배치 10개 군구	상근간사배치 10개 군구	상근간사배치 10개 군구
협의체 군구 통합 지역대회	예산액	15	15	15	15
	주요내용	군구 통합 지역대회 개최	군구 통합 지역대회 개최	군구 통합 지역대회 개최	군구 통합 지역대회 개최
	성과지표	1회	1회	1회	1회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법	횟수	시기
군구 종합평가	서면 및 현지조사	연 1회	다음해 1월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상근간사 채용시 무기계약직 등으로 채용을 유도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 구성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군·구 사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함.

세부과제 2-2.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는 17개 중앙부처의 292개 사회복지사업 중 170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이며 1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로 기능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하여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력확충과 기능재편이 필요함.

○ 사업목적

- 동(洞) 주민센터에서 수행중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
- 대상별로 추진되는 각종 방문형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계·협력을 강화함.
- 복합 욕구를 갖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사업 구분

세부사업	지역사업(v)	보편사업()
	지속사업(v)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사회복지인력확충	사회복지직 신규 채용
읍·면·동장의 복수직렬 확대	읍·면·동장의 사회복지직/행정직 복수직렬 조정
동장 복지교육 이수	읍·면·동장 복지교육 이수
복지코디네이터 배치	복지코디네이터 지정·배치
동 복지위원회 구성	구성 조례정비 및 위원 구성

○ 사업 내용(활동)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사업대상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 복지위원회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의한 인력 확보
 - 사회복지인력의 적정 배치
 - 읍·면·동장 복수직렬대상 확대

- 읍·면·동장의 복지교육이수
-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배치
- 읍면동 복지위원 구성 조례정비 및 위원 구성
- 재원조달(매칭) : 비예산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명)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사회복지 인력충원	예산액	-	-	-	-
	주요내용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
	성과지표	60명	70명	74명	80명
읍·면·동장 복수직렬확대	예산액	-	-	-	-
	주요내용	읍·면·동장 복수직렬확대	읍·면·동장 복수직렬확대	읍·면·동장 복수직렬확대	읍·면·동장 복수직렬확대
	성과지표	21개소	24개소	26개소	26개소
읍·면·동장 복지교육이수	예산액	-	-	-	-
	주요내용	읍·면·동장 복지교육이수	읍·면·동장 복지교육이수	읍·면·동장 복지교육이수	읍·면·동장 복지교육이수
	성과지표	연4시간이상 20%	연4시간이상 40%	연4시간이상 60%	연4시간이상 100%
복지코디네이 터 지정배치	예산액	-	-	-	-
	주요내용	코디에 의한 복지종합상담	코디에 의한 복지종합상담	코디에 의한 복지종합상담	코디에 의한 복지종합상담
	성과지표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동 복지위원 구성	예산액	-	-	-	-
	주요내용	동복지위원 조례정비 및 위원구성	동 복지위원 구성·운영	동 복지위원 구성·운영	동 복지위원 구성·운영
	성과지표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 분	방법	횟수	시기
군구 종합평가	서면 및 현지조사	연2회	당해 7월, 다음해 1월,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읍·면·동 복지동장의 복지행정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함.
-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의 종합상담 성과를 분석함.
- 읍·면·동 복지위원회의 지역자원 개발과 연계를 활성화함.
- 읍·면·동 복지위원회의 구성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한 구성이 필요함.

세부과제 2-3. 요양보호사 지원 쉼터 운영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어 질 높은 노인돌봄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노인을 위한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돌봄제공자들은 저임금, 낮은 복리후생,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기가 저하된 상태임.

○ 사업목적

- ‘쉼터’를 건립해서 요양보호사와 노인 돌봄 제공 인력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건강을 증진하고 직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 쉼터에서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을 위한 건강증진과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해서 직무능력향상과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함.

○ 사업구분 : 공약사업

요양보호사 쉼터 운영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요양보호사 지원 쉼터 운영	이용자수

○ 사업 내용

- 사업 근거 : 민선6기 공약사업
- 사업대상 : 요양보호사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쉼터 건립
 - 건강증진지원(심리상담, 체조 등), 취업 지원
 - 직무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지원
 -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 관련 정보 제공

-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사업 등
- 재원조달 : 시비 10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요양보호사 쉽터 운영	예산액	-	500	300	300
	주요내용	사업 운영방향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장소 선정 및 운영 공간 구축	전문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	전문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
	성과지표	-	-	3,000명	5,00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쉽터 건립 이후에도 추가적인 지원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쉽터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세부과제 2-4.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지침과 사업비 배분에 기초한 사회복지사업의 실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고, 변화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사업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인천지역은 사회복지관련 대학교 교수와 전문 연구자가 많지 않고, 또한 몇몇 시도와 같이 등과 같이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사업을 조사·연구·개발하고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조사연구개발기관이 없어서, 지역사회복지정책연구 및 사업 개발이 부진하고, 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 사업목적

-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천형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사업을 연구개발하고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 조사연구개발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 사업구분 : 공약사업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지역사업(v)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v)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 법인설립 운영

○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민선6기 공약사업
- 사업대상 : 인천복지재단 설립
- 사업시기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재단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 재단 설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재단 설립 및 운영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예산액	-	2,500	1,000	1,000
	주요내용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재단설립허가 신청	법인 설립, 법인 운영규정 제정, 법인직원 채용	재단 운영	재단운영
	성과지표	계획수립 여부, 조례제정, 법인허가신청	재단설립	정책개발 및 연구	정책개발 및 연구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평가	결과 확인	연 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재단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주요 목적사업에 대한 여론 조성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함.
- 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에서 시의회를 지원받을 필요가 있음.
- 재단의 설립을 출연금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요함.

3. 핵심과제 3. 모두가 건강한 도시

1)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 역할과 기능 정립 필요성

- 인구 300만의 광역시 인천에 종합병원 18개소, 병원 54개소, 의원 1,404개소, 치과 병·의원 806개소, 한방 병·의원 608개소, 요양병원 59개소 및 약국 1,001개소가 소재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은 백령도 분원을 포함한 인천의료원 1개소와 군·구의 보건소 11개소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이 미미한 것이 현실임.

○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지원의 필요성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노인 및 한부모가족 등 일반적 의미의 취약계층의 비율은 2013년 현재 인천 전체 인구의 약 16.4%로 추산됨.
- 하지만, 이들 이외에 소아, 도서지역주민, 보훈대상자 등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서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각각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금연 지원을 통한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 필요성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2013년 현재 24.5%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이에 따라, 금연클리닉 확대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실천 등을 지원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자살예방 강화 필요성

- 통계청의 2014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자살은 여자, 10대, 중졸, 실업 및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높으며, 자살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외로움·고독 등의 순서임.
- 2013년 인천의 자살율은 인구 10만명 기준 30.6명으로 17개 지자체 중 일곱 번째로 자살율이 높은 수준임.
- 인천의 경우 2013년 자살율은 2012년과 비교하여 30~50대 및 70대에서 자살률이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았음.
-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일상생활에서 건강증진활동 강화 필요성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의하면 개인의 주관적 건강평가에서 인천의 경우 건강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3년 43.6%에 불과하여, 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 또한 같은 조사결과 성인의 신체활동 실천율도 2013년 19.6%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7개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 건강증진활동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음.
-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의 필요성
 - 2014년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장애인 약 13만명 중 정신장애인은 4,319명이며, 2014년 정신장애인들의 고용률은 11.1%로 신체장애인들의 고용률인 38.5%과 비교하여 1/3수준에 불과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재활사업 이 필요한 상황임.
 - 정신질환자들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거나 입원할 필요가 없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거나 입소할 필요가 없는 정신질환자들은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
- 정신건강관리의 필요성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이 17.4% 증가하는 것과 같이 인구구조는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이에 따라 치매노인은 같은 기간 동안 26.8% 증가하면서 치매로 인한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담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치매 예방·관리사업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음.

(2) 현황 및 대응방안

① 수요분석

- 공공보건의료 강화
 - 2011년 인천의료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제시한 ‘인천광역시 공공의료발전계획’은 인천에 시립의료원을 현재 1개소에서 4개소까지 확충하고, 보건지소·보건소·요양병원·재활병원·지역거점병원으로 구성되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제시하였음.
 - 또한, 이 연구는 인천지역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연구와 정책 생산, 보건의료인력 교육과 훈련,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연계와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료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강화
 - 강화군과 옹진군은 도서지역이며, 강화군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분만 의료취약지와 응급의료 준취약지이며, 옹진군은 민간 의료시설 부재로 인한 의료취약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서 및 내륙 취약지역 반경 130km 내외 도서, 산간지역의 중증응급환자 등의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계속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응급실 환자의 24.8%를 차지하는 소아환자는 대부분 경증환자이며 야간시간대에 문을 여는 다른 진료기관이 없어서 응급실을 이용하므로 다른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토·일요일 저녁에 응급실 소아환자 수가 급증하고,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면 비싸고 오래 기다리며, 경험이 부족한 전공의가 진료하여 의료의 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 때문에 현재 1개소인 소아전용응급실의 확대 및 24시까지 진료하는 소아야간 진료 의료기관의 확대가 필요함.

- ‘보훈의 도시’인 인천의 보훈대상자들은 인천에 보훈대상자 전용 병원이 없기 때문에 진료를 위하여 서울보훈병원을 방문하느라고, 시간·비용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있음에 따라 인천지역에 보훈병원 건립에 대한 요구는 지속되고 있음.
-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년)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전국 6대 권역(경인, 강원, 제주, 대전, 광주, 경남) 중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으로 인천적십자병원 부지 내에 2010년 9월 전국 최초로 개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는 급성기치료 이후의 아급성기 환자에 대한 의료재활, 지역사회 중심재활, 재활 전문요원 양성, 재활 교육 및 연구사업 등 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공공병원에 입원한 저소득계층 급성기 환자 등을 대상으로 4~6인 이상 다인병실에 5~6명의 간병사 인건비 지원하는 공동간병 시스템인 ‘보호자 없는 병실’에 대한 수요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이외의 저소득취약계층으로 확대된 상황임.
-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 높은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의 증가, 운동실천율의 감소 등 악화되고 있는 건강한 생활습관은 만성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생활습관의 개선과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의 유병율과 사망률을 낮춰 건강수명을 높일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9개소가 운영 중임.
 -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참여활동 증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임.
- 정신건강 통합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
 - 인천의 경우 자살율이 높은 지역이며, 특히 노인자살율이 높아 자살 예방 교육과 자살 고위험군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하면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2011년 31.0명, 2012년 31.2명, 2013년 29.4명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7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령대별로는 15세 미만 아동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1명으로 머무르고 있고, 15세 이상~65세 미만의 청소년·성인의 경우는 2010년 32.9명, 2011년 33.9명, 2012년 30.0명으로 감소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의 경우는 2010년 86.9명, 2011년 82.1명, 2012년 92.4명으로 증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분석하면 인천의 우울감 경험율은 2008년 8.7%, 2009년 9.9%, 2010년 6.0%, 2011년 5.2%, 2012년 5.6%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또한 스트레스 인지율도 같은 기간 동안 27.4%, 31.3%, 30.6%, 31.3%, 31.5%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살과도 연관성이 있는 정신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2014년 9월 기준 인천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0.2%로 전국 7대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치매추정 환자 수는 27,098명으로 보건복지부의 「2012년 치매유병률 조사」에 기초한 치매유병률 9.16%이 되면서 7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됨으로, 치매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② 공급분석

○ 부족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총 7개소로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4개소는 인천시가 설립주체이며, 인천적십자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인천중앙병원은 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음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동구 1개소, 옹진군 1개소, 서구 1개소, 계양구 1개소, 부평구 1개소, 연수구 2개소로 중구, 남구, 남동구, 강화군의 경우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역시 군·구간 형평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확충이 필요함

○ 부족한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병원 설립은 아직까지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에서 55병상을 대상으로 간병인력 55명을 투입하여 진행 중임.
- 현재 소아전용응급실은 1개 병원에서만 운영 중임.
- 2011년 9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1대를 임대하여 도서 및 산간 등 응급의료이송 취약지 해소 및 외상환자, 심장응급질환 및 뇌 응급질환 등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문의 탑승, 5분 이내 출동 가능한 응급환자 전용헬기를 운용 중임.
- 경인의료재활병원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지원하고 있음.

○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 2012년 건강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WHO 건강도시연맹 및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 후 건강도시 실현을 위하여 2013년에는 5개소, 2014년에는 4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한 생활터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 현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를 위한 재활훈련 서비스 제공 시설 9개소를 운영 중임.

○ 통합적 정신건강관리

-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군·구 보건소, 군·구 치매센터, 시립치매노인요양병원에서 치매조기검진과 검진 후 발견된 치매노인의 대상자별 관련기관 연계 강화 및 치매 가족 교육모임을 지원하고 있음.
- 만성정신질환자 재활을 위해 정신보건시설 편성함으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탈시설화를 촉진하고자 등록된 정신질환 및 가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전화, 가정방문, 내소 등의 방법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일반 상담, 교육, 지역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광역자살예방센터와 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112, 119, 응급의료센터, 중앙심리부검사업단, 쉼터 등과 협력하여 24시간 자살 상담(1577-0199) 및 응급출동 시스템 가동, 네트워크 활성화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1차적 개입 강화, 응급실의 자살시도자 개입 매뉴얼 개발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

③ 수요-공급 격차분석 및 대응방안

○ 공공의료기관들의 연계 체계 구축

- 다른 광역지자체와 같이 의료원의 신설, 보건소의 확충 등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자체의 확대가 쉽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인센티브 부여 또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기능을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확립하도록 인천의료원을 중심으로 보건소와 전체 민간의료기관들간의 연계와 지원 및 공공의료기능 교육을 강화함.

○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강화

- 소아응급진료체계의 확대를 위하여 소아전용응급실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24시까지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함.
- 장애인 재활진료기관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경인의료재활센터의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함.
-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인천시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을 지속함.
- 저소득계층의 입원진료 및 가족의 경제활동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간병인제도인 ‘보호자 없는 병실’ 제도의 운영을 지속함.
- 인천지역 보훈대상자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인천보훈병원 건립을 추진함.
- 다른 광역지자체와 같이 의료원의 신설, 보건소의 확충 등과 같은 공공의료기관 자체의

○ 건강증진활동의 생활화

- 시민들의 건강증진활동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건강한 생활터 조성’ 사업을 학교, 직장, 아파트단지, 쇼펍센터, 재래시장, 마을, 병원 등에서 점차 확대 실시하여 시민이 일하고 배우고 즐기는 삶의 터전이자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생활터’를 단위로 하여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함.
- 높은 수준의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금연의 생활화 및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금연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함.

○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사회적 자립 지원

-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정신장애인에게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통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생활지도·교육·직업재활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귀·재활·자립 및 생활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일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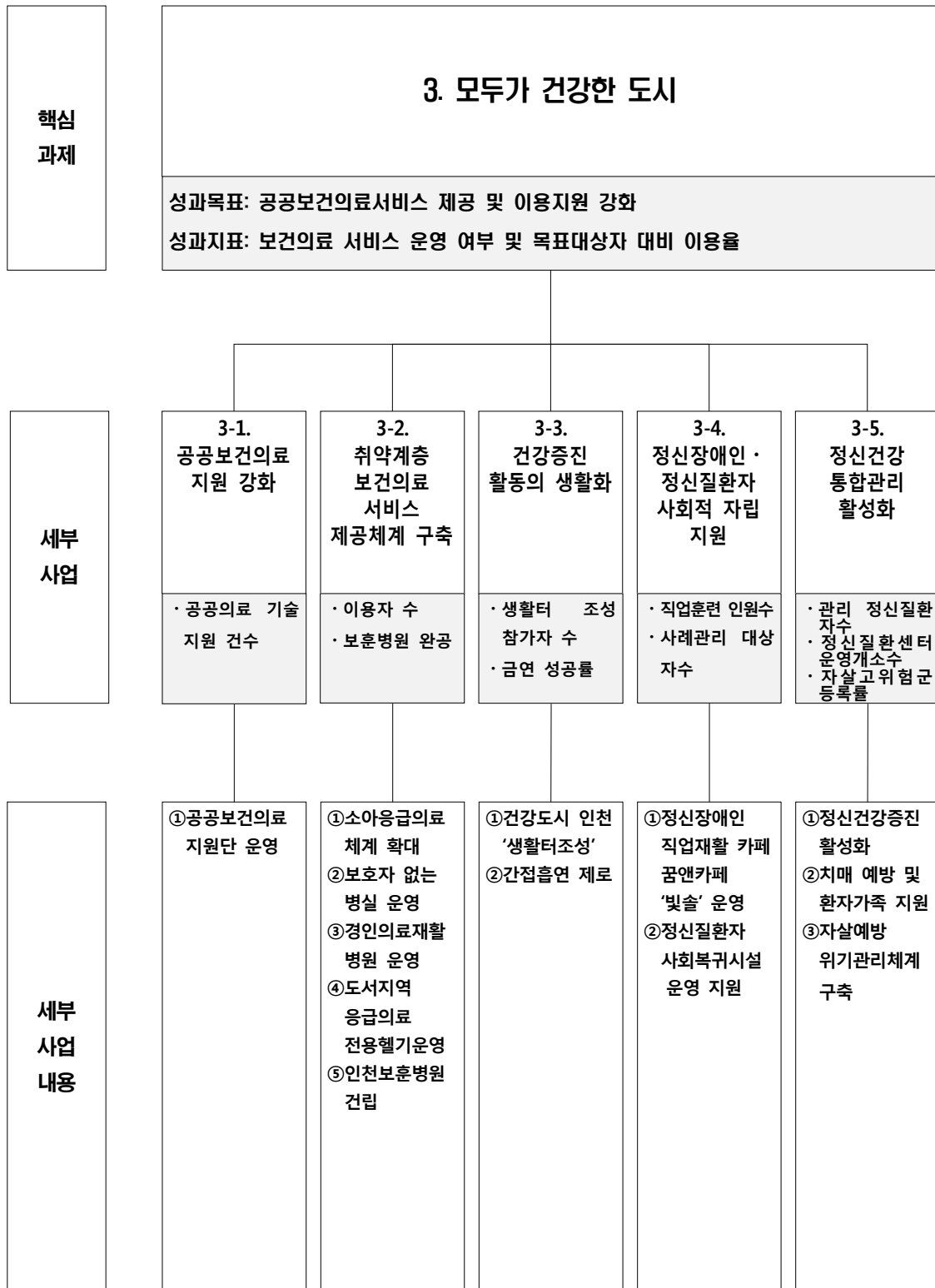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의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신건강 통합관리 활성화

- 정신건강증진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10개 군구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관련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 고용, 주거, 지역사회 활동 등 환경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가족 지원 등 통합적인 치매관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0개 군구에서 운영 중인 치매센터를 확충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치매환자가족지원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자살위험 고위험군 등록,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 위기대응 체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3) 핵심과제 내용 및 추진방향

①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도식



② 세부과제 개요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	예산	225	225	225	225
	성과지표 (기술 지원 규모, 아카데미 운영 횟수)	기술지원 3회, 아카데미 운영 1회	기술지원 3회, 아카데미 운영 1회	기술지원 3회, 아카데미 운영 1회	기술지원 3회, 아카데미 운영 1회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소아응급의료 체계 확대	예산	384	624	624
	성과지표 (이용자 수)	31,800명	34,200명	34,800명	34,800명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예산	968	1,000	1,100
	성과지표 (이용자 수)	12,000명	12,500명	13,000명	13,500명
	경인의료재활 병원 운영	예산	1,000	1,200	1,200
	성과지표 (병원 진료자 수)	3,000명	3,060명	3,120명	3,180명
	도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운영	예산	3,000	3,000	3,000
	성과지표 (이용자 수)	130명	130명	130명	130명
	인천보훈병원 건립	예산	11,500	11,867	10,300
	성과지표 (예산확보, 착공, 완공)	부지매입, 행정절차 이행 예산 확보	착공, 예산 확보	예산확보 건축 진행	예산 확보, 준공
건강증진활동 등의 생활화	건강도시 인천 생활터 조성	예산	74	118	178
	성과지표 (프로그램 및 참가자 수)	프로그램 2개, 참가자 200명	프로그램 4개, 참가자 400명	프로그램 7개, 참가자 700명	프로그램 10개, 참가자 1,000명
	간접흡연 제로	예산	1,581	1,628	1,676
	성과지표 (금연 6개월 성공률)	52.0%	52.5%	53.0%	53.5%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사회적 자립 지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카페 운영	예산	60	-	60
	성과지표 (정신장애인 직업훈련 카페 운영 규모 직업재활 훈련 인원 수)	카페 1개소, 직업훈련 연간 20명	카페 1개소, 직업훈련 연간 20명	카페 2개소, 직업훈련 연간 20명	카페 2개소, 직업훈련 연간 20명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원	예산	1,069	1,440	1,500
	성과지표 (사례관리 대상자 수, 취업자 수)	사례관리 100명, 취업자 65명	사례관리 120명, 취업자 70명	사례관리 100명, 취업자 65명	사례관리 120명, 취업자 70명
정신건강 통합관리 활성화	정신건강 증진 활성화	예산	2,208	2,340	2,410
	성과지표 (관리 정신질환자 규모, 운영 정신건강증진센터 규모)	30,311명 9개소	30,987명 10개소	31,663명 10개소	32,339명 10개소
	치매 예방 및 환자가족지원	예산	5,794	5,800	5,950
	성과지표 (치매시설 운영 수, 인지재활 프로그램 수, 가족모임 지원 수)	시설 17개소, 프로그램 500개, 가족모임지원 850명	시설 17개소, 프로그램 520개, 가족모임지원 900명	시설 18개소, 프로그램 540개, 가족모임지원 950명	시설 18개소, 프로그램 560개, 가족모임지원 1,000명
	자살예방 위기관리체계 구축	예산	536	736	736
	성과지표 (자살고위험군 등록율)	75%	78%	80%	85%

2)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3-1.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

○ 추진 배경

- 인구 300만의 도시 인천에 종합병원 18개소, 병원 54개소, 의원 1,404개소, 치과 병·의원 806개소, 한방 병·의원 608개소, 요양병원 59개소 및 약국 1,001개소가 소재하고 있지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은 백령도 분원을 포함한 인천의료원 1개소와 군구의 보건소뿐인 상황이어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이 미미한 것이 현실임.
-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권역별로 의료원을 확충하거나, 군·구차원에서 지역의 인구나 거주현황에 기초한 보건소를 확충하거나, 민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인천시 전체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 수행을 위한 연계, 교육,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기술지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질적 향상 추진
-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업무 수행 지원

○ 사업구분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	지역사업(v)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v)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기관 계획서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횟수 공공보건의료 아카데미 운영 횟수

○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대상 :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 기술 지원

- 인천광역시 보건의료 정책연구과제 수행
 -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 교육
 - 공공보건의료 관심 제고 홍보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 재원조달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운영	예산액	225	225	225	225
	주요내용	기술지원 정책연구 수행 교육사업 홍보사업 연계체계 구축	기술지원 정책연구 수행 교육사업 홍보사업 연계체계 구축	기술지원 정책연구 수행 교육사업 홍보사업 연계체계 구축	기술지원 정책연구 수행 교육사업 홍보사업 연계체계 구축
	성과지표	기술지원: 3회 아카데미 운영: 1회	기술지원: 3회 아카데미 운영: 1회	기술지원: 3회 아카데미 운영: 1회	기술지원: 3회 아카데미 운영: 1회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평가	운영위원회 운영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
내부 평가	평가지표 활용	연 1회	하반기(12월)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3-2.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성된 공적 의료보장제도로 모든 국민이 진료비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저소득계층, 소아응급진료, 장애인재활진료, 도서지역 응급환자, 보훈대상자 등 일부 취약계층들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소아의 경우 휴일 및 심야시간대에 소아환자 진료 의료기관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종합병원 응급실로 집중됨에 따라 소아환자뿐만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소아응급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함.
- 저소득계층 입원환자의 간병비 등 입원진료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간병서비스 지원을 통한 저소득계층 입원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년~2007년)에 따라 권역별 장애인재활병원이 설립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중장기적인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치료가 어렵고, 구급차 등 지상 이송이 불가능한 도서·산간 의료취약 지역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임.
-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의료기관이 인천에 없음에 따라 보훈대상자들이 진료에 불편이 있고, 교통비 등 진료를 위한 전체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보훈병원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소아전용응급실 운영을 유지하고, 24시까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급 2개소 신규 지정을 통한 소아 야간진료기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경증 소아환자 및 중증 응급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소아환자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
-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에 입원한 저소득계층 입원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계속 운영하고자 함.
- 장애인이 일반인과 같이 사회활동을 하는 통합사회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를 위한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함.
-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장비가 탑재된 전용헬기를 운영하고, 이 응급전용헬기에 응급의료 전문인력이 탑승하여 응급환자를 진료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인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진료와 재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보훈병원을 건립함.

○ 사업구분 : 공약사업 포함*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대는 공약사업

*인천보훈병원 건립은 공약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대	소아응급의료체계 운영기관 확대 소아응급의료체계 이용자 수 증가	소아응급의료체계 운영기관 수 소아응급의료체계 이용자 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자 규모 증가	이용자 수
경인의료재활병원 운영	병원 진료자수 누적 2% 향상	병원 진료자 수
도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운영	도서·산간 취약지역 응급의료 이송 서비스 유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용자 수
인천보훈병원 건립	인천보훈병원 건립	예산확보, 행정절차 이행, 착공, 완공

○ 사업 내용

①소아응급의료체계 확대(보건정책과)

-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민선6기 공약사업

- 사업대상 : 소아(14세 이하)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지원
 - 병·의원급 2개소 신규 지정을 통한 소아 야간진료기관 운영 지원
- 재원조달(매칭)
- 소아전용응급실 : 국비 100%
 - 소아야간진료 : 국비 50%, 시비 50%, 군·구비 0%

②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보건정책과)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음

가. 우선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그 밖에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원폭피해자 및 그 자녀,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 다자녀(3자녀 이상) 양육 가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다. 간병비를 지원하는 다른 제도(희귀난치성 질환자 간병비 지원 등)와 중복하여 수혜
를 받지 않도록 대상 선정 시 중복 수급자 제외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운영병원 :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 운영병상 : 7실 38병상

· 병실기준 : 4~6인 이상 다인병실, 병실 당 7명의 간병사 인건비 지원

- 재원조달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③경인의료재활병원 운영(장애인복지과)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장애인의 종합적인 상담, 진단, 서비스 제공

· 어린이재활센터 운영(낮병동 포함)

· 조기사회복귀도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 재원조달(매칭) : 시비 100%

④도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운영(보건정책과)

- 관련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 사업대상 : 강화군, 옹진군 도서·산간의 의료 취약지역 주민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도입헬기 : EC 135 (7~8인승 소형) 임대

· 운항개념 : 구조요청 ⇒ 출동지시(운항통제실) ⇒ 헬기 이륙준비, 응급의료 전문인력
탑승 ⇒ 현장도착 ⇒ 응급처치개시 ⇒ 병원이송

· 운항범위 : 도서 및 내륙 취약지역 반경 70 ~ 80km 내외

· 사업기관 :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국립중앙의료원, 대한항공

- 재원조달(매칭) : 국비 70%, 시비30%, 군·구비 0%

⑤인천보훈병원 건립(사회복지봉사과)

- 관련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민선6기 공약사업

- 사업대상 :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연중지속사업)

- 사업내용

· 건립위치 : 인천시 남구 용현동 450-5외 6필지

- 건립면적 : 14,638㎡ (의료시설 11,050㎡, 주차면적 3,588㎡)
- 건립규모 : 130병상(지하1층 ~ 지상3층)
- 재원조달(매칭) : 국비 100%, 시비 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소아응급의료 체계 확대	예산	384	624	624	624
		주요내용	소아전용 응급실 1개소 운영, 소아 야간 진료 1개소 운영	소아전용 응급실 1개소 운영, 소아 야간 진료 2개소 운영	소아전용 응급실 1개소 운영, 소아 야간 진료 2개소 운영	소아전용 응급실 1개소 운영, 소아 야간 진료 2개소 운영
		성과지표 (이용자 수)	31,800명	34,200명	34,800명	34,800명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예산	968	1,000	1,100	1,200
		주요내용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성과지표 (이용자 수)	12,000명	12,500명	13,000명	13,500명
	경인의료재활 병원 운영	예산	1,000	1,200	1,200	1,200
		주요내용	1개소 운영	1개소 운영	1개소 운영	1개소 운영
		성과지표 (병원 진료자 수)	3,000명	3,060명	3,120명	3,180명
	도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운영	예산	3,000	3,000	3,000	3,000
		주요내용	응급환자 전용헬기 이송	응급환자 전용헬기 이송	응급환자 전용헬기 이송	응급환자 전용헬기 이송
		성과지표 (이용자 수)	130명	130명	130명	130명
	인천보훈병원 건립	예산	11,500	11,867	10,300	10,000
		주요내용	국고보조금 확보 행정절차 이행	국고보조금 확보 보훈병원 착공	국고보조금 확보 보훈병원건립	국고보조금 확보 보훈병원준공
		성과지표 (예산확보, 착공, 완공)	부지매입, 행정절차 이행, 예산 확보	착공, 예산 확보	예산확보 건축 진행	예산 확보, 준공

(2) 사업모니터링 계획

사업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대	지도점검	2회	6월, 12월	상·하반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입원환자	현지방문	4회	매 분기 1회
경인의료재활병원 운영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연말
도시지역 응급의료 전용헬기운영	국립중앙의료원평가	운영실태평가	연 2회	상·하반기
인천보훈병원 건립	-	-	-	-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소아 야간진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나, 국·시비 매칭사업인 관계로 국비지원을 고려하여 대상 의료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입원진료에 대하여 간병서비스가 포함된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보완제도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소방안전본부 응급헬기 운영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함께 인천보훈병원 건립 TFT를 구성하여 인천보훈병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추진 등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및 사업 추진시 현안사항 등의 신속한 해결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3-3. 건강증진활동의 생활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인천광역시의 2012년 WHO건강도시연맹 가입은 그 지역이 삶의 질이 높은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으로 네트워크 활동 참여 및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한 환경 조성에 의의가 있음.
-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건강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함.
-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또한, 2013년 현재 24.5%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을 낮추어 금연클리닉 확대와 금연구역에서의 금연 실천 등을 지원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WHO 건강도시연맹 네트워크 활동 참여로 건강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이 일하고 배우고 즐기는 삶의 터전이자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생활터’ 중심 주민참여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학교, 직장, 아파트단지, 쇼핑센터, 재래시장, 마을, 병원 등과 같은 생활터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증진활동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함.
- 국민건강의 주요 위해요인인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을 통한 비흡연자 보호하며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함.

○ 사업구분

건강증진활동의 생활화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건강도시 인천 ‘생활터’ 조성	프로그램 운영 군구 수 증가 프로그램 참여자 수 증가	프로그램 운영 군구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간접흡연 제로	금연성공률	금연 6개월 성공률*

*6개월 금연성공자수/6개월 이상 금연결심하고 경과자 수*100

○ 사업 내용

①건강도시 인천 ‘생활터조성’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 사업대상 : 어린이집, 아파트, 기업체 등
- 사업시기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어린이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
 - 건강동아리 지원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 건강지도자 양성 및 건강환경 조성
- 재원조달(매칭) :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②간접흡연 제로

-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 사업대상 : 흡연자 및 비흡연자 등 인천시민, 금연대상시설 등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사업장, 경로당 등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법 및 조례지정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 금연벨, 금연우수기관 인증 등 금연환경조성 등
- 재원조달(매칭) :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건강도시 인천 '생활터조성'	예산액	74	118	178	208
	주요내용	주민 참여형 (생활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형 (생활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형 (생활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형 (생활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성과지표	프로그램 운영 군구 수 : 2 개 프로그램 참여자 수: 200명	프로그램 운영 군구 수 : 4 개 프로그램 참여자 수: 400명	프로그램 운영 군구 수 : 7 개 프로그램 참여자 수: 700명	프로그램 운영 군구 수 : 10 개 프로그램 참여자 수: 1,000명
간접흡연 제로	예산액	1,581	1,628	1,676	1,726
	주요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 금연환경조성 등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 금연환경조성 등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 금연환경조성 등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 금연환경조성 등
	성과지표	금연 6개월 성공률 52.0	금연 6개월 성공률 52.5	금연 6개월 성공률 53.0%	금연 6개월 성공률 53.5%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구분	방법	횟수	시기
건강도시 인천 ‘생활터조성’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연말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추진실태 평가	연 2회	상, 하반기
간접흡연 제로	내부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익년 2월
	사업지원단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 평가	연 1회	연말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연 2회	상, 하반기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건강도시 인천 ‘생활터조성’은 WHO 건강도시 가입 이후 ‘건강도시 인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의 생활화차원에서 도시의 자연·물리적 환경 특성에 기초한 건강도시 조성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간접흡연 제로 사업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의 연계를 추진하는 금연을 위한 통합사업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세부과제 3-4.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사회적 자립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2014년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약 13만명 중 정신장애인은 4,319명이며, 신체장애인 고용률은 38.5%인데 비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3수준인 1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재활사업이 필요함.
- 정신질환자 중 사회복귀시설 이용자가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정신장애인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카페인 ‘꿈앤카페 빛솔’ 설치·운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함.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귀시설에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함.

○ 사업구분*

세부사업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카페 운영’은 신규 사업이며, ‘사회복귀 시설 운영 지원’은 지속사업임.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카페 운영	정신장애인 직업훈련 카페 운영 규모 확대 카페에서 직업재활 훈련 인원 수 증가	정신장애인 직업훈련 카페 운영 규모 직업재활 훈련 인원 수
사회복귀 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귀시설의 사회복귀 사례관리 강화 사회복귀시설 생활자/이용자의 사회복귀 강화	사회복귀시설의 사회복귀 사례관리 대상자 수 사회복귀시설 이용자/생활자의 취업자 수

○ 사업 내용

①정신장애인 직업재활카페 운영

- 관련근거 : 정신보건법 제 13조
- 사업대상 : 지역 내 거주하는 정신장애인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1층 휴식공간 13평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카페 “꿈앤카페 빛

술” 설치 운영

-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월-금요일 08~18시에 커피, 생과일 주스, 브런치 메뉴 등 판매
- 1일 6명의 정신장애인을 판매원으로 고용, 매니저는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상주하여 관리
- 사·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방문 상담, 사례관리 및 취업 지도
- 연간 20명 이상의 정신장애인에게 바리스타 양성교육 실시
- 재원조달 : 국비 0%, 시비 17%, 군·구비 0%, 기타(한국장애인개발원 펀드 지원) 83%

②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관련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 사업대상 : 정신질환자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제공
 -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 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재활, 자립 및 생활적응 훈련 실시
 - 정신질환자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직업능력을 갖추어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사회적 자립 지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카페 운영*	예산	60	-	60	-
		주요내용	빛솔 설치운영 장애인직업훈련	빛솔 운영 장애인직업훈련	빛솔 설치운영 장애인직업훈련	빛솔 운영 장애인직업훈련
		성과지표 (정신장애인 직업훈련 카페 운영 규모 직업재활 훈련 인원 수)	카페 1개소, 직업훈련 연간 20명	카페 1개소, 직업훈련 연간 20명	카페 2개소, 직업훈련 연간 20명	카페 2개소, 직업훈련 연간 20명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원	예산	1,069	1,440	1,500	1,530
		주요내용	사회복지·재 활·자립, 생활적응 사례관리, 직업훈련, 취업 지원	사회복지·재 활·자립, 생활적응 사례관리, 직업훈련, 취업 지원	사회복지·재 활·자립, 생활적응 사례관리, 직업훈련, 취업 지원	사회복지·재 활·자립, 생활적응 사례관리, 직업훈련, 취업 지원
		성과지표 (사례관리 대상자 수, 취업자 수)	사례관리 100명, 취업자 65명	사례관리 120명, 취업자 70명	사례관리 100명, 취업자 65명	사례관리 120명, 취업자 70명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카페 수익금으로 운영함.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카페 운영	내부 평가	운영실태 평가	연 1회	연말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원	내부평가 및 지도점검	운영실태평가 및 지도점검	연 2회	상·하반기
	사회복지협의회	결과평가	3년 주기	연 중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꿈앤카페 빛솔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판매품목의 질적 향상, 고용된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훈련 강화가 필요함.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확대를 위해 빗술을 연도별로 1개소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직업재활 및 퇴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세부과제 3-5. 정신건강 통합관리 활성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경제, 사회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정신질환 증가로 정신질환 유병률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인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활성화가 필요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4% 증가함에 따라 치매노인은 26.8% 증가하면서 치매유병률의 급증으로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의 약 2.4배이며, 인천의 자살율은 2013년 30.6명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일곱 번째로 높은 수준이어서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및 자살예방이 필요함.

○ 사업목적

- 10개 군·구 모두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기반 시민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치매 예방·관리사업 활성화시켜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발병에 따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자살충동을 억제하고 자살위기에 대응하는 자살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살율을 감소시키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 사업구분 : 공약사업 포함*

세부사업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정신건강증진활성화는 공약사업임.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정신건강 증진 활성화	정신건강증진센터 10개 군구 설치 정신질환자 추계규모의 12% 관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수 정신질환자 관리자 수
치매 예방 및 환자가족지원	운영 치매시설 규모 증가 치매예방 프로그램 규모 증가 치매환자가족모임 지원 규모 증가	치매시설 운영 수 운영 인지재활 프로그램 수 가족모임 지원 수
자살예방 위기관리 체계 구축	자살률 감소	자살고위험군 등록률

○ 사업 내용

① 정신건강 증진 활성화

- 관련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 사업대상 :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정신질환 조기 발견·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 정신보건시설·의료기관 정신질환자 관리
- 재원조달(매칭) :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② 치매 예방 및 환자가족지원

- 관련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
- 사업대상 : 치매환자 및 가족, 일반주민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치매센터 운영
 - 치매예방교육 및 가족지원
- 재원조달(매칭) : 국비 7%, 시비 48%, 군·구비 45%

③ 자살예방 위기관리 체계 구축

- 관련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사업대상 : 자살고위험군 및 청소년, 노인 등 일반 시민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지속사업)
-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설치, 군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전담인력 각 1~2명 배치
 -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하여 자살예방 민간협력체계 구축 강화
 - 세대별(청소년, 성인, 노인) 특성에 맞춘 연령대별 자살예방사업 추진
 - 자살고위험군 위기대응 강화 : 24시간 자살예방 상담, 위기개입, 응급출동
 - 자살유가족을 지원하고 업무 종사자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 자살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심리적 부검, 자살시도자특성연구)
 -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의 구축하고 대중매체 통한 자살예방 홍보
 -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 자살다발지역 중점의 생명사랑캠페인 전개
- 재원조달(매칭) : 국비 31%, 시비 54%, 군·구비 15%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정신건강 통합관리 활성화	정신건강 증진 활성화	예산	2,208	2,340	2,410	2,482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센터 운영, 정 신 질 환 자 관리	정신건강증진 센터 운영, 정 신 질 환 자 관리	정신건강증진 센터 운영, 정 신 질 환 자 관리	정신건강증진 센터 운영, 정 신 질 환 자 관리
		성과지표 (정신질환자 관리 규모,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규모)	30,311명 9개소	30,987명 10개소	31,663명 10개소	32,339명 10개소
	치매 예방 및 환자가족지원	예산	5,794	5,800	5,950	6,000
		주요내용	치매센터운영, 치매예방교육, 가족지원	치매센터운영, 치매예방교육, 가족지원	치매센터운영, 치매예방교육, 가족지원	치매센터운영, 치매예방교육, 가족지원
		성과지표 (치매시설 운영 수, 인지재활 프로그램 수, 가족모임 지원 수)	시설 17개소, 프로그램 500개, 가족모임지원 850명	시설 17개소, 프로그램 520개, 가족모임지원 900명	시설 18개소, 프로그램 540개, 가족모임지원 950명	시설 18개소, 프로그램 560개, 가족모임지원 1,000명
	자살예방 위기관리 체계 구축	예산액	536	736	736	736
		주요내용	자살예방교육, 상담, 위기개입	자살예방교육, 상담, 위기개입	자살예방교육, 상담, 위기개입	자살예방교육, 상담, 위기개입
		성과지표 (자살고위험군 등록율)	75%	78%	80%	85%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정신건강증진 활성화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2회	상·하반기
	보건복지부	운영실태 평가	연 1회	연말
치매 예방 및 환자가족지원	내부평가	운영결과	2회	상·하반기
자살예방 위기관리 체계 구축	내부 평가	반기 실적	연 2회	7월, 익년 1월
	통계자료	사망통계(통계청)	연 1회	9월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신질환의 특성상 수동적 거부적 태도로 인한 등록 기피로 등록률이 낮기 때문에 홍보강화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등과의 확고한 연계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율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며, 치매센터 운영 지원 및 센터들 간 연계체계 강화가 필요함.
- 자살의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우울증), 경제사회적 요인(인구고령화, 경제위기 등), 심리적 불안(청소년모방 자살), 개인의 특성(유전, 가족력 등) 등 다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인의 정신적 문제가 아닌 사회 인구학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임.

4. 핵심과제 4. 안심 출산·맘(Mom) 편한 보육

1)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비용 지원의 필요성

- 비 장애여성과 비교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과 출산 시 비용지출이 많기 때문에 등록장애인 중 1~3급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함.

○ 모성·영유아에 대한 건강교실 운영의 필요성

-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만혼 및 늦은 출산 경향이 뚜렷함.
- 이로 인해 임신·출산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임신유지 위협요인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에 따른 사전 교육과 단계별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분만을 도와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육품질 개선 중심의 정책패러다임 전환

-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돌봄 부재에 대한 대응으로써 그동안 보육의 사회화를 위한 양적 증대는 지속되어 왔음.
- 제1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06-2010)과 아이사랑 플랜(제1차 보완 및 수정 2009-2012)에서는 양적 확충을, 제2차(2013-2017)에서는 부모의 선택권 지원을 강조하면서 국가 책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면, 최근에 개최된(2014.9.)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보육품질개선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아이행복플랜(안)’ 수립 계획을 논의하였음
- 인천시의 보육 환경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어린이집 이용률은 88.6%에 달하며, 81,796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2013. 12.기준/2013 보육통계, 보건복지부)하는 등 보육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질적 제고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중앙의 보육정책 기조를 공유하면서 인천시 보육 품질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성 확보

- 부모의 소득에 따른 계층 간 보육(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빈곤의 대물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질적으로 소득 하위 20%와 소득 상위 20% 가구 간 사교육비 지출 차가 7.5배에 달하기도 함(2009)(2013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또한 국제결혼, 가족해체 가정의 양육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생애주기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히는 영유아기의 보육(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평한 보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발달단계에 맞는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제반 환경 구축

- 여성들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의 어려움과 이중 부담에 직면해 급기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곧 출산율 저하와 질 좋은 숙련된 여성의 노동력 상실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음.
- 이에 국가는 주 출산연령대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폭 낮아지는 M-curve현상의 완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07)을 시작으로 범 부처차원의 제도를 마련하면서 꾸준히 공적 아젠다로 형성을 시도하고 있음.
- 인천시 또한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출산 및 양육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및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

(2) 현황 및 대응방안

① 수요분석

○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이 필요함.

- 차별받지 않는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임신·출산·양육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 및 건강한 출산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교실 운영이 필요함

- 우리나라 모성사망비(2012년 9.9명)는 OECD 평균(8.6명)보다 높다는 점은 임신부터 모성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함을 의미함.

○ 보육의 공공성 확충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35.1%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모의 자녀 입소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유형별 입소대기기간은 가장 긴 평균 9.7개월인 것으로 조사됨(2012 보육실태조사).

○ 보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욕구가 강함

-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시민 욕구조사에 따르면 ‘취학 전 자녀양육 관련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27.4%가 ‘시간연장형 교육’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강화군(63.0%), 부평구(39.5%), 남구(37.5%)의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38.3%는 ‘시간연장보육의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4시간 보육’의 필요성 또한 10.5%를 차지함.
- 보육실태조사에서 모의 미취업이유로 ‘자녀양육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62.3%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영아 64.8%, 유아 57.6%로 자녀가 어릴수록 그 비율은 더욱 높았음. 이어 미취업모의 취업 계획과 관련해서도 ‘아이가 더 크면 일을 알아볼 생각’이라는 응답이 64.5%로 나타남. 이러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모 및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시간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② 공급분석

○ 민간개인 중심의 보육 공급 구조 여전

- 2014년 12월 말 기준 2,300개소의 인천시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이 1,270개소(55.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어 민간어린이집이 813개소(35.3%)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공급율이 90%에 달함.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130개소로 5.7%에 그치고 있음. 그 외 사회복지법인 11개소, 법인단체 등 22개소, 부모협동 7개소, 직장어린이집은 47개소임.
-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은 이루었으나, 공급구조는 여전히 민간 위주로 되어 있으며 공적 인프라 기반 또한 부족한 실정임.

○ 특수보육 어린이집 부족

- 2014년 기준, 인천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은 11개소, ‘방과후’ 25개소, ‘시간연장’ 297소, ‘영아전담’ 24개소, ‘장애아 전문’ 6개소, ‘장애아 통합’ 58개소, ‘휴일 보육’ 1개소, ‘시간제 보육’ 8개소로 총 430개소의 특수보육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음. 이는 전국 특수보육 어린이집 11,360개소의 약 3.7%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향후 증가하고 있는 특수보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

○ 보육 정책 추진 체계 마련

- 보육은 인천시 정책의 핵심과제로서 그간 지원 대상과 재정적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음. 2010년 당시 보육료는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은 차상위층 계층에 지원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전(全)계층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합친 예산 또한 2010년 1,561억원에서 2014년 4,194억원으로, 불과 4년 동안 268%가 증액되는 등 보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음.
- 2002년에는 인천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어 2011년에는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12년에는 「인천광역시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시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2010년에는 여성복지보건국에서 가정복지국으로 분리, 2011년에는 여성가족국으로 조직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2년에는 여성가족국 내 보육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보육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정비되었음.

③ 수요-공급 격차분석 및 대응방안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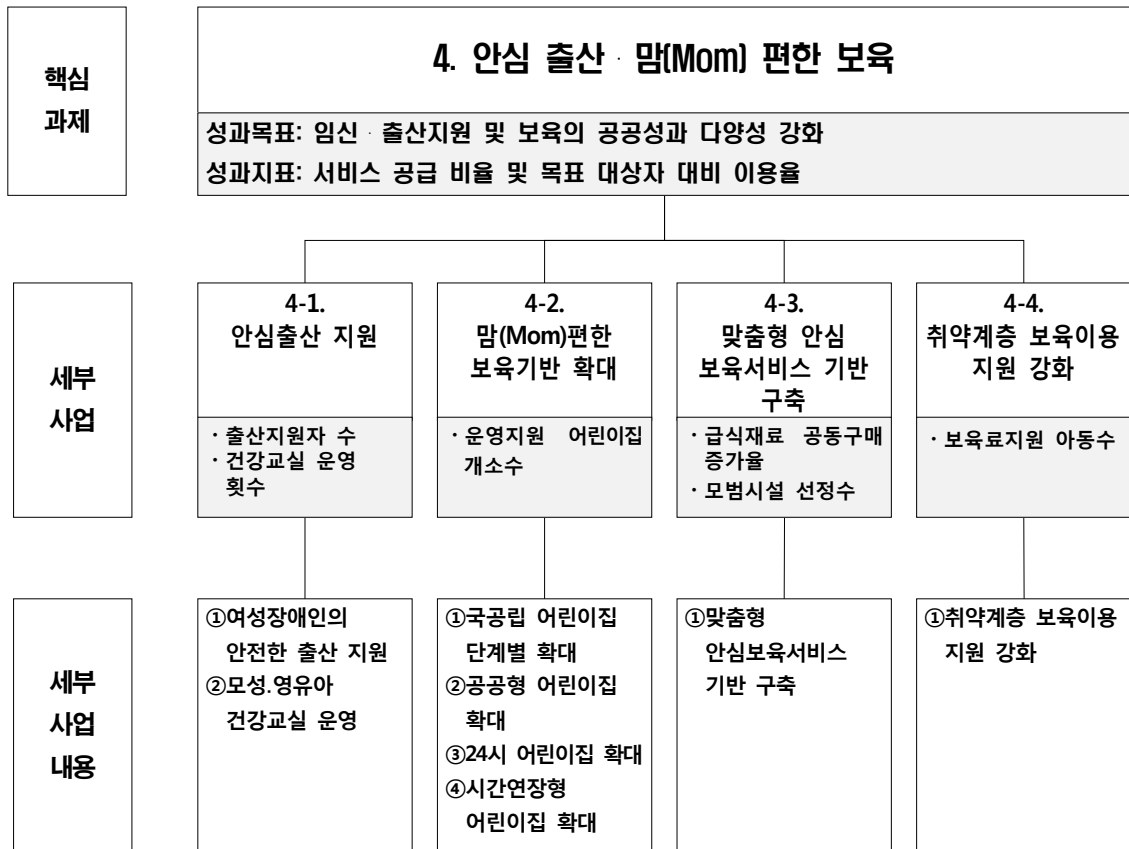
- 여성장애인에게 가사활동과 출산비용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1~6급 여성장애인에게 태안 1명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함.
- 1~3급 여성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출산 전·후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

○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

- 공보육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공공부문 보육분담률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증설이 필요함.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재정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고려 추진해 볼 수 있음.
 - 또한, 민간부문에 대한 부모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대도 요구됨.
-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촘촘한 시스템 구축
- 아동과 부모, 가구 특성과 다양한 양육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를 위하여 시간연장, 24시간 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아이의 연령, 소득수준, 다양한 가족형태(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정 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없는 촘촘한 양육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 안전하고 투명한 안심보육 환경 마련
-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집 내 안심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증가함.
 - 급식, 아동학대 등 안심보육의 실현과 부조리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우수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안심보육 도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함.

(3) 핵심과제 내용 및 추진방향

①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도식



② 세부과제 개요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안심출산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예산	158	167	182	197
		성과지표 (출산지원 여성장애인)	121명	130명	130명	130명
	모성·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예산	90	95	100	100
		성과지표 (건강교실 운영 횟수)	1,050회	1,100회	1,130회	1,150회
맘(Mom) 편한 보육기반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단계별 확대	예산	253	600	600	600
		성과지표 (추가설치 규모)	4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예산	689	990	990	990
		성과지표 (운영지원 규모)	선정 및 운영 90개소 (11개소 신규)	선정 및 운영 99개소 (9개소 신규)	운영 지원 99개소	운영 지원 99개소
	24시 어린이집 확대	예산	624	720	720	720
		성과지표 (운영지원 규모)	지정 및 운영 13개소 (2개소 신규)	지정 및 운영 15개소 (2개소 신규)	15개소 운영	15개소 운영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예산	5,100	5,200	5,300	5,400
		성과지표 (운영지원 규모)	291개소	295개소 (4개소 신규)	297개소 (2개소 신규)	300개소 (3개소 신규)
맞춤형 안심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지표 (급식재료 공동구매, 모범어린이집 선정, 지도·점검대상 시설)	급식재료공동 구매 전년대비 3%증가, 모범어린이집 20개소 선정, 전체 시설 지도 점검	급식재료공동 구매 전년대비 6%증가, 모범어린이집 23개소 선정 전체 시설 지도 점검	급식재료공동 구매 전년대비 9%증가, 모범어린이집 26개소 선정 전체 시설 지도 점검	급식재료공동 구매 전년대비 12%증가, 모범어린이집 29개소 선정 전체 시설 지도 점검
취약계층 보육이용 지원 강화		예산	1,672	1,674	1,676	1,678
		성과지표 (보육비용 지원 아동)	3,047명	3,077명	3,107명	3,137명

2)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4-1. 안심출산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비 장애여성과 비교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출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차별받지 않는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임신·출산·양육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 및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기반으로 이에 근간이 되는 모성의 통합적 건강관리와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및 정보제공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저체중출생아, 다태아 등 증가로 모성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시스템의 강화로 안전한 분만과 영아 사망율의 최소화로 출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기존에 1~3급 여성장애인들에게만 지급되었던 출산비용지원의 대상자범위를 1~6급 여성장애인에게 확대하고, 기타 출산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심출산문화 및 출산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분만·양육의 단계별 체계적인 건강교실 운영 및 정보제공으로 출산율 제고로 저출산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구분 : 공약사업 포함

안심출산 지원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여성장애인출산지원은 공약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출산비용 지원자 규모 유지	출산비용 지원자 수
모성·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모자건강교실 운영 지원	건강교실 운영횟수

○ 사업 내용(활동)

①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자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1~6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태아 1인 1백만원
 - 여성장애인 출산 전·후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 : 1-3급 여성장애인
- 재원조달(매칭)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국비70%, 시비30%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시비100%

②모성·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 관련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10조, 제12조
- 사업대상 : 모든 임신부 및 영유아
- 사업기간 : 2015 ~ 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임신·출산과정의 이해 및 태교 교육
 - 분만의 진행 과정 및 라마즈 호흡법 교육
 - 영양관리, 산후 우울증 예방관리, 인공임신중절 예방, 성교육
 - 모유수유 교실 운영
 - 영유아 발달스크리닝, 오감발달, 이유식교실, 건강검진 안내 등
- 재원조달(매칭) : 시비50%, 군구비 5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강화	예산액	158	167	182	197
	주요내용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 전·후 산후조리, 자녀양육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 전·후 산후조리, 자녀양육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 전·후 산후조리, 자녀양육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 전·후 산후조리, 자녀양육 지원
	성과지표	121명	130명	130명	130명
모성·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예산액	90	95	100	100
	주요내용	모성과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모성과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모성과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모성과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성과지표 (운영 횟수)	1,050회	1,100회	1,130회	1,150회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강화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4회	분기별
모성·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내부평가	사업별 달성도 평가	연 2회	12월 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출산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이며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한 안심출산문화, 또는 출산친화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모성·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사업은 시 재정상태에 따라 사업규모가 유동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군·구가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세부과제 4-2. 맘(Mom) 편한 보육기반 확대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무상보육료의 지원 대상이 전(全)계층, 전(全)연령으로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 증대 등 양적 보육환경은 개선되어 왔으나,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욕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인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분담 비율 5.9%, 2014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의 지역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육성함으로써 인천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보육인프라의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일하는 부모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간연장형(야간반, 새벽반 등) 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모색하며, 특히 미설치된 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등 4개 군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

○ 사업목적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인프라 구축
- 민간부문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4시간 어린이집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 야간경제활동 가정, 한부모 및 조손가정에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

○사업구분 : 공약사업

맘(Mom) 편한 보육기반 확대	지역사업()	보편사업(v)
	지속사업(v)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사업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국공립 어린이집 단계별 확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2018년까지 19개소 신규 설치)	신규 지정 개소 수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신규 지정 개소 수
24시 어린이집 확대	24시간 어린이집 추가 지정 및 운영 지원	24시간 어린이집 추가 지정 수 및 운영 지원 여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시간연장 어린이집 추가 지정 확대	시간연장 어린이집 추가 지정 개소 수

○ 사업 내용(활동)

①국공립 어린이집 단계별 확대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사업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축, 리모델링 : 시설매입, 기존시설, 공동주택 어린이집)
- 사업시기 : 2015 ~ 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국공립시설 신축 : 지원 단가 1,27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최대 396㎡까지 251,460천원 지원(국비)
 - 시설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 251,460천원(국비지원한도액)까지 지원
 -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리모델링 : 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포함)
- 재원조달(매칭) :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②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 사업대상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지정
- 사업시기 : 2015 ~ 2018년(연중 지속사업)
- 확충목표 : 2014년 79개소, 2015년 90개소, 2016년 99개소
- 사업내용
 - 국고보조사업 :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최저 116만원 ~ 최고 875만원 지원
 - 지방비 사업 :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별 70만원 지원
- 재원조달(매칭) : 국비60%, 시비 28 %, 군·구비 12%

③24시 어린이집 확대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 사업대상 : 맞벌이 가정, 야간 경제활동 가정, 한부모, 조손 가정 등 불가피하게 주간보육과 야간보육을 모두 이용하는 가정
- 사업시기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 민간지정시설 : 보육교사 1인당 120만원 지원
 - 취사부 인건비 : 100% 지원
- 재원조달(매칭) : 국비 60%, 시비 28%, 군·구비 12%

④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
- 사업대상 :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 확대
- 사업시기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담당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재원조달(매칭) : 국비 60%, 시비 28%, 군·구비 12%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맘(Mom) 편한 보육기반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단계별 확대	예산	253	600	600	600
		성과지표 (추가설치 규모)	4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공공형 어린이집확대	예산	689	990	990	990
		성과지표 (운영지원 규모)	90개소 (11개소 신규)	99개소 (9개소 신규)	운영 지원 99개소	운영 지원 99개소
	24시 어린이집 확대	예산	624	720	720	720
		성과지표	지정 및 운영 13개소 (2개소 신규)	지정 및 운영 15개소 (2개소 신규)	15개소 운영	15개소 운영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예산	5,100	5,200	5,300	5,400
		성과지표 (운영지원 규모)	291개소	295개소 (증4개소)	297개소 (증2개소)	300개소 (증3개소)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평가	달성도 평가	연 1회	하반기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부지 및 건물매입)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무상임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보육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의 보육분담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민간부문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예: 품질 관리 컨설팅 실시)
- 24시간 어린이집의 확대 지정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함.

세부과제 4-3. 맞춤형 안심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민간부문의 모니터링 부재 및 관공서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보육시설의 부실한 아동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음.

○ 사업목적

-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는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투명성·신뢰성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기반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구 분

맞춤형 안심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전년대비 증가율
모범 어린이집 선정	선정시설 수
지도점검 강화	점검시설 수

○ 사업 내용(활동)

- 관련근거 : 「영유아 보육법」,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사업대상 : 운영 중인 전체 어린이집
- 사업시기 : 2015 ~ 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제 확대
 - 모범 어린이집 선정
 - 지도점검 강화 실시
- 재원조달(매칭) : 비예산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맞춤형 안심보육 서비스 기반 구축	예산액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주요내용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모범 어린이집 선정	모범 어린이집 선정	모범 어린이집 선정	모범 어린이집 선정
		지도점검 강화	지도점검 강화	지도점검 강화	지도점검 강화
	성과지표	전년대비 증가율(3)	전년대비 증가율(6)	전년대비 증가율(9)	전년대비 증가율(12)
		선정시설 수(20)	선정시설 수(23)	선정시설 수(26)	선정시설 수(29)
		점검시설 수 (전체시설)	점검시설 수 (전체시설)	점검시설 수 (전체시설)	점검시설 수 (전체시설)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평가	사업별 달성도 평가	연 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모범 어린이집 선정 및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함

세부과제 4-4. 취약계층 보육이용 지원 강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법정 저소득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 및 민간어린이집 이용시 발생하는 보육비용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들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저소득계층 및 장애아동의 보육 필요비용 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이용 차액의 보조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육이용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구분

취약계층 보육이용 지원 강화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취약계층 지원 확대	지원아동 수

○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
- 사업대상
 - 법정저소득층 아동 필요경비 지원 : 0~5세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 법정저소득층 아동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조 :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아동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50 %, 군·구비 50 %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취약계층 보육이용 지원 강화	예산액	1,672	1,674	1,676	1,678
	주요내용	차액보육료, 필요경비	차액보육료, 필요경비	차액보육료, 필요경비	차액보육료, 필요경비
	성과지표	3,047명	3,077명	3,107명	3,137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저소득계층 아동, 장애아 등 모든 계층의 아동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육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개발과 사업수행이 필요함.

5. 핵심과제5.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1)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족해체, 위기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와 지원 필요
 - 가족해체로 인하여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 아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 저소득계층 아동들의 경우 가정 내에서의 돌봄이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방과 후 돌봄이 부족해 적절한 학습지도와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
 -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급식 및 학습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중요한데, 이들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적 문제 다음으로 자녀양육과 교육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이혼가정에서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학업중단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자립지원 필요
 - 학업중단 청소년의 규모는 최근 점차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일정 비율 이상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 밖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심각해지므로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학교 밖 교육 및 자립 지원이 절실함.
 - 취약계층 아동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의 삶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형성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요구 증대
 - 청소년들의 독특하고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향유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다문화사회에서의 삶의 능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교육도시로서의 인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2) 현황 및 대응방안

① 수요 분석

-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필요
 - 2014년 기준 소년소녀가정이 16세대로 23명의 아동이 있고, 가정위탁 아동이 777명으로

전국에서 5.4%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2012년 4,582명에서 2013년 4,698명으로 늘어나 지역아동센터 개소가 1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아동은 늘어나고 있음.
- 2014년 12월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260명으로, 이중 초등학생이 152명, 중학생이 108명임.
-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에서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도서관이나 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편이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높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학업중단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의 증가 및 욕구 다양화

- 학업중단 청소년의 전체적인 규모는 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2.0%에서 2013년 1.4%로 점진적인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매년 1,000명 이상의 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인 중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2013년 0.7%로 매년 500명 이상의 중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 위기청소년들이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지만, 센터의 정원과 성별 구분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임.
- 학교 밖 청소년들과 위기청소년들의 욕구가 일시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자립, 진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 및 국제 교류에 대한 요구 증대

-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성화로 인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향유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를 위한 충분한 기회와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바라고 있음.
-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
-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청소년 복지 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통접근성이 개선되거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이용 의향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임.

② 공급 분석

○ 각종 아동복지시설 및 인프라의 점진적 확대

- 아동복지시설로 양육시설이 9개소인데 생활인원은 2013년 4/4분기 기준으로 606명임. 이 중 영유아전담 아동복지시설은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이외에 그룹홈 13개소, 일시보호소 1개소, 지역아동센터 181개소가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개소, 가정위탁지원센터가 1개소 있음.
- 2015년 기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8개소가 운영 중인데, 초등학생 160명, 중학생 160명, 전체 320명이 이용 가능한 시설임.

- 드림스타트 서비스 대상 지역이 기존 9개에서 2015년도 10개 군구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위기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시설 부족

- 2014년 12월 기준으로 청소년쉼터가 8개소 운영 중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가 2개소 운영 중임.
- 청소년쉼터 8개소 중 여자청소년 쉼터가 3개소, 남자청소년 쉼터가 3개소, 혼성 쉼터가 2개소이고, 중장기 쉼터가 2개소, 단기 쉼터 4개소, 일시 쉼터가 2개소이고, 이용가능한 정원은 115명으로, 정원보다 수요가 많아 시설이 부족한 형편임.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2015년에 새롭게 출범하지만, 군구센터의 경우 지원 인력이 2명밖에 추가되지 않아 제대로 된 사업을 실행하기에는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함.
- 쉼터를 나온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하여 자립생활관과 자활작업장을 각 3개소씩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 정원은 27명임.

○ 청소년문화 지원 인프라 부족

- 2014년 12월 기준으로 청소년 수련시설로는 청소년 수련관 8개소,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청소년수련원 5개소, 유스호스텔 4개소, 청소년 야영장 5개소가 운영 중임.
- 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 대표 2개, 군구 4개 등 전체 6개를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98개의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음.

③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 취약계층 아동 및 위기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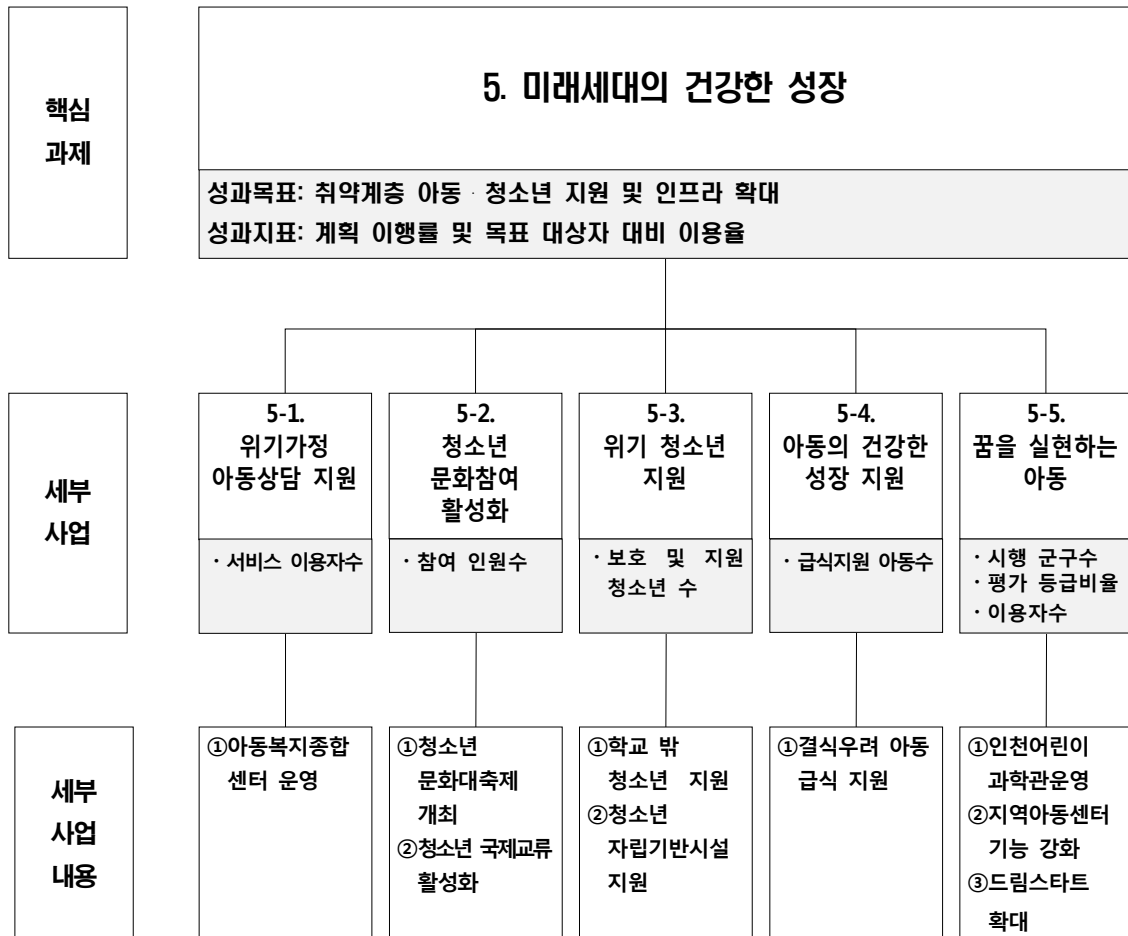
- 요보호아동, 결식우려아동, 위기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함.
- 취약계층의 아동 및 위기청소년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들을 위한 보호, 교육, 진로,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 강화

- 학교에서도 교과활동 이외에 비교과활동이 중요시되고 있고, 인성교육 및 체험학습이 강조되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어 건전하고 역동적인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성과를 드러내고 국제적 안목을 키워주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3) 핵심과제 내용 및 추진 방향

①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도식



② 세부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위기가정 아동 상담 지원		예산	916	962	992	992
		성과지표 (아동 상담 실적 누적)	37,600명	38,300명	39,100명	39,900명
청소년 문화참여 활성화	청소년 문화대축제 개최	예산	80	90	90	90
		성과지표 (참여인원)	7,000명	7,500명	8,000명	8,500명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48	58	68	78
		성과지표 (참여 교류 인원)	117명	125명	130명	140명
위기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671	691	711	732
		성과지표 (서비스 제공 인원)	2,110명	2,110명	2,110명	2,110명
	청소년 자립기반 시설 지원	예산	224	300	320	340
		성과지표 (보호 및 지원 청소년 수)	27명	30명	33명	36명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예산	12,741	12,800	13,000	13,000
		성과지표 (급식지원 아동 수)	21,500명	21,000명	20,500명	20,000명
꿈을 실현하는 아동	드림스타트 확대	예산	3,050	3,200	3,200	3,200
		성과지표 (실시지역 확대)	10개 군·구 확대 시행	10개 군·구 확대운영, 영종지소 개소	10개 군·구, 영종지소 확대 운영	10개 군·구, 영종지소 확대 운영
	지역아동센 터 기능 강화	예산액	14,169	14,200	14,400	14,700
		성과지표 (평가결과 '보통'이상 비율)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인천어린이 과학관 운영	예산액	3,625	3,987	4,385	4,823
		성과지표 (이용자 수)	440,000명	445,000명	450,000명	455,000명

2)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5-1. 위기가정 아동 상담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최근 가족해체 및 아동학대, 이혼의 증가 등으로 가정해체 및 위기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 결과 함께 증가하는 위기가정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 상담, 교육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목적

- 아동복지종합센터가 지역사회 아동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아동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함.

○ 사업구분

위기가정 아동 상담 지원	지역사업(V)	보편사업()
	지속사업(V)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아동 상담실적 누적 2% 향상	연간 상담실적 누계

○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2조, 제59조
- 사업대상 : 가정해체, 학대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위기가정 아동 개별상담 및 집단 치료
 - 집단 및 가족치료를 통한 치료·예방사업
 - 기타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아동을 위한 특색사업 추진
- 재원조달(매칭) : 시비 50%, 구비 50%(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위기가정 아동 상담 지원	예산액	916	962	992	992
	주요내용	심리상담·치료 및 예방,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치료 및 예방,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치료 및 예방,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치료 및 예방,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37,600명	38,300명	39,100명	39,90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하반기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위기가정 아동, 저소득계층 아동이 심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치료사업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응집력 강화를 통한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부모교육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5-2. 청소년 문화참여 활성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청소년 스스로가 학업과 또래문화 이외의 다양한 청소년문화를 함께 만들어 내고, 참여하는 기회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넓은 세계관에 대한 이해 및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청소년문화 교류의 장을 만들어 청소년, 가족,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종합문화축제로 성장시키고자 함.
- 해외 청소년들과 문화교류를 통해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질개발, 긍정적 가치관 고취, 폭넓은 세계관 형성 등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함.

○ 사업구분

청소년 문화참여 활성화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청소년 문화대축제 개최	건전하고 역동적인 청소년문화 형성 기회 부여 및 활성화	참여인원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교류 활성화	참여 교류 인원

○ 사업 내용

① 청소년 문화대축제 개최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 사업대상 : 인천시 청소년 및 일반시민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청소년체험문화마당 : 공예체험, 건전놀이체험, 세계문화체험, 진로체험, 예술음악체험, 과학체험, 전통문화체험, 기타 문화체험 활동, 인천시 직영. 위탁 청소년시설 및 단체, 청소년웹진 MOO 홍보, 청소년 전시부스 활동, 청소년 공연 활동
 - 공연마당 : 청소년 락페스티벌, 축하공연
- 재원조달(매칭) : 시비 100%

② 청소년 국제교류

- 관련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사업대상 : 관내청소년 및 관내취약계층 청소년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학교수업 참여, 문화체험, 관공서 방문, 청소년 캠프 등
 -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교류의 기회를 제공
- 재원조달(매칭) : 시비 10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청소년 문화참여 활성화	청소년 문화대축제 개최	예산	80	90	90	90
		주요내용	체험문화 마당, 공연마당 운영	체험문화 마당, 공연마당 운영	체험문화 마당, 공연마당 운영	체험문화 마당, 공연마당 운영
		성과지표 (참여인원)	7,000명	7,500명	8,000명	8,500명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액	48	58	68	78
		주요내용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성과지표 (교류참여 인원)	117명	125명	130명	14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청소년 문화대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사 전 시설물 현황과 공급시설의 위치 파

악, 인력배치운영 세부점검 등 소운영체계의 강구와 차질 없는 사전 준비를 통해 안전한 개최를 준비해야 함.

- 「청소년 문화대축제 공연마당(락페스티벌)」 우수 공연팀 발굴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 등 시상계획 수립을 통하여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역량과 기량을 맘껏 펼쳐 공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국제교류 대상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인천을 대표하는 청소년인 만큼 위상에 걸맞은 적격자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는 절차를 확립함.

세부과제 5-3. 위기청소년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입시 압박,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인천시에서 2,000여 명 이상이 발생한 상태이며,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학업복귀, 또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신장이나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함.
-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에 제정되어 2015년 5월에 시행됨. 이에 따른 학교 밖 지원 업무가 시 및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됨.
- 섣터 퇴소 후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이 필요함. 즉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기술심화를 위한 취업연계 실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자활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청년실업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여야 함.

○ 사업목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로 심리, 진로, 가족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등과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자립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청소년들의 학교복귀와 직업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함.

○ 사업구분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청소년 수
청소년 자립기반시설 지원	청소년 자립기반 서비스 제공	보호 및 지원 청소년 수

*성과지표 설정 근거는 2015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인천지역 서비스 제공 인원수 2,110명 이상을 시 센터 주관 하에 군구 센터별 배분하며, 시 센터는 470명, 계양구·서구·남구·부평구·중구·연수구 센터는 각각 210명, 남동구·동구 센터는 각각 190명임.

○ 사업 내용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관련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 시행일인 2015. 5. 28까지는 기존 규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 적용)

- 사업대상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사업기간 : 2015~2018(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
 - 구 센터 지역자원연계망 구축 지원 및 지도 감독
 - 재원조달(매칭) : 국비 70%, 시비 30%
- ②청소년 자립기반시설 지원
-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사업대상 : 만24세 이하 가출청소년
 - 사업기간 : 2015~2018(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합리적 지출훈련 등)
 - 취업유지 훈련프로그램 지원(자격증 취득, 심리검사 등)
 - 재원조달(매칭) : 시비 100 %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위기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671	691	711	732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성과지표 (서비스 제공 인원)	2,110명	2,110명	2,110명	2,110명
	청소년 자립기반 시설 지원	예산	224	300	320	340
		주요 내용	청소년자립 지원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자립 지원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자립 지원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자립 지원관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성과지표 (보호·지원 청소년 수)	27명	30명	33명	36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연말
학교밖 청소년지원 센터	성과관리	연 4회	분기별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학교 밖 청소년 발생시 즉각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보의 학교 제공 및 센터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청소년자립지원관 등 자립지원시설 입소 후 서비스를 제공받은 결과 사회진입 등을 사유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함.

세부과제 5-4.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저소득층 맞벌이가구 및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이들 가정의 아동들에게 결식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급식지원이 필요함.
- 결식가능아동 파악과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 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양상태의 개선을 추진함.

○ 사업구분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급식지원 아동 수

○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 2항 제3호
- 사업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의 결식 가능 아동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급식지원 대상 아동 선정
 - 아동 특성에 맞는 급식지원 형태에 따른 급식비 지원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75%, 군·구비 25%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예산	12,741	12,800	13,000	13,000
	주요내용	결식우려 아동 특성별 급식 지원	결식우려 아동 특성별 급식 지원	결식우려 아동 특성별 급식 지원	결식우려 아동 특성별 급식 지원
	성과지표 (급식지원 아동 수)	21,700명	21,000명	20,500명	20,00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평가	결과 평가	연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적극적인 홍보로 연중·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
- 아동의 생활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급식형태를 지원함.
- 위생·영양을 고려한 아동급식 제공 단체(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함.

세부과제 5-5. 꿈을 실현하는 아동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취약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중산서민계층 아동들도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가족해체, 사회 양극화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킬 필요가 증가하고 있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의 증가 추세로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돌봄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력·창의력 창출을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과학관으로 미래 국가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갈 과학인재 양성 및 미래 지향적 과학 전시물 및 체험·교육을 통해 인천 및 수도권 거점 선진 어린이과학관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모든 사회계층의 아동들이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방과 후 학력신장 지원 및 과학교육 등을 지원함.
- 드림스타트사업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인천 어린이과학관은 어린이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주제와 과학교육 방법의 제시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과학, 즉 어린이와 과학을 테마로 하여 일반적인 종합과학관과는 차별화를 추구함

○ 사업구분

꿈을 실현하는 아동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드림스타트 확대	드림스타트 사업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실시지역 확대 (현재 9개 군·구 → 10개 군·구로 확대)
지역아동센터 기능 강화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	지역아동센터 평가결과 '보통'이상 비율*
인천어린이과학관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 활성화	관람 및 참여인원 수

*(평가결과'보통'이상센터 수 / 평가대상센터 수) X 100

○ 사업 내용

①드림스타트 확대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사업대상 : 0세(임산부) ~ 만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아동 가구 발굴 및 지역보건복지 자원 발굴 연계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관리
 - 서비스 간 연계 및 사후관리(서비스 최초 개입부터 종결까지)
 - 기초기록 관리 및 아동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재원조달(매칭) : 국비 100% (※ 일부 군·구는 시 50% : 구 50% 보조금 추가 지원)

②지역아동센터 기능 강화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 사업대상 : 만 18세미만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우선보호아동 60% 이상)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 거점·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및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재원조달(매칭) :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③인천어린이과학관 운영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2호
- 사업대상 : 영·유아 및 어린이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국내 최초 체험위주의 전문 어린이과학관 운영
 - 체험·참여 위주의 전시환경 구축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
- 재원조달 : 시비 100 %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꿈을 실현하는 아동	드림스타트 확대	예산	3,050	3,200	3,200	3,200
		주요내용	드림스타트 사업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강화
		성과지표 (실시지역 확대)	10개 군·구 확대 시행	10개 군·구 확대운영, 영종지소 개소	10개 군·구, 영종지소 확대 운영	10개 군·구, 영종지소 확대 운영
	지역아동센터 기능 강화	예산액	14,169	14,200	14,400	14,700
		주요내용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성과지표 (평가결과 '보통'이상 비율)	80%이상	80%이상	80%이상	80%이상
	인천어린이 과학관 운영	예산액	3,625	3,987	4,385	4,823
		주요내용	상설전시관 운영, 프로그램 운영, 과학문화행사 개최	상설전시관 운영, 프로그램 운영, 과학문화행사 개최	상설전시관 운영, 프로그램 운영, 과학문화행사 개최	상설전시관 운영, 프로그램 운영, 과학문화행사 개최
		성과지표 (이용자 수)	440,000명	445,000명	450,000명	455,00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연말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평가 결과	연 1회	연중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2015년도 드림스타트사업 신규 설치 지역인 옹진군이 도서지역이라는 지역여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방식을 도시지역, 또는 농촌지역과 달리하는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함.
-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가정,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 맞벌이·이혼가정의 아동, 다문화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아동센터가 자체적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자원체계 개발·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함.
- 인천어린이과학관은 과학관 특성상 새로운 볼거리 제공, 전시물 교체, 신규설치 등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어린이 관람객을 계속 유치하여 과학을 꿈꾸는 아동의 기본 체험 학습장소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6. 핵심과제 6. 건강한 노후, 활기찬 여가

1)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여건의 조성

-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healthy ageing)를 보내기 위해서는 노인의 기능과 상태에 적합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의 제공 등의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됨.
- 먼저, 건강한 노인은 기존 복지 관련 인프라의 활용 및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사회 관계망을 확대 및 유지하도록 ‘사회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함.
- 그 다음으로, 허약한 노인이나 독거노인, 학대나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노인은 적절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노인의 사회참여와 돌봄과 보호의 강화

-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독거노인이 늘면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
- 아울러, 여러 형태의 어려움에 처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서비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요양보호사와 같은 인력의 지원을 통한 서비스 질의 개선도 요구됨.
- 노인의 사회참여와 돌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2) 현황 분석 및 대응 방안

① 수요분석

○ 노인인구 지속적인 증가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노인인구는 지난 2009년 22만 5,683명으로 전체 인구의 8.3%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29만7,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음.

○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 증가

- 노인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음.

- 취업이나 창업과 같은 경제 활동을 하거나 늘어난 여가시간에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개인 취미생활 등 사회 활동의 참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노인이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함.
- 또한,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요구됨.

○ 적절한 돌봄과 보호에 대한 요구 증대

- 독거노인이 계속 늘면서 사회적 활동과 사람과의 교류가 매우 제한적인 ‘사회적 고립’ 상태에 처한 노인들도 늘고 있음.
- 독거노인에게는 평상시에도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의 지원이 요구됨. 미흡한 대처시 노인의 방치 및 고독사로 이어지기도 함.
-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이 약 14.7%로 조사됐고, 학대 피해노인은 약 4만여명으로 추산됨(인천시, 2013). 노인의 자살률도 전체 자살률의 27.9%를 차지하고, 전국의 노인 자살률 평균보다 1.1%p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학대와 자살의 위험에 처한 노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② 공급분석

○ 사회 참여 지원 시스템의 부족

- 노인과 베이비부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 관련 기관들이 일자리, 자원봉사, 취미생활, 각종 여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지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 허약한 노인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 돌봄과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한계

- 독거노인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안전시스템 등을 구축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거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함.
- 학대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된 노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개입을 통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적지 않음.

③ 수요-공급 격차분석 및 대응방안

○ 노인을 위한 사회참여 지원 시스템의 강화

- 노인과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즐거운 인생센터’를 건립하고자 함.
- 이 센터를 통해 인생이모작을 실질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일자리 및 창업정보,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교육과 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실버농장’을 운영해서 소규모 집단 경작지에서 노인이 필요한 농산물을 직접 재배,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노인들에게 일상의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의 관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함.

○ 노인을 위한 돌봄과 보호 체계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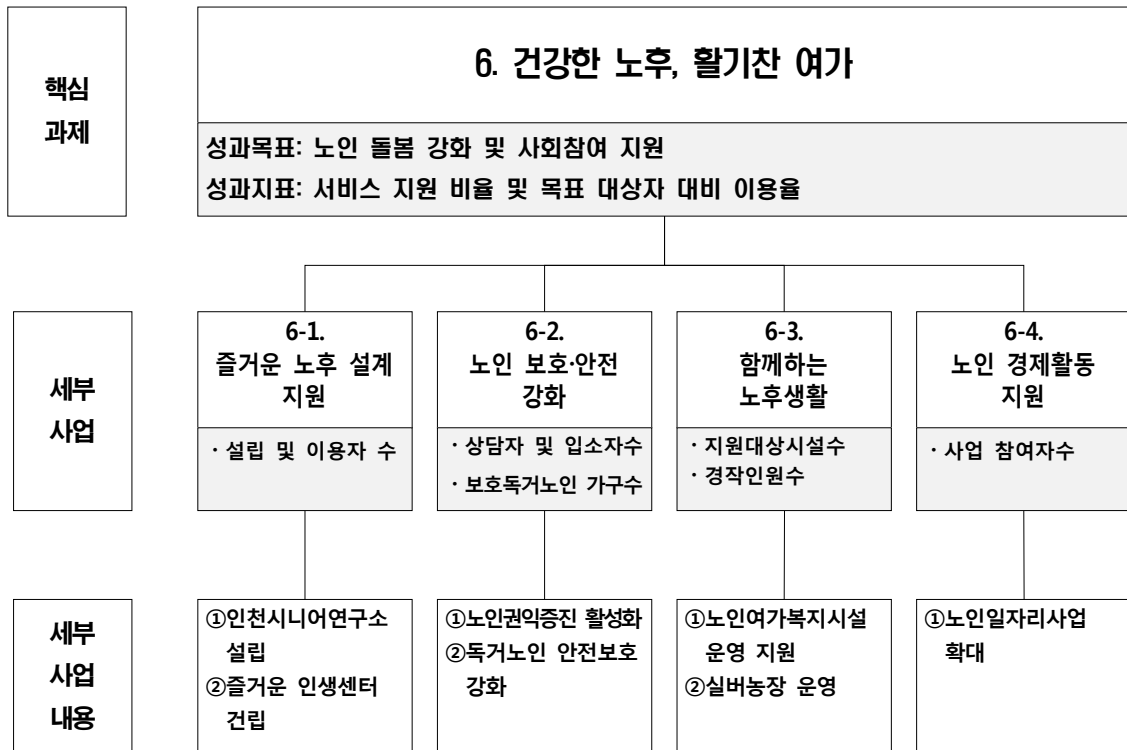
-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및 위급 상황시에 효과적 대응 위한 ‘독거노인 보호 시책’을 추진함.
- 학대나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노인을 조기에 발굴해서 상담과 사정, 심신치유서비스 제공 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임.

○ 노인 복지의 정책 기능 강화

- ‘인천 시니어연구소’를 신설해서 노인들의 급증하는 복지에 대한 욕구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의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노인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인천광역시의 특징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자 함.

(3) 핵심과제 내용 및 추진 방향

①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도식



② 세부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즐거운 노후설계 지원	인천시니어 연구소 설립	예산	-	200	220	250
		성과지표 (정책 개발 규모)	설립관련 보고서	2건	3건	3건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예산	-	1,000	400	400
		성과지표 (이용자 규모)	설립결정	센터발족	5,000명	7,000명
노인 보호·안전 강화	노인권익증 진 활성화	예산	293	295	300	300
		성과지표 (학대노인가정 상담, 학대피해노인 입소)	상담 6,156건, 입소노인 84명	상담 6,711건, 입소노인 96명	상담 7,447건, 입소노인 108명	상담 8,191건, 입소노인 132명
	독거노인 안전보호 강화	예산	3,488	3,593	3,700	3,811
		성과지표 (보호 독거노인세대 수)	12,438가구	12,810가구	13,190가구	13,590가구
함께 노후생활 지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예산	23,054	23,490	29,944	23,790
		성과지표 (지원 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 규모)	1,478개소	1,482개소	1,494개소	1,516개소
	실버농장 운영	예산	19	30	40	50
		성과지표 (면적, 경작인원)	25,730㎡, 950명	27,430㎡, 1,050명	29,130㎡, 1,150명	30,830㎡, 1,250명
노인경제활동 지원		예산	39,730	46,000	54,000	60,000
		성과지표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20,000명	23,000명	27,000명	30,000명

2)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6-1. 즐거운 노후설계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인구고령화 및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지역정책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노인과 베이비부머의 사회참여 욕구 증가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정보·일자리 등의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적인 문화공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목적

- 노인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노인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 인생 이모작, 또는 삼모작의 설계를 지원하는 노인과 베이비부머를 위한 인생설계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의 취업, 창업,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참여기회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함.

○ 사업구분 : 공약사업*

즐거운 노후설계 지원	지역사업(v)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v)

*2개 사업인 '인천시니어연구소 설립' 및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은 모두 공약사업임.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인천시니어연구소 설립	연구소 설치 운영	노인정책 개발 건수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센터 설치 운영	센터 이용자수

○ 사업 내용

① 인천시니어연구소 설립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계속사업)
- 사업규모 : 시니어 관련 전문 연구인력 확보 2명
- 설치장소 : 인천발전연구원에 전담기구 운영
- 사업내용
 - 노인관련 중앙정부 및 타 사·도의 정책과 사업 모니터링
 - 지역 맞춤형 노인 정책과 사업 연구개발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②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계속사업)
- 사업규모 : 1센터 4팀 20명(계획)
- 사업내용
 - 센터 운영공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인생이모작 설계, 사회공헌 아카데미, 창업정보, 일자리 및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베이비붐 세대 전담 지원, 사례 발굴 등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즐거운 노후설계 지원	인천시니어 연구소 설립	예산	-	200	220	250
		주요내용	센터 설치, 정책연구	연구소 설치, 운영	연구소 운영	연구소 운영
		성과지표 (정책 개발 규모)	설립관련 보고서	2건	3건	3건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예산	-	1,000	400	400
		주요내용	사업계획 수립	센터건립 및 발족	센터운영	센터운영
		성과지표 (이용자 규모)	설립결정	센터발족	5,000명	7,00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평가	운영 결과 평가	연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인천시니어연구소의 노인정책·사업 연구·개발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발전연구원과 연구소의 운영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센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6-2. 노인보호·안전 강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노인에 대한 학대도 증가함에 따라 노인안전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 인천은 노인인구가 29만명(10.2%) 수준으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학대, 노인자살, 노인사기피해 등이 사회병리현상으로 이슈화됨.
- 인천 지역 실태조사 응답자 중 노인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이 14.7%로 조사되었으며 학대피해노인이 약 4만 여명으로 추산. 잠재된 학대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 필요.(2013 인천 노인생활실태 및 노인보호[학대] 실태조사)
- 특히, 학대행위자의 약 90%가 친족(아들, 배우자, 며느리, 손자녀 등)에 의한 학대행위로 발생되고 있어 학대의 재발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격리를 할 수 있는 쉼터 기능 확충이 필요함
- 인천시 노인자살률은 27.9%로 전국 노인자살률 평균에 비해 1.1%p 높게 나타나고, 적지 않은 노인단독가구가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인천 거주 자살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보호 대책과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위기상황 발생시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의 보호 강화 필요한 상황임.

○ 사업목적

- 학대 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며,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긴급보호를 제공하고, 노인보호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심신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원가정 회복을 지원함.
- 지역사회 내 자살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보호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및 보호시스템 정착을 통해 생활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사업구분

노인보호·안전 강화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노인권익증진 활성화	학대노인가정 상담 규모 증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입소 지원	학대노인가정 상담 규모,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입소 규모
독거노인 안전보호 강화	보호 독거노인세대 수 증가	보호 독거노인세대 규모

○ 사업 내용

① 노인권익증진 활성화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제5항,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만 60세 이상 노인, 학대피해노인 및 가정, 인천 시민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학대피해노인 상담 및 사례관리 진행(군·구 권역별 담당자 배치를 통한 학대피해노인 사례관리 진행)
 - 긴급 상담(노인사기피해, 노인자살, 실종노인, 노인 성(性), 기타 문제 상담) 및 시니어 정보지원 상담(생계관련, 의료관련, 지역사회 복지정보, 기타 관련 정보 제공)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보건복지부 지정> 개최(노인학대예방 및 효(孝) 문화 확산을 위한 인천시민 참여 행사)
 - 노인권익증진을 위한 ‘효(孝) 공모전’ 개최(시민참여UCC 홍보영상, 사진 공모전 / 시상식)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대상『노인인권아카데미』(노인생활시설의 장 및 종사자 대상 직책별 노인인권·노인학대예방교육)
 - 학대피해노인 긴급보호 및 건강증진, 문화여가, 사회기능회복, 심리치료, 가족상담 프로그램 운영
 - 인천 군·구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및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통한 자살 고위험군 노인 발굴 및 심리상담, 약물치료, 법률 서비스 등 연계·동행 서비스 지원
- 재원조달(매칭)
 - 노인보호전문사업(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사업): 국비 50%, 시비 50%, 군·구비 0%
 - 노인권익증진상담사업: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위기노인자살예방사업: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② 독거노인 안전보호 강화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대상 : 주민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돌봄서비스 대상 독거노인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사회적 보호 필요도가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既 구축 시스템)을 활용하

- 여 안전 확인 및 위급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보호활동을 전개
-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한 정기·수시 안전 확인 실시
 -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을 활용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강화
 - ‘안전도우미’를 활용한 독거노인 위급상황 대처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50%, 군·구비 5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노인 보호·안전 강화	노인권익증 진 활성화	예산	293	295	300	300
		주요내용	노인보호전문 사업, 노인권익증진 상담사업,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자살예방 사업	노인보호전문 사업, 노인권익증진 상담사업,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자살예방 사업	노인보호전문 사업, 노인권익증진 상담사업,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자살예방 사업	노인보호전문 사업, 노인권익증진 상담사업,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자살예방 사업
		성과지표 (학대노인가정 상담, 학대피해노인 입소)	상담 6,156건, 입소노인 84명	상담 6,711건, 입소노인 96명	상담 7,447건, 입소노인 108명	상담 8,191건, 입소노인 132명
	독거노인 안전보호 강화	예산	3,488	3,593	3,700	3,811
		주요내용	기존 안전 확인시스템 활용 독거노인 안전 확인·보호	기존 안전 확인시스템 활용 독거노인 안전 확인·보호	기존 안전 확인시스템 활용 독거노인 안전 확인·보호	기존 안전 확인시스템 활용 독거노인 안전 확인·보호
		성과지표 (보호 독거노인세대 수)	12,438가구	12,810가구	13,190가구	13,590가구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노인권익증진 활성화	지도점검	현장 방문 점검	연 1회	3분기
독거노인 안전보호 강화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독거노인보호를 위하여 이미 구축 안전확인 시스템의 정착 시행을 위한 관련 기관(부서)와의 협력체계유지 및 홍보강화가 필요함.
- 인천 지역 노인학대 관련 Data Base 심층분석·권역별 사례관리 수행기관 네트워크 강화 사례판정 배심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한 [노인종합솔루션센터 구축-노인인권 Golden-Time 정립]이 필요함.
- 건물 전체 사용, 남녀보호공간 분리, 전문심리상담 공간 마련 등 학대피해노인의 사생활 보호 및 신변 안전을 위한 쉼터의 확장이 필요함.
- 인천 전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자살 실태조사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6-3. 함께하는 노후생활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인구고령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노인들이 서로 함께하는 여가활동은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으며, 노인의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삶의 활력 제공 및 노인간 유대강화를 통한 사회참여기회 제공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 제기
- 먼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노인복지관련 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이 시설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또한, 노인에게 시설과 프로그램이외에 소규모집단 경작지와 여가선용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농업을 통한 건강관리, 함께 하는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유도하여 노인들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간단한 소규모 도시농업이 가능한 경작지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함께 땀 흘리면서 건강도 관리하고, 사회참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사업구분

함께하는 노후생활 지원	지역사업(v)	보편사업()
	지속사업(v)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대상 노인시설 규모 누적 0.3% 향상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실버농장 운영	노인 사회참여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도모	실버농장 운영 개소 및 참여인원

○ 사업 내용

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사업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 1,478개소 (노인복지관 10개소, 노인문화센터 9개소, 노인종합문화회관 1개소, 노인대학 30개소, 경로당 1,428개소)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 시설 이용자를 위한 사회(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재원조달(매칭) : 국비 6%, 시비 51%, 군·구비 43%

② 실버농장 운영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사업대상 : 65세 이상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거주노인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연수 실버농장 : 550명(30㎡형 550필지) ⇒ 선학동 149-1, 210일원
 - 남동 실버농장 : 280명(20㎡형 280필지) ⇒ 수산동 13-1일원
 - 계양 실버농장 : 100명(21㎡형 100필지) ⇒ 굴현동 337일원
 - 서구 실버농장 : 90명(17㎡형 90필지) ⇒ 검암동 29일원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함께 노후생활 지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예산	23,054	23,490	29,944	23,790
		주요내용	시설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시설 확충	시설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시설 확충	시설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시설 확충	시설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업비, 시설 확충
		성과지표 (지원 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 규모)	1,478개소	1,482개소	1,494개소	1,516개소
	실버농장 운영	예산	19	30	40	50
		주요내용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성과지표 (면적, 경작인원)	25,730㎡, 950명	27,430㎡, 1,050명	29,130㎡, 1,150명	30,830㎡, 1,25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도점검	시설운영 지도·점검	연 1회	연말
실버농장 운영	지도점검	현장 방문 점검	연 2회	4월, 7월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노인복지여가시설의 확충은 재정 등을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노인복지여가시설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실버농장운영은 노인일자리사업인 노인 경제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모든 군구로 확대하고, 위탁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6-4. 노인 경제활동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인구고령화와 수명의 연장에 따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아직은 확고하지 못하여 국민연금 수급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는 국민연금의 월 수령액도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기초연금의 금액도 충분하지는 않음.
- 저소득 노인의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경제활동기회의 제공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목적

-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충, 적극적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과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자 함.

○ 사업구분

노인 경제활동 지원	지역사업()	보편사업(v)
	지속사업(v)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	일자리 참여자 수

○ 사업 내용(활동)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 제공)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전국형 노인일자리 : 노노케어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방문 돌봄사업)
 - 지역형 노인일자리 : 환경정비, 스쿨존교통지원, 학교급식도우미, 보육시설강사 등
 - 취업·창업형 노인일자리 : 경비원, 주유원, 아파트택배, 실버카페, 공동작업장(쇼핑백 제작 등)
- 재원조달(매칭) :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노인경제활동 지원	예산	39,730	46,000	54,000	60,000
	주요내용	만 65세 이상 노인대상, 매년 3월~11월 (전국형은 1월~12월), 수행기관별로 노인 일자리 제공	만 65세 이상 노인대상, 매년 3월~11월 (전국형은 1월~12월), 수행기관별로 노인 일자리 제공	만 65세 이상 노인대상, 매년 3월~11월 (전국형은 1월~12월), 수행기관별로 노인 일자리 제공	만 65세 이상 노인대상, 매년 3월~11월 (전국형은 1월~12월), 수행기관별로 노인 일자리 제공
	성과지표 (일자리사업 참여자 수)	20,000명	23,000명	27,000명	30,00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노인사회활동사업	모니터링 참여자 모집운영 : 20명	수시	3월~11월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7. 핵심과제 7. 장애인의 사회통합

1)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 발굴 요구
 -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례는 아직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전문적 서비스 체계가 필요함.
 -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편의, 도시기반 시설 점검 및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이용가능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필요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장애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시설 마련이 요구됨.
 - 또한 재가장애인, 여성 및 남성장애인의 성별특성 반영, 장애유형에 따른 욕구 사정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다각화 요구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별 배치와 전문화된 서비스에 대한 주민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기반마련을 위한 지속적 일자리 마련
 - 장애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한시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국한되는 공공부문에 편중되어 있고, 장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고용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의 어려움 중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을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정책은 아직은 부재함.
-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 다양한 복지서비스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거주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보다 더 이루어져야 함.
 - 장애인의 의료지원, 재활지원 등의 치료, 장애가족서비스 확대, 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전문화된 서비스 실시 필요

(2) 현황 및 대응방안

①수요분석

- 장애인수의 증가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요구 증가
 -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총 12만 6,738명에서 2013년 13

만 3,77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장애유형별로는 2013년을 기준으로 지체장애인이 7만 2,6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시각장애인이 1만 3,604명, 청각장애인이 1만 3,286명, 뇌병변 장애가 1만 2,687명 순이었음.

- 장애인수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의 증가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유형별 전문화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총량이 증대되어야 함을 의미함.

○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 미흡

-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사회전반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설립되어야 함.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부족 및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의 미비

- 복지욕구 조사결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겪는 어려움은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이 3.4점, 취업의 어려움이 3.3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고용지원 서비스가 23.5%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14.9%, 재활훈련 12.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10.5%로 장애인들은 고용에 대한 서비스를 가장 원하고 있음.

○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유형, 접근성을 고려한 장애인복지시설 부족

- 복지욕구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의 인지도와 이용경험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절대적인 이용경험은 각각 17.2%, 20.7%로 낮음. 그러나 향후 이용의향은 장애인 복지관이 4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종합사회복지관이 35.3%로 나타났음.
-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으로는 정보제공의 부족이 22.4%, 시설의 낙후로 인한 불편함도 21.2%임.
-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이용경험, 인지도가 가장 높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한 증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강화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폭넓게 시행하여 이용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
-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재활지원, 거주환경 조성
- 인천의 1급 장애인은 2013년 기준 10,701명, 2급 장애인은 17,151명, 3급은 22,975명으로 중증장애인의 규모는 1,2급은 27,852명이며, 1,2,3급을 합산하면 50,827명에 이르고 있음.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확대가 요구됨

②공급분석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 실시

-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63%에서 70%로 상향되었고, 기초급여액은 202,600원으로 인상하였음.
- 장애인 아동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장애인 의료비 및 교육비 지원,

장애등록 진단비용 및 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재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지원 및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생활편의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재활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으며, 2014년 기준 3,759명에게 지원되었음. 장애인 재활치료의 세부사업으로는 장애아동 대상 언어, 청력 등 재활서비스, 시청각언어장애인부모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 수중재활치료 및 재활승마치료 지원 등이 포함됨.
-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및 경제부담 완화를 통한 건강가정을 육성하고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및 부모심리상담 서비스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 장애인의 자립, 사회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으로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만 6세~64세, 1급 -2급 장애인 대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됨. 인천에는 현재 48개소의 제공기관이 운영 되고 있음.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으로 자립생활센터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중증장애인 체험홈, 자립주택 운영, 탈시설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2014년 26명 지원,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사업은 2014년 237명 실시하였음.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 장애인 복지시설은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이 72개소에 1,022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지체 장애인이 705명으로 대부분임. 장애인 이용시설은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32개소, 직업재활시설이 28개소, 장애인복지관은 8개소로 총 6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③수요 - 공급 격차분석 및 대응방안

○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및 서비스 발굴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사회적 대처와 권익보장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 설치가 필요함.
- 장애인 이동권을 고려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확대되어야 하고, 장애인 이동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발굴되어야 함.

○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

- 장애인 고용체험 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 강화 등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지속적 장애인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고용이 더욱 증대되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이 발굴되어야 함.

○ 장애인 욕구 맞춤형 장애인복지시설 증설 및 운영확대

- 장애인들의 이용욕구가 가장 높은 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고,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을 신축해야 함.
- 특히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설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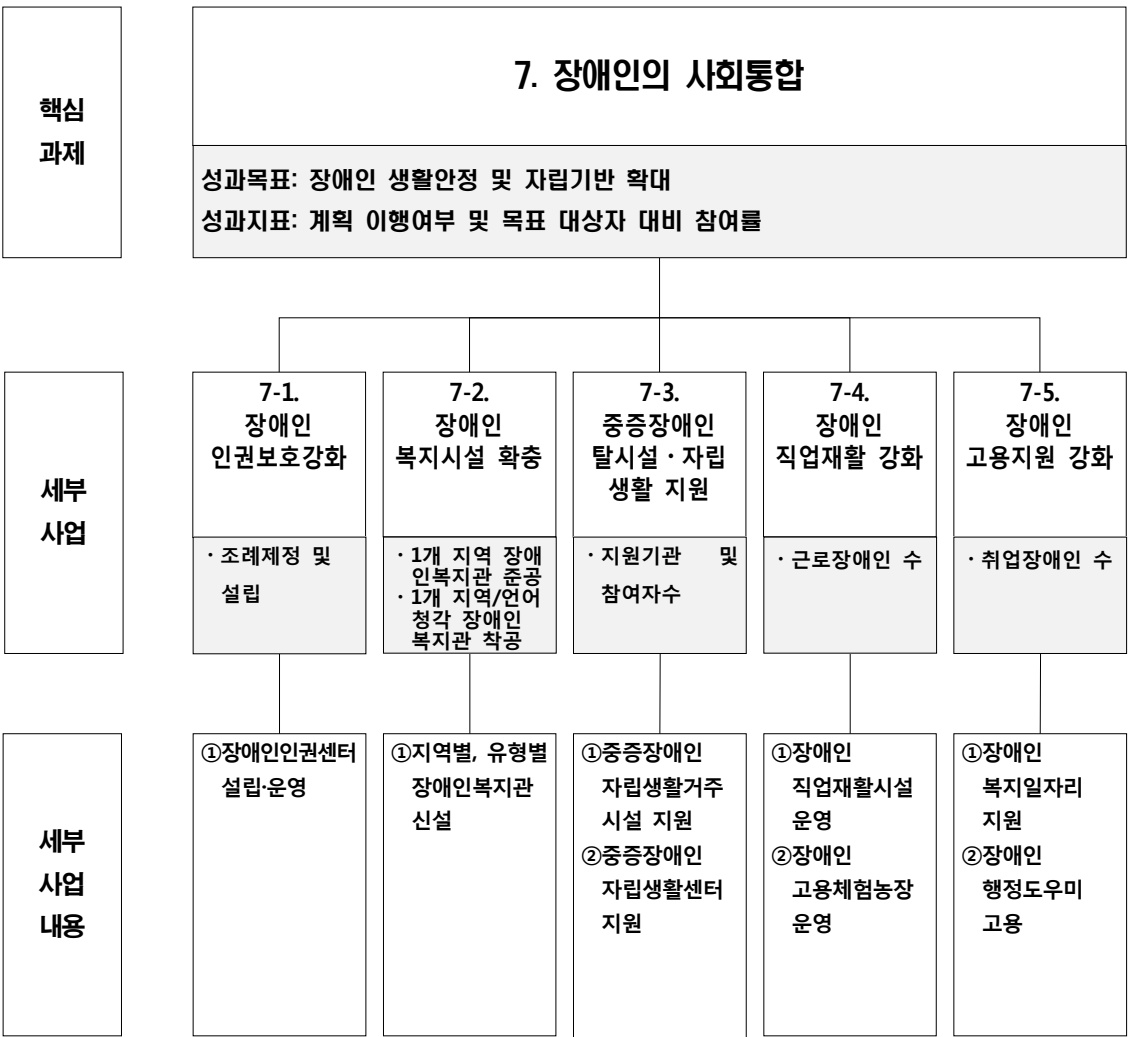
지역별 시설 설치가 이루어져야함.

○ 장애인 자립 및 사회참여활동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 거주시설과 유형별 시설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장애인 탈시설 욕구를 충족할 적극적 대안이 요구 되고 있음.
- 그 중 장애인 유형별 중증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함.

(3) 핵심과제 내용 및 추진 방향

①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도식



② 세부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예산	-	-	500	350
			성과지표 (인권센터 설립·운영)	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조례제정 등 설립준비	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예산	4,937	1,000	5,000 (기부채납)	3,500
			성과지표 (신규 장애인복지관 건)	1개소	-	1개소	1개소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거주시설 지원	예산	147	156	161	166	
		성과지표 (입소자 수, 초기정착금 지원자 수)	입주자 25명, 초기정착금 지원 5명	입주자 25명, 초기정착금 지원 5명	입주자 25명, 초기정착금 지원 5명	입주자 25명, 초기정착금 지원 5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 터 지원	예산	920	1,000	1,080	1,080	
		성과지표 (지원기관 수, 이용자 수)	8개 센터, 10,000명	9개 센터, 11,000명	10개 센터, 12,000명	10개 센터, 13,000명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시 설 지원	예산	4,655	6,222	6,322	6,522	
		성과지표 (근로장애인 수)	817명	850명	900명	910명	
	장애인 고용체험농 장 운영	예산	70	80	80	80	
		성과지표 (체험자 수)	30명	30명	30명	30명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예산액	788	1,002	1,022	1,024	
		성과지표 (참여 인원 수)	251명	254명	261명	265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고용	예산액	3,580	4,088	4,100	4,120	
		성과지표 (참여 인원 수)	225명	226명	229명	230명	

2)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7-1.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밝혀지고,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인권보호 전문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목적

-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구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장애인 인권 증진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등록 장애인과 그 가족, 일반 시민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구제활동, 교육사업
 - 장애인인식개선사업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예산	-	-	500	350
	주요내용	타당성 검토	조례제정 및 설립준비	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운영
	성과지표 (인권센터 설립·운영)	-	-	1개소 설치 및 운영	1개소 운영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평가	운영 결과 평가	연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 및 타 시도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을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운영방안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출함.

세부과제 7-2.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모든 군구가 지역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특정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임.
- 장애인복지관이 종합복지관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이용이 쉽지 않아서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서비스가 가능한 장애인복지관 필요한 상황임.

○ 사업목적

-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역별 및 장애유형별로 확충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사업구분 : 공약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지역사업(v)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v)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확대	신축 장애인복지관 수

○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동구 및 계양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 인천광역시차원의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인천 서구 왕길동)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20%, 군·구비 45%, 기타(민간 기부채납) 35%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예산	4,937	1,000	5,000 (기부채납)	3,500
	주요내용	동구 장애인복지관 착공	동구 장애인복지관 개관, 운영	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 착공	계양 장애인복지관 착공
	성과지표 (신규 장애인복지관 건)	1개소	-	1개소	1개소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평가	결과 평가	연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장애인복지관 확충 사업은 3~4년의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며, 예산금액의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변경사항이 많아 연차별 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7-3.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었음.
-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 가족에게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및 초기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탈시설 장애인뿐만 아니라 재가거주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의 참여와 훈련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할 경우 일정기간 자립생활의 최초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제공 및 체험기회 부여와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생활초기정착금을 지원하여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함.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을 지원함.

○ 사업구분 : 공약사업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거주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능력 향상	입주자 수, 초기정착금 지원 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증대	지원개소 수, 이용자 수

○ 사업 내용

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거주시설 지원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16조, 제17조
- 사업대상 :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중증장애인
- 사업시기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시설확보 : 자립체험홈, 자립주택 등 주거공간
- 지원 : 입주자를 위한 운영비 및 초기비품 구입비, 초기정착금 지원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13조
- 사업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 사업내용에 따라 1급, 2급 중증장애인 우선
- 사업시기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기본사업 :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 선택사업 :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서비스, 이동서비스, 보조기구(관리, 수리, 임대), 기타
 - 특화사업 : 사례관리,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 재원조달(매칭) : 국고보조 및 시 자체 지원
 - 중앙정부 지정 센터 : 국비 40%, 시비 60%, 군·구비 0%
 - 시 지정 센터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거주시설 지원	예산	147	156	161	166
		주요내용	거주공간 운영비, 초기정착금지 원	거주공간 운영비, 초기정착금지 원	거주공간 운영비, 초기정착금지 원	거주공간 운영비, 초기정착금지 원
		성과지표 (입소자 수, 초기정착금 지원자 수)	입주자 25명, 초기정착금 지원 5명	입주자 25명, 초기정착금 지원 5명	입주자 25명, 초기정착금 지원 5명	입주자 25명, 초기정착금 지원 5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지원	예산	920	1,000	1,080	1,080
		주요내용	8개 센터 운영비지원	9개 센터 운영비지원	10개 센터 운영비지원	10개 센터 운영비지원
		성과지표 (지원기관 수 이용자 수)	8개 센터, 10,000명	9개 센터, 11,000명	10개 센터, 12,000명	10개 센터, 13,00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거주시설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여부	전화 및 설문지	1회	10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센터 사업시행관리	전화 및 설문지	사업실시 개수와 동일	사업종료시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시·군·구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평가에 대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된 후 센터 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세부과제 7-4.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맞는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의 프로그램 통해 직업의식과 직업능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하나의 단계로서 고용경험을 체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회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함.
- 장애인의 근로농업을 통하여 장애인이 고용체험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고취시키고 농장운영에 따른 일정한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함.

○ 사업구분 : 공약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	지역사업(v)	보편사업()
	지속사업(v)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수 증대	근로장애인 수
장애인 고용체험농장 운영	농장의 안정적 운영 지원	체험자수

○ 사업 내용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81조(비용 보조)
- 사업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8개소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지원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시설 제반서비스 제공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② 장애인 고용체험농장 운영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81조(비용보조)

- 사업대상 : 농장종사자 및 농장 이용 장애인 약 40명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직업훈련 : 직업인식, 재배기술, 판매훈련, 취업훈련
 - 작업활동 : 파종 및 관리, 수확
 - 상담 및 평가 :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례회의
 - 판매촉진 : 판매망확보, 판매활동, 체험활동
 - 연구개발 : 정보수집, 팀 역량 개발, 전문교육, 심성개발,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지원	예산	4,655	6,222	6,322	6,522
		주요내용	장애인직업재 활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직업재 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직업재 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직업재 활시설 운영비
		성과지표 (근로장애인 수)	817명	850명	900명	910명
	장애인 고용체험 농장 운영	예산	70	80	80	80
		주요내용	장애인농장체 험	장애인농장체 험	장애인농장체 험	장애인농장체 험
		성과지표 (체험자 수)	30명	30명	30명	3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내부평가	결과평가	연 1회	연말
	자체지도점검	점검	연 2회	상, 하반기
장애인 고용체험농장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여부	전화 및 설문지	2회	5월, 10월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규 사업장 확장이 필요함.
-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이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7-5.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 제공, 소득지원 및 고용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장애인들의 경우 고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보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나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등과 같이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소득획득 기회와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유도하고자 함.

○ 사업구분 :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지역사업()	보편사업(v)
	지속사업(v)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참여인원 수

○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사업대상 :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 및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 사업시기 : 2015 ~ 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및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지속적인 참여 인원 확대 추진
 -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서 교육청과 연계된 특수교육-복지연계사업 지속 추진
 -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서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지속 추진
- 재원조달(매칭) : 국비 50 %, 시비 50 %,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예산액	788	1,002	1,022	1,024
		주요내용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지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지원
		성과지표 (참여인원 수)	참여인원수 (251명) 일자리 : 174명 특수교육 : 27명 안마사파견50명	참여인원수 (254명) 일자리 : 175명 특수교육 : 28명 안마사파견51명	참여인원수 (261명) 일자리 : 178명 특수교육 : 30명 안마사파견53명	참여인원수 (265명) 일자리 : 180명 특수교육 : 31명 안마사파견54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예산액	3,580	4,088	4,100	4,120
		주요내용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지원
		성과지표 (참여인원 수)	참여인원수 (225명) 행정도우미:2 00명 요양보호사 보조:25명	참여인원수 (226명) 행정도우미:2 01명 요양보호사 보조:25명	참여인원수 (229명) 행정도우미:2 03명 요양보호사 보조:26명	참여인원수 (230명) 행정도우미:2 03명 요양보호사 보조:27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평가	결과평가	연 1회	연말
자체지도점검	점검	연 2회	상, 하반기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사업은 장애인 특수교육형-복지연계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확대가 필요함.

8. 핵심과제 8. 여성의 사회적 · 경제적 권리 실현

1)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

-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 개정되어, 2015. 7. 1. 「양성평등기본법」시행됨.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개정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명시함.
-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인천시의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과 함께, 그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함. 또한, 양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양성이 함께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이를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 전국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2%, 남성은 73.2%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고, 인천시의 경우에도 여성 52.3%, 남성 75.3%로 각각 나타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 기준)
- 고용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는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제공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 아동과 여성의 안전 강화

-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은 안전 문제에 취약함. 실제로 아동과 여성은 폭력, 성폭력,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피해 현황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아동과 여성의 안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집, 학교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저소득 한부모 지원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할 필요 있음.
- 전국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수는 2010년 107,775 가구에서 2014년 142,069 가구로 큰 폭으로 증가함.
- 이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정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사업 통합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권역별 미

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 구조지원,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등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향후 한부모가족 증가에 따른 지원 정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현황 및 대응방안

① 수요 분석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추진 체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양성평등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 필요함. 현재 인천시 및 군구의 경우, ‘여성발전기본조례’, ‘양성평등기본조례’,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등을 통해 양성평등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 인천시 및 군구에서는 관련 조례에 기반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2012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인천시 및 군구에서는 사업, 법률,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도 교육 등도 확대 실시하고 있음.
- 향후,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한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이 확대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정책적 기반 마련 필요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 통계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2014. 12 기준 남성은 73.2%, 여성은 51.2%로 성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음
- 통계청의 2013년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의하면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시 여성의 임금근로자 481천명 중 임시·일용직이 250천명으로 51.9%를 차지함. 반면, 남성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 631천명 중 상용 근로자가 441천명(70%), 임시·일용직은 190천명(30%)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가정 일이 관계없이 취업해야 한다’는 응답이 2013년 기준 여성 51.0%, 남성은 49.5%로 각각 나타나, 높은 취업 욕구를 알 수 있음.
- 여성의 취업 욕구는 높은 반면, 일자리의 질이 낮고, 일·가정 양립 등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여성의 경제적 권리의 핵심 영역임.

○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필요성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불안하다’는 응답 비율이 여성의 경우 68.5%, 남성의 경우 54.3%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통계청, 2013 사회조사). 야간 보행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우 15.3%가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남성은 3.1%만이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2013 인천 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 2014년 인천 성 인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인천시의 성폭력 발생 건수는 1,381건으로 서울 6,062건, 부산 1,527건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대구 1,091건, 광주 1,005건, 대전 600건, 울산 417건).
- 아동과 여성의 안전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과 맞물려 있으며, 기본적인 ‘삶의 질’의 추구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확대가 필요함.

○ 저소득 한부모 지원 필요성

- 인천시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가구 수는 8,961가구, 가구원수는 22,874명으로 나타남.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는 5,412가구, 가구원은 14,193명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합하면 총 14,373가구, 가구원은 37,167명으로 나타남.
-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가구 수와 가구원 수는 2009년 1만 2,022가구, 3만 1,471명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2012년에 1만 4,373가구, 3만 7,06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한부모가족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 필요함.

② 공급분석

○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성 주류화 정책 추진 확대

- 인천시 및 군·구에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정책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인지 예산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성 인지 정책 수립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인지 예산 컨설팅 지원, 공무원 성 인지 교육 등의 지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천시 및 군구의 여성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

○ 인천여성 취업 관련 기관의 헤드쿼터 필요

- 인천시의 여성취업지원 관련 기관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곳, 여성사회교육기관 7곳, 그리고 인천여성취업센터와 인천 JST 일자리 종합센터 등임.
- 이들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통해 취업관련 교육, 일자리 연계, 일자리 발굴 등 여성취업 지원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아동과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필요

- 인천시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2010년 제정하였고, 이후 지역 연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여성폭력 예방강사 교육, 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토론회, 초등학교 성 인지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안전허브마을 조성,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 필요

- 모자보호시설은 1개(생활인원 68명), 여성복지시설 중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은 총 9개이며, 총 27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음.
- 인천시는 위 시설의 운영 관련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건강 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③ 수요·공급 격차분석 및 대응방안

○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성 주류화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대부분의 군·구에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계양구와 강화군의 경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 정책 관련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시하여 양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타 각종 위원회에 양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 있음

○ 인천여성 취업 관련 기관의 헤드쿼터 마련

- 인천지역의 여성취업 관련 기관을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필요. 현재 인천시에 서는 인천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본부(가칭)를 운영할 계획임.
- 본 본부와 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여성취업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동과 여성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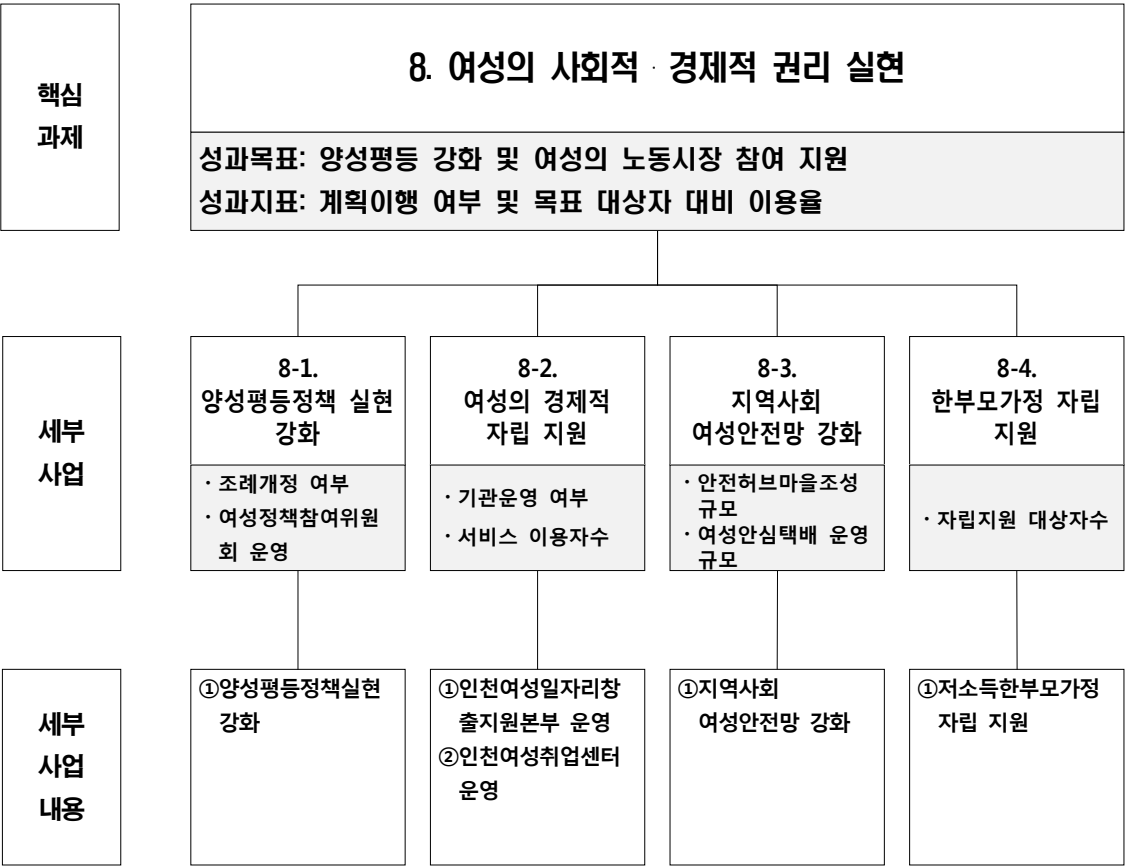
-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안전허브마을 조성, 아동안전지도 제작,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활성화 및 취약지역 현장조사 및 안전진단 등의 지역안전 프로그램 운영, 안전 허브마을 조성 확대 등이 필요함.

○ 다양한 한부모의 욕구를 고려한 지원 정책 마련

- 한부모 가족의 유형이 한부모(모자, 부자),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 한부모 등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복지 욕구에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욕구의 차이를 고려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할 필요 있음

(3) 핵심과제 내용 및 추진방향

①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도식



② 세부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양성평등정책 실현 강화		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성과지표 (구성·운영)	조례 개정	위원 25명으로 증원, 분과위원회 5개로 증가	연2회 운영	연2회 운영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인천여성 일자리창출 지원본부 구성·운영	예산	-	270	300	330
		성과지표 (구성 및 운영)	구성	1개소 운영	1개소 운영	1개소 운영
	인천여성 취업센터 운영	예산	180	180	180	180
		성과지표 (취업알선자 수)	1,300명	1,300명	1,400명	1,500명
지역사회 여성안전망 강화		예산	70	200	230	260
		성과지표 (허브마을안심택배 수)	허브마을 2개소, 안심택배 20개소	허브마을 3개소, 안심택배 40개소	허브마을 4개소, 안심택배 60개소	허브마을 5개소, 안심택배 100개소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예산액	12,623	13,001	13,391	13,792
		성과지표 (지원 한부모가정 인원)	39,394명	40,500명	41,000명	43,000명

2)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8-1. 양성평등정책 실현 강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 개정되어, 2015. 7. 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됨.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함
-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지역복지와 여성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양성이 함께 참여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성 인지 관점에서 양성이 평등한 정책이 추진되고 그 혜택이 사회 전반적으로 고루 분배되어야 함.

○ 사업목적

- 효과적인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정책실현을 강화함.
- 여성정책참여위원회 설치·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적 능력향상 및 시정참여 지원을 확대함.

○ 사업구분 : 공약사업

양성평등정책 실현 강화	지역사업(v)	보편사업()
	지속사업(v)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양성평등정책참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명칭변경 및 기능 확대(위원 수, 분과위원회 수 확대) ·위원회 개최 건수

사업 내용(활동)

- 관련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 사업시기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여성발전위원회 명칭 변경 및 기능과 역할 확대
 - 체계적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강화
- 재원조달 : 비예산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양성평등정책 실현 강화	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주요내용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제정	위원회 명칭변경 및 기능 확대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성과지표 (구성·운영)	조례 개정	위원 25명으로 증원, 분과위원회 5개로 증가	연2회 운영	연2회 운영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평가	결과평가	연 2회	상·하반기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민·관·연 거버넌스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인천시 소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초과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조례개정을 통해 여성발전위원회 재구성 시 위원 수 및 분과위원회 수의 조정이 필요함.

세부과제 8-2.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여성취업·창업문제를 담당할 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여성일자리 조사·연구,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수적임.
- 또한, 경력단절 구직여성에 대한 취업상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시스템 구축함.

○ 사업목적

-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본부로서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를 구성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취업관련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참여율 제고를 유도함.
- 또한, 인천여성취업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운영을 지원하여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유도함.

○ 사업구분 : 공약사업 포함*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인천여성 일자리창출지원본부 구성·운영은 공약사업임.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인천여성 일자리창출지원본부 구성·운영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 구성	인천여성일자리창출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인천여성 취업센터 운영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취업알선 건수

○ 사업 내용

① 인천여성 일자리창출지원본부 구성·운영

- 사업대상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관련근거 : 민선6기 공약사항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인천여성일자리창출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 여성일자리 조사 및 연구
 -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여성취업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재원조달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② 인천여성 취업센터 운영

- 관련근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구직여성과 구인기업과의 취업매칭 및 중소기업 빈 일터 발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 찾아가는 취업상담사 운영
 - 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 재원조달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인천여성 일자리창출 지원본부 구성·운영	예산	-	270	300	330
		주요내용	본부 구성	본부 운영	본부 운영	본부 운영
		성과지표 (구성 및 운영)	구성	1개소 운영	1개소 운영	1개소 운영
	인천여성 취업센터 운영	예산	180	180	180	180
		주요내용	취업알선 및 새일센터 운영지원	취업알선 및 새일센터 운영지원	취업알선 및 새일센터 운영지원	새일센터 운영지원
		성과지표 (취업알선자 수)	1,300명	1,300명	1,400명	1,50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지도·점검	센터 지도·점검	연 1회	연중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강화와 여성 일자리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여성 일자리창출지원본부 구성·운영 계획(2015년 수립)에 따라 2016년 이후 사업내용 및 성과지표를 구체화할 수 있음.
- 인천여성취업센터의 효과적이며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부과제 8-3. 지역사회 여성안전망 강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최근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의 급격한 증가와 성폭행·강도사건의 증가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여성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여성안전망 구축은 마을단위의 주민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사회 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목적

- 골목지킴이, 마을순찰사업, 폭력예방 캠페인 등 마을단위로 지역사회 내에서 민·관 협력에 의한 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
-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택배수령과 관련하여,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택배기사의 직접 방문 없이 물품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구축으로 택배관련 범죄로부터 여성·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구분 : 공약사업*

지역사회 여성안전망 강화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안전허브마을조성 및 여성안심무인택배 설치는 공약사업임.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안전허브마을 2개소	안전허브마을 조성 개소 수
여성안심무인택배 100개소	무인택배서비스 제공 개소 수

○ 사업 내용

- 관련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사업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아동·여성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마을별 실정에 적합한 환경개선으로 안전 환경 조성
 - 학교, 지구대, 복지관, 이웃과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내 안전망 구축
 - 골목지킴이, 마을순찰사업, 폭력예방 캠페인 등 주민참여 활동지원
 - 싱글여성 거주 지역 및 주민 접근성 높은 장소 선정하여 무인택배함 설치

- 재원조달(매칭) : 시비 10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지역사회 여성안전망 강화	예산	70	200	230	260
	주요내용	안전허브 마을 조성,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안전허브 마을 조성,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안전허브 마을 조성,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안전허브 마을 조성,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운영
	성과지표 (허브마을·안심택배 수)	안심허브 마을 2개소, 안심택배 20개소	안심허브 마을 3개소, 안심택배 40개소	안심허브 마을 4개소, 안심택배 60개소	안심허브 마을 5개소, 안심택배 100개소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평가	결과 평가	연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지역사회 여성안전망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안전허브마을간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내 전반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참여활동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세부과제 8-4.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배우자의 사망, 이혼, 또는 조손가정의 증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한부모가정의 경우 생계유지와 자녀교육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임.
- 저소득한부모가족이 자립하여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사업목적

- 생계유지 및 교육관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자녀교육 및 자립을 유도함.

○ 사업구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원세대 3% 향상	지원명수

○ 사업 내용(활동)

- 관련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사업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만 12세미만 자녀에게 월10만원 자녀양육비등 지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분기 4만원 초등학생 학용품비지원
 - 분기 9만원 중·고교생 학습비 지원
 - 분기 4만원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 년 20만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10개소에 기능보강, 입소자상담치료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9개소 지원
- 위기가족지원사업(중구,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
- 재원조달(매칭)
 - 자녀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국비 80%, 시비 20%, 군·구비 0%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국비 0%, 시비 20%, 군·구비 0%, 기타(교육청) 80%
 - 초등학생 학용품비, 중·고교생 학습비·교통비·교복비, 한부모가족지원센터지원 : 국비 0%, 시비 50%, 군·구비 50%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국비 00%, 시비 100%, 군·구비 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기능보강, 입소자상담치료비), 위기가족지원사업, 권역별미혼모부자지원사업 : 국비 50%, 시비 5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예산액	12,623	13,001	13,391	13,792
	주요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성과지표 (지원 한부모가정 인원)	39,394명	40,500명	41,000명	43,000명

(2) 사업모니터링 계획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지원대상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저소득한부모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함.

9. 핵심과제 9. 동고동락하는 다양한 사회

1)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확대 전망

- 2000년대 전후로 급증하던 국제결혼은 최근 약간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0여년 동안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의 수는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07년 4,927명이던 결혼이민자(한국국적 미취득)는 2014년 8,79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혼인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또한 같은 기간 2,562명에서 5,770명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행정자치부, 2014). 뿐만 아니라 기존 결혼이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결혼 후 출산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문화가족의 인구가 증가하고 구성원의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었던 정책 또한 자녀, 배우자 및 그 가족,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착기간이 늘어남으로써 기존의 원활한 조기정착 지원이외의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정책적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음.

○ 사회통합 지원체계의 한계 노정

- 급격히 증가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8.6.), 「다문화가족지원법」(2008.9.) 등 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대책을 수립하였음.
- 이러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의 기능 향상과 사회통합을 이루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에서 이방인이라는 스티그마(stigma)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의식과 역할이 주어져야 하나, 현재는 여러 방면에서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임.

(2) 현황 및 대응방안

① 수요분석

○ 정책적 수혜자가 아닌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우리사회에 정착해감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사회적, 경제적 자원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다문화가족은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한 편임. 2013년에 실

시한 “인천시 가족실태 및 수요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4.4%는 ‘사회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참여한 경험은 45.3%에 그쳤음), 동일 조사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 인천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54.7%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꼽기도 했음.

- 이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 의식 증진 및 지역 연대,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정책 대상 및 수요의 다변화

- 자녀가 학령기로 접어드는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14. 4. 기준 인천시의 총 3,003명의 다문화 학생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238명으로 전체 7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생 527명(17.6%), 고등학생은 238명으로 7.9%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음(교육부, 2014). 다문화가족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습과 청소년기의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또한 최근에는 중도입국 자녀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2014. 4. 현재 인천시에는 총 349명의 중도입국 학생이 있음). 이들은 상이한 언어와 문화 등으로 학교교과과정 및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동반되어야 함.

○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다문화가족 해체

- 이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2년 인천시 총 이혼 9,840건 중 외국인과의 이혼은 63건으로 0.6%의 비중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그 비율이 11.0%로 증가하였음(7,401건의 인천시 총 이혼 건 수 중 외국인과의 이혼은 814건). 이는 17개 시도 중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준임(통계청, 2014, 인구동태통계연보).
- 2013년 “인천시 가족실태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부부싸움을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7.9%나 되었으며, 이 중 18.3%는 ‘부부싸움 중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기도 함. 부부싸움의 이유로는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36.7%, 1순위 선택) 과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46.7%, 1+2순위)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음.
- 다문화가족은 성역할 의식의 차이, 상이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 큰 폭의 연령차 등 더 많은 갈등 요인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관심 및 적절한 지원이 요구됨

② 공급분석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인천시 10개 군구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9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서비스 지원 기반을 잘 마련되어 있음. 현재 옹진군만 미설치되어 있으나 옹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지원되고 있는 상태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첫째, 가족을 대상으로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운영

- 둘째, 양성평등 향상을 위하여 배우자부부교육 실시
- 셋째, 인권분야로는 다문화 이해에 관한 교육 운영
- 넷째, 사회통합 방안으로 취업지원 및 자조모임 지원
- 다섯째,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실시
- 여섯째, 홍보 및 자원연계 활동 실시
- 이러한 기본사업 외에도 특성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언어발달 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③ 수요-공급 격차분석 및 대응방안

○ 다문화가족 문제 해소 및 진정한 사회통합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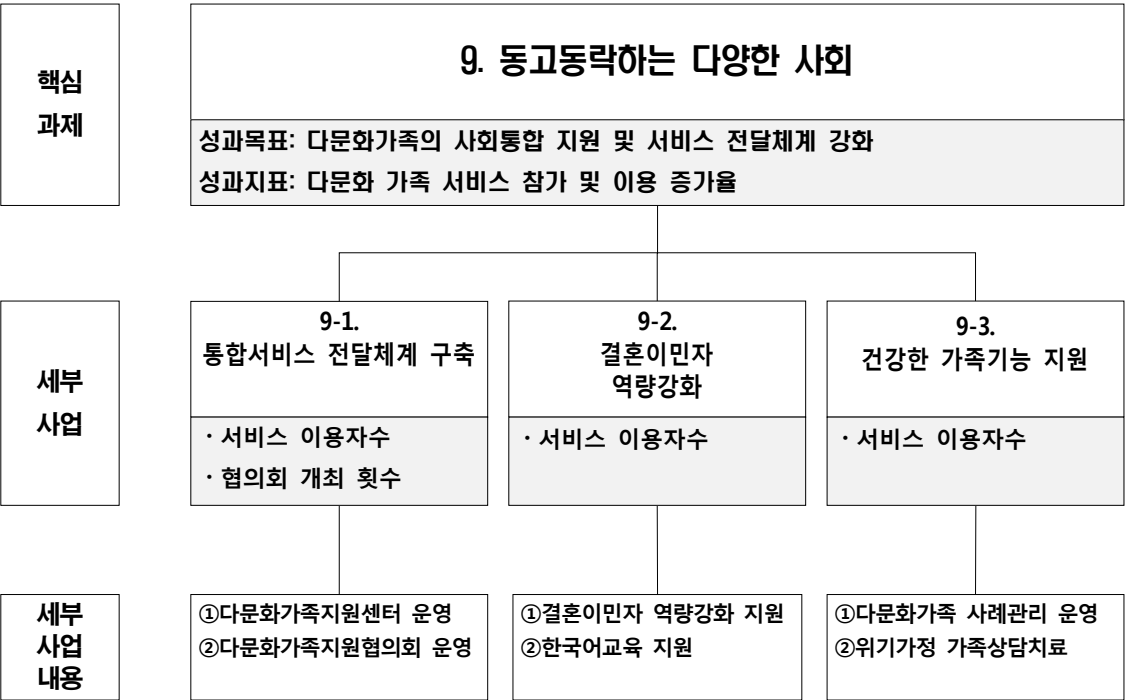
- 사회통합 및 정착을 위한 기본 전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정책은 조기정착에 필요한 기초 한국어 교육에만 역점을 두고 지원되었음. 이에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심화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또한 다문화가족의 높은 취업 욕구를 반영한 자립 지원 정책이 요구되며, 단기 성과보다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시각으로 추진함.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 학업성취의 미달 문제, 중도입국 자녀 지원, 위기 가정 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정주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등장하는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활용 및 프로그램 강화

- 인천시 10개 군구 중 9개 기초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반 형성은 다문화가족의 인프라 접근 차원에서도 큰 장점을 지니고 있음.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거점다문화가족지원센터-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연계성으로 정책적 효율성도 높은 수준임.
-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3) 핵심과제 내용 및 추진방향

①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도식



② 세부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예산액	3,585	3,585	3,585	3,585
		성과지표 (센터 연 이용자)	135,000명	135,500명	136,000명	136,500명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예산액	2	2	2	2
		성과지표 (개최 횟수)	2	2	2	2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결혼이민자 학력신장 사업	예산액	22	25	30	30
		성과지표 (지원 규모)	50명	50명	60명	60명
	한국어 교육 지원	예산액	224	208	198	188
		성과지표 (지원 규모)	1,550	1,550	1,550	1,550
건강한 가족기능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운영	예산액	85	85	85	85
		성과지표 (지원 규모)	75	75	75	75
	위기가정 가족상담 치료	예산액	35	40	40	40
		성과지표 (지원 규모)	30가정	35가정	35가정	35가정

2) 세부과제 계획

세부과제 9-1.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결혼하는 10쌍 중 1쌍은 국제결혼으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하나의 가족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부부간 연령차, 다른 문화, 언어, 생활방식 등으로 야기되는 갈등은 여전하며, 최근에는 가정 내 폭력, 자녀양육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가족 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만한 가족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자녀·가족 교육, 상담, 통번역서비스, 역량강화 지원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함.
- 지역 내 민·관 협력기구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단위 서비스 접근성 및 수준 제고

○ 사업구분

다문화가족 통합적 지원서비스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인원의 확대	이용 연인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	개최 횟수

○ 사업 내용(활동)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자녀 등 다문화가족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교육(가족성평등인권사회통합), 상담, 자녀언어발달지원, 통번역 등 : 군·구 센터 9개소
 - 다문화가족 한국어 기초교육 : 군·구 센터 9개소, 옹진군 북도면·영흥면(직영)
- 재원조달(매칭) :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②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6조
- 사업대상 : 전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개최 및 운영(연2회)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점검 및 평가,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예산액	3,585	3,585	3,585	3,585
		주요내용	정착지원 서비스	정착지원 서비스	정착지원 서비스	정착지원 서비스
		성과지표 (센터연이용자)	135,000명	135,500명	136,000명	136,500명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예산액	2	2	2	2
		주요내용	민관협력을 통한 협의·조정	민관협력을 통한 협의·조정	민관협력을 통한 협의·조정	민관협력을 통한 협의·조정
		성과지표 (개최 횟수)	2	2	2	2

(2) 사업모니터링 계획

사업	구분	방법	횟수	시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연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연말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정기적인 사업 실적 모니터링, 일선기관 담당자와의 소통 등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함.
- 다문화가족의 우리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이외에 장기거주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발굴이 필요함.
- 지역사회와의 민관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및 기관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

세부과제 9-2.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국제결혼의 증가는 다문화가족이 정책대상이 된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 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 등 새로운 수요가 등장함.
-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 높음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의 자녀양육과 학습지도에 대한 어려움은 교육격차와 교육 빈곤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어 사용능력과 기초학력 강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및 기초 학습능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과 사회참여 및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게 함.

○ 사업구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국내 인증학력 취득	사업 참여인원 수
한국어 활용능력 강화	사업 참여인원 수

○ 사업 내용(활동)

① 다문화가족 학력신장사업

-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학력신장(검정고시) 사업 지원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② 한국어 교육지원

-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초기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기초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를 위한 특화된 한국어 심화교육 지원(지역특화사업)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한국어 심화교육은 전액시비 사업으로 규모를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센터 한국어교육 사업으로 연계할 계획임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결혼이민자 학력신장 사업	예산액	22	25	30	30
		주요내용	검정고시교 육지원	검정고시교 육지원	검정고시교 육지원	검정고시교 육지원
		성과지표 (지원 규모)	50명	55명	60명	60명
	한국어 교육 지원	예산액	224	208	198	188
		주요내용	한국어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지원
		성과지표 (지원 규모)	1,550	1,550	1,550	1,550

(2) 사업모니터링 계획

사업	구분	방법	횟수	시기
결혼이민자 학력신장사업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결과 보고시
	내부 점검	운영실태 점검	연 1회	3/4분기
	사업수행기관	참가자 만족도 조사	연 1회	사업 종료시
한국어교육지원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결과 보고시
	내부 점검	운영실태 점검	연 1회	3/4분기
	사업수행기관	참가자 만족도 조사	연 1회	사업 종료시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한국어 교육을 기초로 학력신장 검정고시 응시 등 단계별 역량강화 사업에 참가한 수료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향후 결혼이민자를 선도할 리더그룹으로 양성

세부과제 9-3. 건강한 가족기능 지원

(1) 세부사업 계획

○ 추진 배경

- 국제결혼 증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다문화가족의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위기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사업목적

-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 능력, 가정환경, 역량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가족갈등 문제 해결 및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 위기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상담 및 심층적 가족치료 개입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구분

건강한 가족기능 지원	지역사업(√)	보편사업(√)
	지속사업(√)	신규사업()

○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운영	사례관리사별 25가구
위기가정 가족상담치료	참여가정 수

○ 사업 내용(활동)

①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운영

-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2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 복합적 문제를 가진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대상 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욕구 사정, 정보제공, 상담, 자원연계 등)
- 재원조달(매칭) :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② 위기가정 가족상담 치료

- 관련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제5조, 제7조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다문화가족
- 사업기간 : 2015~2018년(연중 지속사업)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위기가정 가족치료
- 재원조달(매칭) : 국비 0%, 시비 100%, 군구비 0%

○ 단계별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구분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건강한 가족기능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운영	예산액	85	85	85	85
		주요내용	대상자 발굴, 관리	대상자 발굴, 관리	대상자 발굴, 관리	대상자 발굴, 관리
		성과지표 (지원 규모)	75	75	75	75
	위기가정 가족상담 치료	예산액	35	40	40	40
		주요내용	가족상담· 치료	가족상담· 치료	가족상담· 치료	가족상담· 치료
		성과지표 (지원 규모)	30가정	35가정	35가정	35가정

(2) 사업모니터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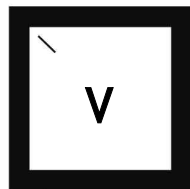
	구 분	방법	횟수	시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운영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연말
위기가정 가족상담 치료	내부 평가	결과 평가	연 1회	결과 보고시
	내부 점검	운영실태 점검	연 1회	3/4분기
	사업수행기관	사전/사후 조사 향상도	연 1회	사업 종료시

(3) 사업의 권고조정 내용

핵심과제	세부사업명	변경내용	사유
해당 사항 없음			

(4) 향후 고려사항

-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종결 가구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 가족치료 종결 후 사후관리 실시 및 재발 가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기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



V.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원계획

1.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 분석
2.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
3. 군·구 핵심과제 지원 계획

V.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원계획

1.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 분석

- 인천시 군·구의 복지계획 수립 과정의 점검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참여주체 평가와 절차평가에 대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 통합성, 참여성, 협력성을 기준으로 평가함.
 - 통합성은 각 자치구의 수립과정에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분석·평가와 상위계획을 비롯한 관련 연계성과 일관성을 분석함.
 - 참여성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서비스 공급자,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여부와 정도를 분석함.
 - 협력성은 핵심과제와 세부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민·관의 협력정도, 민간복지 자원과 지역복지자원 활용정도를 분석함.

1) 군·구 계획수립 과정의 참여주체 평가

-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축으로 TF와의 지역사회복지육구 조사 설문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설문지(안)작성을 협력하였음.
 - 중구는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선정, 사업별 세부계획에 TF팀이 참여하여 협력하였음.
 - 담당부서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사이에서 협력으로 사업가능성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였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민관 파트너십에 입각한 협력과 전문가 참여를 통한 계획으로 참여와 협력을 이루었음.

〈표 5-1〉 중구의 참여주체 평가

계획 수립 과정	참여주체					
	관련부서	지방의회	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1. 지역사회복지 조사	○		○	○	○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작성	○		○		○	
3.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선정	○		○		○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결정	○		○		○	
5. 핵심과제별 기획	○		○		○	
5. 지역사회 의견 수렴	○		○	○	○	
7. 계획 심의	○	○	○		○	
8. 지방의회 보고	○	○				
9. 최종 결정 및 제출	○	○				

○ 동구

- 동구지역복지를 위해 지역사회복지계획실무협의체 및 대표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루었음.
- 전략목표와 핵심과제 선정,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하는데 협의체와 복지부서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였음.
- 계획수립에서 주민참여, 기존사업 분석, 욕구조사 등에서 제시된 주민 욕구나 의견 반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이루었음.

〈표 5-2〉 동구의 참여주체 평가

계획 수립 과정	참여주체					
	관련부서	지방의회	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1. 지역사회복지 조사	○		○	○	○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작성	○		○		○	
3.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선정	○		○		○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결정	○		○		○	
5. 핵심과제별 기획	○		○	○	○	
6. 지역사회 의견 수렴	○		○	○	○	
7. 계획 심의	○		○		○	
8. 지방의회 보고	○					
9. 최종 결정 및 제출	○					

○ 남구

- 중앙정부 및 인천시, 남구 발전계획, 업무계획, 사회복지계획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에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주민과 지역복지사업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협력을 이루었음.

〈표 5-3〉 남구의 참여주체 평가

계획 수립 과정	참여주체					
	관련부서	지방의회	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1. 지역사회복지 조사	○		○	○	○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작성	○		○		○	
3.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선정	○		○		○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결정	○					
5. 핵심과제별 기획	○		○		○	
5. 지역사회 의견 수렴	○		○	○	○	
7. 계획 심의	○				○	
8. 지방의회 보고	○					
9. 최종 결정 및 제출	○					

○ 연수구

- 연계 (TFT) 활성화를 통한 제3기 복지계획 수립활동과 구체적인 신규 사업 발굴 및 년차별 세부계획안 검토에 사회복지협의체, 행정조직이 협력, 참여하였음.
- 지역사회 의견수렴과 기획에 있어서 복지계획 추진단을 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민관협력을 이루었음.
- 공청회개최 및 용역기관 중간보고 등 지역의견을 수렴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음.
- 최종계획안 확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TFT, 복지정책 관련 이해관계에 있는 공공 및 민간시설, 프로그램 운영 단체 등의 조정·통합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들의 참여와 협력이 있었음.
- 핵심과제 설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속 전문가 및 실무자와 연구진이 참여하였음.

〈표 5-4〉 연수구의 참여주체 평가

계획 수립 과정	참여주체					
	관련부서	지방의회	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1. 지역사회복지 조사	○		○		○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작성	○		○		○	
3.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선정	○		○		○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결정	○		○		○	
5. 핵심과제별 기획	○		○		○	
5. 지역사회 의견 수렴	○		○	○	○	
7. 계획 심의	○		○			
8. 지방의회 보고	○		○		○	
9. 최종 결정 및 제출	○	○			○	

○ 남동구

- 지역주민들의 욕구의 수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계획수립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복지계획의 추진과정에 참여가 이루어졌음.
- 다양한 민간복지단체의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의 참여뿐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관련 의

사 결정과정 참여, 집행과정 및 평가과정 참여 등으로 협력이 이루어졌음.

〈표 5-5〉 남동구의 참여주체 평가

계획 수립 과정	참여주체					
	관련부서	지방의회	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1. 지역사회복지 조사	○		○		○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작성	○		○	○	○	
3.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선정	○		○		○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결정	○		○		○	
5. 핵심과제별 기획	○		○		○	
5. 지역사회 의견 수렴	○		○	○	○	
7. 계획 심의	○		○			
8. 지방의회 보고	○					
9. 최종 결정 및 제출	○					

○ 부평구

- 협의체 역할을 중시하여 계획수립, 욕구조사지 개선 및 조사영역 검토 시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음.
- 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수립 및 실행의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촉진하고자 하였음.
- 이외에도 거의 모든 업무에 협의체가 참여하였음.

〈표 5-6〉 부평구의 참여주체 평가

계획 수립 과정	참여주체					
	관련부서	지방의회	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1. 지역사회복지 조사	○		○	○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작성	○		○		○	
3.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선정	○		○	○	○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결정	○		○			
5. 핵심과제별 기획	○		○		○	
5. 지역사회 의견 수렴	○		○		○	
7. 계획 심의	○		○			
8. 지방의회 보고						
9. 최종 결정 및 제출						

○ 계양구

-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장의 실무자들뿐 아니라 계양구의 실정을 잘 아는 학계의 전문가 및 행정주체인 담당공무원등이 FGI 실시로 참여하였음.
-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 및 전략목표 설정, 핵심과제, 세부사업의 선정과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등에 계획수립TF, 전문가, 협의체 분과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참여 협력하였음.

- 계획 수립에 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참여하였음.

〈표 5-7〉 계양구의 참여주체 평가

계획 수립 과정	참여주체					
	관련부서	지방의회	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1. 지역사회복지 조사	○		○	○	○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작성	○		○	○	○	
3.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선정	○		○	○	○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결정	○		○			
5. 핵심과제별 기획	○		○		○	
5. 지역사회 의견 수렴	○		○	○		
7. 계획 심의	○		○		○	
8. 지방의회 보고	○		○			
9. 최종 결정 및 제출	○					

○ 서구

-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협의체가 협력하였음.
- 계획수립 TF팀 구성, 계획 수립에 대한기획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구청 복지부서가 중심으로 협력하였음.

〈표 5-8〉 서구의 참여주체 평가

계획 수립 과정	참여주체					
	관련부서	지방의회	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1. 지역사회복지 조사	○		○	○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작성	○		○		○	
3.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선정	○		○	○	○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결정	○		○		○	
5. 핵심과제별 기획	○		○		○	
5. 지역사회 의견 수렴	○		○	○	○	
7. 계획 심의	○		○			
8. 지방의회 보고	○					
9. 최종 결정 및 제출	○					

○ 강화군

- 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에 협의체와 복지부서와 협력하였음.
- 전략목표와 핵심과제 선정,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에도 협의체와 복지부서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였음.

〈표 5-9〉 강화군의 참여주체 평가

계획 수립 과정	참여주체					
	관련부서	지방의회	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1. 지역사회복지 조사	○		○	○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작성	○		○		○	
3.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선정	○		○		○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결정	○		○			
5. 핵심과제별 기획	○		○			
6. 지역사회 의견 수렴	○		○	○	○	
7. 계획 심의	○		○			
8. 지방의회 보고	○					
9. 최종 결정 및 제출						

○ 용진군

- 기본계획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TFT, 복지정책 관련 이해관계에 있는 공공 및 민간시설, 프로그램 운영 단체 등이 의견을 제시하여 참여하였음.
- 연차별 시행계획안 검토 및 수정·보완 시행계획안의 최종심의 확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참여하였음.
- 각 분야별 욕구조사 설문 개발 회의 시 지역실무자가 참여하였음.
- 욕구조사 보고회에 군민이 참여하였음.
- 각 사업별 책임과 협조관계를 계획수립 설계시점 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하였음.

〈표 5-10〉 용진군의 참여주체 평가

계획 수립 과정	참여주체					
	관련부서	지방의회	협의체	지역주민	전문가	기타
1. 지역사회복지 조사	○		○	○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작성	○		○			
3.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선정	○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결정	○				○	
5. 핵심과제별 기획	○		○		○	
6. 지역사회 의견 수렴	○		○	○		
7. 계획 심의	○		○		○	
8. 지방의회 보고	○					
9. 최종 결정 및 제출	○		○			

2) 군·구 계획수립 과정의 절차 평가

〈표 5-11〉 군·구 계획수립 과정의 ‘절차평가’

군·구	지역사회 복지조사	비전, 전략목표 작성	핵심과제, 세부사업 선정	핵심사업별 기획	지역사회 의견수렴	지방 의회 보고	최종결정 및 제출
중구	· 욕구조사 (1. 403가구 면접조사, 중구 사회복지시 설 중사자 141명 대상 설문조사)	· 비전: 구민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복지 중구 · 전략목표: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 건강한 마을복지공동 체 형성 3. 맞춤형 서비스제공 강화	1. · 사회복지증사 자 전문성 강화 · 지역단위 네트워크기반 확대 ·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2. · 주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지원 · 건강한 일자리 확보 · 지역균형 및 복지사각지대 의 해소 3. · 욕구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공동체 의식 확대 및 주민소통과 협력 강화 · 생애주기별 특성 기반 서비스제공	· 사업의 내용과 지침점검을 통해 사업 중복, 사각지대 등 정리 · 2기 복지계획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등 검토 ·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실현 가능한 지역사회복지 계획안 수립 · 계획수립 TF팀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비전, 전략목표, 핵심과제 선정, 세부계획 수립 · 실무분과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함 · 사업계획을 실무부서에 제공하여 실현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	· 설문조 사 · 공청회 · 공고		· 지방의회 보고를 통한 계획과 예산 연계
동구	· 욕구조사 (468가구 면접조사)	· 비전: 행복한 동구! 살기 좋은 동구! · 전략목표: 1. 빈틈없는 동구 2. 걱정없는 동구 3. 누리는 동구	1. · 민·관 협력 활성화 · 복지인프라 구축 · 취약계층지 원 2. · 돌봄서비스 확충 · 복지서비스 내실화 · 환경개선 3. · 일자리창출 및 지원 ·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 기획단계에 서 중앙 및 시도 정책 방향 반영, 군·구 관련 계획 연계 반영 · 협의체와 복지부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세부계획 수립 · 복지거버넌 스를 강화하여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주민과 지역복지사 업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	· 욕구조 사 · 공청회 · 공고 · 인터넷	· 지방 의회 보고 로 계획 과 예산 연계	
남구	· 욕구조사 (450 가구 면접조사)	· 비전: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1. · 맞춤형 생활보장지	· 지역사회 문제 분석 · 지역 자원			

군·구	지역사회 복지조사	비전, 전략목표 작성	핵심과제, 세부사업 선정	핵심사업별 기획	지역사회 의견수렴	지방 의회 보고	최종결정 및 제출
		맞춤복지를 실현하는 남구 · 전략목표: 1.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 2.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문화 3. 복지전달체 계 확립	원 · 돌봄서비스 강화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2. ·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환경조성 · 나눔문화 확산기반 마련 · 여성 가족친환경 조성 3. · 동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 민관협력 활성화 기반 구축	집중화 · 사업 개발 · 주민욕구를 기반으로 하되 실행력의 핵심적 주체가 되는 공공영역에 서의 행·재정 범위, 각 사업별 투입과 성과에 대한 구체화된 예측, 현실적 평가제표의 개발에 대한 검토			
연수구	· 욕구조사 (413가구 면접조사)	· 비전: 돌봄과 배려, 꿈을 이루는 복지 연수 · 전략목표: 1. 구민이 함께 키워가는 건강한 신세대 육성 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복지자산 기반 구축 3. 구민이 함께하는 참여, 모두, 균형복지 네트워크 강화	1 · 임신/출산, 보육이 걱정 없는 보육환경 조성 · 건강, 튼튼, 행복한 아동청소년 생활기반 조성 2 · 몸과 마음이 행복한 건강 100세 복지환경조 성 · 저소득/장애 인들의 희망과 행복이 깃드는 생활안정기 반 강화 · 건강가족, 행복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사회적 역량 제고 3. · 모듬과 균형복지 실현을 위한 모든 구민 들의 참여의식 제고 및	·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복지자원조 사 결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및 복지자원의 확충, 전달체계 혁신, 민관협력 증진, 복지서비스 와 보건, 고용 등의 관련 서비스와 연계방안 등을 고려한 기획 · 복지사업 참여주체들 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지역주민 요구도가 높은 사업과 연수구의 민선 6기 정책적 공약사업을 고려한 기획 · 연수구의 계획 중에 있는 사업과 연계성과	· 공청회 · 공고		· 최종심의 확정된 시행계획 안 인천시 보고 ·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안) 지역사회 에 공시

군·구	지역사회 복지조사	비전, 전략목표 작성	핵심과제, 세부사업 선정	핵심사업별 기획	지역사회 의견수렴	지방 의회 보고	최종결정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성화 ·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통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한 우선사업 순위 선정 			
남동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조사 (420가구 면접조사) · 관련 전문가 실무자 대상 FGI · 복지시설자원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복지공동체 남동 · 전략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통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2.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 복지역량 강화 3. 지역특성에 따른 통합복지서비스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동구 복지통합조정센터(가칭) 구축 · 민·관 거버넌스 강화 및 종사자 지원체계 구축 2. 복지사각지대 해소 · 시민복지 교육 및 정보체계구축 · 주민의 복지정책참여 기회 확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 취업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 다문화 사회구성원을 위한 사회통합 실현 ·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성 및 가족서비스 확대 · 장애인 생활지원 서비스 확대 ·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생활지원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사례를 선정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민관협력의 사례관리 · one-stop 복지자원 연계와 문제해결형 사례관리를 수행할 복지통합조정센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가 집단 및 실무자의 의견을 청취 · 공청회 · 설명회 		
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조사 (450가구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지도시 부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 건강한 노후생활 · 노후 삶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상위계획과 관련된 사회보장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 주민 욕구조사 		

군·구	지역사회 복지조사	비전, 전략목표 작성	핵심과제, 세부사업 선정	핵심사업별 기획	지역사회 의견수렴	지방 의회 보고	최종결정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1. 건강한 부평 2. 행복한 부평 3. 지속가능한 부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향상 · 건강생활실 천사업 · 보건의료서 비스사업 · 장애인 복지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 노인인력개 발센터 활성화 · 방문건강관 리사업 · 치매관리사 업 · 노인문화센 터 건립 및 운영 2. · 맞춤형 복지사각지 대 해소 · 자활사업 활성화 ·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 강화 · 긴급복지사 업활성화 · 보육시설 활성화 ·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일자리사업 추진 3. ·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 동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복지네 트워크 구축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청소년 역량개발 강화 · 자원봉사 센터기능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 사업들을 고려한 정책적 통합성 및 정합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 수립 			
계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조사 (400가구 면접조사) · 공무원 대상조사 (82명) · FGI(전문가 3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함께 가꾸는 행복! 살맛나는 계양! · 전략목표: 1. 사람중심 서비스제공 체계 확립 2.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중심 서비스제공 체계구축 · one-stop 통합 서비스 체계 확대 · 사람중심 복지 생태계조성 2. · 일을 통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과제 별 세부사업계 획 수립 · 기반조성계 획 수립 · 계획 공고 · 대표협의체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 설명회 · 협의회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의회 보고 	

군·구	지역사회 복지조사	비전, 전략목표 작성	핵심과제, 세부사업 선정	핵심사업별 기획	지역사회 의견수렴	지방 의회 보고	최종결정 및 제출
		3. 소통과 참여 구현	복지 실현 · 복지사각지 대해소 · 욕구맞춤형 예방적 건강서비스 제공 3. · 복지파트너 십 확립 · 나눔문화 확산				
서구	· 욕구조사 (420가구 면접조사) · 지역환경 SWOT분석 · 홈페이지 분석	· 비전: 따뜻하고 모두가 행복한 살 맛 나는 서구! · 전략목표: 1. 사회통합 제고와 안전한 도시 건설 2. 자립기반 구축과 생활안정 강화 3. 균형 발전과 서비스 질 개선	1. ·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2. · 평생학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하는 복지" 3. · 접근성 개선과 인프라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 복지"	· 단위사업을 저소득복지, 가족복지,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여성·다문화 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등으로 구분 · 세부사업을 22개로 선정	· 공고 · FGI · 설문조 사 · 설명회		
강화군	· 욕구조사 (416가구 면접조사)	· 비전: 행복한 강화, 편안한 강화 · 전략목표: 1. 수요자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 2. 생활안정 도모 및 지원 3. 튼튼한 복지 기반 확립	1. ·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 여성가족 친화 기반 구성 2. · 취약계층 맞춤형지원 ·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3. · 지역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구축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 복지시설 지원확대 및 환경개선	· 협의체와 복지부서와 협의를 계획 수립 기획 · 기획단계에 서 중앙 및 시도 정책 방향 반영, 시군구 관련 계획 연계 반영 · 협의체와 복지부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전략목표와 핵심과제 선정,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공청회 · 공고 · 설문조 사	· 지방 의회 보고	
웅진군	· 욕구조사 (400가구 면접조사) · FGI · 복지자원조	· 비전: 모두가 행복한 복지 웅진구현 · 전략목표	1. · 복지안정망 구축강화 · 사회적 일자리	· 부분별 사업 계획 시 실무분과 중심의 의견수렴 및	· 욕구조 사 · 시민간 담회 · 공고를		· 계획 심의 거쳐 계획을 수정

군·구	지역사회 복지조사	비전, 전략목표 작성	핵심과제, 세부사업 선정	핵심사업별 기획	지역사회 의견수렴	지방 의회 보고	최종결정 및 제출
	사	1. 풍요로운 생활공동체 실현 2. 지속가능 성장기반 육성 3. 복지자원 통합 및 자산구축	창출기반강 화 2. · 맞춤형 보육서비스 ·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 · 미래세대 육성 · 안정된 노후 생활환경 조성 3. · 복지자원 자산기반 구축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강 화 4. ·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100세 건강사회실 현	계획 · 지역의 실무전문가 중심의 분야별 연구진 구성 · 사업계획별 로 실무분과의 검토과정 거침 · 각 분야별 사업에 대한 공공영역의 행·재정 실행가능성 에 대한 검토 · 복지계획 실행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매뉴얼 목록 외에 주무부서, 협력기관 및 협력부서를 명시하여 각 사업별 책임과 협조관계를 계획수립 설계시점 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	통한 의견수 렴 · 토론회 · 설명회		결정하여 최종안 제출

2.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 분석

1) 군·구 계획의 내용 점검 영역 및 기준

- 인천시 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은 8개 영역을 5개 기준으로 평가함.
- 점검기준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인 참여성, 통합성, 협력성에 지역성과 적절성을 추가하여 평가함.
- 각 대상영역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함.

2) 군·구 계획 내용 점검의 대상 영역, 기준 및 주요내용, 점검지표와 평가기술

- 군·구 계획내용의 점검은 2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 첫째, 각 대상영역의 점검기준인 참여성, 지역성, 적절성, 통합성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각각의 주요내용과 점검지표 그리고 평가작성방법으로 작성했음.
- 둘째, 첫 번째 작성한 점검 대상영역, 기준, 주요내용, 평가작성방법을 기준으로 각 군·구의 세부적인 점검사항들을 작성하였음.
- 평가방법은 정량(인원, 횟수)의 경우에는 각 자치구의 보고서내용을 기입하였음.
-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O, X로 평가하였음.
- 정도를 묻는 항목은 3단계로 구분하여 높은, 보통, 낮음으로 평가하였음.

〈표 5-12〉 군·구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용의 점검영역 및 기준

대상영역	기준	주요내용	점검지표	평가작성방법
A. 군·구 계획 개요	참여성	· 지역사회협의체의 참여 · 계획수립과정의 참여 정도 · 개방성, 민주성	참여 인원	명수
			참여 회수	횟수
			지역협의체 참여 여부	참가 여부 (O, X 표시)
			참여의 적극성	3단계 표시 높음: 기획, 계획수립, 평가단계에 모두 참여 보통: 일부 단계에만 참여 낮음: 거의 참여 없음
	지역성	· 지역특성 반영	지역조사 여부	실시 여부 (O, X 표시)
			지역조사서술여부와 지역특성 반영 정도	실시 여부 (O, X 표시)
			지역(민간) 자원 활용 정도	3단계 평가 3: 높음, 2: 보통, 1: 낮음

대상영역	기준	주요내용	점검지표	평가작성방법
B. 지역사회복지조사	적절성	· 데이터의 정확성 · 지역 현황 및 특성 분석	인구집단별 지표	지표 여부 (O, X 표시)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지표	지표 여부 (O, X 표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반영 여부 (O, X 표시)
		· 욕구 조사	표본설계	실시 여부 (O, X 표시)
			연령, 대상별 욕구조사	실시 여부 (O, X 표시)
		· 자원 조사	자원현황(공공, 민간)	실시 여부 (O, X 표시)
			수요분석	실시 여부 (O, X 표시)
			공급분석	실시 여부 (O, X 표시)
	지역성	· 지역현황 및 특성 분석	욕구조사를 통해 분석된 지역현황과 특성에 대한 설명 여부	3단계로 평가 3: 높음, 2: 보통, 1: 낮음
C. 관련 계획 분석	통합성	· 상위계획 및 연관 계획 분석 · 2기 계획 평가 반영	중앙정부 계획 반영	반영 여부 (O, X 표시)
			인천시 계획 반영	반영 여부 (O, X 표시)
			제 2기 계획 결과 분석 반영	반영 여부 (O, X 표시)
D. 비전, 전략목표	지역성	·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 반영	· TF 지역주민 참가 여부 · 지역주민의 FGI 참가 여부	참가 여부 (O, X 표시)
	적절성	· 비전과 전략의 타당성	비전체계도 여부	실시 여부 (O, X 표시)
E. 핵심과제 선정 및 성과지표 설정	참여성	· 지역사회 주체의 참여 정도	TF팀 참가 여부	참가 여부 (O, X 표시)
	지역성	· 지역 현황 반영 · 지역문제 해결 노력	지역현황, 특성지역욕구 조사 반영여부	반영 여부 (O, X 표시)
	적절성	· 성과지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작성여부	실시 여부 (O, X 표시)
	통합성	· 핵심과제와 관련계획의 연계성	핵심과제와 관련계획 연계여부	연계 여부 (O, X 표시)
F. 세부사업계획	적절성	· 세부사업 계획 내용의 타당성 · 실현가능성	성과지표작성여부	작성 여부 (O, X 표시)
			연차별 사업계획 작성 여부	작성 여부 (O, X 표시)
	통합성	· 세부사업과 핵심과제, 전략목표, 비전의 일관성	세부사업과 핵심과제, 전략목표, 비전의 일관성여부	일관성 여부 (O, X 표시)
G. 행·재정계획	적절성	· 계획 내용의 타당성 · 실현가능성	인력계획여부	작성 여부 (O, X 표시)
			전달체계 정비 계획 여부	작성 여부 (O, X 표시)
			복지자원 인프라 확충계획 여부	작성 여부 (O, X 표시)
			재정확보와 투입 계획여부	작성 여부 (O, X 표시)
			입법(조례) 추진 계획여부	작성 여부 (O, X 표시)

대상영역	기준	주요내용	점검지표	평가작성방법
	협력성	·자원연계 ·민관협력	민간자원과의 협력관계 제시 여부	작성 여부 (O, X 표시)
	통합성	·핵심과제 계획 ·중기재정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	핵심과제 계획, 중기재 정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 여부	연계 여부 (O, X 표시)
H. 첨부자료	적절성	·내용의 구체성, 정확 성	지역사회복지관련 통 계자료 첨부 여부	첨부 여부 (O, X 표시)
I. 자체평가 (계획평가)	통합성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의 통합정도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의 타당성	계획평가 계획 작성 여 부	작성 여부 (O, X 표시)

〈표 5-13〉 군·구 계획 개요의 내용 평가 취합

대상 영역	기준	점검지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A. 계획 개요	참여성	참여인원	135명	31명	15명	미기재	70명
		참여횟수	7회	미기재	미기재	미기재	25일간
		지역사회협의체참여정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참여의 적극성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지역성	지역조사 여부	○	○	○	○	○
		지역조사서술여부와 지역특성 반영정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지역(민간) 자원 활용 정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B. 지역사회복지조사	적절성	인구집단별 지표	○	○	○	○	○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지표	○	○	○	○	○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	○	○	○	○
		표본설계	○	○	X	○	○
		연령, 대상별 욕구조사	○	○	○	○	○
		자원현황(공공, 민간)	○	○	○	○	○
		수요분석	○	○	○	○	○
		공급분석	○	○	○	○	○
	지역성	욕구조사를 통해 분석된 지역현황과 특성에 대한 설명여부	○	○	○	○	○
C. 관련계획분석	통합성	중앙정부계획반영	○	○	○	○	○
		인천시 계획반영	○	○	○	○	○
		제 2기 계획결과 분석 반영	○	○	○	○	○
D. 비전 및 전략목표	지역성	· TF 지역주민 참가 여부 · 지역주민의 FG 참가 여부	○	X	X	X	○
	적절성	비전체계도 여부	○	○	○	○	○
E. 핵심과제 선정 및 성과지표설정	참여성	TF팀 참가여부	○	○	○	○	○
	지역성	지역현황, 특성지역욕구조사 반영여부	○	○	○	○	○
	적절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작성여부	○	○	○	○	○
	통합성	핵심과제와 관련계획 연계여부	○	○	○	○	○
F. 세부사업계획	적절성	성과지표작성여부	○	○	○	○	○
		연차별 사업계획 작성 여부	○	○	○	○	○
	통합성	세부사업과 핵심과제, 전략목표, 비전의 일관성여부	○	○	○	○	○
G. 행·재정계획	적절성	인력계획여부	○	○	○	미제출	○
		전달체계 정비계획여부	○	○	○	미제출	○
		복지자원 인프라 확충계획여부	○	○	○	미제출	○
		재정확보와 투입계획여부	○	○	○	미제출	○
		입법(조례) 추진계획여부	○	○	○	미제출	미제출
	협력성	민간자원과의 협력관계 제시 여부	○	○	○	미제출	○
	통합성	핵심과제 계획, 중기재정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 여부	○	○	○	미제출	○
H. 첨부자료	적절성	지역사회복지관련 통계자료 첨부여부	X	○	X	X	○
I. 자체평가	통합성	계획평가 계획 작성 여부	○	○	○	X	○

대상 영역	기준	점검기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A. 계획 개요	참여성	참여인원	미가입	14명	37명	30명	30명
		참여횟수	미기재	미기재	13회	미기재	미기재
		지역사회협의체참여정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참여의 적극성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지역성	지역조사 여부	○	○	○	○	○
		지역조사서술여부와 지역특성 반영정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지역(민간) 자원 활용 정도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B. 지역사회 복지조사	적절성	인구집단별 지표	○	○	○	○	○
		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지표	○	○	○	○	○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	○	○	○	○
		표본설계	○	○	○	○	○
		연령, 대상별 욕구조사	○	○	○	○	○
		자원현황(공공, 민간)	○	○	○	○	○
		수요분석	○	○	○	○	○
		공급분석	○	○	○	○	○
	지역성	욕구조사를 통해 분석된 지역현황과 특성에 대한 설명여부	○	○	○	○	○
C. 관련계획 분석	통합성	중앙정부계획반영	○	X	○	○	○
		인천시 계획반영	○	○	X	○	○
		제 2기 계획결과 분석 반영	○	○	○	○	○
D. 비전 및 전략목표	지역성	· TF 지역주민 참여여부 · 지역주민의 FG 참여 여부	X	X	X	○	○
	적절성	비전체계도 여부	○	○	○	○	○
E. 핵심과제 선정 및 성과지표 설정	참여성	TF팀 참여여부	○	○	○	○	○
	지역성	지역현황, 특성지역욕구조사 반영여부	○	○	○	○	○
	적절성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작성여부	○	○	○	○	○
	통합성	핵심과제와 관련계획 연계여부	○	○	○	○	○
F. 세부사업 계획	적절성	성과지표작성여부	○	○	○	○	○
		연차별 사업계획 작성 여부	○	○	○	○	○
	통합성	세부사업과 핵심과제, 전략목표, 비전의 일관성 여부	○	○	○	○	○
G. 행·재정 계획	적절성	인력계획여부	○	○	○	○	○
		전달체계 정비계획여부	○	○	○	○	○
		복지자원 인프라 확충계획여부	○	○	○	○	○
		재정확보와 투입계획여부	○	○	○	○	○
		입법(조례) 추진계획여부	X	X	○	○	○
	협력성	민간자원과의 협력관계 제시 여부	○	○	○	○	○
	통합성	핵심과제 계획, 중기재정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 여부	○	○	○	○	○
H. 첨부자료	적절성	지역사회복지관련 통계자료 첨부여부	○	○	X	X	○
I. 자체평가	통합성	계획평가 계획 작성 여부	○	○	○	○	○

- 군·구의 계획 개요에 있어서 지역사회협의체 참여와 참여의 적극성은 모든 자치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지역조사여부정도, 지역조사 서술여부와 지역특성 반영정도, 지역(민간) 자원활용 정도에서 나타난 지역성 역시 인천시 모든 자치구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음.
- 지역사회복지조사에 있어서도 적절성과 지역성이 모든 자치구에서 잘 반영되었음.
- 표본설계는 지역에 따라 세분화된 표본을 표시 한 곳도 있었고 단순하게 정리한 곳도 있었으나, 조사내용으로 보아 모든 자치구에서 조사의 표본설계가 잘 되어 있었음.
- 비전과 전략목표를 계획할 때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지역협의체의 참가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TF의 지역주민 참가와 FGI에 지역주민이 참가한 곳은 4개의 자치구였음.
- 그러나 주민의견은 다른 방법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적절하게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 관련 계획 분석의 통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계획반영은 모든 자치구에서 명확하게 기술하였음.
- 행·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서는 연수구가 미제출 하였음.
- 지역사회복지관련 통계자료 첨부는 동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에서 작성 첨부하였고, 중구, 남구, 연수구, 서구는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음.

3. 군·구 핵심과제 지원계획

1) 군·구 핵심과제의 지원 계획

- 인천시 10개 구·군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전략목표, 핵심과제, 인천시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내용을 작성하였음.

〈표 5-14〉 인천시 자치구의 전략목표, 핵심과제, 세부사업의 비교

군·구	전략 목표 수	핵심 과제 수	세부 사항 수	빈곤 계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가정	보건 의료	복지 전달 체계 서비스
중구	3	9	28	0	0	0	0	0	0	0
동구	3	8	50	0	0	0	0	0	0	0
남구	3	9	64	0	0	0	0	0	0	0
연수구	3	7	128	0	0	0	0	0	0	0
남동구	3	11	34	0	0	0	0	0	0	0
부평구	3	3	22	0	0	0	0	0	0	0
계양구	3	8	23	0	0	0	0	0	0	0
서구	5	3	39	0	0	0	0	0	0	0
강화구	3	8	55	0	0	0	0	0	0	0
옹진군	4	10	51	0	0	0	0	0	0	0

- 인천시 각 군·구의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전략목표의 수는 평균적으로 3개정도이며 서구의 경우 5개, 옹진군의 경우 4개로 계획하고 있음.
- 핵심과제와 이에 따르는 세부사업은 구마다 다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이 가장 많은 구는 연수구로 128개의 사업이 있는 반면 부평구의 경우 22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복지정책의 종류는 빈곤,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가정, 보건 그리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복지정책과 동일하게 계획하고 있음.
- 보건의료사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양은 자치구의 경우에는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 노인들을 위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음.
- 이러한 복지계획을 전달하는 복지전달시스템도 10개 자치구 모두에서 계획하고 있음.
- 옹진군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서 다루지 않은 보훈사업을 계획에 포함하였음.

〈표 5-15〉 군·구의 핵심과제 지원계획내용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자치구명	지역사회복지계획	핵심과제	시, 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중구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	· 사회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중 교육과정 수강 가능자를 선정 및 접수하여 각 분야별 전문화 교육을 시행 및 운영함에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 교육비 지원 · 인력확충과 더불어 복지담당공무원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한 상담 창구에 전화기, 녹음기 등과 같은 녹음장비 및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등 지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기반확대	· 협의체 참여위원 활동에 대한 지역 내 개별 기관의 배려 및 지원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	
	건강한 마을복지 공동체 조성	주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	· CCTV설치와 지역의 안정망 구축 지원
		건강한 일자리(Workfare)확보	
		지역균형 및 사각지대의 해소	· 지역사회 건강문제 대응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지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강화	육구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기존 지역인프라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협의체 등과의 연계 강화 지원
		공동체 의식 확대 및 구민통과 협력강화	· 사례관리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훈련과정을 의무화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지원
		생애주기별특성기반 서비스제공	
동구	빈틈없는 동구	민관협력활성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협의체의 상시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민·관 협의체 기능 정착 지원
		복지인프라구축	· 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 ·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지원	· 공공부문 지원 외 민간부문 후원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지원 · '긴급지원서비스 팀' 운영 지원
	걱정 없는 동구	돌봄 서비스 확충	
		복지서비스 내실화	·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 구입 지원 및 운영비 지원 · 청소년 문화존(ZONE) 지정 지원
		환경개선	· CCTV 설치 지원
	누리는 동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지원	· 전문 의료인력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친환경 무상급식확대 · 비흡연자(어린이, 청소년 등) 대상 흡연 예방교육 지원
남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보장	맞춤형 생활보장지원	· 정확한 수급자 관리 및 욕구 파악 지원 · 민간사회안전망 설치 지원
		돌봄서비스 강화	·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센터 추가 설치 검토 지원 · 아동에 대한 문화 체험 및 다양한 문화 경험의 장 지원
		맞춤형 일자리지원	· '청년일자리 지원협의회' 구성 지원 · 구인구직 전용사이트(Work-Net) 운영 지원

자치구명	지역사회복지계획	핵심과제	시, 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문화환경 조성	맞춤 건강서비스지원	· 건강증진센터 년차별 4개 권역 확대 설치 지원 ·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배우고 즐기는 환경조성	· 문화환경 조성 지원(시설운영비/ 학습편의점설치/평생학습관운영 지원)
		나눔문화 확산 기반 마련	· 자원봉사자 인력뱅크 지원
		여성, 가족친화 환경조성	· 여성주간행사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복지전달체계 확립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 관련 인력확충 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기반구축	
연수구	구민이 함께 키워가는 건강한 신세대 육성	임신/출산, 보육이 걱정 없는 보육환경조성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보육시설 운영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 평가인증 준비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들에게 평가인증 통과 후 인센티브(수당) 지원
		건강, 튼튼, 행복한 아동청소년 생활기반 조성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소년소녀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복지교사 확충 지원 · 어린이 안전시스템 마련을 위한 CCTV 구축사업 지원 · 저소득층 청소년 학자금 지원 ·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지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복지자산 기반 구축	몸과 마음이 행복한 건강100세 복지환경조성	·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 치매예방센터 설치 지원 · 학교내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
		저소득/장애인들의 희망과 행복이 깃드는 생활안정 기반 강화	· 주거안정을 위한 전제자금 대출 및 융자지원 · 창업자금 융자 후 창업을 위한 기술·경영 지도를 필요로 하는 융자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청) 등을 통한 지원 ·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돌봄비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 · 2급 ~ 4급 중복지 장애인 대상 시 자체 활동지원사업 지원
		건강가족, 행복사회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사회적 역량제고	·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 · 다문화가족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구민이 함께하는 참여, 모듬, 균형복지 네트워크 강화	모듬과 균형복지실현을 위한 모든 구민들의 참여의식 제고 및 활성화	· 기부식품지원사업 지원 · 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지원
		틈새 없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강화	
남동구	소통을 통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남동구 복지통합조정센터(가칭) 구축	
		민·관 거버넌스 및 종사자 지원 강화	· 지역복지의 또 다른 특성인 민간과 민간, 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네트워크를 확립하기 위한 전문종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거버넌스 업무과제 개발과 실천을 위한 년 2회 민관협력 워크숍 개최 지원
	참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동복지위원회와 복지통장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1% 나눔 행복남

자치구명	지역사회복지계획	핵심과제	시, 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시민사회 복지역량 강화		동 참여인원을 확대, 통합조정센터의 민간자원 발굴을 포함해 연간 5억의 복지자원 개발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주민의 복지정책 참여기회 확대	· 복지정책콘서트 운영 지원
		시민복지 교육 및 정보체계 구축	
	지역특성에 따른 통합복지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취업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 국공립 어린이 집 추가 신설 및 지정 지원
		다문화 사회구성원을 위한 사회통합 실현	· 외국인 구성원의 모국의 문화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화페스티벌을 경연대회 형식으로 1년 1회 개최 · 사할린동포센터에 여가프로그램 개설 및 확대 지원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생활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활지원 서비스 확대	· 분야별 장애인 스포츠대회 신설(1년 1회) 지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 복지아카데미 개설 지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성 및 가족서비스 확대(영유아 포함)	· 중소기업 업종전문 여성인턴십 결연사업 지원
부평구	건강한 부평	구민의 건강증진	· 경로당, 노인대학의 여가프로그램의 강화 지원 · 보건의로 취약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도시 보건지소 운영 지원 · 지역사회의 수요 등 파악을 통해 주민밀착형 보건의로 서비스 제공 지원 ·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관련 직원의 신분보장 지원
		건강한 노후생활	· 노인문화센터 건립 추진 지원
		맞춤형 복지	·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
	행복한 부평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부평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 동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 지원 · 지역복지 네트워크 추진 지원 · 복지박람회, 시설종사자 워크숍 개최에 대한 예산 지원
		미래세대 성장기반 조성	
계양구	사람중심 서비스제공체계 확립	지역중심 서비스제공 체계 구축	·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체계의 구성계획 수립 모니터링 요원 훈련 지원
		One-stop 통합서비스 체계 확대	· 동 단위 자원네트워크 네트워크 구축 및 광역 차원 자원체계 구축 지원
		사람중심 복지생태계 조성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장난감월드에 대한 종합지원 강화 지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보장	일을 통한 복지 실현 (workfare)	· 지역 내 기업들과의 일자리연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위원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구축 지원
		육구맞춤형 예방적 건강서비스 제공	· 연령별 다양한 치매예방 교육컨텐츠 개발 지원
	소통과 참여복지 구현	복지파트너십 확립	· 민간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체계 개선(호봉, 초과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휴가수당 등)에 필요한 지원

자치구명	지역사회복지계획	핵심과제	시, 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나눔문화 확산	
서구	따뜻하고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서구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커뮤니티형 모델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지역 내 인프라 협조체계 마련지원 · 기존 사업 기구의 확대보다 독립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운영주체 결정 및 물리적 공간 확보 지원 · 지역 내 병원 및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치매노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효과성 검증 및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평생학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하는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원 · 서구 평생학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
		접근성 개선과 인프라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민간 기관들의 민간 협력 통합사례회의 참여 유도가 가능한 민간 복지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 지원
강화군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연중 개별 지원 · 독거노인을 위한 어르신 주거 공동시설 시범 운영 지원 · 효행실천 모범자 및 모범노인 선정 포상, 격려를 위한 지원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아동 급식지원 · 소년소녀가정 및 입양아동 양육지원 · 청소년시설 이용활성화 및 청소년 여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확충 및 문화 공원을 조성지원 ·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지원
		여성가족 친화 기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출산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 · 영육아 보육지원료 지원
	생활 안정 도모 및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저소득모자 가정세대 자립지원 및 자활공동체 운영 지원 ·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의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카페 운영 지원
	튼튼한 복지 기반 확립	지역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군복지재단 설립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65 재능나눔(기부) 센터를 『재능 품-앗이 은행』으로 활성화 운영 지원 ·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지원 · 강화 어울림 다문화 가족 축제행사 지원
		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학 및 노인회 운영 지원 · 경로당 운영비 등 확대 지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웅진군	풍요로운 생활공동체 실현	복지 안전망 구축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연금과 수당 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기반강화	

자치구명	지역사회복지계획	핵심과제	시, 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
	지속가능 성장기반 육성	맞춤형 보육서비스	· 대체교사 지원제도 확대 지원
		여성 사회적 역량 강화	· 웅진군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 ·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지원 ·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여성발전 기금 조성 및 조례 제정 지원
		미래세대 육성	· 위탁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만 14미만의 입양가정, 월 150,000원 지원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지원(대학 재학기간까지 지원)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안정된 노후 생활환경조성	·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지원 · 경로당유지 및 개보수 지원
	복지자원 통합 및 자산 구축	복지자원 자산 기반 구축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 누리과정 운영지원

2) 군·구의 복지사업 대상별 핵심과제 지원계획의 내용

○ 기초지자체 지원 요구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방향

- 핵심과제를 기준으로 10개 기초지자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을 구분하면, ‘사회복지 시설 확충’,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지역사회 복지수요 발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 라고 할 수 있음.
- ‘사회복지 시설 확충’에 관한 지원 요구는 지역사회의 수요 및 사업의 타당성, 지자체간 형평성 및 인천광역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구와 지원방안 협의할 계획임
- ‘사회복지인력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지원 요구는 사회복지 인력들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사회복지인력의 처우개선의 차원에서 2015년 인천광역시의 자체 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지원할 계획임.
- ‘지역사회 복지수요 발굴’에 관한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역사회에서 복지허브화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복지통장제와 동 복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에 관한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상근간사가 채용되어 근무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를 통해 10개 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임.

○ 중구 핵심과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방향

-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및 전문성 향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확정과 함께 역량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임.
- ‘지역단위 네트워크 기반 확대’의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을 지원하는 ‘세부사업 2-1.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주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은 안전허브마을 2개소 및 안심무인택배 100개소를 조성하는 ‘세부사업 8-3. 지역사회 여성안전망 강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동구 핵심과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방향

- ‘민관협력활성화’의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을 지원하는 ‘세부사업 2-1.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복지인프라 구축’의 경우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세부사업 7-2.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경로당 운영활성화는 ‘세부사업 6-3. 함께 하는 노후생활 지원’의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에 포함하여 지원함.
- 공공부문 지원 외 민간부문 후원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민간자원과 공공의 운영 지원이 결합되는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사랑가(家) 꿈, 기부식품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사업 1-1. 나눔과 배려의 복지공동체’에 포함하여 지원함.

-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에서 비흡연자(어린이, 청소년 등) 대상 흡연 예방교육 지원은 금연환경 조성 등 간접흡연 제로가 사업으로 포함된 ‘세부사업 3-3. 건강증진활동의 생활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남구 핵심과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방향

- ‘맞춤형 생활보장 지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제공하는 ‘세부사업 1-2.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및 민간자원과 공공의 운영 지원이 결합되는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사랑가(家) 꿈, 기부식품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사업 1-1. 나눔과 배려의 복지공동체’에 포함하여 지원함.
- ‘돌봄서비스 강화’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가족을 지원하는 치매센터 운영이 사업의 하나인 ‘세부사업 3-5. 정신건강 통합관리 활성화’, 아동에 대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세부사업 1-4.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에 포함하여 지원함.
- ‘맞춤 건강서비스지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 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 3-5. 정신건강 통합관리 활성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인력을 충원하고, 읍·면·동장을 복수직렬로 임명하여 사회복지교육을 확대하고, 149개 전체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코디네이터를 지정배치하며, 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세부사업 2-2.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민관협력 활성화 기반구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및 군구 통합 지역대회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세부사업 2-1.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연수구 핵심과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방향

-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지원은 ‘세부사업 5-2. 청소년 문화참여 활성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몸과 마음이 행복한 건강100세 복지환경 조성’ 중 치매예방센터 설치 지원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 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증진하고자 하는 ‘세부사업 3-5. 정신건강 통합관리 활성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건강가족, 행복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사회적 역량제고’ 중 다문화가족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은 ‘세부사업 9-3. 다문화가족 통합적 지원서비스’에 포함하여 지원함.
- ‘모듬과 균형복지실현을 위한 모든 구민들의 참여의식 제고 및 활성화’ 중 기부식품 지원사업 지원은 ‘세부사업 1-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에 포함하여 지원함.

○ 남동구 핵심과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방향

-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세부사업 1-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

‘세부사업 1-2.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및 ‘세부사업 2-2.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취업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은 ‘세부사업 4-2. 맘(Mom) 편한 보육 기반 확대’에 포함하여 지원함.
- ‘민·관 거버넌스 및 종사자 지원 강화’는 ‘세부사업 2-1.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포함하여 지원함.
- ‘행복한 가정을 위한 여성 및 가족서비스 확대’는 ‘세부사업 8-2.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포함하여 지원함.

○ 부평구 핵심과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방향

- ‘구민의 건강증진’은 ‘세부사업 3-1. 공공보건의료지원 강화’, ‘세부사업 3-2.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제공체계 구축’, ‘3-2. 건강증진활동의 생활화’, ‘세부사업 3-4.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사회적 자립 지원’ 및 ‘세부사업 3-5. 정신건강 통합관리 활성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건강한 노후생활’은 ‘세부사업 6-3. 함께 하는 노후생활’에 포함하여 지원함.
-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은 ‘세부사업 2-2.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및 ‘세부사업 2-1.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포함하여 지원함.

○ 계양구 핵심과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방향

- ‘지역중심 서비스제공체계 구축’ 및 ‘One-stop 통합서비스체계 확대’는 ‘세부사업 2-1.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세부사업 2-2.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세부사업 2-1.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세부사업 1-2.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포함하여 지원함.
- ‘육구맞춤형 예방적 건강서비스 제공’은 ‘세부사업 3-5. 정신건강 통합관리 활성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나눔문화 확산’은 ‘세부사업 1-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에 포함하여 지원함.

○ 서구 핵심과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방향

- ‘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중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커뮤니티형 모델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지역 내 인프라 협조체계 마련 지원은 ‘세부사업 3-5. 정신건강 통합관리 활성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평생학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하는 복지’ 중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원은 ‘세부과제 7-4.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강화군 핵심과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방향

-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은 ‘세부사업 5-4.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 ‘세부사업 5-2. 청소년 문화참여 활성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여성가족 친화 기반 구성’ 중 영육아 보육지원료 지원은 ‘세부사업 4-4. 취약계층 보육이용지원 강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중 한부모가족·저소득모자 가정세대 자립지원은 ‘세부사업 8-4.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자활공동체 운영 지원은 ‘세부사업 1-3. 저소득층 자립 지원’에 포함하여 지원함.
-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는 ‘세부사업 1-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에 포함하여 지원함.
- ‘복지시설 지원 확대 및 환경 개선’ 중 경로당 운영비 등 확대 지원은 ‘세부사업 6-3. 함께 하는 노후생활’,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은 ‘세부사업 5-5. 꿈을 실현하는 아동’에 포함하여 지원함.

○ 웅진군 핵심과제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 방향

- ‘복지 안전망 구축강화’ 중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은 세부사업 8-4.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에 포함하여 지원함.
- ‘여성 사회적 역량 강화’ 중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은 ‘세부사업 4-3. 맞춤형 안심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에 포함하여 지원함.
- ‘안정된 노후 생활환경조성’ 중 경로당 유지는 ‘세부사업 6-3. 함께 하는 노후생활’에 포함하여 지원함.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중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확충 지원은 ‘세부사업 2-2.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에 포함하여 지원함.



VI

VI. 행·재정계획

1. 인력 계획
2. 복지인프라 확충 계획
3. 사회복지전달체계 정비 계획
4. 복지재정 계획
5. 조례 제·개정 계획

Ⅵ. 행·재정 계획

1. 인력 계획

1)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 필요성

- 국가사무인 사회복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은 1991년에 설치된 ‘기능이양합동심의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그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통해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
-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 분출, 지방자치단체 선거,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사업 확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사회복지부문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예산은 2010년 예산의 22.3%인 1조 485억원에서 2014년에는 29.2%인 1조 7,338억원으로 증가함.

〈표 6-1〉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대상 및 담당공무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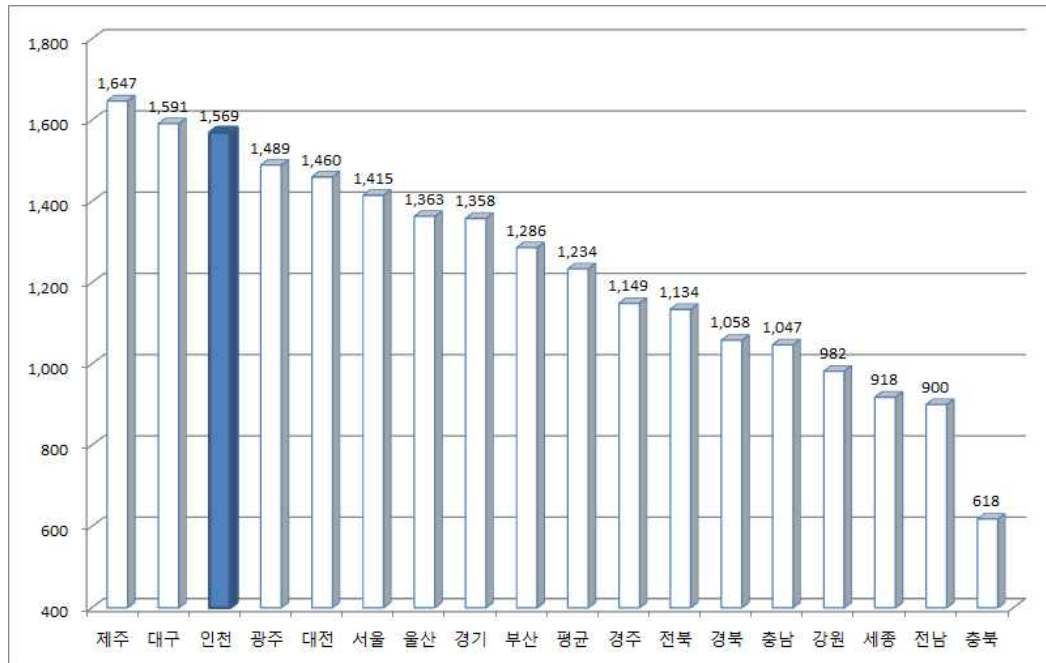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기초노령)	등록 장애인	보육관련 대상자	그 외	(전담)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규모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대상자수	
							담당	전담
규모(명)	71,807	189,353	173,997	334,532	334,532	577	817	1,569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 사회복지사업의 규모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담당인력 확충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음.
- 2013년 6월 현재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의 인력규모는 577명이며,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대상자수는 담당 817명, 전담 1,569명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대상자 수 전국 평균인 674명보다 21.2%가 많으며, 사회복지 전담 인력 기준 대상자 수 전국 평균인 1,234명보다는 27.2% 많아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2013년 6월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는 13개 중앙부처 292개 사회복지사업 중 180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2013년에는 임대주택 사업, 저소득층 학비지원, 무상보육 전면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 등을 새로운 사업과 업무로 부여 받은 상황임.
- 사회복지분야에서 담당해야하는 영유아, 노인, 장애인 인구 규모가 지속적 증가 할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인력의 확충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나가야 함.

〈그림 6-1〉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비교 (전담)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통한 주민센터 허브화

- 2014년 하반기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는 17개 중앙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292개 사업복지사업 중 170개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가장 핵심적이며, 제1차 사회복지전달체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통한 윈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의 확충과 기능 개편이 필요함.
- 동 주민센터에서 수행중인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대상별로 추진되는 각종 방문형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저소득·취약계층가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복합욕구에 대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주민센터 허브화를 위한 단계별 인력 충원 계획

-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총 284명 규모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임.
- 사회복지 인력충원(신규 충원)의 단계적 추진계획은 2015년 60명, 2016년 70명, 2017년 74명, 2018년 80명으로 2015년 이후 매년 인력을 확충함.

〈표 6-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 계획

(단위: 명)

인력확충 사업		연차별 충원 계획			
		2015	2016	2017	2018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	60명	70명	74명	80명
	읍·면·동장 복수직렬 확대	21개 읍·면·동	24개 읍·면·동	26개 읍·면·동	26개 읍·면·동
	복지코디네이터 지정배치	149개 읍·면·동	149개 읍·면·동	149개 읍·면·동	149개 읍·면·동
	동 복지위원 구성	149개 읍·면·동	149개 읍·면·동	149개 읍·면·동	149개 읍·면·동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위한 단계별 인력 배치 계획

-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인력 확충이외에도 읍·면·동장을 복수직렬로 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게 하게 함.
- 또한 2015년부터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코디네이터를 지정·배치하여 사회복지관련 상담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임.
- 2015년부터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장을 복지통장으로 전환하고, 복지위원들을 임명하여 읍·면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게 할 예정임.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조직개편 및 배치인력 확대

-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증진과’를 신설함.
·18명 규모의 건강증진과는 WHO건강도시 인천, 흡연예방과 금연, 정신건강증진, 치매예방과 치매환자가족 지원, 정신보건사업, 암예방관리, 구강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담당함.
- 복지재정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봉사과에 ‘복지관리팀’을 신설함.
·3명 규모의 복지관리팀은 복지재정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타당성 검토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당함.

〈표 6-3〉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조직 개편

구분	명칭	업무	인력 규모
과(課) 신설	건강증진과	WHO건강도시 인천, 흡연예방과 금연, 정신건강증진, 치매예방과 치매환자가족 지원, 정신보건사업, 암예방관리, 구강보건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18명
팀 신설	복지관리팀	복지재정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타당성 검토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명

2) 민간인력 확충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 민간인력 확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담인력 지원 필요성
 -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고도화 되고 공공과 민간이 각각 다른 운영 방식과 조직 하에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이 갖고 있는 복지자원을 이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지만, 상근간사가 부재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지역차원에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배치 지원
 -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문제를 민관협력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현재 10개 군·구 중 8개 군·구에 배치된 상근간사를 2016년부터는 10개 군·구 모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
 - 타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사기가 저하된 상태임.
 - 낮은 수준의 보수로 인하여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고, 이로 인하여 시설은 우수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며, 그 결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법적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제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우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천지역에 근무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권 보장 및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으로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에도 포함된 사항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목적
 - 처우개선과 교육을 통해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이 우수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 진작을 유도하고자 함.
 - 처우개선의 기본 원칙은 2014년 현재 약 95% 수준인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

사자의 인건비 평균이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0000년도 사회복지 시설 관리 안내」가 제시하는 인건비지침의 100%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업의 내용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 구조 및 복리후생 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표창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실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정견학 추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사업의 향후 고려사항

-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및 규모에 따른 처우수준의 적정화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분석 및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계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수적임.
-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등 관련 조례 등 법령을 정비함.

2. 복지인프라 확충 계획

1) 현황 및 필요성

-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 충족의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가구구성 변화에 따른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여성과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증가, 신도시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제시되는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들의 해소를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증가
-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의 필요성 증가
 - 소득수준의 향상, 평균 수명의 증가, 문화예술영역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필요성 증가
 - 시설물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 사회서비스 제공과 이용에서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 등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필요성 증가
 - 시설물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안전한 환경, 사회서비스 제공과 이용에서 이용자의 안
- 장애인 인권보장센터 신설, 지역별·장애유형별 장애인복지관 확충, 중장애인지립생활지원센터 확충 필요성
 -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인권센터 신설이 필요함.
 - 기초지자체별로 장애인복지관이 확충되어야 하며, 또한 장애유형별로 장애인복지관이 확충되어야 장애인들이 지역과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음.
 - ‘탈시설·지역사회자립’ 원칙에 따라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 및 재가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중증장애인지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건립의 필요성
 -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보훈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천에 보훈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함.
- 요양보호사의 휴식, 건강증진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 건립의 필요성
 - 저임금, 낮은 수준의 복리후생,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노인들을 위하여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쉼터를 건립하여 이들에게 휴식, 건강증진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2) 개선방안(확충계획)

- 요양보호사 쉼터 설립 및 운영
 - 요양보호사와 노인 돌봄 제공 인력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건강을 증진하고 직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천형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사업을 연구개발하고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 조사연구개발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함.
-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대
 - 소아전용응급실 운영을 유지하고, 24시까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급 2개소 신규 지정을 통한 소아 야간진료기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경증 소아환자 및 중증 응급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소아환자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
- 인천보훈병원 건립
 - 인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진료와 재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보훈병원을 건립함.
-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카페 빛솔 운영
 - 정신장애인에게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카페인 ‘꿈앤카페 빛솔’ 설치·운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함.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기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함.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민간부문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민간부문 위주의 보육인프라 구조를 공공부문의 확대 공급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함.
- 24시 어린이집 확대
 - 부모의 맞벌이 및 야간경제활동과 한부모, 조손가정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24시까지 제공함.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 보육시간을 연장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워킹 맘의 경력단절 방지와 맞벌이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함.
- 인천시니어연구소 설립
 - 인천시에 적합한 노인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노인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표 6-4〉 복지인프라 확충 계획

구분		연차별 계획				비고 (소재지)
세부사업	성과목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3. 요양보호사 쉼터 운영	요양보호사 쉼터 설립·운영	운영방향 검토, 기본계획 수립	장소 선정, 운영 공간 구축	전문 운영기관 선정, 운영위탁	전문기관의 위탁운영	미정
2-4.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인천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재단설립 허가 신청	법인 설립, 법인운영규정 제정, 법인직원 채용	재단 운영	재단운영	미정
3-2.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소아응급의료 체계 확대	소아전용 응급실 1개소, 소아 야간진료소 1개소 운영	소아전용 응급실 1개소, 소아 야간진료소 2개소 운영	소아전용 응급실 1개소, 소아 야간진료소 2개소 운영	소아전용 응급실 1개소, 소아 야간진료소 2개소 운영	남구
	인천보훈병원 건립	국고보조금 확보, 행정절차 이행	국고보조금 확보, 보훈병원 착공	국고보조금 확보, 보훈병원건립	국고보조금 확보, 보훈병원준공	
3-4. 정신장애인·정신 질환자 사회적 자립 지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카페 빛솔 운영	빛솔 설치·운영, 장애인직업훈련	빛솔 운영, 장애인직업훈련	신규 빛솔카페 설치, 총 2개소 운영, 장애인직업훈련	빛솔카페 2개소 운영, 장애인직업훈련	
4-2. 맘 편한 보육기반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 5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90개소 운영 지원(11개소 신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및 99개소 운영 지원 (9개소 신규)	공공형 어린이집 99개소 운영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99개소 운영 지원	
	24시 어린이집 확대	24시 어린이집 추가 지정 및 13개소 운영 지원	24시 어린이집 추가 지정 및 15개소 운영 지원	24시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지원	24시 어린이집 15개소 운영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추가 지정 및 291개소 운영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4개소 추가 지정 및 295개소운영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2개소 추가 지정 및 297개소 운영 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개소 추가 지정 및 300개소 운영 지원	
6-1. 즐거운 노후설계 지원	인천시니어연 구소 설립	센터 설치, 정책연구	연구소 설치, 운영	연구소 운영	연구소 운영	미정
	즐거운인생센 터 건립	사업계획 수립	센터 건립, 발족	센터 운영	센터 운영	미정
7-1. 장애인인권보호 강화	장애인인권센 터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인권센터 설립	센터 운영	센터 운영	미정
7-2.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역별, 유형별 장애인복지관 신설	동구 장애인복지관 착공	동구 장애인복지관 개관, 운영	서구 인천광역시 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 착공	계양 장애인복지관 착공	동구 서구 계양구
7-3.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생 활 지원	중증장애인자 립생활지원센 터 지원 확대	8개 센터 운영비 지원	9개 센터 운영비 지원	10개 센터 운영비 지원	10개 센터 운영비 지원	
8-2.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인천여성일자 리창출지원본 부 구성·운영	지원본부 구성	지원본부 운영	지원본부 운영	지원본부 운영	미정
8-3. 지역사회 여성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여성안전망 강화	안전허브 마을 2개소 운영, 여성안심택배 20개소 운영	안전허브 마을 3개소 운영, 여성안심택배 40개소 운영	안전허브 마을 4개소 운영, 여성안심택배 60개소 운영	안전허브 마을 5개소 운영, 여성안심택배 100개소 운영	

○ 즐거운인생센터 건립

- 인생 이모작, 또는 삼모작의 설계를 지원하는 노인과 베이비부머를 위한 인생설계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의 취업, 창업,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참여기회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함.

○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 운영

-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역별, 유형별 장애인복지관 신설

-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을 지역별 및 장애유형별로 확충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동구 및 계양구에 각각 장애인종합복지관, 서구에 인천광역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함.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 인천시의 지원을 받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을 지원함.

○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 구성 · 운영

-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총괄본부로서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를 구성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취업관련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참여율 제고를 유도함.

○ 지역사회 여성안전망 강화

- 골목지킴이, 마을순찰사업, 폭력예방 캠페인 등 마을단위로 지역사회 내에서 민·관 협력에 의한 안전네트워크 구축 및 범죄 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안전허브마을을 만들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
-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택배수령과 관련하여, 안심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택배기사의 직접 방문 없이 물품 수령이 가능한 서비스 구축으로 택배관련 범죄로부터 여성·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3. 사회복지전달체계 정비 계획

1) 사회복지전달체계

-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 2014년 10개 군·구의 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 복지시설 이용의 불편한 점 1~3순위가 ‘대중교통접근 이용의 불편함’, ‘정보제공 부족’, ‘필요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이었음.
 -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및 사례관리사와 보건소의 간호사 등 보건 의료인력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간 연계와 조정을 통한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간 연계와 조정을 통한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중앙정부의 국민 중심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 추진
 - 2013년 이후 중앙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행정 기능을 강화하여 one-stop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은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행정사무의 기능을 담당하던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복지기능을 강화시켜, 사회복지관련 각종 서비스의 신청·접수, 상담, 안내, 방문서비스, 사례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

2) 개선방안(추진방향)

-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 2013년부터 시작된 중앙정부의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행정 기능 강화 시범사업과 함께 인천광역시의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함.
 - 이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는 다음과 같이 개편함.
 -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
 - 읍면동장의 복수직렬제 확대와 사회복지교육이수 확대,
 -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코디네이터를 지정배치를 통한 사회복지관련 상담업무 전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문제를 민관협력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10개 군·구 지역사

회복지협의체를 상근간사 채용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고자 함.

-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10개 군·구 149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장을 복지통장으로 전환 및 복지위원들을 임명하여 읍·면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함.
 - 동복지위원회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을 담당
 - 찾아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4. 복지재정 계획

1) 인천광역시 재정현황

- 인천광역시의 세입규모는 2009년에는 약 8조 2,599억원 수준이었으나, 2010~2011년 지난 2년간 세입규모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나타냄.
- 2013년의 세입규모는 2012년 7조 7,913억원에 비해 1조 5,532억원이 증가한 9조 3,445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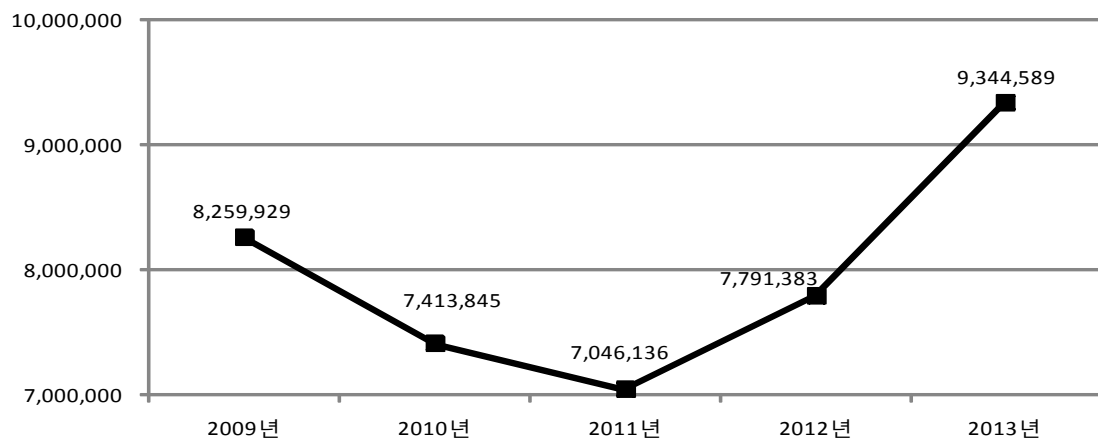
〈표 6-5〉 인천광역시 세입 규모*

(단위: 백만원)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8,259,929	7,413,845	7,046,136	7,791,383	9,344,589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결산 총계 기준

〈그림 6-2〉 인천광역시 세입규모 증감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지난 5년간 인천광역시의 일반회계기준 세출예산규모는 2010년 4조 1,311억원에서 2014년 5조 2,638억원으로 2010년 대비 27.4%(금액 1조 1,326억원) 증가하였음.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해당분야의 지출확대가 세출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를 분야별, 연도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총 세출 대비 2010년 21.9%에서 2014년 29.9%로 7.9%p 증가함.
- 일반공공행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주요 세출부문의 2014년 비중은

201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음.

〈표 6-6〉 인천광역시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분야별	2010년	비중	2011년	비중	2012년	비중	2013년	비중	2014년	비중
합계	4,131,118	100.0	3,951,595	100.0	4,442,755	100.0	4,683,331	100.0	5,263,812	100.0
일반공공행정	728,620	17.6	472,476	12.0	601,216	13.5	670,550	14.3	859,116	16.3
교육	489,196	11.8	547,755	13.9	616,781	13.9	507,589	10.8	514,050	9.8
문화 및 관광	208,013	5.0	202,200	5.1	222,934	5.0	313,277	6.7	330,360	6.3
사회복지	906,506	21.9	1,069,536	27.1	1,156,497	26.0	1,301,658	27.8	1,571,413	29.9
수송 및 교통	675,303	16.3	592,231	15.0	804,573	18.1	722,918	15.4	734,016	13.9
국토 및 지역개발	310,249	7.5	246,947	6.2	206,266	4.6	283,269	6.0	279,497	5.3
그 외	813,232	19.7	820,450	20.8	834,488	18.8	884,071	18.9	975,360	18.5

*인천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기준

자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인천광역시의 복지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9,065.1억원에서 2014년 1조 5,714.1억원으로 증가함.

- 사회복지 예산 비중도 2010년 21.9%에서 2014년 29.9%로 약 8.0% 포인트 증가함.

〈표 6-7〉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회복지 예산규모	9,065.1	10,695.4	11,565.0	13,016.6	15,714.1
사회복지 비중	21.9%	27.1%	26.0%	27.8%	29.9%

*인천광역시 본청 사회복지예산, 일반회계 기준

자료: 재정고, 지방예산현황/지방예산지표/사회복지비중

(http://lofin.mogah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

○ 2014년 인천광역시 자치단체별 사회복지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비중의 자치구 평균이 54.7%이며 군 평균이 17.3%임

- 자치구 중 부평구의 사회복지 비중이 60.9%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중구가 34.7%로 가

장 낮게 나타남

- 강화군 및 옹진군의 사회복지 비중은 강화군이 20.3%, 옹진군이 12.6%로 낮게 나타남

〈표 6-8〉 2014년 인천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 예산*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사회복지비중	사회복지분야 예산	자치단체 예산규모
전국 시·도 평균	26.1		
인천광역시 평균	29.2	1,738,805	5,946,987
특·광역시 평균	32.2		
인천광역시 본청	29.9	1,571,412	5,263,812
전국 자치구 평균	52.9		
인천 자치구 평균	54.7	1,508,944	2,760,019
중구	34.7	78,569	226,978
동구	46.1	64,050	139,079
남구	58.1	228,995	394,106
연수구	53.7	161,921	301,708
남동구	57.7	271,489	470,311
부평구	60.9	298,686	490,415
계양구	56.1	168,718	300,896
서구	54.2	236,423	436,521
전국 군 평균	19.6		
인천 군 평균	17.3	99,447	575,833
강화군	20.3	70,920	349,897
옹진군	12.6	28,526	225,935

*일반회계 기준

자료: 재정고, 지방예산현황/지방예산지표/사회복지비중

(http://lofin.mogaha.go.kr/lofin_stat/budget/jipyo/jipyo_Sabok)

○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분야 2014년 당초예산은 약 1조 5,71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697억원이 증가함

- 부문별 사회복지예산은 ‘보육·가정 및 여성’의 예산비중이 3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청소년(27.36%)’, ‘기초생활보장(19.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경우 사회복지 예산항목 중 ‘노인·청소년’ 분야 (예산증가율 2.99%)의 예산이 가장 높게 증가하였고, 반면에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3.90%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음.

〈표 6-9〉 2014년 인천광역시 세부항목별 사회복지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3년		비교증감	증감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사회복지	1,571,412	100%	1,301,658	100%	269,754	20.72%
- 기초생활보장	312,781	19.90%	309,770	23.80%	3,011	0.97%
- 취약계층 지원	150,797	9.60%	129,966	9.98%	20,831	16.03%
- 보육·가족 및 여성	564,515	35.93%	464,689	35.70%	99,826	21.48%
- 노인·청소년	429,981	27.36%	317,245	24.37%	112,736	35.54%
- 노동	27,603	1.76%	20,299	1.56%	7,304	35.98%
- 보훈	13,858	0.88%	14,121	1.09%	△263	△1.86%
- 주택	37,068	2.36%	12,895	0.99%	24,173	187.46%
- 사회복지 일반	34,806	2.21%	32,670	2.51%	2,136	6.54%

*인천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기준

출처: 인천광역시, 재정정보 세출총괄표(기능별)

2) 재정투입 계획

- 인천광역시 복지예산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은 2018년 2조 6,24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최근 4년 평균증가율 적용 추계 기준).
 - 사회복지비 비중은 2014년 29.9%에서 2018년 3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6-1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예산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a) 평균 예산증가율 적용 추계	사회복지예산	1,571,413	1,786,456	2,030,927	2,308,853	2,624,812
	총예산	5,263,812	5,791,791	6,372,727	7,011,933	7,715,254
	복지예산 비중	29.9	30.8	31.9	32.9	34.0
(b)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회복지예산	-	1,714,913	1,723,847	1,765,549	1,815,736
	총예산	-	5,225,436	5,200,169	5,283,332	5,512,086
	복지예산 비중	-	32.8	33.1	33.4	32.9

* 1) 인천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기준; 2) 2014년은 당초예산

3) (a) 추계액 산정시 2011~2014년 평균 예산증가율 적용(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3.7%, 총예산 증가율 10.0%)

- 인천광역시 제3기 지역복지계획에서 제시한 재정투입 소요액은 2015년 2,304.1억원, 2016년 2,467.7억원, 2017년 2,658.3억원, 2018년 2,67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2018년간 총 1조 105.2억원이 소요될 계획임.

〈표 6-11〉 핵심과제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핵심과제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핵심과제 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 공동체 형성	59,187	62,044	63,667	65,425	250,323
핵심과제 2. 민관협력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215	3,265	1,565	1,565	6,610
핵심과제 3. 모두가 건강한 도시	28,399	29,978	28,959	28,931	116,267
핵심과제 4. 안심 출산·맘(Mom) 편한 보육	8,586	9,446	9,568	9,685	37,285
핵심과제 5.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35,524	36,288	37,166	37,955	146,933
핵심과제 6. 건강한 노후, 활기찬 노년	66,584	74,608	88,604	88,601	318,397
핵심과제 7. 장애인의 사회통합	15,097	13,548	18,265	16,842	63,752
핵심과제 8.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실현	12,873	13,651	14,101	14,562	55,187
핵심과제 9. 동고동락하는 다양한 사회	3,953	3,945	3,940	3,930	15,768
전체	230,418	246,773	265,835	267,496	1,010,522

〈표 6-12〉 세부과제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세부과제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핵심과제 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3,039	2,584	2,602	2,630	10,855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11,517	13,690	14,100	14,510	53,817
	저소득층계층 빈곤탈출·자립 지원	33,038	34,160	35,335	36,635	139,168
	지역맞춤형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제공	11,593	11,610	11,630	11,650	46,483
핵심과제 2. 민관협력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네트워크 활성화	215	265	265	265	1,010
	주민복지센터 복지 허브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요양보호사센터 운영	0	500	300	300	1,100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	0	2,500	1,000	1,000	4,500
핵심과제 3. 모두가 건강한 도시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	225	225	225	225	900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16,852	17,691	16,224	16,024	66,791
	건강증진 활동의 생활화	1,655	1,746	1,854	1,934	7,189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사회적 자립지원	1,129	1,440	1,560	1,530	5,659
	정신건강 통합관리 활성화	8,538	8,876	9,096	9,218	35,728
핵심과제 4. 안심 출산· 맘(Mom) 편한 보육	안심출산지원	248	262	282	297	1,089
	맘(Mom)편한 보육기반 확대	6,666	7,510	7,610	7,710	29,496
	맞춤형 안심보육서비스 기반구축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취약계층 보육이용 강화	1,672	1,674	1,676	1,678	6,700
핵심과제 5.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위기가정 아동상담 지원	916	962	992	992	3,862
	청소년 문화참여 활성화	128	148	158	168	602
	위기 청소년 지원	895	991	1,031	1,072	3,989
	아동의 건강한 이동 성장 지원	12,741	12,800	13,000	13,000	51,541
	꿈을 실현하는 아동	20,844	21,387	21,985	22,723	86,939
핵심과제 6. 건강한 노후, 활기찬 여가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0	1200	620	650	2,470
	노인보호·안전 강화	3,781	3,888	4,000	4,111	15,780
	함께하는 노후생활	23,073	23,520	29,984	23,840	100,417
	노인 경제활동 지원	39,730	46,000	54,000	60,000	199,730
핵심과제 7. 장애인의 사회통합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0	0	500	350	850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4,937	1,000	5,000	3,500	14,437
	중증장애인 탈시설·자립 생활지원	1,067	1,156	1,241	1,246	4,710
	장애인 직업재활 강화	4,725	6,302	6,402	6,602	24,031
핵심과제 8.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실현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4,368	5,090	5,122	5,144	19,724
	양성평등정책 실현 강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180	450	480	510	1,620
	지역사회 여성안전망 강화	70	200	230	260	760
핵심과제 9. 동고동락하는 다양한 사회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12,623	13,001	13,391	13,792	52,807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3,587	3,587	3,587	3,587	14,348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246	233	228	218	925
	건강한 가족기능 지원	120	125	125	125	495
전체		230,418	246,773	265,835	267,496	1,010,522

5. 조례 제·개정 계획

- 읍·면·동 복지위원 구성을 위한 조례 정비
 - 149개 읍·면·동 전체에 복지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조례 정비
-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천형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사업을 연구개발하고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 조사연구개발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조례 제정
- 자살예방 위기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
 -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하여 자살예방 민간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정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정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로 심리, 진로, 가족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등과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자립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청소년들의 학교복귀와 직업역량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조례 정비
- 인천시니어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
 - 노인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가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조례 정비
- 즐거운인생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
 - 인생 이모작, 또는 삼모작의 설계를 지원하는 노인과 베이비부머를 위한 인생설계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의 취업, 창업,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참여기회를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조례 정비
- 장애인인권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
 -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조례 정비
- 양성평등정책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인천광역시 소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초과 여부 확인 및 여성발전위원회 재구성 시 위원 수 및 분과위원회 수의 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조례 정비



VII

VII. 자체평가 계획

1. 평가의 근거, 목적 및 기대효과
2. 평가 방법
3. 평가계획(안) 및 평가결과 활용

VII. 자체평가 계획

1. 평가 근거, 목적 및 기대효과

1) 평가의 근거

○ 평가의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은 제1항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결과를 사회복지사업 수행에 대한 비용보조에 반영할 수 있음.

2) 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 평가의 목적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평가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복지욕구충족 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타당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가를 평가하고자 함.
 - 둘째, 4년 중장기 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기초하여 수행된 사업의 결과에 대한 연차별 평가계획 작성 및 추진실적 모니터링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기초하여 4년간 수행한 사회복지사업 성과에 대한 지역사회 영향, 즉 사회복지사업의 효과분석의 기준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평가의 기대효과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는 계획 수립의 타당성 평가, 연차별 평가, 성과평가에 대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음.

2. 평가 방법

1) 평가추진체계

○ 평가추진체계 구성

-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를 위한 추진체계를 ‘자체평가팀’과 ‘평가위원회’로 구성함.
- 자체평가팀
 - 팀장을 사회복지봉사과 과장으로 하며 지역사회복지계획 업무담당자, 관련 복지업무 담당자 및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구성함.
- 평가위원회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여하지 않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과 관련 전문가, 시민을 중심으로 구성함.
 - 평가위원은 보건복지국장이 추천하고, 인천광역시장이 위촉함.

〈표 7-1〉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구분	위원회 구성	위원장	역할
자체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 업무 담당자 · 유관부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 인천광역시 추진부서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복지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 (사회복지봉사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상반기에 구성된 자체평가팀은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을 수립과정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위원 · 지역사회대표 · 관련 전문가 ※제3기 계획 수립 참가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국장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팀이 제출한 평가보고서 및 근거자료에 대한 확인과 점검 · 자체평가 결과 수용의 충실성 및 반영 사항 점검 후 중앙정부에 그 결과 제출

○ 평가추진체계의 역할

- 자체평가팀
 -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세부사업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내부적으로 평가함.
 - 평가위원회의 운영지원, 평가관련 자료 작성 등의 업무 담당함.
- 평가위원회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제안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통해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결정함.
 - 논의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로 인천광역시 계획, 연차별 실적,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하고, 기초지자체의 자체평가를 점검하여 평가결과를 중앙정부에 제출함.

2) 평가유형

○ 평가의 구분

- 평가주체에 따른 구분

- 내부 평가 : 인천광역시의 자체평가팀에 의해 세부사업의 진행정도를 모니터링함.
- 외부 평가 : 평가위원회가 평가함.

- 평가시기에 따른 구분

- 계획 평가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타당성평가
- 연차별 평가 :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성과 평가 : 지역사회복지계획 성과평가

○ 계획평가

- 계획평가의 특성

- 계획평가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후 가장 처음 실시하는 평가로 2015년 상반기에 실시되며, 계획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함.
- 계획평가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해 계획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사전평가의 성격을 가짐.

〈표 7-2〉 계획평가 수립과정에 대한 평가지표

기준	평가지표	배점(50점 만점)
제2기 계획 평가의 적절성	평가팀의 구성 여부	1
	평가팀 참여자의 다양성	4
참여성	계획수립 주체(위원회, 기획단) 구성의 적절성	5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방법 및 실시 정도	5
	지역사회복지조사 참여자의 다양성	5
충실성	계획수립 일정의 준수 정도	5
	계획수립 절차의 준수 정도	5
	계획수립 방법/기법의 활용도	5
지역 파급성	단체장 관심도와 지원 정도	5
	계획의 언론노출 정도	5
	지역주민 관심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5

- 계획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수립과정에 대한 계획평가는 제2기 계획 평가의 적절성, 제3기 계획 수립과정의 참여성과 충실성 및 계획수립의 지역 파급성으로 구성됨.

·계획내용에 대한 계획평가는 2기 계획 평가결과의 환류성, 계획의 지역성, 계획의 적절성 기초지자체 계획의 조정 및 지원방안의 적절성으로 구성됨.

〈표 7-3〉 계획평가 계획내용에 대한 평가지표

기준	평가지표	배점 (광역/기초 지자체)
제2기 계획 평가결과의 환류성	2기 계획 평가결과의 반영 정도	5
계획 내용의 지역성	지역사회복지조사 결과분석의 적절성	3
	비전·전략과 지역특성의 연계성	4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의 지역 적합성	4
계획 내용의 적절성	단체장 공약 및 관심사항 반영의 적절성	4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의 일관성·체계성	4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4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의 실현가능성	4
	추진체계, 복지자원 확보, 예산계획의 적절성	4
기초지자체 계획 지원의 적절성	기초지자체 계획에 대한 점검의 적절성	5
	기초지자체 계획에 대한 조정의 적절성	5
	기초지자체 계획에 대한 지원방안의 적절성	5

○ 연차별 평가

- 연차별 평가의 특성

- 연차별 평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당초 의도한 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지 설정된 연차별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임.
- 연차별 평가의 시기는 매년 세부사업별 연간 실적이 취합되는 익년 연초(3월 이내)에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표 7-4〉 연차별 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추진과정	충분성	재원확보의 충분성	계획대비 예산확보 비율
	준비성	추진팀 구성	해당연도 계획추진을 위한 추진팀 구성의 적절성
		모니터링체계	추진팀 구성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 해당연도 추진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마련 여부
	충실성	일정 준수	해당연도 세부계획 추진일정의 준수성
추진결과	지역파급성	단체장 관심도	지역사회복지계획과 관련 업무추진의 지원 정도
		홍보 정도	해당연도 언론노출 정도
		주민 관심도	해당연도 지역주민대상 각종 관심유발행사 수행 정도
추진결과	활동성	자원동원 정도	해당연도 지역 내 민간자원개발 및 동원 정도
		추진팀 활동	해당연도 추진팀의 실제 활동 정도
	집행	모니터링 활동	해당연도 모니터링체계의 실제 활동 정도
		목표 달성도	목표대비 목표달성 정도
		예산지출 집행성	예산대비 결산 비율

- 연차별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 추진과정에 대한 계획평가는 제3기 계획이 수행되기에 위한 충분성, 준비성, 지역과급성으로 구성됨.
- 추진결과에 대한 계획평가는 제3기 계획 추진을 위한 활동성, 목표달성도 및 집행으로 구성됨.

○ 성과 평가

- 성과평가의 특성

- 성과평가는 2015~2018년까지 추진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영향력을 분석하는 평가임.
- 성과평가는 2015~2018년까지 4개년의 실적 취합이 끝난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함.

- 성과평가의 내용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표달성도 : 전략목표의 성과지표로 측정함.
- 지역사회복지수준의 변화 : 지역사회복지지수와 연계하여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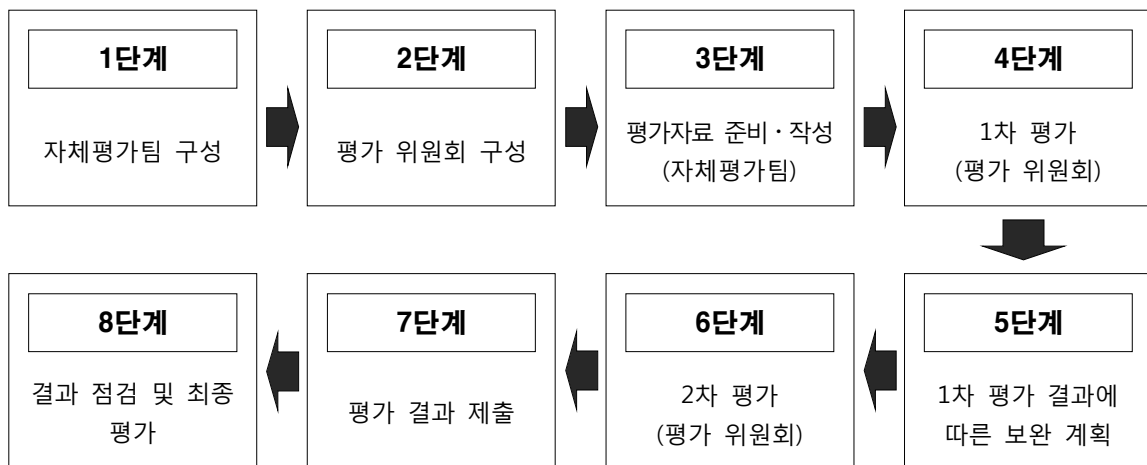
3. 평가계획(안) 및 평가결과 활용

1) 평가절차

○ 평가의 구분

- 계획평가는 2015년 상반기에 1회 실시함.
- 연차별 평가는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매년 1번씩, 총4회 실시함.
- 성과평가는 2019년 상반기에 1회 실시함.

〈그림 7-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의 절차와 과정



○ 연차별 평가의 과정

- 1단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자체평가팀 구성
 - 지역사회복지계획 관련 담당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자체평가팀을 구성함.
 - 지역사회복지계획 업무 담당 부서장(사회복지봉사과장)이 평가팀 팀장을 담당함.
- 2단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구성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연차별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지표 결정
- 3단계: 자체평가팀의 평가자료 준비 작성
 -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에 따라 부산시 자체평가팀이 평가자료를 준비하여 작성
- 4단계: 평가위원회 1차 평가
 - 평가위원회가 1차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평가의견을 단체장에게 제출
- 5단계: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자체평가팀의 향후 추진계획 보완

- 평가위원회 평가의견에 따라 부산시 차원에서 향후계획을 보완
- 6단계: 평가위원회 2차 평가
 - 1차 평가에 따른 계획의 보완, 평가 결과 반영을 확인하는 등 평가결과 수용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
- 7단계: 자체평가팀의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정·보완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을 수정·보완한 계획 제출
- 8단계: 자체평가팀 및 평가위원회의 결과점검 및 최종평가
 - 최종평가 및 결과제출

〈표 7-5〉 인천광역시의 평가계획

구분	시기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평가	2015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 과정 평가 · 2기 계획 평가의 적절성, · 3기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참여성, 충실성, 지역파급성 - 계획내용 평가 · 2기 계획 평가결과의 환류성 · 3기 계획 내용의 지역성 · 계획내용의 적절성 · 기초지자체 계획 지원의 적절성 	· 보건복지부 계획수립 매뉴얼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연차별 평가	2015~2018년까지 매년 세부사업 추진 실적이 정리되는 익년 상반기(3월 이내) · 1차: 2016년 상반기 · 2차: 2017년 상반기 · 3차: 2018년 상반기 · 4차: 2019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평가로서의 연차별 평가 · 연차별 성과지표 달성여부 점검 · 연차별 사업 집행의 일관성 확보 · 전략목표,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의 수정과 보완을 위한 정책정보 산출 - 모니터링으로서의 연차별 평가 · 연차별 투입과 추진상황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판단 ·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파악 및 수정·보완 	· 보건복지부 계획수립 매뉴얼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성과평가	2015~2018년까지 4개년에 걸친 실적이 취합되는 2019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간 실시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성과 평가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표 달성도 · 지역사회 복지 수준의 변화 정도 측정(지역주민의 삶의 질, 지역사회 질, 만족도 등의 변화 측정) 	복지수준 변화 · 전략목표의 성과지표 항목 측정(복지체감도 향상, 지역사회 소속감 증대, 지역공동체성 향상, 복지여건 향상)

○ 2015년~2019년까지 평가 시간표

- 1차년도 2015년 상반기
 - 제3기 타당성 평가
- 2차년도 2016년 상반기
 - 2015년 실행결과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3차년도 2017년 상반기
 - 2016년 실행결과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4차년도 2018년 상반기
 - 2017년 실행결과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2019년 상반기
 - 2018년 실행결과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성과평가

2)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및 수정·보완

- 계획수립 타당성 평가와 연차별 평가의 추진실적 평가 등은 제3기 계획 연차별 시행에 대하여 수정·보완 및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복지업무 담당부서에 회신하여, 추후 사업 추진시 반영토록 권고함.
-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우수 추진사업 등은 홍보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우수사례로 추천하여 다른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확산을 유도함.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 평가시 제기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평가위원회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함.
- 중앙정부나 인천광역시의 정책변화, 사업수행을 위한 자원동원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강력한 요구 등 환경변화에 따라 세부사업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근거 제시 이외에도 제3기 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함.



VIII. 첨부자료

VIII. 첨부자료

1. 지역사회복지 관련 통계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단위	연도			산출방법
				2011	2012	2013	
인구	1	유년부양비	%	20.8	20.3	19.7	(0-14세 인구수/15-64세 인구 수)×100
	2	노년부양비	%	11.9	12.5	13.0	(65세 이상 인구수/15-64세 인구 수)×100
	3	독거노인 비중	%	18.2	19.2	21.7	(독거노인수/65세이상주민수)*100
	4	등록장애인 비중	%	4.7	4.6	4.6	(등록장애인수/행정구역인구수) *100
경제 · 고용	5	고용률	%	60.3	61.2	61.0	(취업자/만15세이상인구)*100
	6	여성고용률	%	48.5	50.2	50.3	(여성취업자/만15세 이상 여성 인구)*100
	7	노인고용률	%	23.6	31.1	-	(노인취업자/만65세이상인구)*100
	8	실업률	%	4.8	4.5	4.2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9	청년실업률	%	10.0	10.4	9.3	(15~29세 실업자/ 15~29세 경제활동인구)*100
	10	사업체수	개소	169,421	177,198	-	-
재정	11	재정자립도	%	65.8	70.4	64.6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100
	12	복지보건예산 비중	%	31.7	31.6	25.8	(사회복지 및 보건예산/전체 예산)*100
	13	SOC예산 비중	%	33.5	34.6	27.6	(SOC예산/전체예산)*100
사회	14	범죄율	천분율	29.1	31.9	37.4	(범죄발생건수/행정구역인구수)*1,000
	15	등록외국인 비율	%	1.8	1.6	1.4	(등록외국인수 / 행정구역 인구 수)*100
	16	조이혼율	천분율	2.5	2.6	2.5	(이혼건수/행정구역인구수)*1,000
	17	자살률	십만분율	32.8	31.2	30.6	(자살건수/행정구역인구수)*100,000
	18	조출생률	천분율	9.2	9.7	9.0	(출생아수/행정구역인구수)*1,000
소득 정책	19	1인당 복지예산	천원/인	780	812	611	복지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20	1인당 자체 복지예산	천원/인	389	426	580	자체복지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21	수급자(차상위 포함)당 자체 복지예산	천원/인	10,290	10,947	11,860	자체복지예산(천원)/수급자·차상위 인구수
	22	기초보장수급자 비율	%	2.5	2.5	2.4	(기초보장수급자 / 행정구역 인구 수)*100
	23	차상위계층 비율	%	1.7	1.8	1.9	(차상위 계층 / 행정구역 인구 수)*100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단위	연도			산출방법
				2011	2012	2013	
건강 정책	24	1인당 보건예산	천원/인	55	59	85	보건예산(천원)/행정구역인구수
	25	보건소 의료인 1인당 인구수	명	6,158.7	6,422.7	5,570.6	행정구역인구수/보건소의료인수
	26	의료인 1인당 인구수	명	151.8	127.5	124.7	행정구역인구수/의료인수
	27	0~9세 사망률	천분율	0.5	0.5	0.5	(0~9세 사망자수/0~9세연앙인구)*1,000
	28	10~39세 사망률	천분율	0.5	0.5	0.5	(10~39세 사망자수/10~39세연앙인구)*1,000
	29	40~59세 사망률	천분율	2.7	2.7	2.8	(40~59세 사망자수/40~59세연앙인구)*1,000
	30	60~79세 사망률	천분율	14.4	15.3	16.4	(60~79세 사망자수/60~79세연앙인구)*1,000
	31	80세 이상 사망률	천분율	75.0	88.9	99.1	(80세이상사망자수/80세이상연앙인구)*1,000
교육 정책	32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천원/인	1,467	1,721	1,882	초등학교 공교육비 / 초등학교 재적학생수
	33	중학생 1인당 공교육비	천원/인	1,323	1,445	1,464	중학교 공교육비 / 중학교 재적학생수
	34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	천원/인	1,578	1,712	1,827	고등학교 공교육비 / 고등학교 재적학생수
	35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명	18.0	17.1	16.2	초등학교 재적학생수 / 초등학교 재적교원수
	36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명	19.4	18.4	17.0	중학교 재적학생수 / 중학교 재적교원수
	37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	명	14.1	13.6	13.5	고등학교 재적학생수 / 고등학교 재적교원수
	38	초등학생 학업중단율	%	0.49	0.49	0.46	(초등학교 학업중단자수 / 초등학교 재적학생수)*100
	39	중학생 학업중단율	%	1.06	1.02	0.88	(중학교 학업중단자수 / 중학교 재적학생수)*100
주거 정책	40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	1.99	1.80	1.63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수 / 고등학교 재적학생수)*100
	41	취약계층 1인당 주거복지 예산	천원/인	306	309	323	주거복지예산(천원)/(수급자인구+차상위계층인구)
	42	주택 전세가격 지수	지수	101.70	99.90	106.10	각년도 11월의 해당지역의 주택 전세가격 지수
	43	주택보급률	%	103.40	103.90	102.00	주택수/일반가구수×100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단위	연도			산출방법
				2011	2012	2013	
돌봄 정책	44	필요노인 1인당 노인돌봄 예산	천원/인	1,661	2,659	2,643	노인돌봄예산(천원)/돌봄필요노인수
	45	장애인 1인당 장애인돌봄 예산	천원/인	182	229	317	장애인돌봄예산(천원)/등록장애인수
	46	영유아 1인당 영유아돌봄 예산	천원/인	1,522	2,085	2,729	영유아(0~5세)돌봄예산(천원)/0-5세영유아수
	47	노인돌봄 이용자 비율	%	2.0%	2.0	2.0	(노인돌봄 관련서비스 이용자 / 노인인구)*100
	48	장애인돌봄 이용자 비율	%	15.7	17.4	17.1	(장애인돌봄관련서비스이용자/등록장애인)*100
	49	영유아돌봄 이용자 비율	%	39.5	47.5	76.5	(영유아돌봄관련서비스이용자/영유아인구)*100
고용 정책	5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비율	%	5.5	5.9	6.1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수/65세 이상 인구)*100
	51	사회적 기업 고용률	%	0.02	0.04	0.04	(사회적 기업 고용인원 수/전체 고용인 수)*100
	52	자활 성공률	%	11.1	14.2	14.2	(탈수급, 취업, 창업자 수/자활 참여자 수)*100
	53	취업성공패키지 성공률	%	60.1	58.4	52.2	(참여자 중 취업인원 수/취성패 참여자 수)*100

2. 복지사업 목록

복지사업명		연차별 예산 현황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핵심과제 1. 나눔과 배려의 인천형 복지공동체 형성	합계	59,187	62,044	63,667	65,425	250,323
	1. 복지포털행복나눔인천운영	126	134	142	150	552
	2. 재능나눔-주거환경개선사업'사랑가(家)꿈'	1,000	530	530	530	2,590
	3. 기부식품제공	1,913	1,920	1,930	1,950	7,713
	4. 긴급복지지원	10,500	12,670	13,050	13,440	49,660
	5. 통합사례관리	1,017	1,020	1,050	1,070	4,157
	6. 자활사업알자리확대를 통한 빈곤탈출 .자립지원	28,314	29,160	30,035	30,935	118,444
	7. 근로빈곤층자산형성지원	4,724	5,000	5,300	5,700	20,724
	8. 맞춤형지역사회서비스사업확충	11,593	11,610	11,630	11,650	46,483
핵심과제 2. 민관협력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합계	215	3,265	1,565	1,565	6,610
	9. 지역사회복지협의체상근간사배치	200	250	250	250	950
	10. 협의체군구통합지역대회	15	15	15	15	60
	11. 사회복지인력충원	0	0	0	0	0
	12. 읍·면·동장복수직렬확대	0	0	0	0	0
	13. 읍·면·동장복지교육이수	0	0	0	0	0
	14. 복지코디네이터지정배치	0	0	0	0	0
	15. 동복지위원회구성	0	0	0	0	0
	16. 요양보호사쉼터운영	0	500	300	300	1,100
핵심과제 3. 모두가 건강한 도시	17. 인천복지재단설립·운영	0	2,500	1,000	1,000	4,500
	합계	28,399	29,978	28,959	28,931	116,267
	18. 공공보건의료지원강화	225	225	225	225	900
	19. 소아응급의료체계확대	384	624	624	624	2,256
	20. 보호자없는병실운영	968	1,000	1,100	1,200	4,268
	21. 경인의료재활병원운영	1,000	1,200	1,200	1,200	4,600
	22. 도서지역응급의료전용헬기운영	3,000	3,000	3,000	3,000	12,000
	23. 인천보훈병원건립	11,500	11,867	10,300	10,000	43,667
	24. 건강도시인천'생활터조성'	74	118	178	208	578
	25. 간접흡연제로	1,581	1,628	1,676	1,726	6,611
	26. 정신장애인직업재활카페운영	60	0	60	0	120
	27.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1,069	1,440	1,500	1,530	5,539
	28. 정신건강증진활성화	2,208	2,340	2,410	2,482	9,440
	29. 치매예방및환자가족지원	5,794	5,800	5,950	6,000	23,544
	30. 자살예방위기관리체계구축	536	736	736	736	2,744

복지사업명		연차별 예산 현황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핵심과제 4. 안심출산· 맘(Mom) 편한 보육	합계	8,586	9,446	9,568	9,685	37,285
	31. 여성장애인의안전한출산지원	158	167	182	197	704
	32. 모성·영유아건강교실운영	90	95	100	100	385
	33. 국공립어린이집단계별확대	253	600	600	600	2,053
	34. 공공형어린이집확대	689	990	990	990	3,659
	35. 24시어린이집확대	624	720	720	720	2,784
	36. 시간연장형어린이집확대	5,100	5,200	5,300	5,400	21,000
	37. 맞춤형안심보육서비스기반구축					
	38. 취약계층보육이용지원강화	1,672	1,674	1,676	1,678	6,700
핵심과제 5.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	합계	35,524	36,288	37,166	37,955	146,933
	39. 위기가정아동상담지원	916	962	992	992	3,862
	40. 청소년문화대축제개최	80	90	90	90	350
	41. 청소년국제교류	48	58	68	78	252
	42. 학교밖청소년지원	671	691	711	732	2,805
	43. 청소년자립기반시설지원	224	300	320	340	1,184
	44. 아동의건강한성장지원	12,741	12,800	13,000	13,000	51,541
	45. 드림스타트확대	3,050	3,200	3,200	3,200	12,650
	46. 지역아동센터기능확대	14,169	14,200	14,400	14,700	57,469
핵심과제 6. 건강한 노후, 활기찬 여가	합계	66,584	74,608	88,604	88,601	318,397
	48. 인천시니어연구소설립	0	200	220	250	670
	49. 즐거운인생센터건립	0	1,000	400	400	1,800
	50. 노인권익증진활성화	293	295	300	300	1,188
	51. 독거노인안전보호강화	3,488	3,593	3,700	3,811	14,592
	52.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	23,054	23,490	29,944	23,790	100,278
	53. 실버농장운영	19	30	40	50	139
	54. 노인경제활동지원	39,730	46,000	54,000	60,000	199,730
핵심과제 7. 장애인의 사회통합	합계	15,097	13,548	18,265	16,842	63,752
	55. 장애인인권보호강화	0	0	500	350	850
	56. 장애인복지시설확충	4,937	1,000	5,000	3,500	14,437
	57. 중증장애인자립생활거주시설지원	147	156	161	166	630
	58.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920	1,000	1,080	1,080	4,080
	5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4,655	6,222	6,322	6,522	23,721
	60. 장애인고용채움농장운영	70	80	80	80	310
	61.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788	1,002	1,022	1,024	3,836
	62. 장애인행정도우미고용	3,580	4,088	4,100	4,120	15,888

복지사업명		연차별 예산 현황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핵심과제 8.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 실현	합계	12,873	13,651	14,101	14,562	55,187
	63. 양성평등정책실현강화	0	0	0	0	0
	64.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구성·운영	0	270	300	330	900
	65. 인천여성취업센터운영	180	180	180	180	720
	66. 지역사회여성안전망강화	70	200	230	260	760
	67. 한부모가정자립지원	12,623	13,001	13,391	13,792	52,807
핵심과제 9. 동고동락하는 다양한 사회	합계	3,953	3,945	3,940	3,930	15,768
	6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3,585	3,585	3,585	3,585	14,340
	69.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운영	2	2	2	2	8
	71. 결혼이민자학력신장사업	22	25	30	30	107
	72. 한국어교육지원	224	208	198	188	818
	72. 다문화가족사례관리운영	85	85	85	85	340
	73. 위기가정가족상담치료	35	40	40	40	155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일정

○ 사전 준비

연번	사전준비	기간
1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 계획(2015~2018)」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및 결과 분석	2014.04~2014.07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매뉴얼 및 관련 자료 검토·분석	2014.04~2014.09
3	10개 군·구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분석 및 인천광역시 사회 복지 관련 기초자료 분석	2015.09~2014.12
4	내부 연구진 구성 및 제3기 계획 수립 일정 조정	2015.01

○ 연구진 구성 및 연구진 회의

연번	회의명	날자	장소	참석자
1	내부 연구진 회의	2015.02	인천발전연구원	내부 연구자 4명
2	외부 연구자 구성 및 연구진 회의	2015.02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여성재단	외부 연구자 6명
3	제2기 계획 평가 준비 분야별 회의	2015.03.31.(화) 2015.04.01.(수)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전체
4	제3기 계획 핵심과제 논의 및 세부사업 선정 준비 분야별 회의	2015.04.07.(화) 2015.04.08.(수)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전체

○ 공무원 교육 및 기초자료 작성

연번	회의명	날자	장소	참석자
1	제2기 계획 평가 준비 및 제3기 계획 세부사업 선정 교육	2015.03.5.(목)	인천광역시청	내부연구진 4명 보건복지국·여성가족국 각 팀장
2	제2기 계획 평가자료 및 제3기 계획 세부사업 기초자료 작성	2015.03.6. ~ 03.27	-	보건복지국·여성가족국 각 팀장 및 담당자

○ 총괄 TFT 회의

연번	회의명	날자	장소	참석자
1	제2기 계획 총괄 평가 및 제3기 계획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 선정	2015.04.15.(수)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3명 공무원 2명

○ 제2기 계획 평가 분야별 TFT 회의

연번	회의명	날자	장소	참석자
1	제2기 계획 저소득계층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분야 평가	2015.03.31.(화)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3명 공무원 5명
2	제2기 계획 장애인복지분야 평가	2015.03.31.(화)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3	제2기 계획 여성·가족·보육·다문화복지분야 평가	2015.03.31.(화)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4	제2기 계획 노인복지분야 평가	2015.04.01.(수)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2명 공무원 3명
5	제2기 계획 아동·청소년복지분야 평가	2015.04.01.(수)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2명 공무원 3명
6	제2기 계획 보건의료분야 평가	2015.04.01.(수)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2명 공무원 3명

○ 제3기 계획 사업선정 분야별 TFT 회의

연번	회의명	날자	장소	참석자
1	제3기 계획 장애인복지분야 핵심과제 논의 및 세부사업 선정	2015.04.07.(화)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2	제3기 계획 보건의료분야 핵심과제 논의 및 세부사업 선정	2015.04.07.(화)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3	제3기 계획 저소득계층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분야 핵심과제 논의 및 세부사업 선정	2015.04.08.(수)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4명 공무원 5명
4	제3기 계획 노인복지분야 핵심과제 논의 및 세부사업 선정	2015.04.08.(수)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2명 공무원 3명
5	제3기 계획 여성·가족·보육·다문화복지분야 핵심과제 논의 및 세부사업 선정	2015.04.08.(수)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4명 공무원 3명
6	제3기 계획 아동·청소년복지분야 핵심과제 논의 및 세부사업 선정	2015.04.08.(수)	인천광역시청	연구진 2명 전문가 3명 공무원 3명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보고

연번	회의명	날자	장소	참석자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착수보고	2015.03.11.(수)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중간보고	2015.04.20.(월)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최종보고	2015.07.03(금)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

○ 전문가 자문회의

연번	회의명	날자	장소	참석자
1	제3기 계획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2015.04.30.(수)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진 2명 외부전문가 4명
2	제3기 계획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2015.05.06.(수)	서강대학교	연구진 3명 외부전문가 4명

○ 계획안 공고

연번	공고명	날자	장소	참석자
1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안) 공고	2015.05.04. ~5.24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공청회

연번	회의명	날자	장소	참석자
1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시민공청회	2015.05.20.(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발표: 연구책임자 좌장 및 토론자: 5명 외부 참석자: 100여명

○ 인천광역시장 보고

연번	회의명	날자	장소	참석자
1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인천광역시장 보고	2015.06.01.(수)	인천광역시청	시장, 행정부시장, 보건복지국·여성가족국 국장·과장, 탐장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고

연번	회의명	날자	장소	참석자
1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고	2015.06.19.(금)	인천광역시의회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보건복지국 국장·과장, 여성가족국 과장, 연구진 2명

4.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 계획(2015~2018)」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설문지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수립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와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전문가 여러분께 인천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평가하고 정책과제 수립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통계법 제31조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시간을 내시어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5월

I. 일반 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만 _____ 세)
3. 귀하의 학력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2년제 졸 ⑤ 4년제 졸 ⑥ 대학원 이상		
4. 귀하 소속 분야는?	① 공무원 (☞ A-1번 문항으로) ② 사회복지시설 (☞ B-1번 문항으로) ③ 교수 (☞ C-1번 문항으로) ④ 연구자등 학계 (☞ C-1번 문항으로) ⑤ 기타 () (☞ C-1번 문항으로)		

A-1. 귀하의 직급은? ()

① 5급 ② 6급 ③ 7급 ④ 8급 ⑤ 9급 ⑥ 기타 ()

A-2. 귀하의 공무원 근속연수는? ()

① 5년이하 ② 6년~10년 ③ 11년~15년 ④ 16년~20년 ⑤ 21년~25년 ⑥ 26년이상

A-3. 귀하의 직렬은 무엇입니까? ()

① 사회복지 ② 보건 ③ 기타 ()

A-4. 현재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의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저소득취약계층 ② 보육 ③ 아동·청소년 ④ 여성·가족 ⑤ 다문화가정 ⑥ 장애인
 ⑦ 노인 ⑧ 지역사회서비스 ⑨ 자원봉사 ⑩ 보건 및 정신보건 ⑪ 기타 ()

B-1. 귀하의 현 근무기관 유형은? ()

- ① 종합사회복지관(재가복지봉사센터) ②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③ 아동청소년 생활시설
④ 노인 이용시설 ⑤ 노인 생활시설 ⑥ 여성 이용시설
⑦ 여성 생활시설 ⑧ 정신요양 생활시설 ⑨ 장애인 이용시설
⑩ 장애인 생활시설 ⑪ 지역자활센터 ⑫ 기타()

B-2. 귀하의 직위는? ()

- ① 기관장 ② 부기관장(사무국장) ③ 부장 ④ 과장
⑤ 팀장(선임사회복지사) ⑥ 일반사회복지사 ⑦ 생활지도사 ⑧ 기타()

B-3. 귀하의 직무는? ()

- ① 시설장·총무(사무국장) ② 촉탁의사 ③ 간호사·물리치료사
③ 생활지도원·생활보조원 ④ 영양사 ⑤ 조리사·조리보조원
⑥ 사회복지사 ⑦ 운전기사·시설관리인 ⑧ 기타 직원

B-4. 귀하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기간은? ()

- ① 1년 미만 ② 1년 - 5년 ③ 6년 - 10년 ④ 11년 - 15년 ⑤ 15년 이상

C-1. 귀하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정치 ② 경제 ③ 사회·문화 ④ 교육 ⑤ 행정
⑥ 법 ⑦ 복지 ⑧ 보건·건강 ⑨ 여성 ⑩ 가족
⑪ 기타()

II.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현황

1. 귀하는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복지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아동복지 ② 청소년복지 ③ 여성·가족복지 ④ 노인복지 ⑤ 장애인복지
⑥ 정신보건복지 ⑦ 저소득층복지 ⑧ 다문화복지 ⑨ 노숙인복지 ⑩ 기타()

3. 인천광역시에서 앞으로 가장 힘써야 할 복지 분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아동복지 ② 청소년복지 ③ 여성·가족복지 ④ 노인복지 ⑤ 장애인복지
⑥ 정신보건복지 ⑦ 저소득층복지 ⑧ 다문화복지 ⑨ 노숙인복지 ⑩ 기타()

4.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사회복지 시설 ② 시장 및 구청장 등 지도층의 인식
③ 사회복지 행정 담당자의 인식과 전문성 ④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인식과 전문성
⑤ 시민의 관심과 참여 ⑥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
⑦ 사회복지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⑧ 사회복지 실천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
⑨ 기타 ()

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방법에 있어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을 시 또는 구에 활발히 개진(인터넷 게시판 건의, 제안서, 민원 등)
② 위원회 등 모임 참여
③ 담당 공무원들을 직접 접촉
④ 피켓팅, 시위, 집회 등에 적극적인 참여
⑤ 행정상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
⑥ 기타 ()

III. 가정 ‘인천복지재단’ 설립

6.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서울·경기·부산·대전·경북·전남의 경우 재단법인형태의 복지재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재단과 같은 지역의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민간 복지자원에 대한 지원 및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공익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 ① 절대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 서울시복지재단은 2004년 서울시가 설립한 기관으로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2006년 부산복지개발원을, 경기도는 2007년 경기복지재단을, 경상북도는 2011년에 ‘경북행복재단’을, 대전시는 2012년 ‘대전복지재단’을, 전라남도는 2014년 ‘전남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복지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시설평가와 인증, 사회안전망 구축 및 자원연계 등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7. 사회복지업무를 공익성의 전담기구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운영한다면 어떤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겠습니까? ()
- ① 복지재원의 누수 방지기능
 ② 수요자별, 지역별 특화된 서비스 제공 및 수요자의 욕구 변화에 탄력적 대응
 ③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참여복지를 실현할 수 있음(모금, 봉사 등)
 ④ 복지재정 지방분권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⑤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확정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음
 ⑥ 사회복지 기관·단체의 집적화와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기능 및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음
 ⑦ 기타 ()
 ⑧ 긍정적 효과 없음
8. 반면 사회복지 업무를 공익성의 통합전담기구(통상적 ‘복지재단’으로 칭함)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신설기구의 운영을 위해 추가 자원 투입으로 재정적 부담 증가
 ② 공익성의 공공기관에 비해 공권력 행사의 제한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③ 사회복지 기관·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중복되어 업무의 혼선 및 효율성 저하
 ④ 민간사회복지 시설·기관과 갈등이나 알력을 일으킬 소지가 있음
 ⑤ 기존의 지역복지협의기관·기구와의 역할중복 및 갈등 유발
 ⑥ 기타 ()
 ⑦ 없음
9. 만일 사회복지 분야의 공익성의 공공기관을 만든다면 어떤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익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② 지방공사 설립 ③ 기존 민간법인에 위탁
 ④ 시장 직속기구 또는 자문기구 운영 ⑤ 시민협의체로 운영 ⑥ 기타 ()

IV. 보건복지 전달체계

10. 현행 보건·복지 전달체계 중 민간부문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순위로 2개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② 기관 대 기관, 시설 대 시설 간의 연계·조정이 미흡하여 서비스가 중복 또는 누락되는 경향이 있음
 ③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짐
 ④ 사회복지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수요자와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움
 ⑤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기관·시설에 대한 정보취득이 용이치 않음
 ⑥ 사회복지사들의 수가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⑦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원(인적, 물적)확보가 어려움
 ⑧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
 ⑨ 행정관청의 지나친 감독과 간섭으로 인해 자율성 확보가 곤란함
 ⑩ 기타 ()

11. 민간기관·시설 간 서비스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복지재단’과 같은 각 기관·시설 간 조정·연계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기구신설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용
- ③ 각 기관·시설 간 전산망 구축
- ④ 각 기관·시설 간 상설협의체 구축
- ⑤ 기타 ()

12. 현행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 공공부문의 문제점에 대해 우선순위로 2개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①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② 수요자가 대상 서비스 별로 개별 부서를 찾아다녀야 함
- ③ 부서 간 또는 상·하 지자체간 서비스연계 없이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가 중복되고 낭비되는 경향이 있음
- ④ 복지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함
- ⑤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짐
- ⑥ 중앙부서·광역사·도 또는 광역시·도·사·군·구 간에 유기적 협력관계가 부족함
- ⑦ 각 부서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⑧ 명확한 업무지침이나 기준이 없어 업무에 혼선이 초래됨
- ⑨ 복지담당 공무원이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 ⑩ 기타 ()

13. 보건·복지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연계·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통합전산망 구축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 ③ 서비스의 연계·조정을 전담할 기구 또는 조직의 신설
- ④ 기타 ()

14. 현재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연계·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잘되고 있음 (☞ 15번 문항으로)
- ② 잘되고 있음 (☞ 15번 문항으로)
- ③ 보통임 (☞ 15번 문항으로)
- ④ 잘 안 되고 있음 (☞ 14_1번 문항으로)
- ⑤ 전혀 안 되고 있음 (☞ 14_1번 문항으로)

14_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연계·조정이 미흡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에 종속되어 있어 자발성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없음
- ②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③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부서 또는 기관 이기주의에 빠져 있음
- ④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
- ⑤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관료주의 행태
- ⑥ 민간부문 종사자들의 무사안일주의
- ⑦ 기타 ()

15.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함
- ② 각 부문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있어야 함
- ③ 각 부문 간 정보공유, 교환을 위해 공통의 전산망이 구축되어야 함
- ④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있어야 함
- ⑤ 사회복지사의 인식개선이 있어야 함
- ⑥ 각 부문 간 업무 분장량이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함
- ⑦ 기타 ()

V.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16. 인천광역시에서는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제2기 (2011-2014년)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 ()

① 알고 있음 (☞ 17번 문항으로)

② 모름 (☞ 20번 문항으로)

17.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매우 만족하지 보통 매우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얼마나 실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전혀 실행되지 않음 보통 매우 잘 실행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시나 구·군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로 2개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	--	-----	--

- 주) ①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비전제시
② 실현에 필요한 자원(인력·예산 등) 부족
③ 향후 지역사회변화에 따른 탄력성 부족
④ 연차별 복지계획의 관련성 부족
⑤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미비
⑥ 기반 조성 사업의 부족
⑦ 지역주민 참여(의견) 저조
⑧ 획일적인 프로그램 제시
⑨ 민관협력 부재
⑩ 기타 ()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중점정책 및 분야별 추진과제

- 비전 : 나눔과 참여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인천
- 슬로건 : 그늘 없는 복지
- 분야별 비전 : 저소득시민에 대한 생활보장과 자립 지원(저소득취약계층),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구현(장애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평등도시(여성·가족),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노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실현(아동·청소년), WHO가 인정하는 건강도시(건강)
- 중점정책 : 취약계층 일자리 특별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무장애도시 프로젝트, 다문화복지환경 조성
- 분야별 추진과제
 - 저소득 : 저소득시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일을 통한 자활지원 강화, 복지사각지대 시민 지원
 - 장애인 : 장애인의 보건복지 서비스, 장애인의 자립지원, 장애인의 교육·문화·여가 지원, 장애인의 안정적 경제기반 조성,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도시 기반 조성
 - 여성·가족 : 다양한 가족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안전시스템 구축
 - 노인 : 노인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노인의 건강한 생활지원,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취약계층 노인지원, 장사문화 개선과 장사시설 확충
 -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활동 진흥,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저소득 아동·청소년 보호, 아동·청소년 글로벌 여건 조성
 - 사회복지 일반 및 자원봉사 : 복지전달체계의 민·관협력 강화, 자원봉사 참여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보건·의료정책 :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신보건사업 확대, 보건·의료 사각지대 지원

Ⅵ.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정책 과제

20. 2014년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이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알고 있으십니까? ()

-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보통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21. 다음은 향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제안들입니다. 각 항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현재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1-1. 향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정책제안들입니다. 각 항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현재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보장		중요도					실행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실행지 않고 있음	실행 되지 않고 있음	보통	잘 실행되 고 있음	매우 잘 실행되 고 있음
1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대상 발굴 및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기초생활보장 지원확대(양곡할인, 교복비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종합사회복지관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2. 향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차상위계층(비수급 저소득층)복지 영역**의 정책제안들입니다. 각 항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현재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 차상위계층(비수급 저소득층) 복지		중요도					실행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실행지 않고 있음	실행 되지 않고 있음	보통	잘 실행되 고 있음	매우 잘 실행되 고 있음
1	차상위계층 발굴 및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사업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사례관리 사업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안전망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긴급복지지원체계 구축(희망복지129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식품 나눔 문화 활성화(푸드마켓, 푸드뱅크사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자활분야 일자리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자활 관련 시설의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3. 향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노인복지 영역**의 정책제안들입니다. 각 항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현재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인복지		중요도					실행정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실행 되지 않고 있음	실행 되지 않고 있음	보통	잘 실행 되고 있음	매우 잘 실행 되고 있음
1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의료보장 지원 및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노인의 주거정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요양보호노인을 위한 시설확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내실화 방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사각지대·취약계층 노인 정책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노인의 교육·여가정책 및 권익증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노인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노인 건강관리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독거노인 지원정책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노인복지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장묘문화 발전과 장사시설 확충 방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4. 향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장애인복지 영역**의 정책제안들입니다. 각 항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현재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 복지		중요도					실행정도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실행 되지 않고 있음	실행 되지 않고 있음	보통	잘 실행 되고 있음	매우 잘 실행 되고 있음
1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익옹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장애인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일자리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장애인의 소득보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주거시설 서비스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내실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이동 및 편의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정보 접근권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장애인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장애인의 여가·문화, 체육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장애인 평생 교육프로그램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장애인보조기구 지원관리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장애인 시설·단체 네트워크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8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내실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5. 향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여성·가족복지 영역**의 정책제안들입니다. 각 항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현재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5] 여성·가족 복지		중요도					실행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실행 되지 않고 있음	실행 되지 않고 있음	보통	잘 실행 되고 있음	매우 잘 실행 되고 있음
1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일·가족 양립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보육사업 발전 계획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성평등 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지역여성문화 발굴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여성의 복지권 및 건강권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취약계층여성(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새터민)에 대한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여성인권보호체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여성의 정치참여 및 사회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가족의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가족지원기관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6. 향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복지 영역**의 정책제안들입니다. 각 항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현재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동·청소년 복지		중요도					실행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실행 되지 않고 있음	실행 되지 않고 있음	보통	잘 실행 되고 있음	매우 잘 실행 되고 있음
1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청소년 안전 및 문화기반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제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아동·청소년 시설보호 및 자립지원 방안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정보호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결식아동급식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국내입양사업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아동·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수련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위기 및 소외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청소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전담사회복지사 배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다문화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7-1. 향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지역복지 영역**의 정책제안들입니다. 각 항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현재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 일반 - 지역복지		중요도					실행정도				
		전혀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중요함	전혀실행되지 않음	실행되고 있음	보통	잘 실행되고 있음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1	복지네트워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후원 및 기부문화 확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7-2. 향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자원봉사 영역**의 정책제안들입니다. 각 항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현재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 일반 - 자원봉사		중요도					실행정도				
		전혀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중요함	전혀실행되지 않음	실행되고 있음	보통	잘 실행되고 있음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1	주민참여의식 및 참여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과 연구 개발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제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자원봉사센터 육성 및 인프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전문자원봉사단 건립 및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자원봉사센터 건립 및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자원봉사단 육성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7-3. 향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영역**의 정책제안들입니다. 각 항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현재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 일반 - 저출산고령사회		중요도					실행정도				
		전혀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중요함	전혀실행되지 않음	실행되고 있음	보통	잘 실행되고 있음	매우 잘 실행되고 있음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책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보육, 아동복지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7-4. 향후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사회복지 일반 '보건 및 정신보건' 영역**의 정책제안들입니다. 각 항의 과제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며 현재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 일반 - 보건 및 정신보건		중요도					실행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음	실행 되지 않고 있음	보통	잘 실행되 고 있음	매우 잘 실행되 고 있음
1	생애주기별 적극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생활권별 보건의료 수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정신보건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공공보건의료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취약계층 건강 수준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2. 이밖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 _____
- (2) _____
- (3) _____

VII.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과 전략목표

23.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양식은 제한이 없으며 비전을 담고 있는 단어 또는 문장으로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시>

「제1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의 비전

-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WELFARE 실현”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의 비전

- “나눔과 참여로 만드는 복지공동체 인천”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 영구·국민 임대주택 등 관리 현황

○ 영구·국민 임대주택 등 관리 현황

(단위: 세대)

구분	합계	영구 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5년 임대주택	사원 임대주택	매입	전세
전체	52,334 (49개소)	8,900 (8개소)	1,433 (3개소)	21,886 (22개소)	1,274 (9개소)	1,790 (5개소)	1,007 (2개소)	4,683	11,361
도시 공사	4,393 (5개소)	2,398 (3개소)	-	250 (1개소)	515 (1개소)	-			1,230
NH	46,732 (41개소)	6,502 (5개소)	1,433 (3개소)	21,636 (21개소)	557 (7개소)	1,790 (5개소)		4,683	10,131
민간	1,209 (3개소)				202 (1개소)	-	1,007 (2개소)		

○ 향후 공공임대주택 비율 추계(%)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비율(%)	3.5	5.0	7.5	9.0	10.5

6. 주요 복지시설 현황 및 향후(2015-2018년) 설치 계획

○ 총괄 현황

(2014.12.31. 현재) (단위 : 개소)

시설 현황	계		중 구		동 구		남 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 구		강화군		옹진군	
	현 재	향후설치계획	현 재	향후설치계획	현 재	향후설치계획	현 재	향후설치계획	현 재	향후설치계획	현 재	향후설치계획	현 재	향후설치계획	현 재	향후설치계획	현 재	향후설치계획	현 재	향후설치계획	현 재	향후설치계획
계	172	10	9	1	11	1	34	1	15	1	18	1	24	2	16	1	25	2	18	-	2	
장애인복지관	9	3	1			1	2		1		1		1		1	1	1	1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9		1		2		9		1		2		4		3		4		2		1	
양로시설	23								1		2		4		1		7		8			
노인복지관	11		1		1		2		1		2		1		1		1		1			
노인문화센터	9	1			1		2		1					1	3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9		1		1		2		1		1		1		1		1					
아동복지 종합센터	4						3				1											
아동양육센터	9		1		1		3						3						1			
청소년수련시설	12	5		1	1		1		1	1	1	1	1	1	1		4	1	2			
사회복지관	19		1		2		3		3		4		3		1		1				1	
지역자활센터	11		1		1		2		1		1		2		1		1		1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9		1		1		1		1		1		1		1		1		1			
여성복지회관	6		1				1		1				1		1		1					
여성인력 개발센터	3						1				1						1					
사회복귀시설	9						2		2		1		2		1				1			
보훈병원		1						1														

※ 시(市) 복지시설은 해당 소재지 군·구에 포함

○ 주요 복지시설 현황

(2014.12.31. 현재)

주요 복지시설	시 설 명	주 소
장애인복지관 (9)	노틀담복지관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계산2동40번지)
	인천광역시강화장애인복지관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63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남구 경원대로714(관교동)
	인천광역시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남동구 담방서로23번길17
	인천광역시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부평구 일신로 25
	인천광역시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서구 드림로284-8(백석동)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남구 한나루로길 357번지 105-19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연수구 앵고개길 130(동춘1동)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중구 매소홀로10(신흥동3가)
장애인직업 재활시설(29)	굿프랜드	부평구 십정2동 586-2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남구 도화동 90-19
	이후	동구 보세로26번길 24-16
	노틀담보호작업장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계산2동40번지)
	두드림보호작업장	서구 백석동 86-1
	모아직업재활시설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835-38
	모퉁이보호작업장	남구 주안3동 800-17 인천재활의원4층
	미추클린센터	남구 용현 1동 50-10
	비전엔보호작업장	남구 관교동 469
	성동보호작업장	부평구 부평2동 756-88
	송암보호작업장	부평구 일신동 62번지 부평장애인복지관4층
	아이드림	부평구 십정동 576
	애호일터	남구 주안1동 194-8 명품관 1층
	어울림카페	남구 주안1동 194-8 명품관 1층
	열린일터	남동구 만수6동 1085-6 남동장애인복지관 별관 2층
	예림일터	남구 주안중로 19 창보B/D 101
	예진원	서구 심곡동 14-5
	우리마을직업재활시설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05-29
	인정재활관	서구 석남동 491-1
	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중구 낙섬길 54(신흥동 3가 30-17)
	인천안마수련원	남구 주안1동 216-2 이화빌딩 4층
	일원중증장애인근로원	계양구 효성동 557-1
	장봉해림보호작업장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30
	해내기보호작업장	연수구 동춘동 산29-1
	해인한	동구 방축로 157번길 48
	해피로드	계양구 작전동 898-3 성웅빌딩 B01호
	보아스테크	남동구 남촌동 624-13 4층
	행복한일터	남구 석정동92번길(도화동)
	서구보호작업장	서구 마중1로 12(오류동)

주요 복지시설	시 설 명	주 소
양로 시설 (23)	낙원양로원	서구 경서로 56번길 15-5
	나솔채양로원	계양구 솔고개길 19(박촌동)
	동성양로원	부평구 일신로 18(일신동)
	백향그린실버타운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304번길 49-20
	성지에담양로원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89-22
	소망의집	남동구 논현고잔로 88번길 35 (고잔동)
	은혜의집	남동구 구월말로 3번길 50-6 (구월동)
	예향원	서구 세자봉로 76번길 11
	온정의집	서구 봉화로 69번길 23(오류동)
	요셉의집	부평구 장제로 372(삼산동)
	희락원	부평구 여우재로 26번길 47(십정동)
	사랑의집	서구 가남로 203-3
	인천영락원	연수구 청량로 58(동춘동)
	임마누엘실버홈	서구 간촌로 7번길 11
	생수실버하우스	서구 길주로 142번길 24-1
	평화의집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637
	협성양로원	부평구 화랑로63 (산곡동)
	형제나사로의 집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255-12
	호세양로원	강화군 불은면 고려왕릉로 283번길17
	에덴실버타운양로원	강화군 양도면 고려왕릉로 139번길10-11
	청라백세마을	서구 로봇랜드로 249-14
	다비다의 집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262
	푸른마을	강화읍 갑룡길 206번길 55
노인복지관 (11)	강화군노인복지관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23-1
	계양구노인복지관	계양구 효서로 34번길 11
	남구노인복지관	남구 학익소로 37번길 17
	남동구노인복지관	남동구 문화서로 62번길 13
	동구노인복지관	동구 샛골로 177
	부평구노인복지관	부평구 굴포로 110
	서구노인복지관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
	연수구노인복지관	연수구 함박외로 194
	인천광역시노인복지관	남구 능해길 21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	남동구 용천로 205번길 21
	인천중구노인복지관	중구 제물량로 80번길 3-24
노인문화센터 (9)	계산노인문화센터	계양구 경명대로 980
	남구노인문화센터	남구 인하로 77번길 38
	동구노인문화센터	동구 솔빛로 13

주요 복지시설	시 설 명	주 소
	동양노인문화센터	계양구 동양로 74-29
	서구가좌노인문화센터	서구 장고개로 387
	서구연희노인문화센터	서구 승학로 263
	주안노인문화센터	남구 석정로 464
	청학노인문화센터	연수구 청학로 12번길 53
	효성노인문화센터	계양구 봉오대로 516
노인일자리 전담기관(9)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남구 석정로 227번길 21 (제물포스마트타운 3층)
	계양시니어클럽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2층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남구 독정리로 95번길 남구청 스포츠센터1층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남동구 소래로 645 남동복지관 3층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부평구 장제로 235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서구 승학로 263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빌딩 4층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중구 우현로 20번길 43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동구 염전로 40번길 70
아동복지 종합센터(4)	누리마루 아동복지종합센터	남구 석정로329번길 32(도화2동)
	솔샘나리아동복지종합센터	남구 인하로 91번길(용현4동 183-6)
	인천아동복지종합센터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201호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	남구 매소홀로446번길 50(학익1동)
아동양육시설 (9)	계명원	강화군 강화남로518번길6-41(양도면)
	디차힐	중구 중산로122-3(중산동)
	보라매보육원	동구 화도진로126(화수1동)
	파인트리홈	부평구 일신로25(일신동)
	신명보육원	부평구 경인로749(십정동)
	인천보육원	남구 매소홀로446번길 50(학익1동)
	해성보육원	남구 인하로91번길 15(용현4동)
	해피홈보육원	부평구 경인로898(부평2동)
	향진원	남구 석정로329번길 32(도화2동)
청소년 수련시설(12)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남동구 장수로 42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	남구 경인로 42번길 23
	동구청소년수련관	동구 솔빛로 82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연수구 앵고개로 132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 체육관로 76(삼산동)
	계양구청소년수련관	계양구 장제로 937
	서구청소년수련관	서구 원창로 92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서구 완정로 188번길3(마전동)

주요 복지시설	시 설 명	주 소
	연희청소년문화의집	서구 승학로 264(심곡동)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서구 서달로190(가정동)
	강화군청소년수련관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54
	강화군청소년문화의집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 22번길 30-1
사회복지관(19)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계양구 아나지로 517 (서운동)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 호구포로 292 (논현동)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 서판로 54번길 12 (만수동)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남구 염창로 97 (주안동)
	백령종합사회복지관	옹진군 백령로 271번길 20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부평구 경원대로 1418번길 13(부평동)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중구 송학로 40번길 (내동)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 석정로 552 (간석동)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연수구 원인재로 315 (연수동)
	송림종합사회복지관	동구 송림로 43번길 (송림동)
	송의종합사회복지관	남구 독배로 485 (송의동)
	어린이재단연수종합사회복지관	연수구 원인재로 212 (연수동)
	월드비전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연수구 선학로 14 (선학동)
	인천YMCA갈산종합사회복지관	부평구 주부토로 206 (갈산동)
	인천YMCA만수종합사회복지관	남동구 담방로 105 (만수동)
	인천YWCA삼산종합사회복지관	부평구 평천로 447 (삼산동)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서구 심곡로 124번길 10 (심곡동)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남구 매소홀로 418번길 14-57(학익동)
	창영사회복지관	동구 우각로 57 (창영동)
지역자활센터 (11)	강화지역자활센터	강화군강화읍충열사로 155
	계양지역자활센터	계양구 계산2동 906-1 노동복지회관 3층
	남구미추홀지역자활센터	인천시 남구 용현3동 490-87 2층
	남구지역자활센터	남구 용현동 490-87 3층
	남동지역자활센터	남동구 간석3동 37-4
	동구지역자활센터	동구화수안로40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부평구 십정동 열우물로 103 6층
	부평지역자활센터	부평구 부개3동 499-7 부평구재활용센터 2층
	서구지역자활센터	서구 검암동 679-3 4층
	연수지역자활센터	연수구청학동485-2
	중구지역자활센터	중구 제물량로 132-2
다문화가족 지원센터(9)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11-1, 2층
	계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노동복지회관 3층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구 소성로 189 새암빌딩 5층

주요 복지시설	시 설 명	주 소
	남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구 장승로 59-21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동구 화도진로 44번길 21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평구 길주로539 인천여성문화회관 별관1층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1층
	연수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빌딩 4층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구 제물량로122, 답동신협빌딩 4층
여성복지(회)관 (6)	계양구여성복지회관	계양구 봉오대로 628번길 10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	서구 석남동 325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부평구 갈산2동 375-1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남구 주안6동 946-1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	연수구 동춘1동 920
	중구여성회관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81
여성인력 개발센터(3)	인천남구여성인력개발센터	남구 용현5동 630-10 청솔프라자 1층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서구 가정동 517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동구만수5동889
사회복귀시설 (9)	인천사회복귀시설협회	부평구 갈산동 169-3 대진빌딩 3층
	강화은혜의집	강화군 내가면 고천4리 302
	꿈의동지	남구 문학동 369-4 현빌리지 301, 302호
	남동사회복귀시설그루터기	남동구 만수6동 1085-6
	리앤리	연수구 옥련동 330-29
	미추홀하우스	남구 도화1동 531-23번지 201호
	연수새누리 사회복귀시설	연수구 동춘동 920 연수수도사업소 2층
	월산사회복귀시설	부평구 갈산동 169-3 대진빌딩 3층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	계양구 계산2동 894-7 2층

제3기(2015-2018)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이용갑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

배은주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최태림 | 인천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정혜 |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권현진 |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전용호 | 인천대학교 교수

이은주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경현 | 인천여성가족재단 부연구위원

윤연숙 | 인천여성가족재단 부연구위원

■ 연구보조

최동국 | 인천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 **발행일** : 2015년 7월

■ **발행처** : 인천광역시

■ **담당자** : 사회복지봉사과 과장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 복지정책담당 고태성
 사회복지봉사과 주무관 장정진
 (032-440-2913)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http://www.incheon.go.kr>